

도-시·군 기능재정립 협약과제

2015. 11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도-시·군 기능재정립 협약과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 11.

충남연구원 원장 강 현 수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
| 2. 연구내용과 범위 | 3 |
| 3. 연구방법 | 4 |
| 제2장 도-시·군 간 협약에 대한 논의 | 6 |
| 1. 협약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6 |
| 2. 협약의 필요성과 한계 | 9 |
| 3. 협약의 종류와 유형 | 15 |
| 4. 협약의 선진 사례 | 21 |
| 제3장 도-시·군 간 협약에 관한 기준(원칙)과 쟁점 | 27 |
| 1. 도-시·군 협약과제의 대상과 유형 | 27 |
| 2. 도-시·군 협력의 제도적 근거 | 28 |
| 3. 도-시·군 협약의 성립요건 | 30 |
| 4. 도-시·군 간 협약의 이행 및 해제 | 32 |
| 5. 도-시·군 간 협약과제 발굴의 기준(원칙) | 33 |
| 제4장 도-시·군 협약과제 | 37 |
| 1. 국·도비 부담비율 합리적 개선을 통한 재정혁신 (기획조정실) | 37 |
| 2. 서울 충남학사 건립 (기획조정실) | 41 |
| 3.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 (기획조정실) | 45 |
| 4.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 (경제산업실) | 48 |
| 5. 충남 상생산단 정주여건 개선 (경제산업실) | 50 |
| 6. 도-시·군 인사교류 활성화 (자치행정국) | 52 |
| 7. 충남형 동네자치 확산 (자치행정국) | 56 |
| 8.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관광국) | 58 |

| | |
|--|----|
| 9. 충남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국) | 60 |
| 10. 공립예술단 운영체제 개편 (문화체육관광국) | 62 |
| 11.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문화유산) 통합관리 (문화체육관광국) | 63 |
| 12.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농정국) | 65 |
| 13. 마을만들기 지원·협력 시스템 구축 (농정국) | 68 |
| 14. 농산물 통합마케팅 체계와 공동브랜드 육성 (농정국) | 71 |
| 15.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역할과 기능 재정립 (복지보건국) | 76 |
| 16. 깨끗한 충남만들기 (환경녹지국) | 80 |
|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 (건설교통국) | 82 |
| 18. 공공디자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건설교통국) | 86 |
| 19. 해양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해양수산국) | 88 |
| 20. 내포신도시 안정적 운영·관리체계 구축 (내포신도시건설본부) | 91 |

제5장 도-시·군 협력과제 95

| | |
|---|-----|
| 1. 재난대응 안전관리 및 안전지수 개선 (재난안전실) | 95 |
| 2. 시·군과 함께하는 「충남경제비전 2030」 (경제산업실) | 100 |
| 3.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관련 범도민 관심제고 (자치행정국) | 104 |
| 4. 체계적인 공공갈등 협력 (자치행정국) | 106 |
| 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 (문화체육관광국) | 109 |
| 6. 2016년 양대체전 성공개최 위한 협업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국) .. | 111 |
| 7. 영상위원회 출범 및 적극적 로케이션 지원 (문화체육관광국) | 114 |
| 8. 3농혁신(2단계) 추진에 따른 시·군의 주도적 참여 (농정국) | 118 |
| 9. 구제역·AI 재발방지대책 (농정국) | 123 |
| 10.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복지보건국) | 128 |
| 11. 닥터헬기 인계점(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 (복지보건국) | 132 |
| 12. 공주역 활성화 방안 (건설교통국) | 135 |
| 13. 지적(지목) 불일치 공유지 정비 (건설교통국) | 137 |
| 14. 수산행정 선진화를 위한 역할 정립 (해양수산국) | 139 |

| | |
|-----------------------------------|-----|
| 제6장. 도-시·군간 정책협력 협약서 및 부속서류 | 141 |
| 1. 도-시·군간 정책협력 협약서 | 141 |
| 2. 도-시·군간 정책협력 협약서 부속서류 | 144 |
| 제7장. 업무협약제도의 도입과 추진방안 | 152 |
| 1. 업무협약의 모형 정립 | 152 |
| 2. 업무협약제도 도입의 기본원칙 | 155 |
| 3. 업무협약제도의 추진방안 | 157 |
| 부록 1. 도-시·군 협약과제 발굴 현황 | 163 |
| 부록 2. 발굴 협약과제 검토의견 | 167 |
| 부록 3. 발굴 협약과제 세부내용 | 177 |
| 부록 4. 도-시·군 간 협약과제 발굴 | 241 |

표 목 차

| | |
|---------------------------------|-----|
| <표 1> 행정주체 상호간 협약의 유형과 사례 | 16 |
| <표 2> 대산항 유류오염사고 현황 | 218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 5 |
| <그림 2> 추진절차 | 30 |
| <그림 3>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현황도 | 105 |
| <그림 4> 업무협약 운용시 매커니즘 협약과정 | 154 |
| <그림 5>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내용 | 263 |
| <그림 6> 민선6기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정책체계 | 264 |
| <그림 7> 광역-기초 민관협력적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 268 |
| <그림 8>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및 추진체계 모형 | 269 |
| <그림 9>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집행방식 개선 개요 | 270 |
| <그림 10> 시·군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절차 | 271 |
| <그림 11> 깨끗한 충남만들기 개념도 | 315 |
| <그림 12>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 317 |
| <그림 13> 깨끗한 충남만들기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안) | 320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 지방자치 출범 20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취약한 지방재정, 자치의식 결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의 추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임. 이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임
-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은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등 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음. 그러나 정작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주인인 광역 지방단체와 기초지방단체의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자신과 관련된 사무를 자신의 구역 안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상 자족적이고 고립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짐
 - 이러한 광역화된 현대행정의 경향으로 도와 시·군 간 여러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상호 협력할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법적 제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에 대한 법적 해결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광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조화와 협력적 관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구상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제도적 방안들도 강구되어지고 있으나 이의 성과는 매우 미흡한 현실임
 - 즉,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에 있어 협력적 관계의 구축은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기초라 할 수 있음

- 현대 행정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수단이 필요시 되며 협약은 행정행위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각 기관의 이익과 조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협약에 의한 사무 처리가 고려되고 있으며 분쟁의 해결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협약에 의한 사무 처리 방식은 모든 관점에 있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음
- 충청남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의 제도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각종 현안들을 발굴하여 건의하고 있음
 - 지난 2014년 충남도 차원에서 도와 시·군의 기능과 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조정하기 위한 논의들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 본 과제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의 현안과 연계한 협약과제를 발굴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협약과제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도와 시·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협약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상호 협력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연구내용과 범위

1) 연구내용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도-시·군 협약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자 함
 - 국내외 문헌조사와 사례수집을 통해 협약에 대한 이론을 정립함
- 둘째, 협약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함
 - 도-시·군의 협약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함
- 셋째, 협약과제를 발굴함
 - 도 및 시·군의 의견조사와 워크숍을 통해 추진 가능한 협약과제를 발굴함
- 넷째, 협약과제의 추진방안을 모색함
 - 발굴된 협약과제의 추진방안과 도-시·군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정리함
- 다섯째, 향후 추진과제를 모색함
 - 협약과제 발굴 이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화 등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함

2)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도와 시·군간 협약과제의 발굴을 위한 조사는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함
 - 실태조사의 기준시점은 사업의 추진과 제도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인 바, 여기에서는 2015년 4월 현재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진 과제를 대상으로 함

■ 대상적 범위 : 도 및 시·군의 사무전체

- 도 및 시·군의 사무전체를 대상으로 협약과제를 발굴하되 제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토록 함

■ 내용적 범위

- 협약과제별 계획 및 도-시·군의 역할 정리
- 향후 추진과제 모색

3. 연구방법

■ 기존연구의 심층 분석

- 자치단체 간 협약 관련 기존연구에 대한 심층 검토
 - 협약에 관한 논의 및 협약과제 발굴을 위한의 기준과 원칙 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 자치단체 간 협약 관련 선진사례 분석

■ 과제수요 조사

- 도 각 실·국 및 15개 시·군 대상 협약과제 관련 대상 사업의견 조사
- 조사된 사업에 대하여 도-시·군 상호 교차 의견 조사

■ FGI(Focusing Group Interview)

- 면담일정 : 협약과제 대상 조사 후
- 면담대상 : 해당 부서 부서장 및 담당자
- 면담장소 : 도 회의실
- 면담내용 : 조사표에 제시된 과제와 관련한 합리성 및 타당성 등 의견조사
- 면담방법 : FGI(Focusing Group Interview)

■ 포럼 및 워크숍

- 연구내용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련 전문가 등과의 검토
보고회 및 워크숍 실시
- 협약과제 발굴 T/F연구단과 지속적인 토론 및 회의 후 결과를 최대한 반영
하여 연구내용을 수정 및 개선
- 협약과제에 관한 최종안을 검토하여 의견수렴 후 향후 개선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제2장 도·시·군 간 협약에 대한 논의

1. 협약의 개념 및 법적 성격

(1) 협약의 개념

■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발전적 관계 형성의 일환으로서 협약

- 현대의 행정은 사무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수직적이고 통제적 권력의 전달체계에서 행정 주체 간의 자율성을 전제로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게 됨
- 특히 지방분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관계가 권위와 통제 보다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지자체 간의 합의를 도출 과정에서 계약을 통한 합의(협약)를 도출하는 것을 행정계약화라 부르고, 이러한 행정계약화 현상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협약임
- 협약을 통한 의사결정은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지자체 간의 이익이 상충되어 갈등이 예상되거나, 사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합의를 찾는 점에서 효율적인 사무 처리 방식임
- 서로 다른 지자체 간 계약을 통한 합의, 즉 협약은 개별 지자체가 현안에서의 자율적 참여라는 지방분권의 본질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식임
-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관계에서 협력이 필요한 특정 사무를 협약을 통한 수행 추세는 현 시기에 보다 진일보한 행정 관계로 평가됨

■ 사무의 수혜범위의 불일치 보완으로서 협약

-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행정구역 내에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본질로 하지만, 현대 행정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수혜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
- 특히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관계에서 행정주체간의 사무 권한 및 이익이 상충되거나 중첩되는 상황이 흔하게 발생
- 중첩되는 권한과 이익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사무수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적어도 협력에 의한 행정 사무의 수행이 효율적인 경우에 많음

- 따라서 협약을 통한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그리고 기초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체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에 행정 수행의 효율적 방식이 될 수 있음

■ 행정사무처리와 관련된 협약의 광의의 의미

-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처리의 내용 및 방식에 관한 의사합치의 계약적 형태를 협약이라고 할 수 있음
- 좁은 의미에서의 사무의 공동처리를 포함하여, 사무위탁, 협의체설립, 인사정보교류,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협력적 형태가 포함될 수 있음
- 이러한 광의의 협약개념을 전제하는 경우에는 각 협력 유형에 따른 유형화가 필요하며, i) 사무의 공동수행 형태, ii) 사무의 위탁 형태, iii) 협의체의 설립 형태, iv) 사무에 대한 보조적 협력(지원) 형태 등의 다양한 구분이 가능
- 그러나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협약을 이해한다면,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움이 있어 협약의 의한 사무처리는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사무처리와 관련된 협약의 협의의 의미

-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적 관련사무를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적 관련사무를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 즉 "공동적 관련성"을 가지는 사무를 협력하여 처리하는 사무수행방식을 말함

■ 행정사무처리와 관련된 협약의 목적

- 지방분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관련된 사무에 대해 협력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
- 국가와 지자체 간,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상호 보완성에 기초하여 단일 행정구역 또는 단일 행정기관이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을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함으로써 정책시행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

■ 협약의 전제조건

- 지방자치의 개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재정상의 능력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의 우선순위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자기책임성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임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소위 전권한성, 자기책임성 및 자치고권을 가진 독자적이고 통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국가와 대비되는 독립적 개념의 것으로 이해되기 어려우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과 기초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방 기관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광역에 대해 기초지자체들의 상황도 비슷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권력적·통제적 측면이 강함
- 이러한 현실, 즉 서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 속의 협약은 대등한 의사의 합치라는 협약의 본질과 맞지 않음
- 따라서 협약에 의한 행정의 전개의 전제조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권력의 배분 상태로 확인할 수 있음
- 수평적 권력의 대등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기관위임사무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의 이념에 합당한 사무의 배분, 사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자주적 재정의 보장, 국가의 권력적 감독·통제의 제한 등이 필요함

(2) 협약의 법적성격

-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의 일종이며,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음
- 권한행사의 방식에 있어서 단독적 행사를 하고,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권한의 위임·위탁과 구별됨

공법상 계약 : 행정주체 상호 간 또는 행정주체와 국민 간에 공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간에 반대방향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비권력적, 쌍방적 공법행위를 말함.

예)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의 도로관리에 관한 협의, 사인에 대한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2. 협약의 필요성과 한계

■ 현대국가의 특징을 반영한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

- 협약에 의한 사무 처리의 배경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사무, 권한, 이익 등의 구별이 모호해진다는 현대 사회의 특징이 자리 잡고 있음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종속적 관계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의한 통치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행정주체로서 협력적 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됨
- 동시에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은 본질적으로 행정사무에서 국가행정과 지방행정, 그리고 광역과 기초행정의 절대적 구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각 행정의 주체는 항상 일정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행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행정의 부분적 주체로서 행정에 관한 공동의 책임을 나누어야 할 지위를 가짐
- 이러한 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양자 간의 협력적 체제는 불가피하며, 협력체제가 강화된 것일수록 협력의 실효성이나 행정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는 바람직한 형태라 할 수 있음

■ 규제에서 협력으로 이동하는 현대 행정의 실현과정으로서 협약

- 현대행정의 실현과정에서 협약과 같은 계약적 기법의 등장은 새삼 새로운 일은 아니며, 각종 규제를 통한 정부기능의 팽창에 대한 제동과 새로운 역할모색을 위한 정부기능의 수행방식 변화의 시도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현대행정의 특성으로 행정실무에서 협약 혹은 계약적 형식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현상은 규제 국가에서 협력국가로 이전되고 있고, 행정개혁의 계약 및 협약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
- 행정사무 수행의 계약화현상, 즉 협약의 도입은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 기본 이념인 민주주의의 중요한 보완책이 되고 있으며, 규제를 통해 수행되는 행정사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됨

■ 행정의 주체 간의 관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사무의 협약

- 행정의 협약 및 계약화현상은 광역과 기초지자체 같은 행정주체 간 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등장
- 현대 행정에서는 다양한 공법인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고, 이들 간에 새로운 관계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다양한 행정체제와 공법인과의 관계에서 효율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통일성에 입각한 효율적인 전달체제와 의사결정의 집중방식보다는 의사결정방식의 분권화와 협력, 그리고 협동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 대두
- 즉 공공정책 실현과정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해짐에 따라 행정의 협약과 계약화현상의 필요성이 제기됨
- 협약에 의한 행정사무 처리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며, 또한 법이 실제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충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방식으로 평가 받고 있음
- 특히, 현대행정이 광역화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의 권한 또는 이익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협약에 의한 사무 처리는 이러한 사안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면에서 필요성과 의의가 큼

■ 갈등의 최소화, 협력의 최대화를 위한 행정사무의 협약

-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려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 지자체의 공간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초래함
-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적 지배력이 높아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규범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협력적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확보되는 데는 어려움이 발생
- 즉 자율성을 토대로 한 수평적인 관계구축과 동시에 업무처리와 관련한 상호 협력적 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이 나타남
-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지자체 관계의 소극적 측면인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서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아울러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같은 발전적인 관계정립

과 “협력의 최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방법으로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즉,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인 협력체계 중 가장 유용한 수단이며, 협약을 통한 사무처리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룰수 있기 때문임

□ 협약을 통한 도·시·군간 패러다임 전환

| 기존 패러다임 | | 새로운 패러다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 의사결정 □ 단선적 협력 □ 사업추진의 암묵적 동의 □ 절차의 투명성, 신뢰성 미흡 □ 정책협력 기능 미약 □ 경제성, 효율성 중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참여형 의사결정 □ 다차원적 정책협력 □ 사업추진의 협력강화 □ 절차의 투명성, 신뢰성 강화 □ 정책협력 기능 강화 □ 수용성, 협력의 지속가능성 |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한 사무수행의 필요성 및 유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허용성 및 구체적 법적 문제는 단지 행정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고찰될 수 없으며 일정한 법적 틀 내에서 논의되어야 함

■ 협약의 법적인 한계

- 협약의 본질은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협약의 내용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결정됨
- 그러나,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는 본질적으로 공적 행정수행이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계약과 같이 사적 자치를 누릴 수는 없으며, 일정한 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됨
- 따라서 이러한 공적 행정에서 협약의 성격이 협약의 한계로 작동하고, 그것에는 법치행정의 원리로서의 한계와 지방자치제의 헌법적보장이 그 한계로 작용함
- 법치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공적 행정영역에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은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협약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데, 협약이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더라도 법률에 반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한계임

- 지방자치체의 헌법적 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권은 헌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한 경우라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또 다른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협약이 계약자유원칙에 벗어나면 제한 가능

-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는 법령이 명문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리고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공법상 계약은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음
- 다만,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이 법령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협약이 공행정인 이상 법률적 원칙에 벗어나면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협약이 행정행위에서 법률의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
- 따라서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 역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령에 반하는 내용의 협약은 허용될 수 없음

■ 지방자치권의 헌법적 보장 한계

-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
- 지방자치권의 헌법적 보장은 전통적인 입장에서처럼 단순히 지방자치제도의 폐지에만 대항할 수 있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것으로 한정될 수 없고, 그 이상의 적극적·능동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함
- 적극적 의미에서 지방자치권은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의 공공과제를 지자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조직 원리임
-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제도, 권리주체성의 보장, 법적인 지위의 보장의 원리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 사무 처리는 제한될 수 밖에 없음
- 즉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율성에 근거해서 체결한 협약에 의한 사무 처리의 경우라도 헌법에 의해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또 다른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법률적 제한이 없는 관할권(전권한성)이 보장의 한계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지역적 사무를 특별한 권한명의 없이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적 사무가 무엇이냐의 문제인바, 지역적 사무란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지역공동체와 특유한 관련을 가지는 사무”로 이해됨
- 이러한 전권한성의 원칙에 따라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전권한성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협약의 허용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보충성의 원칙의 한계

-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사무는 다양하여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법률적 역할에 따라 쉽게 구분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상의 공적행정기관이 성격과 중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 사무배분을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리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됨
- 보충성의 원칙은 행정 수행은 서로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위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하는 것으로, 하위행정기관이 스스로 특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위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원리임
- 이는 곧 사무를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는 주체에게가 아니라, 지역의 사무는 일차적으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본질적 요소로, 특히 오늘날에는 참여민주주의가 강조되는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한 원리로 작동함. 이는 주민 참여와 복지의 증진은 생활현장과 밀착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잘 보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적극적 측면에서의 보충성 원칙은 상위행정단위의 지원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위 행정기관은 하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지역과 밀착된 구성단위의 활동은 보완되어야 하고 따라서 불충분한 능력은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 상급단위에 의하여 하급 구성단위의 활동이 대체되거나 인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 이러한 원칙은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형식적인 사무배분의 원리를 넘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사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지님
- 보충성의 원리는 협약의 대상에 대한 내용적 한계를 제공하는 한편, 협약의 절차와 관련하여 상급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협의 없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협약 당사자의 자기책임성의 한계

- 지방자치의 자기책임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판단과 결정에 근거한 사무의 수행을 보장하는 것임
- 자기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특별하게 마련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은 입법자에 의해서도 폐지될 수 없는 핵심영역에 해당함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즉 ‘자치고권’은 그 내용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직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지방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관리·경영하는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단체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고 지출을 행하는 자치재정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관해 필요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치고권이 침해되는 범위의 협약은 성립하지 않음

■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기초한 협약의 법제화

-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가 법제화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원리를 기초로 입법 자체에 대한 한계가 설정됨
- 따라서, 협약에 관한 입법적 정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원리에서 비롯되는 한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3. 협약의 종류와 유형

■ 협약의 주제에 따른 유형 분류

- 행정계약은 행정의 행위형식의 일부로서 공법상 효과를 발생하는 복수당사자간의 반대방향 의사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행위로 이해됨
- 행정계약의 유형을 주체에 따라 ①행정주체 상호 간, ②행정주체와 사인 간, ③공무수탁사인과 사인 간에 체결되는 형태가 있음
- 행정주체 상호 간 협약은 하청이나 도로와 같은 공물관리나 경비부담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협약은 정부조달계약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공무수탁사인과 사인 간의 협약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인인 공익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의 협의 같은 것을 말함

■ 기능에 따른 협약 유형

- 행정계약의 경우 ①탄력적인 공익실현의 행정목적달성이 가능하고 ②분쟁 예방의 적응성을 높일 수 있으며 ③행정주체가 지급하는 반대급부와 계약 상대방의 성과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기능으로 인해 다양한 행정영역에서 협약이 가능
- 이러한 행정계약의 기능은 ㉠조달행정과 급부행정의 영역 ㉡규제행정의 영역 ㉢행정조직법과 공무원법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협약에 의한 행정행위의 유형

- 협력 : 서로간의 공통문제에 대해 수용 가능한 행동 대안을 형성하고 상호간의 입장을 조정·협력해 나가는 유형
- 교환 : 서로간의 상호이익을 위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대칭적 교환관계(자원부족·고갈 해결, 유동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협력 필요시)
- 공동생산 : 참여주체가 목표지향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생산을 위하여 참여하는 형태

■ 행정주체 상호간 협약의 유형

- 다양한 기준에 의해 협약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 상호 간 협약으로 분류하는 것일 일반적
- 행정주체 상호 간 협약은 정부기관과 정부기관, 정부기관과 공공단체, 공공단체와 공공단체 등으로 구분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과 정부기관의 협약을 주로 다룸

〈표 1〉 행정주체 상호간 협약의 유형과 사례

| 구 분 | | 행정구역상 소속 | | | |
|------------|-----------|------------|--|------------|--|
| | | 같은 시도 내 협력 | | 다른 시도 간 협력 | |
| 자치단체 계층 | 수직적 협력 | I 유형 | 시도를 같이하는 광역-기초간 협력 예) 카지노사업 공동참여 (강원, 삼척, 영원, 정선) | II 유형 | 시도를 달리하는 광역-기초간협력 예) 김해교 재가설 공사 공동참여(부산, 경남 김해) |
| | 수평적 협력 | III 유형 | 시도를 같이하는 기초간 협력 예) 소각장과 매립장 공동설치(파주, 김포) | IV 유형 | 시도를 달리하는 광역간 협력 예) 광역상수도 건설(부산, 경남) |
| | | | | V 유형 | 시도를 달리하는 기초간 협력 예) 폐기물처리시설 협력 (서울마포, 경기고양) |
| | | | | | |

■ 협약의 법률적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 을 규정한 법령

① 국가사무의 협약에 관한 규정의 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공동사무의 협약에 관한 규정의 예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자치사무의 협약에 관한 규정의 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0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①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치안행정위원회(이하 "치안행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0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에 관한 업무협약안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하 “제주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안을 작성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기타(협력, 승인, 협의 등) 규정의 예

□ **시·도경제협의회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시·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시·도지사등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허가)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육성사업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 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 **협약의 법률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 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에 따른다.

②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시가 정하는 수수료 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납부하는 금액

4. 협약의 선진 사례

(1) 국내사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

사례 ①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의 『제주도성과관리협약』

-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성과관리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평가해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임
- 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제주도는 중앙정부와 상호 합의를 통해 성과목표를 설정하되, 중기적 비전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2년 단위의 지표중심으로 설정하고, 실제 평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함
- 성과평가는 공개하고, 성과목표-평가-인센티브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성과가 높을 경우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낮을 경우에는 업무개선계획의 수립, 관련제도개선, 보완책 마련 등을 추진함

사례 ② 정부와 12개 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협약

-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관계부처 장관과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와 12개 시·도 간 기본협약을 체결
-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정부와 시·도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기본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

■ 지방자치단체간 협약

사례 ① 전남도-경기도 간의 문화교류 협약

- 고려청자의 산실인 전남 강진군과 경기 이천, 광주, 여주군이 도자기 관련 자료 공유 및 전시에 관한 협력함
- 주요내용은 도자기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와 실학축전 등 공동개최, 실학관련 유물, 자료 제공 및 교류전시 등임

사례 ② 제주도-서울특별시간의 교류협력업무협약

- 문화, 관광 등 양 시도 공동관심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으로 양 시도는 컨벤션뷰로 및 관광마케팅 공동전개, 지역축제 교류, 교통카드 호환 사용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3개 분야 13개 사업에 대해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사례 ③ 전남도-나주시 간의 하늘연 F&B 업무협약

- 전남도에서 생산되는 과실이나 채소 등 170여 종의 친환경 농산물은 하늘연 F&B(농산물 기초재료 개발 및 가공업체)를 통해 가공 판매한다는 것임. 전남도와 나주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수매해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하늘연 F&B는 이를 가공해 대형 식품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약함

(2) 해외사례

■ 영국의 다지역 협약(MAAs)

- 영국의 다지역 협약(Multi-Area Agreements; MAAs)제도는 기존의 행정단위적 접근에서 현 생활공간 및 경제활동의 변화실태에 부응 하는 방향으로 지역정책적 접근의 변화 노력이 대두되면서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다지역 내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하여 지역의 동반 발전과 우선 추진과제의 조정 등에 대한 협약을 중앙정부가 승인, 지원하는 제도임
- 특히, 행정경계를 넘어 지역단위에서 공동의 목표나 공동의 우선 순위 등을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요 메커니즘으로서 도시지역의 다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원칙이나 공간계획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그 동안의 영국의 지역주의 문제에 대한 반성에서 태동된 측면이 많음
- 그동안의 지역기구에 대한 접근의 애로, 비민주적 특성, 주민의 생활 및 업무 영역 반영의 실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영국의 다지역 협약제도에서는 소지역이 강조되고, 다수 참가자들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 제도의 협약목적은 경제발전, 교통, 토지이용계획, 실업, 자본투자, 인프라

라 등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의 마련 및 투자의 효율성을 강화 하자는 것임. 특히, 비용에 대비하여 창출하는 가치가 큰 투자에 대한 빠르 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 특히 지역발전에 대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자발성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새 로운 형식의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여 지역공동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서로 확인하고 재원이나 인적자원의 공동 활용을 모색하고 있음

- 유연하고 비권위적이며, 자생적인 범지역 기구를 통한 접근에서, 특히 기능 적 경제지역에 주목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책이 올바른 공간수준 에서 관리되도록 하며, 둘째, 파트너십의 중시와 파트너들 간의 역할을 명 확하게 하고, 셋째, 각 지역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 이런 원칙 하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협상이 며, 소지역 파트너십의 경우는 성과도출, 중앙정부의 경우는 파트너십이 제 시하는 요청에 각각 합의하고 있음
- 이처럼 다지역 간 협약제도는 다양한 정책범주에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까지를 포함하여 지역(경제적 공동체)의 공동 발전과 상호 우선 추진과제 의 조정 등에 대한 협약을 중앙정부가 승인·지원하는 제도임. 그리고 다양 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서로 확인하고 재원 이나 인적자원의 공동 활용을 모색함. 또한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기초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새 로운 형식의 거버넌스로서 자발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한편 다지역 간 협약제도의 추진동향을 보면, 주된 관심은 지역의 경제발전 이며, 구체적으로 지역 내 기술의 부족, 주택시장의 불균형, 교통 및 인프라 공급 등의 과제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지역연계 교통망, 다양하고 양질의 주택공급,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노동인력의 공급, 서비스 공급시장 등 기초지자체의 범주를 넘어서 공동으로 추진할 내용에 대해 합의함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권한을 상당부분 이양하고, 협력의 제도적 장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주택, 고용, 인력양성 등에 관한 예산의 활용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용하고 있음. 그리고 지역의 기업이나 비즈 니스 개선에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목표의 유통성이 있도록 변경도 승인하고 있음. 지금까지 총 103개 지자체에 대해 30개 정책분야(고용, 인력양성, 교통, 재생사업, 주 택, 지역계획 등)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도 지방정부간 협력 협정(Interlocal Agreement)의 경우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협약체결을 권장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는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방정부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Florida Statutes Article 163, entitled "Florida Interlocal Cooperation Act of 1969"), 이로 인해 2012년 현재 4,000여개에 달하는 지방정부간 협력협정이 만들어져 있음
- 이러한 지방정부간 협력은 주로 2개 이상에 걸쳐 공공서비스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 효율적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정부간 협력 체결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MOU와 같은 형태의 정부간 협력 형태라고 볼 수 있음

〈플로리다주 법률 163조 2항 정부간 협력 조항〉

It is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o permit local governmental units to make the most efficient use of their powers by enabling them to cooperate with other localities on a basis of mutual advantage and thereby to provide services and facilities in a manner and pursuant to form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will accord best with geographic, economic, population, and other factors influencing the needs and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 그리고, 지방정부간 협정은 라고, 플로리다, 그리고 피넬라스 파크 시 간의 지방정부간 협정의 내용임. 세 지방자치단체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나 시설물들의 이용 합의를 나타내주고 있음

〈지방정부간 협정 사례〉

Interlocal Agreement Between the City of Largo, Florida and the City of Pinellas
Park, Florida

....

WHEREAS, Section 163.01, Florida Statutes, Florida Interlocal Cooperation Act of 1969, authorizes municipalities to provide services and facilities through the use of cooperative agreements for the mutual advantage of each governmental entity; and

WHEREAS, the Parties desire to enter into an interlocal agreement providing for the utilization of recreation programs and facilities within each city for the established "resident" program rates, so that each city may provide additional services to its residents

■ 프랑스의 계획계약

-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의 실시와 더불어 계획의 분권화, 민주화를 위하여 1982년에 ‘계획의 개혁법률’을 제정한 후 1984년부터 계획계약(contrat de plan)제도를 도입하였음
- 프랑스 (국가-레지옹간(지방자치단체)) 계획계약은 계획과 계약이라는 행정작용상의 구별되는 형식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고, 국사원(Conseil d'Etat)은 공법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음. 계획계약은 공공서비스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행정계약임
- 계획계약은 이러한 행정계약적 법적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과 국가의 계약을 구체적 목표설정과 이에 대한 재정부담의 협약을 통해 체결됨
- 계획계약은 지방분권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레지옹)의 관계를 안정화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음. 국가가 주도하는 국토개발계획을 조화롭게 하는 수단적 측면이 있지만 계획계약은 계약 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체결의 일방 당사자로서 합의를 이루어 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프랑스의 계획계약(Contrat de Plan)은 지방정부는 강력한 지원과 구체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진정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진 계약형식은 상호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재원을 분담함으로써 win-win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분권화와 효율성의 가치사이에 절묘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적 거버넌스에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다고 평가됨

제3장 도·시·군 간 협약에 관한 기준(원칙)과 쟁점

1. 도·시·군 협약과제의 대상과 유형

■ 협약의 대상사무

- 도·시·군 간의 협약은 지방분권에 대한 협력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분권과 협력은 반대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로 지방분권이 강화될수록 행정주체 간 연결고리로서 협약 도 강화될 것임
- 또한, 특정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규모의 경제」 구현이 가능함. 도·시·군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행정수요에 대해 공동 협력하여 지방행정과 행정서비스의 형평적이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가능할 것임
- 이러한 도·시·군협약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사무의 재배분을 통해 기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처리 곤란하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공동처리 함으로써 기능과 사무배분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협약의 대상사무는 기본적으로 도와 시·군간에 있어 공통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사무로서, 두 자치단체 간 공동수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임
- 즉,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기초자치단체사무인지 문제되지 않음. 다만 현행 법제상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의 하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인 점에서 협약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일의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사무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추진시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 등 행정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무
 -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지역간 갈등예방 및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무임

■ 협약의 유형

- 도-시·군 간의 협약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하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이며, 다른 하나는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약형태임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유형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형임
-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약유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추진시 예산 절감, 행정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경우 체결할 수 있는 유형임
- 이런 경우 협약은 권한의 구체적인 사항, 공무원 파견, 비용분담, 배상액 규모 등 사무수행과 관련되는 일체의 내용에 대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하는 공식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큼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협약에 관한 공통사항들을 정리하여 체결 절차, 형식, 내용, 방법, 요건, 효과 등을 포괄하는 협약의 기준틀(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도-시·군 협력의 제도적 근거

■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① 사무위탁(제151조)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공동처리, 위탁 등에 대한 경험 및 협상문화의 미숙으로 크게 활용 되지 못함

② 행정협의회(제152조~제158조)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 사무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보다는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문제해결 기능이 약하고, 협의사항에 대한 강제력이 결여

③ 지방자치단체 조합(제159조~제164조)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의 승인과 강력한 감독권으로 인한 자율성이 제약되어 제도 기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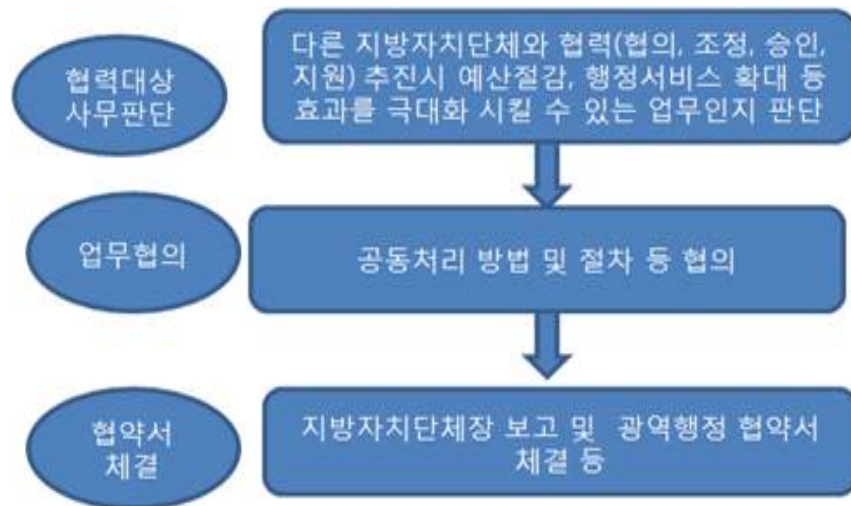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제16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 중앙정부와 협력과 조정의 관계이며, 때로는 갈등과 대립

■ 협약에 관한 제도적 근거

- 도-시·군 간의 협약에 관한 제도적 근거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47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즉, 지방자치법 14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 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업무의 광역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추진절차는 먼저, 협력대상 사무를 판단하며, 업무협의를 한 후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2〉 추진절차



- 협력 대상사무 판단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추진시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 등 행정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무,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지역 간 갈등예방 및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무가 대상임
- 업무협의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공동처리 또는 협의·조정·승인·지원 등 요청, 진행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비용부담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별 부담 금액, 집행방법 등 논의를 들 수 있음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간 MOU 체결 및 협의 동의 공문서 발송 등임

3. 도-시·군 협약의 성립요건

- 일반적으로 협약은 당사자 간의 협력, 특히 의사의 합치를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성립요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만 충족하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 그러한 점에서는 공법상의 계약과 마찬가지로임

■ 권한상의 성립요건

-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는 공행정의 수행방식의 하나인 점에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행정청이 규율대상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져야 함
- 먼저, 권한상 요건의 경우 협약 자체가 2개 이상의 자치단체 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에 계약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법적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무별 협약의 당사자를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러한 경우에 입법적 규율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은 있지만 협약의 의미가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한 협력적 사무수행인 점, 그리고 해당 사무에 기본적인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으로 인해 권한상의 요건문제는 엄격하게 고려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형식상의 성립요건

- 협약의 형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합의내용을 명백히 한다는 의미에서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협약에 의해 공동처리되는 사무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등이 필요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요건이 갖추어져야 함

■ 절차상의 요건

- 협약의 절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음. 다만 사무의 내용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즉, 예산을 수반하거나 조직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에게 이익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승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동시에 협약에 앞서, 협약을 통한 공동처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절차를 사전에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왜냐하면 내용적 타당성 측면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 제도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임(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 이에 있어서는 협약사업의 수요평가와 협약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중요함. 협약사업의 수요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사무를 통해 대상사무를 효율

적인 배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러한 수요평가를 할 수 있는 사무발굴기준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을 보임(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음)

■ 내용상의 요건

- 협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해 정해짐. 다만 협약의 내용이 법령에 반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협약은 허용되지 않음

4 . 도-시·군간 협약의 이행 및 해제

■ 협약의 이행

- 도와 시·군은 협약의 당사자로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짐.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협약은 계약의 본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협약의 이행에 관해서는 사법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당사자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자력강제는 불가능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 그러나 일반적 공법상 계약과 달리,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는 본질적으로 행정의 수행방식이며, 행정주체간의 법률관계인 점에서 본다면, 협약이 가지는 의사합치적 본질에만 근거하여 사법상의 법률 관계와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협약의 이행 및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협약의 변경 · 해제

- 협약에 있어서도 그 본질이 계약이라는 점에서, 협약의 변경 및 해제의 가능성은 일반적 계약법적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협약의 본질이 지방자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와 시·군간 신뢰관계라는 차원에서만 변경·해제를 논할 수 없으며, 주민의 이익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될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5 . 도-시·군간 협약과제 발굴의 기준(원칙)

■ 협약과제 발굴기준(안)

- 도와 시·군의 협약의 대상사무는 기본적으로 도와 시·군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관련성이 가지는 사무로써 협약과제의 발굴 기준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① 도-시·군이 공통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협약을 체결할 내용이 도와 시·군이 공통적으로 관련된 사안으로 공동의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

② 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적인 과제

협약체결을 통해 달성될 파급효과가 매우 크거나 또는 도와 시·군이 함께 전략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지역 간 발전과 공동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제

③ 행정 효율의 시너지 효과가 크거나 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제

도와 시·군이 각자 사무를 수행하는 것 보다 함께 협력하여 상호 부족한 발전 역량을 보완하므로써 광역적인 문제해결의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거나, 또는 지역 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제

④ 도-시·군 단독 추진 시 행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제

행정주체별 지역 간 분절 된 사무수행으로 행정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도민의 행정서비스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상호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제

⑤ 주민생활권 단위로 각종 시설물 등의 공동활용이 효율적인 과제

기초생활권 중심으로 시·군의 경계를 초월하여 주민이 가까운 생활시설물 등의 자유로운 이용에 따라 주민편익이 증진되거나, 기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여 소모적인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과제

⑥ 상호 교류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

도-시군 상호간에 인적, 물적 교류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행정서비스 제고 및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과제

■ 과제발굴시 착안사항

- 도와 시·군 간의 협약은 지방자치의 본원적 의미인 민주적 자주권이 침해받지 않는 수평적인 협약임
- 이에 협약과제에 대한 명확한 전략 및 비전이 제시되고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과제중심으로 발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즉, 신규 사무분야 또는 기존 사무에 보충적으로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분석과 적정한 범위설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필요가 있음
- 또한 협약사업의 실제 협약의 체결에 앞서 구체적 지표에 의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함
- 이에 몇 가지 단계적 이행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가령
 - ① 협약사업의 명확한 목표설정
 - ② 서비스제공 방법과 서비스 수준 (가급적 계량화)
 - ③ 총비용과 분담비용
 - ④ 협약의 경제적, 행정적 운영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약사무 발굴의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성과창출 가능성임, 도-시·군 간 연계·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야 또는 사무임
 - 둘째,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임. 충청남도 지역발전 정책과의 부합성, 구체성,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된 분야 또는 사무임
 - 셋째, 창의성임. 기 추진되던 분야와 유사·중복되지 않는 분야 또는 지역 특성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또는 사무임
 - 넷째, 연계 및 협력성임. 도-시·군 간 합의 수준, 사업 추진체계, 연계협력 등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 또는 사무임
-
- 이와같이 협약과제 발굴기준과 착안사항을 고려하여 협약과제는 도와 시·군의 공통적 관련성이 있는 사무에 대해 공익상의 합목적적인 이유를 필요로 하며, 단순히 사무처리의 편의성 및 경제성만을 이유로 협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사무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합리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도와 시·군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어야 함
 - 또한 도와 시·군의 협약은 도와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역할 분담, 의무행, 재원 분담 등 협약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상호 협약내용의 정책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함
 - 본 연구과제는 도와 시·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질수 있는 최근 현안정책등을 관계 공무원 인터뷰 조사를 통해 리스트화 하여, 이중에서도 실현가능한 경쟁력 있는 과제를 압축하여,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협약체결 원칙

- 협약사무 발굴의 방향을 바탕으로 협약체결의 원칙은
 - 첫째, 도-시·군간 민주적, 자율적인 협약체결임
 - － 행정주체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의 합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체결함
 - 둘째, 보충적 수단으로서 협약체결임
 - － 기존의 법적 시스템만으로는 상호 협력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협약을 추진함
 - 마지막으로 분권적 상생협력발전 추구임
 - － 중앙 의존형 관행에서 탈피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분권적, 자생적 지역 간 상생 협력과제의 발굴로 실천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함

제4장 도-시·군 협약과제

협약 1 . 국 · 도비 부담비율 합리적 개선을 통한 재정혁신

◆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시·군비의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충남형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

■ 현 실태

- 도비 보조사업의 낮은 지원을 개선 요구(15.4.21 시장군수 회의)
-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 증가(12년 2,995 → 15년 3,653억원 ↑ 22%)
- 도 보통교부세 감소(12년 5,622 → 15년 5,180억원 ↓ 7.8%)
- 국고보조사업 도비 의무부담 미준수(13건 337억)

■ 쟁점사항

- 국고보조사업 도비 의무부담비율 미준수에 대한 개선 건의(시·군)
- 도 역점 · 공약사업에 대한 도비보조를 낮아(9~30%) 시·군 재정부담 가중
- 도-시·군간 기능 재정립 관련 시·군 주도사업 시·군에 이양
- 사업 축소(감액·일몰)되는 부서 및 이해당사자 반발

■ 도-시·군 합의사항

- 도비부담 법적비율 미 준수 사업 단계적 개선(3:7→5:5)
 - 16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부터 우선 적용 추진
 - 도 공약사업 등 도비부담 단계적 상향(16년~)
 - 공약사업(20~30% → 50% 수준)/시책사업(9~20% → 30~50% 수준)
 - 도-시·군간 기능 조정 및 성과 미흡사업 단계적 일몰, 감액 등 합리적 개선
 - 시·군 추진 업무 도비 보조 하향조정(3:7), 사업규모 축소, 일몰
- ➔ 결과적으로, 시·군에 지원되는 도비는 200억 정도 증가되는 효과

※ 참고 : 국도비 부담비율 개선내역

1) 증액 사업

① 법적 비율 미준수 사업

■ 기본방향

- 재정여건상 부득히 법정 보조율이 미준수 되었던 사업에 대해 법정 보조 비율 준수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안정화 추진

〈예시〉

- **영유아보육료**(저출산고령화정책과) : 3:7→5:5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중 “영유아보육사업”
- **가정양육수당지원**(저출산고령화정책과) : 3:7→5:5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중 “영유아보육사업”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물관리정책과) : 3:7→5:5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중 “하수처리시설 지원”

② 민선6기 공약사항

■ 기본방향

- 공약사업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정 보조비율 유지
- 도 시책사업의 추진력 확보 및 빠른 정책 확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도비 보조율 상향 조정

〈예시〉

- **행복경로당 지원**(저출산고령화정책과) : 3:7→5:5
↳ 공약명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행복경로당 확대 운영
-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저출산고령화정책과) : 2:8→5:5
↳ 공약명 :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지원**(장애인복지과) : 1.5:8.5→5:5
↳ 공약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2) 감액 사업

① 보조율 하향이 필요한 사업

■ 기본방향

- 특별시책 및 시범사업 등의 사업권장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높은 보조율을 적용했던 사업에 대하여 여건변화 등에 따라 도비 보조율 하향 조정

〈예시〉

- **특수상황지역 개발(수산과) : 4:6→3:7**
↳ “찾아가고 싶은 섬”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법적 부담비율이 아니며, 기본비율(3:7) 유지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물관리정책과) : 5:5→3:7**
↳ 시·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며, 향후 시·군에 이양해야 할 사업
-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건축도시과) : 5:5→3:7**
↳ 도 역점추진 및 공약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기본비율(3:7) 유지

② 사업 규모의 축소가 필요한 사업

■ 기본방향

- 사업 추진 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히 예산규모 조정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관행적인 예산편성 축소 운영

〈예시〉

-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축산과)**
↳ 지원 대상에서 대규모, 기업농을 제외하여 사업 규모 축소

협약 2. “서울 충남학사” 건립

◆ 道내 출신 서울소재 대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지역 인재의 질적 향상,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하여 서울에 충남학사 건립 추진

■ 추진배경

- 우리 도내 학생 중 매년 3,000여명이 수도권 대학 진학(약 1만5천명 재학)
 - 국내 사립대 등록금 1,000만원 시대로 도민들의 학비부담 가중

■ 학사건립계획(안)

- (수용규모) 200~300명 내외 (2인1실)
- (소요비용) 약 150~250억원 예상

■ 건립규모(안)

| 구분 | 구 모 | 소요 비용 | 장단점 분석 |
|-----|------------|-----------------------|--|
| 제1안 | 300명 내외 | 250 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 후 신축(200명을 초과할 경우 리모델링 곤란) • 공통지분 200명+추가지분 100명 내외(희망 시·군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지분 소요 비용은 희망 시·군에서 부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학사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건축 및 디자인 가능 – (단점) 건축비용 증가 및 건축공사 장기간 소요 </div> |
| 제2안 | 200명 이내 | 150 ~ 200 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또는 부지 매입 후 신축 • 공통지분 200명 이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건축비용 부담 완화 – (단점) 리모델링의 경우 제한된 규모·시설 범위내 활용 불가피 </div> |

※ 제1안으로 추진 시 제2안 보다 추가되는 인원(100명)은 희망하는 시·군에 배정(재원부담)

■ [검토결과] : 제1안

- 충남 출신의 서울 소재 대학교 입학생 인원 및 他 시·도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제1안이 적정

■ 재원대책

- 소요예산 : 약 250억원(재단 장학기금 + 시·군 추가지분 충당금 + 기타)
 - (장학기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중 도와 시·군이 미납액을 납부할 경우 기금 298억원* 조성
 - *현 납부액 222억 + 미납액(도43억+시·군33억) = 298억원
 - (추가지분) 희망 시·군에서 충당(1실(1실 2인)당 1억 3천만원):약 90억원
 - 12개 시·군에서 추가지분 확보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
 - ※ 현재까지 시·군 추가지분 신청:총69실(신축규모는 도-시·군 협의를 통해 별도 확정)
 - 추가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학사 입사생 선발권 부여
 - (기타) 민간 모금 등을 위해 노력
- ➔ 장학기금(추가지분 및 민간모금액 포함)을 활용하여 건립 예정

■ 쟁점사항

- 2012년 道 인재육성재단 출범 당시 도와 시·군은 “장학사업”, “서울 충남학사 건립” 등을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하였으나
 - 일부 시·군에서 기금 출연금을 미납(33억)하여 장학기금 목표 달성 지연
- **완납(7)** : 공주, 논산, 계룡, 청양, 서천, 홍성, 예산
 - **미납(8)** : 천안, 아산, 보령, 서산, 당진, 금산, 부여, 태안 (내역 별첨)
- 학사건립 시기, 위치, 규모 등 기본계획 미수립
 - (道입장) 우선 도와 시·군의 부담금 완납(16년까지) 등 장학기금 목표 달성 및 금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예정

■ 도-시·군 합의사항

- 장학기금 미납 8개 시·군은 ' 16년까지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납부
 - 시·군 출연금 목표액 75억원 중 42억 납부 / 미납액 33억원
- 추가 지분 희망 시·군은 학사 건립비용을 ' 16년도 본예산에 반영

※ 참고 1 : 재)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조성 현황

' 12년 재)충남인재육성재단 출범 이후 장학사업, 서울학사 건립 등을 위해 도와 시군별 배분액을 정하여 장학기금을 모금 중으로 관심과 참여가 필요

■ 장학기금 조성 현황

| 합 계 | | 현 금 | | | | 현 물 |
|-----|-----|-----|-----|-----|----|-----|
| | | 소 계 | 도 | 시·군 | 민간 | |
| 목표액 | 500 | 355 | 217 | 75 | 63 | 145 |
| 모금액 | 395 | 222 | 174 | 42 | 6 | 173 |

■ 시·군별 출연현황(7곳 완납, 8곳 미납)

| 시 군 | 합계 | 천안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계룡 | 당진 | 금산 | 부여 | 서천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 |
|-----|----|------|----|----|-----|----|----|-----|-----|----|-----|----|-----|-----|-----|----|
| 목표액 | 75 | 10.5 | 6 | 6 | 7.5 | 6 | 6 | 1.5 | 7.5 | 3 | 4.5 | 3 | 1.5 | 4.5 | 4.5 | 3 |
| 출연액 | 42 | 3 | 6 | 4 | 1 | 3 | 6 | 1.5 | 1.5 | 1 | 1.5 | 3 | 1.5 | 4.5 | 4.5 | 0 |
| 미납액 | 33 | 7.5 | - | 2 | 6.5 | 3 | - | - | 6 | 2 | 3 | - | - | - | - | 3 |

■ 추가지분 시·군별 신청현황(12개 시·군)

| 시 군 | 합계 | 천안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계룡 | 당진 | 금산 | 부여 | 서천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 |
|-------|------|-----|-----|------|-----|-----|------|-----|----|----|----|-----|-----|-----|-----|----|
| 금 액 | 89.7 | 6.5 | 5.2 | 10.4 | 6.5 | 6.5 | 14.3 | 3.9 | 13 | - | - | 3.9 | 3.9 | 6.5 | 9.1 | - |
| 실 (室) | 69 | 5 | 4 | 8 | 5 | 5 | 11 | 3 | 10 | - | - | 3 | 3 | 5 | 7 | - |

※ 2인1실당 : 1억 3천만원으로 산출

※ 참고 2 : 사·도별 서울학생기숙사 현황

| 구분 | 경기도 장학관 | 강원학사 | 충 북 미래관 | 전 북 장학숙 | 남도합숙 (광주+전남) | 탐라영재관 (제주학사) |
|----------|--------------------------------|--------------------------------|----------------------------|----------------------|-----------------------|---|
| 개관 | 1986.12.27 | 1989.2.28 | 2009.9.16 | 1992.3.7 | 1994.2. | 2001.1. |
| 위치 | 도봉구 쌍문동 | 관악구 난곡동 | 영등포구 당산동가 | 서초구 방배동 | 동작구 대방동 | 강서구 가양동 |
| 운영 주체 | 경기도회 장 학 회 | 강 원 인 육성재단 | 충북학사 | 전북인재 육성재단 | 남도 장학회 | 제주지방 개발공사 |
| 부지 규모 | 8,038㎡ (2,431평) | 10,039㎡ (3,037평) | 2,692㎡ (814평) | 4,151㎡ (1,256평) | 7,798㎡ (2,359평) | 2,089㎡ (631평) |
| 시설 규모 | 4개동 (지하1, 지상5) ※모두 동일 | 2개동 (지하1, 지상4) ※모두 동일 | 1개동 (지하1, 지상 10층) | 1개동 (지하1, 지상5) | 1개동 (지하3, 지상11) | 1개동 (지하4, 지상11 ※4층부터 기숙사 |
| 건립 예산 | 55억 (증축 포함) | 34억원 (증축 포함) | 395억원 | 65억원 | 280억원 | 190억원 |
| 수용 인원 | 336명 남192 여144 | 264명 남138 여126 | 318명 남159 여159 | 308명 남176 여132 | 810명 남540 여270 | 300명 남157 여143 |
| 시설 | 2인1실 | 2인1실 | 2인1실 | 2인1실 | 2인1실 | 2인1실, 3인1실 |
| 비용 | 입사비 5만원+ 월12만원 | 입사비 20만원+ 월15만원 | 입사비 5만원+ 월15만원 | 입사비 7만원+ 월15만원 | 입사비 10만원+ 월14만원 | 입사비 30만원 월13만원 (2인실) 월11만원 (3인실) |
| 문화 생활 | 유적지탐방, 해외연수 등 | 유럽여행지원, 교양강좌 등 | 학사제, 체육대회 등 | 교양강좌, 동아리 운영 등 | 계절 열림제, 특별교육 등 | 자율회 운 영 |

- ① (미건립)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북, 충남
 ② (추진 중) 경남
 ③ (제 2학사 건립) 강원, 광주·전남, 충북(타당성 용역 중)

협약 3.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제안:공주,보령,서산,논산,태안)

◆ 부처별 계획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비 매칭 조건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

■ 현 실태

- 사전 협의 없이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도 재정 부담 가중
 - 시·군 독자적 공모사업 신청 이후 도비 부담 요청하고 있어 도 재정 부담 가중
 - 도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없어 도비 지원 근거 부족
-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으로 지역갈등 및 행정력 낭비 사례 발생
 - 시·군 재정여건, 환경, 산업시설 등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 추진으로 행정력 낭비 초래

■ 중앙 공모사업 추진 절차

- ① 공모사업 시행공고(중앙부처) → ② 재정현안 조정 회의(예산실)
→ ③ 지방비 부담 협약, 공모참여(도, 시·군) → ④ 사업선정(중앙부처)
→ ⑤ 추경 또는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 → ⑥ 사업추진

■ 중앙 공모사업 대응전략

- 제1단계(동향파악) : 부처별 공모대상, 공모 시기 등
 - 고향사랑모니터 등 인적네트워크 활용, 대상사업 리스트화 등
- 제2단계(준비단계) : 연간 대응계획 수립
 - 시·군별 경쟁력있는 사업 선별 / 도+시·군 공조
- 제3단계(응모신청) : 응모 신청서 작성 자문(연구기관 협조)
- 제4단계(평가선정) : 부처·평가위원 등 논리제공, 정치권 공조

■ 지방비 부담 원칙

- 도에서 주관하고 직접 집행하는 사업 : 도비 100%
- 시·군, 대학, 연구기관 주관 사업

| 사업성격 | 도비 보조율 | 비 고 |
|---|-----------|--------|
| · 다수의 주민 수혜사업 및 도 시책사업 등 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 | 30~50% | |
| · 시·군 자체 추진사업으로 광역적 성격 및 도가 권장하는 사업 | 20~30% | |
| · 특정 시·군 현안이지만, 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 | |

- ※ 특정 시·군 수혜사업 또는 시·군간 경쟁을 통해 응모대상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시·군에서 응모를 추진하고 지방비 부담도 전액 시·군비 원칙
- ※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도 정책 상황관리회의」 심의 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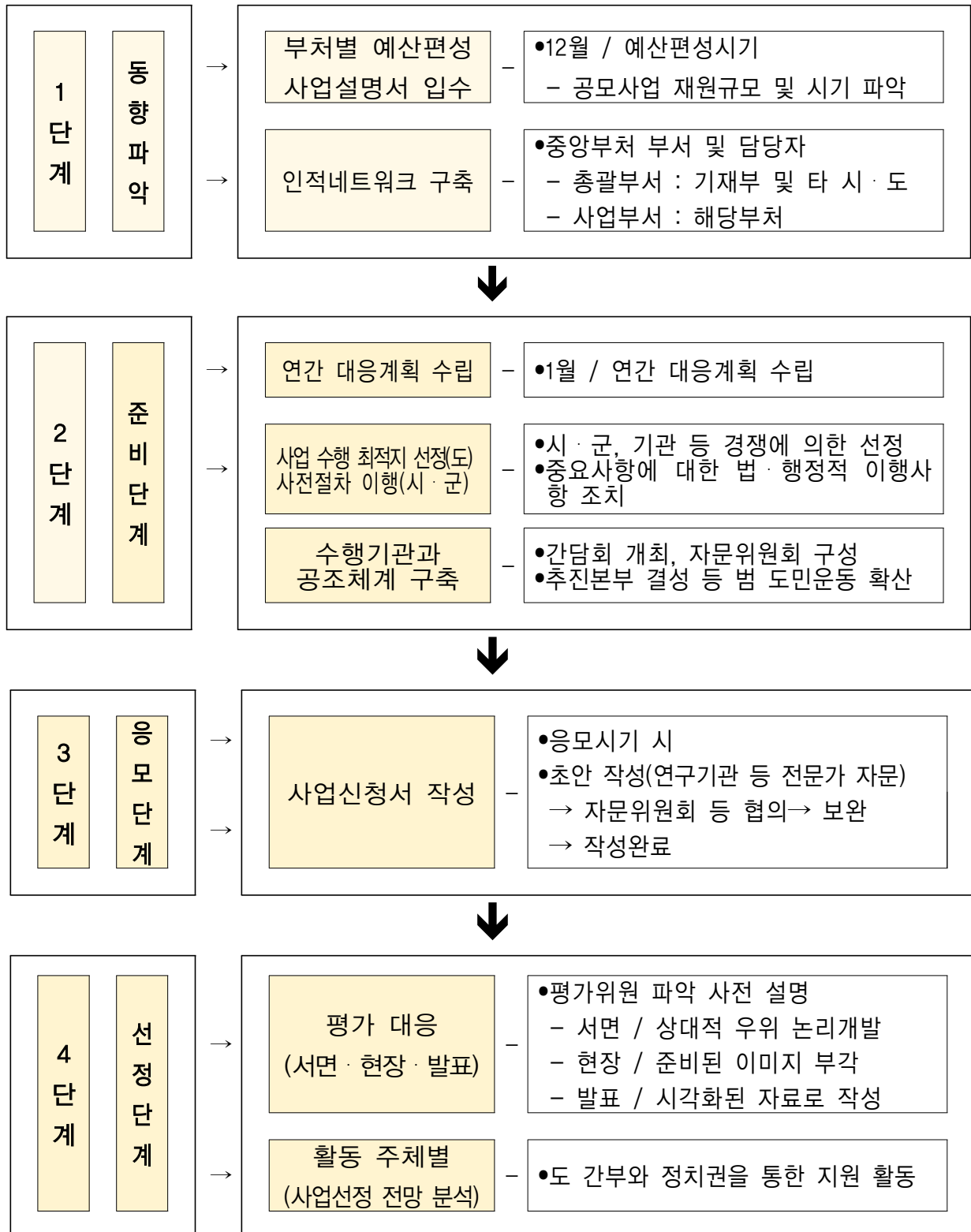
■ 쟁점사항

- 도가 정한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원칙의 도비 보조율에 대한 사항
- 공모 준비단계에서의 도, 시·군 재정부담 비율 결정 문제
- 대학, 연구기관 참여시 자부담 설정, 도민 수혜도 등
- 사업 성격 및 수혜대상 범위 등 사업주체 구분 결정 문제

■ 도-시·군 합의사항

- (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추진체계 구축
 - － 공모사업 사전 정보 조사공유체계 구축
 - －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 공모사업 심사 위원회 구성 및 추진 필요성·타당성 검토
- (시·군) 지역 특색있는 사업 발굴
 - － 기존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 발굴
 - － 공모사업 단계별 공동대응 및 체계적인 사업성과 관리 체계 구축

※ 참고 : 공모사업 단계별 대응 로드맵



협약 4.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제안 : 논산)

◆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도농격차 및 농어촌 공동화 등 지역문제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배경

- 충남 사회적경제는 점진적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對내·외적 공감대 부족
 - 시·군과 현장에서의 체감도 미흡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애로
- ⇒ 자본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경제로서 사회적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 필요

■ 육성현황

- 현황 : 436개(사회적기업 143, 마을기업 90, 협동조합 203)/' 14년 기준
 - 종사자 4,276명, 매출액 81,468백만원
- 그동안 지원실적(' 11~' 14) : 297억원(사회적기업 235, 마을기업 62)
- 지원계획(' 15) : 104.6억원(사회적기업 96, 마을기업 8.6) / 국비보조사업
 - 인건비·사업비 및 기타 「경영컨설팅, 공공구매」 등 지원

■ 현 실태

-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 인식 부족 → 기업육성 애로
 - 전체 경제영역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미미하여 도민 관심 등 부족
 - ▶ 사회적경제 종사자수(4,276명)는 충남 고용인구(1,158천명)의 0.4%에 불과
- 양적성장에 치중, 중앙정부 일자리제공 중심의 사업집행→지역특성 미반영
 - ▶ 일자리제공형(80% 차지)에서, 사회혁신형* 중심으로 육성방향 전환 필요
- *설립목적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문제(노인돌봄 문제 등) 해결이 목적인 기업
- 조직영세, 경영능력 부족, 다양성 부족 → 자립성장 한계
 - 장·노년층이 주도하여 발전 정체, 참신한 청년기업가 등 육성 필요
 - ▶ 사회적기업 연령대 40대 이상이 95% / 고용규모 10명 이하가 70% 차지
- 생산제품 판로 어려움 → 윤리적 소비, 착한소비 분위기 확산 미흡
 - ▶ 사회적기업 196개소 중 4년동안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13), 취소·반납(4) 등 발생

■ 쟁점사항

- 범도민적 인식과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공감대 확산
 - 그간 많은 사업비(4년간 297억원) 투자에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 인식 저조
→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추진
 - ※ (사례) 사회적경제 교재개발 및 교육(아산시), 사회적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태안군) 등
- 시·군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우선구매 확대
 - 사회적기업 선정 前 단계의 기업 발굴 육성(시·군 자체예산지원: 천안, 서천, 부여)
 - ※ (사례) 서천 주민기업 발굴육성사업(서천군),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부여군)
 -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기업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우선구매 확대
-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시·군단위 현지화가 중요
 - 그동안의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은 도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시·군 자체사업 발굴·육성 병행
 - 도 중심의 「공모 지원형」 → 시·군 중심의 「발굴 보육형」 으로 전환
 - ※ 공모지원형: 도에서 지침으로 제시한 일률적 기준요건에 맞으면 선정하는 방식
 - ※ 발굴보육형: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 시·군에서 사전 육성하는 방식

■ 도-시·군 합의사항

- 사회적경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 (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주민자치센터 강좌, 시민대학, 초·중고 학생 교육 등) 운영, 도정신문,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 전개
 - ▶ (시·군) 시·군별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홍보 및 교육 추진
 - * 주민자치센터 연계 사회적경제 교육, 사회복지관 관장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등
-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충남형 사업 전개
 - ▶ (도) 지역문제 해결위한 청년활동가 지원('16년부터 연10명씩 / 2억원), 지역 및 업종별 네트워크 활성화
 - ▶ (시·군) 시·군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 * (사례) 지역순환농업지향 아산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아산시)
-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판로 안정화 지원
 - 지역 내 윤리적 소비 및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도-시·군 공동 노력
 - ▶ (도) 따숨서포터즈* 운영,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체험 평가 홍보를 목적으로 모집 구성된 소비자평가단(50명)
 - ▶ (시·군)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기업을 연계, 우선구매 등 협력 촉진
 - * (사례)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연계(서천군), 홍성군 직원상록회(홍성군) 식자재 구매 등

협약 5. 충남 상생산업단 정주여건 개선

◆ 생산위주의 산업단지 개발에서 탈피하여 생산·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갖춘 상생산업단지 조성

■ 추진배경

- 근로자 정주여건이 기업환경 및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
 - 그간 기업유치 위한 산업단지 공급에만 치중, 근로자의 근무환경(정주여건) 조성은 소홀
- 우리 도(道) 근로자의 외지에서 출퇴근으로 지역소득 역외유출 심화
 -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은 24.1%로 전남에 이어 전국 2위(13년)
- 외지 출퇴근 현황 : 55,297명 (43.1%)
 - 총 근로자 : 128,222명(현지인 72,925명 56.9%) – 15년 6월말 현재
- 정주여건 조사 결과('12. 9.) 만족도 저조 (5점 만점에 3.0점 이하)
 - 주거분야(2.8), 생활편익시설·교육·복지분야(2.6), 의료·교통분야(2.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주민이 함께 공존하며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조성
(생산+업무+주거+교육+의료+문화가 연계된 정주환경)
- 산단현황 : 총 141개소 105,443천㎡
(국가산단 5개, 일반산단 45개, 도시첨단 1개, 농공단지 90개)
- 사업기간 : 2015~2019 (5개년 계획)
- 주요사업 분야
 - (하드웨어 분야) 공동직장어린이집 3, 공원조성 5, 체육시설 6, 공동주택 4, 행복주택(LH) 3, 공동식당 4, 근로자 복지센터 1개소
 - (소프트웨어 분야) 문화예술행사 지원 1, 공동통근버스 운행 지원 3개소
- 사업예산 : 총 4,720억원(국1,869,도262,시·군282,민자/자부담2,307)

■ 추진현황

- 상생산단 정주여건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107개소) : 15.2.~6.
 - ※ 선호도 조사결과 : ❶ 복합커뮤니티 ❷ 산단환경정비 ❸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❹ 공동통근버스 ❺ 출장보건 진료
- 6대 중점과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계획 마련(15.8)
 - * ❶ 교육 ❷ 문화 ❸ 생활여건 ❹ 의료·복지 ❺ 환경개선 ❻ 근로생활
 -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의 지원 강화, 산단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 추진
- 산업단지별 상생산단 조성 중장기 계획수립 (15.9월)

■ 쟁점사항

- 그간 산단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상생산단 조성 소홀
 - 산업단지 지역의 적극적인 정주여건 조성(개선)을 통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 필요
- 사업추진 계획수립 단계이나 상생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 상생산단은 근로자 및 산단인근 주민을 위한 사업임에도 일반주민을 위한 시설 조성 요구 사례 발생
- 열악한 지방재정(도비, 시·군비) 감안 국비지원 사업 유치 절실
 - 중앙단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 노력 필요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국비 90%지원), 산재예방시설(국비 50%지원) 등)

■ 도-시·군 합의사항

- (도) 산단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 실태조사 결과분석을 통한 시·군별 지원대상 사업 및 규모 확정
 - 중앙부처 국비지원 공모사업 등과 연계한 상생산단 조성 추진
- (시·군)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상생산단 정주여건 조성사업 추진
 - 산단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추진, 사업확정에 따른 예산확보(16년)
 -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정주여건 개선 추진
 - 상생산단 관련 중앙 공모사업의 적극적 발굴 및 참여

협약 6. 도-시·군 인사교류 활성화 (제안 : 아산, 계룡, 서천)

◆ 도-시·군(시·군 상호)간 정보공유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의 침체 방지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

■ 인사교류 추진경위

- 민선1·2기 : 관선시대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점진적 축소)
- 민선3~5기 : 인사교류 협약체결(도지사, 시장·군수)
 - ▶ 상호주의 원칙 1:1 교류, 5급 교류비율 10% 유지
 - ➡ 2011년부터 계획인사교류(5~6급)로 전환, 1:1교류 추진

■ 운영실태 (문제점)

- 「관선시절」부터 「민선4기」까지는 道 5급 자원의 시·군 전출 등
- 道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 2007년부터 시·군 공무원노조에서 시·군의 인사적체 등을 이유로 道자원의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 2009년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6년에 걸쳐 시·군에 남아있던 道 자원(43명)을 전원 복귀시켜 인사교류의 큰 흐름 끊김
- 현재는 道와 시·군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5~6급은 1:1 상호 계획교류, 7급 이하는 道 전입 등 형식으로 교류 중이나 추진 미흡

〈인사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

- (1) 생활 주거지 변화에 따른 불편
 - (2) 교류공무원의 원 소속 복귀 시 보직에 대한 불안감
 - (3) 시·군 5급(과장)과 도 5급(팀장)의 간극에 따른 업무부담
 - (4) 조직차원에서 우수 자원을 교류대상자로 선발하지 않는 점
 - (5)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인사교류(타 기관 전출)를 강제할 수 없는 점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4항(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필요)

■ 쟁점사항

-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을 앞두고 세대교체로 인한 조직의 역량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
- 시·군의 계획(인사)교류 추진 의지 부족
 - 인사교류는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투자 방식, 시장·군수의 강력한 의지 필요
 - ※ 아산시의 경우,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지휘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5급 우수자원(2명)을 광역행정 체험 후 복귀토록 선발
- 시·군과 인사교류된 道 자원에 대해 역할이 미미한 보직 부여
 - 잠시 왔다 가는 교류자원으로 인식, 시·군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과장, 읍면동장 직위 보다는 의회전문위원 등 보직 부여
- 인사교류를 문제 직원의 해소방안으로 활용
 - 상대기관에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계기

■ 도-시·군 합의사항

- 도-시·군간 전 직렬 대상 인사교류 실시(교류기간 2년 단위)

교류 목표

- 5급·6급 : 시·군별 각 1~2명 ※ 기술직 포함

- (그 동안) 행정직 중심(70%), 특정 시·군에 한정된 교류
- 직렬별 교류 현황 - 총 83명(행정 58, 기술 25) ※ '11 ~ '15년
 행정 58명(70%), 세무 9명(10.8%), 녹지 4명(4.8%), 지도사 4명(4.8%),
 식품위생 2명(2.4%), 사회복지 2명(2.4%), 보건 2명(2.4%), 시설 2명(2.4%)

- 우수자원을 교류자원으로 선발
 - 교류 후 원 소속 복귀시 도·시·군간 연계성 강화 자원으로 활용토록 승진직후 또는 승진 후 2년 이내 우수자원으로 선발(5·6급 공통)
- 인사교류 자원에 대한 희망보직 부여
 - 도 : 시·군 교류자원에 대한 희망보직(과 단위 포함) 반영
 - 시·군 : 도 교류자원 보직부여(5급 - 과장 또는 읍면동장 / 6급 - 팀장)
-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행 확행
 - 인사교류자가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 가점(월 0.1점), 근무성적 평정(최하 “우” 등급), 성과상여금(최소 “A” 등급) 등 보장

※ 참고 1 : 도-시·군간 계획인사교류 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

■ 계획(인사)교류 기준

- (교류원칙) 동일 직렬·직급간 도·시·군 1:1 상호교류 후 원 소속 복귀
※ 직렬·직급이 상이할 경우, 보직(업무내용)이 동일한 경우 교류 가능
- (교류형식) 파견, 근무기간 2년 원칙(1년 근무 또는 1년 연장 가능)
- (교류대상) 5~6급(지도직 포함) 전 직렬(승진 예정자 포함)
- (교류기관) 도↔시·군간, 시·군 상호간
- (교류방법) 기관 상호간 1:1 파견교류 원칙(동일 직렬·직급간 교류)

■ 인사교류 인센티브

[재 정 상]

- (교류수당) 월 55만원(3년 초과 불가)
- (주택보조비) 월 60만원
- 주택보조비(교류지원)는 아래 기준에 의거 지원

- ❖ 자택 또는 출·퇴근시 유류비 등 감안, 주택보조비의 1/3 범위내 지급
 - ▶ 왕복 120km 이상인 경우, 주택보조비 지급 : 60만원 이내
 -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확인서 필요, 미확인시 교류지원비 지급
 - ▶ 왕복 120km 미만인 경우, 교류지원비 지급 : 20만원
 - 다만, 주거이전의 경우 주택보조비 지급
- ※ 근무지(시·군청)와 실제 출퇴근 거리(여건) 등을 비교 판단 지원

[인 사 상] - 1년 이상 교류근무자

- (교류 가점) 월 0.1점(최대 2.4점)
- 근무성적 평정(최하, '우' 등급), 성과 상여금(최소, 'A' 등급)
 - 동일직급에서 교류前 1년 동안 받았던 평정등급 이상 보장
-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년 이상 근무자) 희망보직 부여 및 특별 승급(1호봉, 1회)
 - 교류완료 후 복귀시 보직은 교류전 보다 상위 보직 부여
- ※ 단, 원소속기관의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업무실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 참고 2 : 도↔시·군간 계획인사교류 실적 (2011 ~ 2015. 10월 현재)

| 구 분 | 도 → 시·군 | | | 시·군 → 도 | | | 시·군 상호간 |
|------|---------|----|----|---------|----|----|---------------|
| | 계 | 5급 | 6급 | 계 | 5급 | 6급 | |
| 계(명) | 31 | 5 | 26 | 36 | 5 | 31 | 16 |
| 천안시 | 6 | 1 | 5 | 8 | 1 | 7 | 2 (↔아산) |
| 공주시 | 3 | 1 | 2 | 3 | 1 | 2 | 1 (↔청양) |
| 보령시 | 1 | | 1 | 1 | | 1 | |
| 아산시 | 5 | 2 | 3 | 5 | 2 | 3 | 2 (↔천안) |
| 서산시 | | | | | | | |
| 논산시 | 2 | | 2 | 5 | | 5 | 1 (↔금산) |
| 계룡시 | 1 | | 1 | 1 | | 1 | |
| 당진시 | 6 | | 6 | 6 | | 6 | |
| 금산군 | | | | | | | 1 (↔논산) |
| 부여군 | 2 | | 2 | 2 | | 2 | 1 (↔청양) |
| 서천군 | 2 | 1 | 1 | 2 | 1 | 1 | |
| 청양군 | | | | | | | 2 (↔공주,부여) |
| 홍성군 | 3 | | 3 | 3 | | 3 | 3 (↔예산) |
| 예산군 | | | | | | | 3 (↔홍성) |
| 태안군 | | | | | | | |

협약 7. 충남형 동네자치 확산 [제안 : 보령, 논산, 태안]

- ◆ 안전, 복지, 문화 등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 접근이 가능한 동네 중심의 주민자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충남형 자치공동체 육성
 ⇒ 동네자치는 작은 생활 정부로서 지방자치의 출발점

■ 추진배경

- 그간 우리는 경제성장 중심 전략을 통해 1인당 GDP 3만불 근접 반면, 노동시간 2위, 빈곤격차 3위, 자살률 1위 등 국민행복과 괴리
 - 산업, 교육, 복지 등 지역사회 문제를 기초·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적 참여와 배려, 동네자치를 통한 신뢰형성 필요

■ 사업개요

- 지속가능한 자치공동체 육성(' 18년까지 100개소)→마을 자치역량 강화
 - 활동가 발굴·육성 : 30명(15년) → 100명(18년)
 -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기업 등 지역네트워크 활용, 공동체에 관심이 높고, 잠재력 있는 주민 대상으로 리더 발굴 및 공동체 육성(컨설팅 등)
- 주민자치 모델 개발(3개 유형) → 시범적용 예정(5개소)
 -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 적용 후 분석(5개 시·군)
 - ※ 자치모델 유형(3): ①지역사회 결속형, ②지역사회 교량형, ③지역사회 민관협치형
- 주민자치 인식 확산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年 3천명)
 - (대상)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과정) 기초→심화→전문교육

■ 추진현황

- 주민자치의식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교육 실시(9,572명)
 - ※ ' 13) 2개 과정 3,260명/ ' 14) 6개 과정 3,865명 / ' 15.6월) 10개 과정 2,447명
- 15년 마을자치 역량조사(45개소)→자치공동체 선정(15개소)
 - ※ 시범공동체 육성(13~14):총 11개소(읍면동 주민자치회 7, 아파트 2, 마을 2)
- 주민자치 모델 유형 개발위한 연구용역중(15.6~15.11)

■ 문제점

- 행정에 의존(주민자치·마을사업)하려는 경향이 강해 주민자립 지연
 - 시범사업 결과 대부분 지원예산 집행위주의 자치활동 시행, 재정지원 중단시 자치공동체 활동의 자발적인 지속성 한계
- 공동체사업 기획·집행·네트워크 주도할 역량있는 리더 부족
 - 도·시·군 역할분담을 통해 현장활동가 육성 및 주민자치 의식 확산 필요
- ※ (도) 전문가 양성, (시·군)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 마을만들기·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과 연계

■ 쟁점사항

- 동네자치 교육은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시·군 단위에서 주도해야 효과적임에도 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 해결 방안
 - 주민자치의식 확산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와 시·군간 역할분담
- 주민자치사업을 선도할 활동가(마을리더)의 체계적 발굴·육성을 위한 도와 시·군 역할 분담

■ 도-시·군 합의사항

- 교육 운영주체 재정립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추진
 - (도) 전문가·강사요원·공무원 교육, 시·군 아카데미 교육비 지원(50%)
 - (시·군) 시·군 주도 주민자치 아카데미 일반·실무교육 실시
- 도·시·군 역할 분담을 통한 현장활동가(리더) 발굴·육성
 - (도) 컨설팅·공동체 조사를 통해 권역별 활동가 및 마을리더 발굴
(18년까지 100명), 워크숍·포럼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
 - (시·군) 마을만들기·사회적경제 등 중간지원조직과 연계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동체 사업에 활동가 참여
- 안정적인 동네자치 운영재원 확보 및 시범사업 추진
 - (도) 「(가칭)주민자치세」 신설 등 법제화 및 제도화 마련
 - (시·군) 주민세를 동네자치 재원으로 활용한 시범사업(1~2개소) 추진

협약 8. 문화관광 축제 경쟁력 강화

◆ 도내 주요 축제를 지역 고유의 특색이 반영된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방향과 지원기준 마련

■ 예산지원 절차

<일반지원 축제>

- ① 시·군 신청 → ② 道 축제육성위원회 심사(현장평가+서면평가) → ③ 문체부 제출 → ④ 문체부 선정 축제(전국 44개) → ⑤ 문체부 미선정:도 자체지원(평가순위에 따라 지원)

〈2015년도 선정·지원축제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 6개 (국비 847백만원, 도비 424백만원)
 - 강경발효젓갈, 한산모시문화제, 서동연꽃, 해미읍성, 홍성역사인물, 금강여울
- 道 자체지원 축제 : 5개 (도비 260백만원)
 - 논산딸기, 칠갑산장승문화, 대한민국코미디 핫 페스티벌, 공주알밤, 태안바다황토

*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 15명(언론, 학계, 연구원, 축제전문가 등)

<정책지원 축제>

- 시·군 등 지원요청에 따라 소관 부서별 국·도비 지원여부 결정
 - 백제문화제, 계룡군문화축제, 보령머드, 금산인삼, 천안홍타령 등

■ 쟁점사항

- 한정된 道 재원으로 시·군이 희망하는 모든 축제에 지원 한계
 - 기존 축제 중심 지원에 그치고 있어 발전 가능성 있는 유망한 소규모·신생축제에 대한 지원 어려움
- 특정 향토문화축제에 대한 도비 지원 지속 요구
 - 매년 현장평가 및 전문가 심의 결과에 따라 계획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개별적인 시·군 지원요구 수용어려움
- 관례적 지원으로 주민주도의 자립형 축제로 전환 미흡
 - 축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립 노력 보다는 국·도비 의존성 심화
 - 객관적 성과평가와 환류 미흡(같은 문제점 반복 발생), 행사를 외부업체에만 맡겨져 고유한 지역문화특성의 반영 한계

■ 도·시·군 합의사항

- 국비지원이 일몰(7년간 지원)된 문화관광축제는 평년에는 도비 미지원
→ 단, 도 주관 메가이벤트 또는 국제행사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도비 지원기준 정립
 - 문화관광축제 : 정해진 매칭비율(국비-지방비)에 따라 지원
 - 지역향토문화축제 : 원칙적으로 시·군 주도로 개최(지역특색을 반영하여 경쟁력 확보)
 - 메가이벤트 축제 : 시·군축제 중 육성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 일정주기로
도 주관의 메가이벤트식 개최(선택과 집중의 전폭적 지원),
축제발전의 기폭제 역할

〈메가이벤트 개최〉 - 별도계획 수립 예정

▶ 기본방향

- 정기 메가이벤트와 비정기 메가이벤트로 구분하여 추진
- 행사주관 및 예산확보에 있어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구분

▶ 선정방법

- 도, 시·군에서 방침결정 후 소관부처 및 기재부 승인신청

▶ 예시

| 연도별 | 이벤트 명칭 | 지 역 | 비 고 |
|-----|------------|-------|-----|
| '17 |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 금산 | |
| '20 | 백제문화제 | 공주·부여 | |
| | 계룡 세계군문화축전 | 계룡 | |
| '21 | 서천세계생태교류전 | 서천 | |

- 유망 지역향토축제 발굴·육성 등 경쟁력 강화
 - (도) 도차원의 육성이 필요한 축제 선정(현장평가, 심의 등) 지원
 - (시·군) 주민 자립형 축제 자체육성 노력(후원 발굴 등 수익 다변화)
- 국비지원 문화관광축제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
 - (도) 국비지원 축제에 대해 중앙과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및 지원,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부담
 - (시·군) 축제의 내실화로 경쟁력을 갖춰 국비지원 축제 기획·응모

협약 9. 충남관광 활성화 [제안:공주,아산,계룡,부여,예산,태안]

◆ 충남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각 시, 군에 분산된 관광자원의 연계 통합을 통한 관광시스템 구축 및 지역 맞춤형 마케팅 전략추진

■ 국내외 여건

- 해외: 지난해 요우커증(41.6%), 일본인減(-17%), FIT(개별관광객) 증(67%)
- 국내: 관광의 경제성장 동력화(관광주간 확대 등), 모바일 예약증(315%)
- 충남: 백제역사 유적 유네스코 등재,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등에 따른 시장의 수요와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정책 필요

■ 현실태

- (충남 관광여건) 역사·자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미흡
 - 「2014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문체부), 국민여행 만족도 낮음
 - ※ 국민여행 만족도(충남) : 가구여행 4.00(전국 8위), 개인여행(3.95)(전국 11위)
- (관광상품 개발) 관광 상품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 마케팅과 관광자원의 연계성 미흡, 관광객 모객 어려움
 - ※ 중장기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충남 관광비전·마케팅 과제와 전략 연구용역 중)
- (홍보) 국내외 관광설명회, 관광홍보관, 팸투어, 옥외광고, 웹진 등 모바일 환경변화에 맞춰 중점 홍보
 - 3농지원 국내 마케팅 확대
(지역특화상품 개발 연계 국내 관광마케팅, 농촌체험 및 생태관광 활성화 등)
- (환대서비스 교육) 관광분야 종사자에 대한 환대서비스 교육 추진
 - 외식업주 위생교육 등과 연계한 친절교육 실시(연간 11,000명)

■ 쟁점사항

- 각 시·군마다 각개 전투식 관광홍보 및 상품개발로 효율성 한계 노출
 - － 새로운 관광자원(지역축제, 생태관광자원, 3농체험 등) 발굴 및 연계 개발
 - ※ 1(시·군),1(축제),1(체험마을)관광상품화 육성 추진:2개 시·군씩 시범실시(16~)
- 관광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광패턴 부족
 - － 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지나가는 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머무르고 싶은 충남” 으로 변화 필요 (개발전략 용역 추진중)
 - － 공주, 부여, 익산을 잇는 테마 관광코스, 의료상품* 등 연계 개발
 - *보건복지부에 “선도의료기술 육성 공모사업 신청” 중
- 국내외 관광시장 분석, 전략적 맞춤형 상품 개발 필요
 - － 중국(한류, 미용, 쇼핑), 일본(백제역사문화 수학여행 유치코스 개발)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추진
 - ※ 15년 마케팅실적 : 총8회(관광박람회3회,여행관계자 팸투어3회,국내 여행사 팸투어 2회)

■ 도-시·군 합의사항

- 중장기 관광비전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 － (도) 충남관광비전·마케팅에 대한 전략(큰 밑그림) 수립
 - － (시·군) 정확한 자료제공 및 지속적 피드백 지원
-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역할분담
 - － (도) 시·군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패키지형 상품으로 개발
 - － (시·군) 지역축제, 3농체험, 문화자원 등 연계할 관광상품 발굴
- 맞춤형 해외마케팅 강화
 - － (도)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 중심의 광역마케팅 강화
 - － (시·군) 지역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행관계자 팸투어 등 관광마케팅 적극적 협조 지원
- 국내외 관광 홍보전(홍보관 운영, 설명회 개최) 공동 협력, 친절교육
 - － (도) 국내외 관광 홍보행사 홍보전 개최(가이드라인 제시)
 - － (시·군) 국내외 마케팅 추진행사에 적극 동참,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강화

협약 10. 「공립예술단」 운영체제 개편

◆ 도-시·군 간 기능재정립 및 도내 지역간 균형 있는 문화향유를 위해 공립예술단 운영체제의 일원화 및 활성화 도모

■ 운영현황

- 운영방식 : 시·군 운영(도비 지원)/설치근거 - 시·군조례
- 운 영 비 : 총 88억원(단원 1인당 47백만원/인건비 42, 운영비 5)
 - ※ 도비 56억, 시·군비 32억
- 예 술 단 : 4개 단체 (단원 189명)

| 예술단 |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 공주시 충남 교향악단 | 부여군 충남 국악단 |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원 |
|-----|------------------|----------------|---------------|-----------------|
| 창단일 | 1990.11.05. | 1990.11.15. | 1994.12.19. | 1997.10.29. |
| 단원수 | 51명 | 74명 | 43명 | 21명 |

■ 문제점

- 공립예술단 운영체제 이원화(도:재정지원, 시·군:운영)에 따른 예술단 활력화 저조
 - 도는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운영에 직접적 관여 곤란(시·군소속 예술단)
 - ※ 도비의 추가지원 없이는 단원보장 및 공연시스템 개편 등 한계
- 운영주체 시·군 중심의 편중된 공연으로 지역 간 불균형
 - 소속시·군 지역 위주의 공연으로 도민들의 균형있는 문화향유 곤란

■ 쟁점사항

- 향후 독립공연단 창단시 시·군예술단에 대한 도비 지속지원 곤란
- 일부 시·군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공립예술단의 道 승계 희망

■ 도-시·군(천안,공주,부여) 합의사항

- 독립예술단 창단시까지 운영비 현 도비 보조율 수준 유지
- 독립예술단 창단시 시·군 공립예술단원 흡수
 - ※ 타 시도 독립예술단(평균2.2개) 운영실태 고려, 독립예술단 창단
- 공립예술단의 全 시·군 균형있는 문화공연 추진

협약 11. 백제역사 유적지구(세계문화유산) 통합관리

◆ 세계문화유산에 걸맞는 전문적 보존·관리로 탁월한 인류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위한 통합관리 필요

■ 세계유산 현황

- 등재결정 : 2015.7.4.(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독일)
- 등재지구 : 8개소
 - 공주(2) : ① 공산성 ② 송산리고분군
 - 부여(4) : ③ 관북리유적·부소산성 ④ 정림사지 ⑤ 나성 ⑥ 능산리고분군
 - 익산(2) : ⑦ 미륵사지 ⑧ 왕궁리 유적

■ 통합관리 추진배경

-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유지를 위한 통합관광관리 전략 수립
 - 고분벽화 보존 상태와 내부 환경 모니터링 주기조정(5년→3년)
 - 등재신청시 약속사항
 - 유적지구 공공관리로 철저한 보호조치(지구내 사유지 매입)
 - 3개 지역(공주, 부여, 익산)을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통합관리 기구 설치
- ⇒ 관리상황 6년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보고 (통합관리 불가피)

■ 개편방향

- 현 통합관리단을 백제세계유산센터로 개편(16예정)
 -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및 보존, 관리, 활용 체계로 기능 전환
 - ※ (등재前) 세계유산 등재업무 → (등재後) 백제유산 통합관리 및 활용·홍보업무
- 백제역사유적지구 현지(3개 시·군)에 ‘지역센터’ 설치 후 점진적 통합
 - 효율적 관리 및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센터 우선 설치 필요
 - ※ 근거 : 등재신청서 5장(유산의 보호 및 관리),
보존관리계획서 3장(통합보존관리시스템 구축)
- 보존·관리(문화재 보수·정비) 시·군 추진

※ 백제세계유산센터 운영계획(안)

| 구 분 | 연도별 | 운 영 방 안 |
|--------------|-----------|---|
| 1단계 (태동기) | 20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범 ◦ 백제센터와 지자체 지역센터(분리 운영) |
| 2단계 (성장기) | 2017~20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운영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분석 ◦ 백제센터와 지역센터 기능 통합 ◦ 전문인력 확보(파견공무원 필수인원 외 복귀) |
| 3단계 (성숙기) | 20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센터와 지역센터의 완전 통합 (지자체 지역센터를 백제센터 조직으로 이관) |

■ 쟁점사항

- 백제세계유산센터 출범(통합)에 따른 합리적 역할 정립
 - 보존·관리(매장문화재 조사·발굴, 문화재 보수·정비)는 현행과 같이 시·군에서 추진 희망하나, 통합관리체계를 위한 역할 재정립 필요
- ※ 백제세계유산센터 건립 위치 및 재원은 미확정(1년 운영 후 추후 결정)

■ 도·시·군(공주, 부여) 합의사항

- 도 :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 중앙부처 협력
 - 시·군 : 관광자원화(활용), 관광객 맞이(백제상가촌·저잣거리 조성 등)
백제왕도 복원, 보존정비, 고도풍미 도시계획 및 조성, 유적 홍보
 - ※ 백제세계유산센터 : 세계유산통합관리, 활용방안 연구 및 콘텐츠 개발, 해설사 교육 등
- ⇒ 단계별(중장기)로 추진하되, 백제세계유산센터는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시·군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활용사업과 백제왕도 복원 등 콘텐츠 확충, 보존관리 중심으로 특화
- ※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단 이사회 개최 결과(' 15.9.7) → 백제세계유산센터 운영계획(안)에 따라 단계별 추진기로 결정(2개팀 10명 구성)

협약 12.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선도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종합센터 역할
- 행정 주도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후 식재료 공급시설 설치

■ 추진방향

- 각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
- 지역 친환경농산물 계획생산 및 공급체계 우선 구축
- 학교급식의 정책개발, 품질관리, 교육 등 공공성 강화에 주력

■ 추진현황

〈도 :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

-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13.12.16/비상임 운영위)
 - 학교급식의 종합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역할 수행
- 2015년 주요 추진사항
 - '14년 학교급식 농산물 사용실태 조사 : 15.3~5월(725개교/288,190명)
 - 학교급식 수요에 맞춘 다품목 계획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 수발주 프로그램 개발 보급 : 6개 시·군(당진, 천안, 논산, 공주, 홍성, 예산)
 - 식재료 품질기준 마련, 품목 간소화, 공동구매, 식생활 교육 등

〈시·군 : 학교급식센터 설치·운영〉

① 운영중인 센터 : 6개소

| | | | |
|----|--------------------------------|----|-------------------------------|
| 당진 | '11. 3월 개장 (전품목/해나루조공위탁) | 아산 | '13. 3월 개장 (농축산물/아산농협조공위탁) |
| 청양 | '14. 4월 개장 (전품목/유기영농법인위탁) | 홍성 | '14. 3월 개장 (전품목/郡 직영) |
| 부여 | '15. 5월 개장(시범운영) (전품목/郡 직영) | 천안 | '15. 7월 시범개장 (전품목/천안조공 위탁) |

② 건립중인 센터 : 2개소(공주, 논산) → '16년 3월 개장 예정

③ 준비중인 센터 : 6개소(보령, 서산, 금산, 예산, 서천, 태안)

- 급식센터 사업확정 시·군(예산 지원) : 2개시·군(보령, 예산)

■ 애로사항

- 학교급식센터를 단순한 시설로 인식,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접근
 -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다양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체계로서 지역 내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농업인 등) 공감대 형성과 협력이 필수
 - － 농협 등 완전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이 불가
 - ※ 공공정책 개발, 품질관리, 식생활 교육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종전 입찰방법과의 차별화 및 행정주도 급식센터 설립 명분이 없음
- 광범위하고 복잡한 업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전담인력 부족
 - － 개장 1년 전부터 3~5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 채용, 전보 제한,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
 - ※ 전국 최초로 전사·군/전품목 추진하는 정책으로 선례가 없는 업무
- 교육청, 학교 등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에 많은 시간 소요
 - － 급식의 다양한 분야 중 교육청 소관 협조 미흡, 기존업체 상생방안 마련 등 행정 역할이 매우 복잡하여, 설립·운영이 지연
 - ※ 식재료 품질관리, 표준화 및 간소화, 식생활교육, 계약방법 개선 등

■ 도·시·군 합의사항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취지의 공감대 형성 및 가치공유 노력
 - － (도)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현장설명회 지원 강화
 - － (시·군) 민관협력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전문가 채용 등 인력확충
-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 － (도) 광역 작부체계 구축, 식재료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
 - － (시·군) 지역 작부체계 구축, 단계별 품질기준 도입, 전통산업 육성 등
- 수발주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식재료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 (도) 수발주 프로그램 개발·보급, 광역단위 통합관리 기준마련
 - － (시·군) 식재료 분류기준 표준화, 품질·가격 비교 가능토록 품목 간소화

※ 참고 : 학교급식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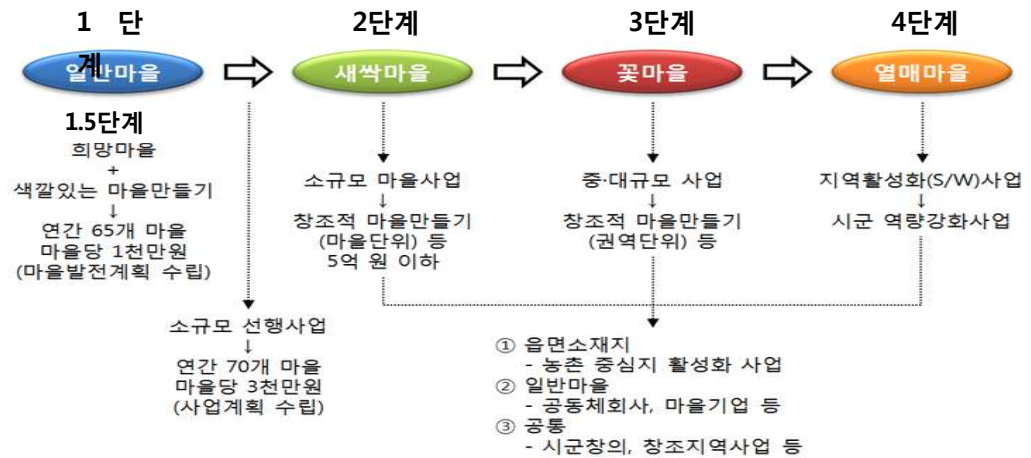
| 기 관 명 | 역 할 |
|---------------------|--|
| 道 · 광역급식 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 운영 정책개발, 기본지침 마련 •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 학교급식 추진상황 지도·감독 및 성과분석 •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 식생활교육 추진 • 로컬푸드 연계형 수발주프로그램 구축, 보급 • 광역단위 농산물 조달체계 구축 및 시·군간 수급조정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추진 및 작부체계 구축 지원 • 식재료 품질기준 마련 및 공동구매 등 통합관리 준비 • 학교급식업무 협의·조정 등 관련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
| 교육청 (교육지원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축산물 현물·수의계약, 도내산 친환경 농축산물 50%이상 사용 권장, 식생활교육 등 반영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 운영 협조, 학교이용 권장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유형, 시기 등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 행정주도 공공형 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 정비 •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센터간 업무협약 체결 • 영양교사, 학부모, 생산자 간 지역농산물 이해도모 노력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시·군단위 작부체계 구축 • 운영 수수료 결정, 품목 및 가격관리 등 센터 지도관리 |
| 학교급식 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및 배송업체 선정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 품목군별 공급품목 · 가격결정, 매월 학교에 제공 • 식재료 물품 관내 외 수급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 작부체계 · 수발주 · 배송 관리 • 학교 및 공급 · 배송업체간 계약, 정산 • 식재료 검품검수 및 안전성 검사 등 품질 관리 등 |
| 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단편성, 식재료 발주 및 납품확인서 발급 • (보조금 학교 현금지원시) 보조금 정산 • 친환경농축산물 이해도 증진 등 식생활교육 강화 |
| 생산자(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친환경농산물 등) • 생산단계의 안전성관리 강화 • 출하시 시험성적서 및 검사필증 발급 |

협약 13. 마을만들기 지원·협력 시스템 구축

◆ 그동안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로 단계별 마을발전 육성에 초점을 뒀으나, 중간지원조직 설립으로 현장밀착형 지원 및 도와 시·군간 지원·협력시스템 구축으로 마을만들기 성과모델 조기 도출

■ 추진배경

- (마을만들기) 총 36종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道 14개 실과 관련)
(국가 공모사업 - 25개, 도비 지원사업 - 11개)
- (추진방향) 마을별 역량 수준에 따라 단계별 모델로 지원



- (문제점)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마을사업 확대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 추진할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관리에 어려움
→ 주민 주도의 현장밀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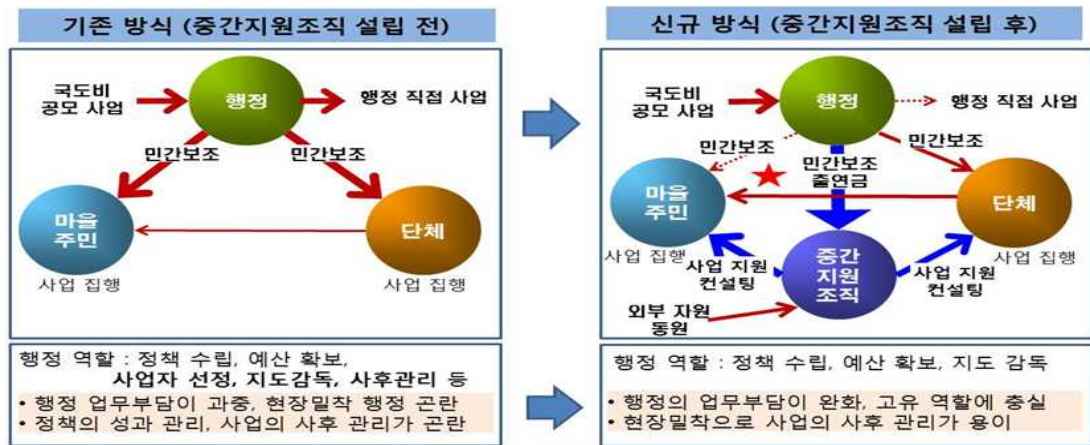
■ 추진현황(중간지원조직)

- 사업명 :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
- 사업량 : 2018년까지 15개 시·군 단계별 구축(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

• 광역 : 설치(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전북), 준비 중(충남·광주·세종)
• 기초 : 설치(44개 자치단체), 우리 도 준비 중(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 사업비 : 시·군당 2년간 320백만원(도비50%, 시·군비 50%)
- 주요기능 : 주민 상담·컨설팅, 마을 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주민복지 및 수익사업 등 현장밀착형 지원

〈중간지원조직 설치 전·후 비교〉



■ 쟁점사항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의 필요성 인식 부족
 - 과중한 행정 업무부담 해소 및 전문성 제고, 사후관리를 위한 중간조직 설치 필요
 - ※ 3농 혁신대학(마을만들기 과정), 워크숍 개최(5회), 시·군 부단체장 설명(6회)
- 도 중간지원조직(' 16.1월 설치예정)과 시·군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미흡
 - 도는 마을만들기 정책개발 지원, 시·군은 마을만들기사업 시행 등 역할정립 추진 필요
 - ※ 충남연구원과 협조하여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협력 추진방안 마련 지원
-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사업을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칸막이식 분산 추진
 - 주민역량 강화(동네자치), 마을만들기사업(마을만들기), 사회경제육성(경제부서) 등 통합 운영 필요

■ 도-시·군 합의사항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 (도) 도 단위 중간조직 설치, 마을만들기 정책개발 지원
 - (시·군) 시·군 단위 중간조직 설치,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
- 장기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 통합·운영
 - (도) 도 및 시·군간, 민과 관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례 및 정책개발 지원
 - (시·군) 주민역량강화, 마을만들기사업, 사회경제 육성 등 마을만들기 사업 통합 운영

※ 참고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현황

| 구분 | 담당부서 | | 사 업 명 | 역량 단계 |
|----|---------|-----------|-----------------------|-------|
| | 실국 | 실과 | | |
| 1 | 농정국 | 농촌마을지원과 | 농촌 현장포럼 | 1단계 |
| 2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동네자치(주민자치) 역량강화 | “ |
| 3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정책과 |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 “ |
| 4 | 복지보건국 | 보건정책과 | 우리마을 주치의제 | “ |
| 5 | “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 “ |
| 6 | 건설교통국 | 건축도시과 |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 “ |
| 7 | 소방본부 | 화재대책과 | 농어촌마을 안전사각지대 소방안전망 구축 | “ |
| 8 | 농정국 | 농촌마을지원과 | 희망마을 선행사업 | 1.5단계 |
| 9 | 건설교통국 | 건축도시과 |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 “ |
| 10 | “ | “ | 슬레이트 처리사업 | “ |
| 11 | 환경녹지국 | 물관리정책과 | 도랑살리기 운동 | “ |
| 12 | 복지보건국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행복경로당 조성 운영 | “ |
| 13 | 경제산업실 | 경제정책과 | 협동조합 발굴육성 지원 | “ |
| 14 | 농정국 | 농촌마을지원과 | 창조적 마을만들기(경관·생태) | 2단계 |
| 15 | “ | “ | 창조적 마을만들기(소득·체험) | “ |
| 16 | “ | “ | 창조적 마을만들기(문화·복지) | “ |
| 17 | “ | “ | 창조적 마을만들기(신규마을 조성) | “ |
| 18 | 해양수산물국 | 수산물과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 “ |
| 19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정책과 |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조성 | “ |
| 20 | 환경녹지국 | 환경정책과 | 주민 주도형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 | “ |
| 21 | 건설교통국 | 건축도시과 |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 “ |
| 22 | “ | “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 “ |
| 23 | 자치행정국 | 정보화지원과 | 농어촌마을 광케이블 보급지원 | “ |
| 24 | 농정국 | 농촌마을지원과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 “ |
| 25 | 경제산업실 | 경제정책과 | 마을기업 육성사업 | “ |
| 26 | “ | “ |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 “ |
| 27 | 농정국 | 농촌마을지원과 | 창조적 마을만들기(마을종합개발) | 3단계 |
| 28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정책과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 |
| 29 | 농정국 | 농촌마을지원과 | 창조적 마을만들기(권역종합개발) | “ |
| 30 | 환경녹지국 | 산림녹지과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 “ |
| 31 | 해양수산물국 | 수산물과 | 어촌종합개발사업 | “ |
| 32 | 농정국 | 농촌마을지원과 |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 |
| 33 | “ | “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 |
| 34 | “ | 농업정책과 |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 “ |
| 35 | 경제산업실 | 경제정책과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 |
| 36 | 농정국 | 농촌마을지원과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4단계 |

협약 14. 농산물 통합마케팅 체계와 공동브랜드 육성

◆ 대형유통업체가 SUPER 甲인 현재 상황에서 공동브랜드 정책을 통합마케팅 체계로 정비하여 산지가 甲이 되는 유통체계 구축

■ 현 실태(농산물 유통구조)

- 현재, 농산물(쌀 제외) 생산량의 84%가 농가에서 직접 도매시장, 개인상인(포전거래)에게 출하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취약
 - － 대부분 수급조절 및 농가 수취, 소비자 가격 등 유통업체가 결정
- 생산자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마케팅 불가피, 강원도의 경우 도단위 통합(도내 전체농산물의 70~80%, 연합)을 통해 교섭력 강화

〈 정부의 정책방향 변화 〉

- 수입농산물과의 차별성 확보와 수급안정 주도를 위해 ‘시·군 단위 산지유통 통합마케팅’¹⁾ 추진 의무화 (’15.3월, 농식품부 용역 中)
- ※ 우리도 6사군(천안, 공주, 아산, 논산, 부여, 예산)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
- ‘산지유통 종합계획’ 미수립시 생산유통 정부지원 배제 방침(도연간 490억원)

■ 우리도 현황

- 우리 도에서는 시·군 단위 통합마케팅을 기본으로 하고 도단위 마케팅이 유리한 품목에 대하여 도단위 통합마케팅(농협 도연합) 추진 중
 - － 7품목(밤, 고구마, 깻잎, 표고버섯, 감자, 토마토, 오이) 도 통합(연합)마케팅 추진 중
- 공동 브랜드와 산지조직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브랜드의 발전과 산지 교섭력강화가 가능하나 아직까지 미흡함
 - － 도공동브랜드 [충남오감]의 경우 조직화와 연계하여 개발(’14.1월), 33개농협 2,278농가 참여, 2018년까지 매출 1천억원 달성 목표
 - － 시·군 공동브랜드의 경우 간장, 와인, 쌀독, 침대 등 광범위하게 사용, 농가나 소규모 영농조합 등 통합마케팅 미참여 시에도 사용권 부여

1) 시·군단위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 시·군단위로 산지 조직(지역농협 등)을 통합하여 마케팅을 추진할 주체를 선정, 통합적으로 소비자 유통 시장에 대응하는 것 (산지유통종합계획 형태로 정부에서 인정)

* 2015년부터 농협중앙회 소속 연합사업단(도나 시·군 설치) 대하여도 통합마케팅 주체로써의 지위 인정(농식품부)

■ 쟁점사항

- 대형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산지유통 조직 (공선조직,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됨
 - 특히, 시장에서 道 브랜드와 시·군 브랜드간, 시·군간, 품목간 상호 경쟁하고 있는 실정

| | |
|--------|--|
| 목 표 | ① 全시·군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체계 구축(종합계획 수립), 강한산지를 만들고 15개 공동브랜드를 파워 브랜드로 육성 ② 道단위 판매가 유리한 품목에 대해 道책임 판매, 유통시장 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道단위 생산량이 전국점유율 20~40% 품목, 조직화 어려워 더디게 진행된 품목 → 정부정책에 부응, 앞서가는 산지조직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

■ 도-시·군 합의사항

- 시·군 단위 산지유통 체계 구축, 파워있는 시·군 브랜드 육성 협력
 - (도) ① ‘공선조직’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시설현대화 지원
 - ② 시·군 단위 순회간담회를 통한 종합계획 수립·실천방향 제시
 - (시·군) ① 산지유통 종합계획(통합마케팅)수립 및 실천
 - ② 시·군 브랜드를 산지유통 육성, 종합계획 수립·실천과 연계
 -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농가조직 위주로 사용권 부여
 - 포장재, 공선 수수료 등 농가 참여유도, 시설 현대화 등 조직 지원
 - 道지원정책 연계, 브랜드 취급 조직 지원 (시설, 컨설팅, 교육 등)
- 道단위 연합마케팅(충남오감) 육성 협력
 - (도) ① 품질관리·상품화 기준마련, 마케팅전담팀, 판로개척
 - ② 참여조직에 포장재, 시설현대화, 물류비 등 지원
 - (시·군) 품질관리·상품화사업 실행, 출하권의 일부를 道연합사업단에 위임
- 道브랜드와 시·군 브랜드 간 조직 공동 활용, 마케팅체계 구축
 - (도) 농협 도본부를 통해 - 시·군 조공법인과 연계 대외마케팅 지원
 - (시·군) 조공법인 등을 통해 - 도단위 연합과 연계 상품공급 체계 확립

※ 참고 1 : 시·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현황

■ 수립현황

| 시·군 | 승인 연도 | 대표조직명 | 참여조직명 (조직수) | 생 산 품 목 | 비고 |
|----------|---------------|----------------------|---|--|------------|
| 계 | 8시·군(7개 통합조직) | | 88개소 (농협 78개, 영농법인 10) | 배, 포도, 오이, 메론 | |
| 천안 | 2012 | 천안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 9개소 (농협 8개, 영농법인 1) | 배, 포도, 오이, 메론 | |
| 서산 태안 | 2013 | 서산태안6쪽마늘 조합공동사업법인 | 19개소 ○ 서산 : 12(농협10, 법인2) ○ 태안 : 7(농협6, 사업단1) |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 채소류 | '15년 취소 |
| 아산 | 2014 | 아산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 11개소 (농협 11) | 배, 사과, 포도, 오이, 쪽파, 토마토 | |
| 논산 | 2011 | 논산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 14개소 (농협 11, 영농법인 3) | 딸기, 수박, 배, 메론, 고구마, 토마토 | |
| 부여 | 2011 | 부여군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10개소 (농협 8, 영농법인 2) | 수박, 메론, 토마토, 양송이, 딸기, 오이 | |
| 예산 | 2013 | 예산군 연합사업단 | 11개소 (농협9, 영농법인 2) | 사과, 배, 수박, 토마토, 쪽파, 고구마 | |
| 공주 | 2015 | 공주시 연합사업단 | 14개소 (농협 12, 영농법인 2) | 오이, 밤, 토마토, 딸기, 고추, 배, 수박, 호박, 콩, 양파, 마늘, 대파, 감자 | |
| 당진 | - | 당진시해나루조합 공동사업법인 | 13개소 (농협12, 영농법인 1) | 서류(감자, 고구마) 채소류(무, 배추), 사과 | 미선 정 |

■ 종합계획의 내용

- 종합계획에 수록될 내용
 - 지역 내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 간 통합 및 계열화 계획
 - 통합마케팅 조직 선정 및 육성계획 수립
 - 참여조직 구성 / 마케팅 창구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지역 내 시설의 적정 수요 파악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단계 : ① 계획수립(시·군) → ② 협의회 구성(시·군, 산지조직, 전문가 등)
 - ③ 기본방향 협의(협의회) → ④계획 수립(시·군) → ⑤ 사업실행
- 신청 및 평가선정(시·군 → 도제출(3월 15일까지))
 - aT주관 / 산·학·연 관계전문가 평가단 구성 평가
 - ▶ 기본요건 검토(1단계), 서면평가(2단계), 공개발표평가(3단계)
- 실행계획 이행 연차평가 : 매년 5월 평가

※ 참고 2 : 충남오감[오감]개발 및 육성 현황

▶ 브랜드명 : 충남O'gam

Organic/Origin/Only/Oh! 등 친환경과 감탄의 이중적 의미로 신선함, 맛, 향기..등 자연의 맛을 통해 오감만족을 주는 농산물이라는 의미



■ 브랜드 개요

- 출시/품목 : ' 14. 1월/7품목 * 밤,고구마,갯잎,표고버섯,감자,토마토,오이
- 관리/사용 : 농협지역본부 / 33개 지역농협(2,278농가)
- 생산 및 취급(판매) 현황

| 전략 품목 | 도내 생산현황 | | | 도내농협 취급액 (억원) | 연합마케팅 취급 | | |
|-------|----------|----------|----------|---------------|----------|-------|---------------------|
| | 생산량 (천톤) | 생산액 (억원) | 전국점유 (%) | | 조합수 | 농가수 | ' 14~' 15.6. 매출(억원) |
| 7개품목 | 323 | 6,969 | (평균)28 | 2,445 | 33 | 2,278 | 254 |

■ 앞으로 추진과제

① 조직화 · 마케팅 역량 강화지원 및 참여유도

- 33개 참여농협 및 2,278농가 품질관리 교육·컨설팅 추진
- 매출확대를 위한 판로개척 활동으로 이마트 등 입점 확대
- 포장재, 시설현대화, 물류비 등 참여확대를 위한 측면 지원
- 충남오감 소식지 발간을 통해 농가참여 및 농협활동 독려

② 홍보·마케팅 및 충남오감 대표품목(토마토)조직화 新모델 구축

- 입점 및 판매에 직접 도움이 되는 유통업체 연계 홍보 진행
 - 이마트 전격납품에 따른 매장 와이드 칼라광고, 판촉행사, 홈쇼핑광고 등
- 충남오감 대표품목(토마토) 조직화 新모델²⁾ 구축
 - 모집 : 10개농협(252농가), 산자시장 분석 중, ' 16년 100억원 목표

2) 조직화 신모델 : 기존, 참여농협이 각자 마케팅도 추진하고 연합에도 출하(마케팅 채널을 이중적 운영)했다면 신모델은 연합마케팅 주체(도본부)에서 전체 물량에 대해 전체 시장을 일괄 분산 발주하는 시스템(강원연합 전품목 전략 추진)

※ 참고 3 : 충남오감[오감] 참여 농협

■ 7품목 / 33개 농협 / 2,278농가

| 품목 | 사군 | 지역농협 | 농가수 | 품목 | 사군 | 지역농협 | 농가수 |
|----------------|----|-------|-----|---------------------|----|------|-----|
| 밤 (7/874) | 부여 | 구룡 | 130 | 표고 버섯 (8/254) | 공주 | 신평 | 40 |
| | | 규암 | 207 | | 보령 | 웅천 | 56 |
| | | 서부여 | 397 | | 부여 | 구룡 | 32 |
| | | 남부여 | 50 | | | 규암 | 25 |
| | | 부여조공 | - | | | 서부여 | 26 |
| | 청양 | 정산 | 50 | | 서천 | 판교 | 35 |
| | | 청양 | 40 | | | 청양 | 정산 |
| | 금산 | 금산 | 29 | | 청양 | | 청양 |
| 만인산 | | 121 | | | | | |
| 고구마 (4/280) | 논산 | 상월 | 20 | 오이 (4/200) | 천안 | 아우내 | 60 |
| | 태안 | 안면도 | 200 | | 공주 | 우성 | 50 |
| | 서산 | 음암 | 30 | | | 공주원예 | 50 |
| | 당진 | 당진해나루 | 30 | | 부여 | 남부여 | 40 |
| 감자 (4/350) | 아산 | 영인 | 70 | 토마토 (4/170) | 논산 | 광석 | 20 |
| | 당진 | 송악 | 200 | | 부여 | 규암 | 10 |
| | | 당진해나루 | 30 | | | 부여 | 70 |
| | 부여 | 남부여 | 50 | | | | 정산 |

협약 15.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역할과 기능 재정립

◆ 90년대 건립되었던 「도립 장애인복지관(2개 지구)」의 광역기능과 역할이 여건의 변화로 당초의 목적과 달리 점차 모호해짐에 따라 기능 재정립 필요

■ 운영현황

- 도립복지관 지구단위 설치(2개 지구)
 - 서부지구 : 보령(91), 청양(서부 분관 09)
 - 남부지구 : 공주(99)

※ 이용자 현황(14년말) : 총 3,819명 (청양 서부분관 제외)
 – (서부지구/보령) 총 1,916명/보령 1196(62.4%), 공주 720(37.6%), 청양 0(0.5%), 기타 61(3.1%)
 – (남부지구/공주) 총 1,903명/공주 1,204(63.3%), 논산 159(8.3%), 기타 540(28.4%)

※ 운영비 투입현황 : 총 3,064백만원 (도비 100%)
 – (서부지구) 1,461백만원 – (남부지구) 1,603백만원

- 시·군 복지관 설치 : 10개 시·군(시·군비 운영)
 - 천안('04), 아산('00), 서산('01), 당진('12), 금산('04), 부여('00), 서천('07), 홍성('99), 예산('99), 태안('07)
 - ※ 미설치 시·군 : 4개 시·군(공주, 보령, 계룡, 청양) / 건립중 (논산)

■ 문제점

- 90년대에 거점형(2개 지구단위) 도립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였으나
 - 이후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각각 설치됨에 따라, 도립의 광역적 기능 보다는 일부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
- 결과적으로, 특정 시·군(공주, 보령, 청양, 논산, 계룡)의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도비로 운영하는 상황
 - 시·군비로 자체 운영하는 타 장애인복지관과 형평성 문제 제기

■ 향후 운영방향

(도립)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장애인 정책개발」, 「시·군 복지관 지원」

- (역할) 장애인복지관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운영
- (기능) 정책 및 사업개발, 운영프로그램 보급, 교육기관

**도
입장**

- 現 도립 장애인복지관 기능유지 → 단계적으로 기초서비스 시·군 이관
※ 16년부터 단계적 시·군이관, 이관 전까지 기초기능 수행 해당시·군과 협의

■ 쟁점사항

- 도립 장애인복지관은 광역기능, 시·군은 기초사업 직접시행 체계 확립
↳ 도립복지관 44개 사업 중 30개(68.8%) 기초사업에 대한 시·군 이관 추진
- 장애인복지관 미설치된 4개 시·군은 건립방안 강구

■ 도-시·군(공주, 보령, 계룡, 청양) 합의사항

1. (공주,보령) 사업성격상 지역장애인 위주 서비스사업 시·군 전담추진(16년부터)

- ' 16년 이관(4개사업) : 소재지 장애인(이용률 95%이상)을 위한사업
※ 재가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특별운송사업

<15년 상반기 사업량(소재지 장애인 이용률)>

| 구분 | 사업비 | 재가복지센터 | 공동생활가정 | 주간보호시설 | 특별운송사업 |
|--------|--------|----------|---------|----------|-----------|
| 공주(남부) | 434백만원 | 788(95%) | 3(100%) | 21(96%) | 125(100%) |
| 보령(서부) | 444백만원 | 645(95%) | 4(100%) | 52(100%) | 93(100%) |

※ 도, 시·군 부단체장 정책조정회의(' 16.10.5) 결과 반영

- ' 17년이후 : 나머지 기초사업 이관은 해당시·군과 협의추진

2. 기초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시·군(공주,보령,계룡,청양)건립방안 강구

3. 도비재원 조정분은 시·군 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용

※ 참고 1 : 15년 도립 장애인복지관 도비지원 및 이용자 현황

■ 도비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사업량 | 계 | 인건비 | 관리운영비 | 사업비 |
|---------------|--------------|-------|--------------|------------|-----------|
| 2015년 (소요) | 계 | 3,324 | 2,703(78.3%) | 453(13.6%) | 168(5.1%) |
| | 서부(보령) | 1,461 | 1,160(28명) | 220 | 81 |
| | 서부 분관(청양) | 260 | 216(4명) | 32 | 12 |
| | 남부(공주) | 1,603 | 1,327(30명) | 201 | 75 |
| 2014년 | 62명 | 3,352 | 2,831(84.5%) | 386(11.5%) | 135(4.0%) |
| 2013년 | 62명 | 3,149 | 2,576(81.8%) | 416(13.2%) | 157(5.0%) |

■ 이용 장애인 현황

| 구 분 | 이용 장애인수 | 사·군별 | | | |
|--------------|------------|--------------|--------------|-----------|-------|
| | | 보령시 | 공주시 | 청양군 | 기타 |
| 계 | 4,045 | 1,196 | 1,214 | 325 | 1,310 |
| 서부 | 1,916 | 1,196(62.4%) | 10 | 99 | 611 |
| 서부분관 (청양) | 226 | — | — | 226(100%) | — |
| 남부 | 1,903 | — | 1,204(63.3%) | — | 699 |

※ 참고 2 : 15년 시·군별 장애인 등록현황(등급별)

(단위 : 명, 6월 말 기준)

| 등급별 | 합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 합 계 | 124,604 | 9,376 | 16,920 | 22,110 | 18,593 | 26,357 | 31,248 |
| 천안시 | 24,009 | 1,987 | 3,448 | 4,086 | 3,301 | 4,688 | 6,499 |
| 공주시 | 8,725 | 917 | 1,255 | 1,568 | 1,196 | 1,850 | 1,939 |
| 보령시 | 8,465 | 714 | 1,030 | 1,789 | 1,277 | 1,724 | 1,931 |
| 아산시 | 14,085 | 1,097 | 1,932 | 2,476 | 2,057 | 2,815 | 3,708 |
| 서산시 | 9,097 | 768 | 1,189 | 1,444 | 1,387 | 1,978 | 2,331 |
| 논산시 | 10,536 | 796 | 1,690 | 2,027 | 1,511 | 2,129 | 2,383 |
| 계룡시 | 1,463 | 111 | 169 | 241 | 211 | 317 | 414 |
| 당진시 | 9,484 | 603 | 1,186 | 1,600 | 1,423 | 2,110 | 2,562 |
| 금산군 | 4,538 | 300 | 571 | 781 | 741 | 997 | 1,148 |
| 부여군 | 7,118 | 383 | 1,024 | 1,308 | 1,090 | 1,601 | 1,712 |
| 서천군 | 5,772 | 366 | 715 | 979 | 1,010 | 1,360 | 1,342 |
| 청양군 | 3,004 | 159 | 375 | 530 | 519 | 710 | 711 |
| 홍성군 | 6,640 | 454 | 857 | 1,270 | 1,039 | 1,404 | 1,616 |
| 예산군 | 6,888 | 425 | 890 | 1,233 | 1,094 | 1,505 | 1,741 |
| 태안군 | 4,780 | 296 | 589 | 778 | 737 | 1,169 | 1,211 |

협약 16. 깨끗한 충남만들기

- ◆ 「깨끗한 충남」 - 발전의 동력이자 관광충남의 원천
 - 깨끗한 충남만들기를 통한 청결한 이미지 홍보, 충남발전 동력 창출

■ 추진배경

- 그동안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방치쓰레기 및 환경민원 상존
 -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하향식 정책 추진의 한계
 - 지역의 『사회적 자본』 성숙 없이 새로운 정책이 정착되지 못함
- 방치쓰레기는 대기, 하천, 해양, 지하수 오염과 함께 안전 문제까지 야기
 - 방치된 농촌쓰레기가 물길을 막아 주택, 농경지 등 피해 발생
 - 항·포구 등의 해양쓰레기는 어족자원 감소, 해양환경 등 파괴
- 깨끗한 충남을 통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
 - 쾌적한 환경속에 삶과 휴식을 갖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

■ 추진전략

- 사회적 자본이 증진될 수 있는 실질적·자발적 도민 참여사업 발굴 시행

- | | |
|------------------------|-----------------|
| - (도) 제도개선 및 법제화, 재정지원 | - (시·군) 실천전략 수립 |
| - (시민단체) 네트워크 확산 | - (주민) 자발적 참여 |

※ 사회적 자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역량

■ 그동안 추진사항

-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시·군 및 협업부서 의견수렴(13회 3~6월)
- “깨끗한 충남만들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6.8)
- “깨끗한 충남만들기” 추진본부(1본부, 2개팀) 구성·운영(6. 15)

- ① “깨끗한 충남만들기 추진·평가위원회” 구성(14명, 6.23)
- ② 시·군 특화사업 컨설팅 실시(15개 시·군, 7.13 ~ 20)
- ③ 깨끗한 충남만들기 “환경 순찰단” 구성·운영(7.24)
- ④ 깨끗한 충남만들기 추진 아이디어 발굴 회의 정례화(7.29 ~)
- ⑤ 불법투기 단속 및 협업부서 환경정비 실시(7.1~9.30)
 - 381건 74백만원 부과, 쓰레기 18,959톤 수거, 빈집 1,886동/광고물 280,097개 정비
- ⑥ 시·군 재정지원사업 심의 선정(8.12, 9.18)
 - 15개 시·군 3,635백만원(1차 6개 시·군 1,982, 2차 9개 시·군 1,653)

■ 쟁점사항

- 시·군 고유사무로만 인식하여 그 동안 도-시·군간 협업 미흡
 - 지방행정 주체로서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동반자적 협력 필요
 - ※ 시·군별 특화사업비 지원(15년) : 총 36억원(도비) / 15개 시·군
- 쓰레기처리 방식 전환(폐열 재활용)
 - 쓰레기 단순 매립·소각시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17년부터) 대응책 필요
 - ※ “단순 소각시설 방식” → “폐열재활용 소각시설 방식” 으로 전환(부담금 면제)
 - (75%이상 폐열 재활용시 부담금 미부과 / 자원순환촉진법 시행 17년부터 시행)

<폐열재활용 소각시설 방식>

- ▶ 현재 폐열재활용 공급 중 : 천안(400톤/일), 아산(200톤/일), 공주(50톤/일)
- ▶ 폐열 재활용시설로 전환 중 : 서산·당진(200톤/일), 금산(30톤/일), 예산(타당성검토)

<단순 소각시설 방식>

- ▶ 논산(50톤), 태안(45톤), 보령(50톤), 계룡(25톤), 서천(10톤), 청양(15톤), 예산(40톤)
- 청소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 역량강화
 - 지금까지의 관주도적 해결방식에서 주민 자발적으로 해결방식으로 전환

■ 도-시·군 합의사항

- 도-시·군간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동의 목표 실현
 - (도) “깨끗한 충남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 정책 피드백 및 추진시스템 발전 방안 마련
 -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사업 단계별 추진
 - 주민 및 사회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자발적 청소 문화 확산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조기 대응
 - (도) 자원순환 사회 기반시설(폐열활용 소각로)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
 - 및 시·군별 연합형(2~3개 단위) 소각시설 설치 조정 역할

※ 시·군 단독 설치시 : 국비 30% 지방비 70%(도비 10%) / 2개시·군 광역설치시 :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10%) / 군단위(농어촌특별회계)사업 국비 15% 진여사업비(도비 50%, 군비 50%)

- (시·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소각시설 변경 등) 및 쓰레기 재활용 확대
- 도민 환경마인드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환경 교육 추진
 - (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상설 교육장 운영
 - (시·군) 자율적 주민 참여를 위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환경 교육 실시

협약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

- ◆ ' 20년 7월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로 인한 대규모 해제 불가피
-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불요불급하고 집행 불가능한 시설의 해제조치 등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 현 황

-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2000.7.1.기준)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20년 경과시 일몰제 적용)
- 일몰제대상 현황

(단위:km², 조원, ' 14년말 기준)

| 구분 | 결정 면적 | 미집행 시설 | | 일몰제 대상시설 ('20.7.1. 실효) | | 비고 |
|----|----------|--------|------|----------------------------|-----|----|
| | | 미집행 면적 | 사업비 | 미집행 면적 | 사업비 | |
| 충남 | 390.0 | 81.4 | 12,5 | 44.2 | 7.1 | |

* 미집행 시설별 비율 : 공원 35.7%, 도로 31.7%, 녹지 등 기타 32.6%

※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정당 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 99.10.21.) ⇨ 국토부 일몰제 도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 문제점

-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에 의해 20. 7. 1.부터 해제 예정(20년 이상 시설 자동실효)
 - 각종 행위제한이 풀려 난개발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문제로 확산
- * 도로, 공원과 같은 필수시설이 갑자기 해제될 경우 지역 간 연계, 주민의 쾌적성 등 악화
-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제도도입³⁾과 예산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미집행시설 해소에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
 - ※ 미집행시설사업 추진(05~15) : 총 2,438억원 (도비 1,084억, 시·군비 1,354억원)
 - 전제적으로 미집행사업비 총 12.5조의 약 2% 수준에 불과(연평균 221억원 집행)

3) 단계별 집행계획(03년), 관리계획 재정비(03년), 매수청구제(03년),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12년) 등

■ 쟁점사항

-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2020.7.1.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

① 장기미집행시설 우선투자 대상 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 해제대상 장기미집행시설 조사 및 우선투자 시설 순위 기준마련, 사업집행을 위한 시·군비 및 도비 확보 (최근 11년간 연평균 도비 98억원 지원)

② 적극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불요불급하고 집행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해제 조치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③ 중앙부처에 정책(제도)개선 및 국비지원 건의

- 중앙정부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재원확보(도시계획세 신설 등) 및 국비 지원 건의 등 적극적 불 조성 (11월 시도지사협의회 통해 건의 예정)
-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 체계적 운영 관리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후 도시 구조(골격) 및 체계 형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획적 관리
 - (예) 용도지역 지정 등을 통한 대체관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계획적 관리 수단 등 활용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대한 대응 및 종합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운영(도, 시·군은 법령상 각각 설치 대상임)
 - ※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업무수행을 위해 도 및 시·군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토록 규정 (국토계획법 제116조)/
(道)16년도에 4명(5급1,6~7급 2,전문가 1) 구성 예정

■ 도-시·군 합의사항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 (도) 장기미집행시설 우선 투자 순위 판단기준 마련 및 도비 지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정 및 국비지원 건의(국토부)
 - (시·군) 장기미집행시설(도로, 공원 등) 우선 추진대상 조사 및 자체 예산 확보, 사업 추진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도, 시·군) 도시계획 전문성·연속성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
 - 정확한 수요추정과 지방재정 등을 감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 참고 1 : 충청남도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장기미집행) 현황

(단위 : m², 백만원)

| 시설구분 | 결정면적 | 미집행 전체 | | 장기미집행(10년이상) | |
|----------|-------------|------------|------------|--------------|-----------|
| | | 미집행면적 | 사업비 | 미집행면적 | 사업비 |
| 계 | 390,008,151 | 81,424,755 | 12,467,680 | 49,700,984 | 8,338,548 |
| 도로 | 111,678,863 | 25,811,857 | 7,232,724 | 16,800,913 | 4,474,948 |
| 공원 | 43,882,680 | 29,077,138 | 3,132,655 | 26,242,547 | 2,859,679 |
| 철도 | 6,289,656 | 283,182 | 59,184 | | |
| 항만 | 6,497,209 | 369,330 | 106,836 | | |
| 주차장 | 1,507,475 | 370,774 | 32,985 | 160,991 | 22,911 |
| 자동차정류장 | 393,552 | 113,377 | 33,391 | 107,034 | 33,391 |
| 광장 | 8,511,727 | 1,322,393 | 94,556 | 626,275 | 56,883 |
| 녹지 | 15,712,259 | 5,405,862 | 414,371 | 2,338,082 | 355,560 |
| 유원지 | 4,535,411 | 2,740,302 | 378,468 | 1,402,177 | 245,252 |
| 공공공지 | 809,408 | 132,226 | 22,008 | 14,861 | 5,331 |
| 유통업무설비 | 1,282,473 | 88,764 | 10,950 | 58,500 | 10,950 |
| 수도공급설비 | 1,722,929 | 92,800 | 3,731 | 20,145 | 1,623 |
| 전기공급설비 | 14,661,997 | 6,193,586 | 2,760 | | |
| 방송·통신시설 | 55,632 | 9,140 | 6,555 | | |
| 시장 | 572,441 | 55,813 | 6,183 | 20,030 | 3,034 |
| 학교 | 24,414,540 | 1,107,500 | 154,344 | 668,153 | 70,461 |
| 운동장 | 2,231,434 | 256,388 | 33,264 | 141,819 | 21,844 |
| 공공청사 | 10,664,923 | 912,392 | 116,951 | 7,258 | 11,582 |
| 문화시설 | 1,714,283 | 139,143 | 3,709 | 17,950 | 1,282 |
| 체육시설 | 16,964,770 | 1,924,695 | 250,894 | | |
| 도서관 | 47,830 | 5,000 | 500 | | |
| 연구시설 | 5,476,603 | 271,859 | 9,940 | 131,859 | |
| 사회복지시설 | 310,124 | 110,555 | 13,466 | 44,567 | 13,266 |
| 청소년수련시설 | 270,462 | 67,424 | 100,000 | 67,424 | 100,000 |
| 하천 | 95,957,816 | 3,332,567 | 164,902 | 642,670 | 39,155 |
| 유수지 | 1,840,270 | 167,565 | 4,042 | | |
| 공동묘지 | 2,998,598 | 117,634 | 5,145 | | |
| 종합의료시설 | 222,529 | 74,646 | 2,475 | 30,026 | |
| 하수도 | 1,618,988 | 126,283 | 23,214 | 43,838 | 8,384 |
| 폐기물처리시설 | 3,065,003 | 646,441 | 40,646 | 113,285 | 3,012 |
| 수질오염방지시설 | 1,334,694 | 97,927 | 6,831 | 580 | |

※ 참고 2 : 2020년 충남 미집행시설 자동 실효대상 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 m²,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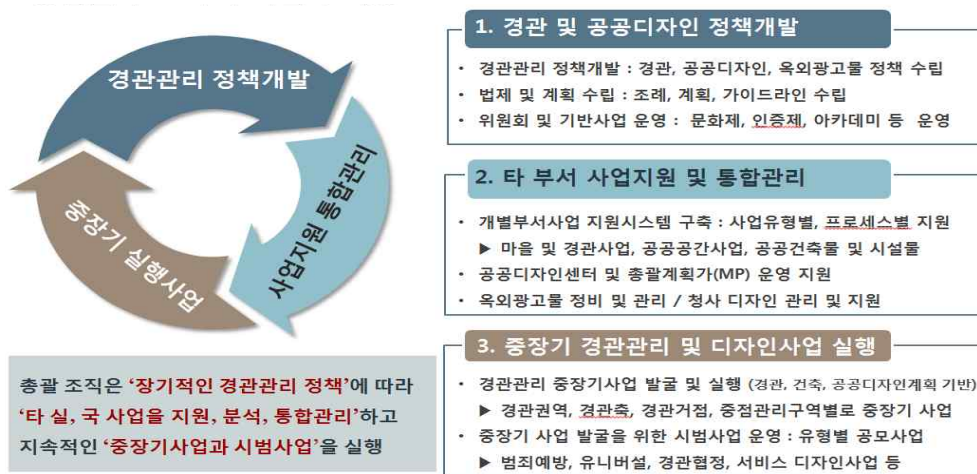
| 시설별 | 면적 | 소요 사업비 | | |
|---------|------------|-----------|-----------|-----------|
| | | 소계 | 보상비 | 공사비 |
| 계 | 44,273,050 | 7,157,453 | 2,836,626 | 4,320,827 |
| 도로 | 13,680,569 | 3,750,521 | 1,538,489 | 2,212,032 |
| 주차장 | 157,469 | 22,574 | 9,730 | 12,844 |
| 공원 | 25,238,730 | 2,748,519 | 1,039,424 | 1,709,095 |
| 광장 | 576,520 | 53,725 | 23,170 | 30,555 |
| 녹지 | 1,996,926 | 304,923 | 120,442 | 184,481 |
| 공공공지 | 9,187 | 4,135 | 3,073 | 1,062 |
| 공공청사 | 6,153 | 11,527 | 450 | 11,077 |
| 문화시설 | 5,935 | 681 | 206 | 475 |
| 사회복지시설 | 24,977 | 6,780 | 1,785 | 4,995 |
| 수도공급설비 | 20,120 | 1,618 | 114 | 1,504 |
| 시장 | 20,030 | 3,034 | 1,524 | 1,510 |
| 운동장 | 141,819 | 21,844 | 8,291 | 13,553 |
| 유원지 | 733,570 | 84,551 | 29,420 | 55,131 |
| 유통업무설비 | 58,500 | 10,950 | 2,660 | 8,290 |
| 자동차정류장 | 107,034 | 33,391 | 22,986 | 10,405 |
| 폐기물처리시설 | 113,285 | 3,012 | 139 | 2,873 |
| 하수도 | 43,838 | 8,384 | 5,320 | 3,064 |
| 하천 | 603,733 | 33,105 | 3,671 | 29,434 |
| 학교 | 572,190 | 54,179 | 25,732 | 28,447 |
| 기타 | 162,465 | | | |

협약 18. 공공디자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 ◆ 공공디자인 중장기 미래발전 정책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디자인 기획 및 콘텐츠 개발과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
- ➡ 사람, 자연,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살고 싶은 “명품 충남” 건설

■ 공공디자인 통합 지원 체계란?

-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공공사업을 체계적인 디자인컨트롤 타워를 통해 디자인 전문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공간·환경·건축물·시설물·매체 등 경관 및 디자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 디자인컨트롤 타워 역할 및 기능



■ 추진현황

- 도시디자인 및 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 공공디자인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틀 마련 (경관법, 옥외광고물법)
- 디자인공모사업 : 공공디자인 도시(3개소), 농어촌(2개소), 아름다운거리(1개소)
-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 사업 추진
 - 공모전(매년 1년, 총 8회), 인증제(마크부여)(매년 1회, 6회), 아카데미(매년)
- 도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 1개소 (컨설팅 시행, 전문가 디자인 자문)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공(15.6월)
 - 범죄예방, 색채, 옥외광고물, 공사용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 공공디자인 센터를 통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15. 9월말 현재 150여건)

■ 쟁점사항

- 통합개념의 공공디자인 접근 부재
 - 개별부서(문화, 관광, 농정 등)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공매체, 시설물 등 일관성 없이 가로경관 조성(디자인 일체감 결여)
 - 타 지역의 외형적 디자인만 단순 모방(가로 정비, 간판정비 등)하는 수준에 머물러 지역의 독창성 부재
 - 시·군의 지역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초기 구상 단계부터 도에 적극적인 컨설팅 요구(시·군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전협의 의무화)
 - 공공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마인드 부족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의 색채, 재질, 형태 등의 부조화
 - 디자인품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총괄계획가(MP) 참여 체계구축 필요
 - 유기적 협력을 위한 행정기반(디자인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미채용) 취약
 - * 전담부서 미설치 : 청양, 부여, 예산
 - * 전문직 미채용 : 공주, 보령, 서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예산, 태안
- ⇒ 2009년부터 공공디자인 정책을 본격 도입, 시·군에 컨설팅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아직 디자인 행정기반(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이 취약해 통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도-시·군 합의사항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 지원체계 운영
 - (도) 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공공디자인센터 및 총괄계획가(MP) 운영지원, 경관관리 중장기사업 발굴
 - (시·군) 공공디자인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확보 및 컨설팅 협업추진
 - (도) 민간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시·군에 자료제공, 시·군에 디자인 컨설팅 지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활용)
 - (시·군) 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공공사업 시행 초기단계부터 적극적 공공디자인 컨설팅 요청(시·군→도)

협약 19. 해양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도-시·군 및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한 관·학·연 융복합 산업 발굴 육성
- 해양신산업 인프라 등 우위 선점,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확보

■ 해양신산업 개념

- (전통적) 해양산업은 「해운·항만·수산·해양과학기술 개발·해양환경·해양관광 및 해양 정보 관련 사업」 등 의미
- (해양신산업) 전통적 해양산업에 「바이오·전자정보·환경기술」 등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 |
|------------------|--|
| 대 상 사 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분야) 수산양식, 수산가공 및 유통, 6차산업화 등 •(해양자원/과학기술분야) 해조류산업, 신재생에너지(디젤·수소 등) 해양바이오(생명공학), 해양자원(갯벌·광업 등) •(해양관광분야) 마리나 항 개발,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등 |
|------------------|--|

〈관심분야〉

- (해양관광분야) 해양레저산업·해양헬스케어산업 등 기반구축
- (해양자원개발분야) 해양바이오·해양자원 신소재 사업 연구 등

■ 우리 도 여건(문제점)

- 전통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로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전무
 - R&D기반 해양신산업 수행관련 기관 부족(연구기관, 대학, 관련기업 등)
 - 유망서비스업 해양관광 인프라 열악 및 고부가 콘텐츠 개발 미흡
- ⇒ 새로운 블루오션인 해양신산업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개발 확대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 (해양자원 개발) 해양신산업 추진기반 구축에 진력
 - 도내 대학(호서대·한서대) 등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MOU)
 - * 도~호서대 : 해양수산업발전을 위한 상호협력(3.3, 해양ICT 융합기술분야) 등
 - 대학 및 관련 연구소, 공공기관과 협력방안 협의
 - * 단국대 : 해양수산분야 협업(4.15), 충남대 : 해양수산물발전방향(4.16)
- 한국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4.16) : 해양산업분야 협력방안 모색

- (연구기관 유치) 해양수산 국책연구기관 서해분원 유치 추진
 - 해양수산부 건의(7.16), 관련 기관 벤치마킹(8.11, 제주센터)
- (마리나 항만 개발) 국가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우리 道 다수 항 반영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수정계획 반영(7개소), 어촌마리나역 선정(2개소)
 - 당진 왜목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대상지로 선정(' 15. 7, 국비 300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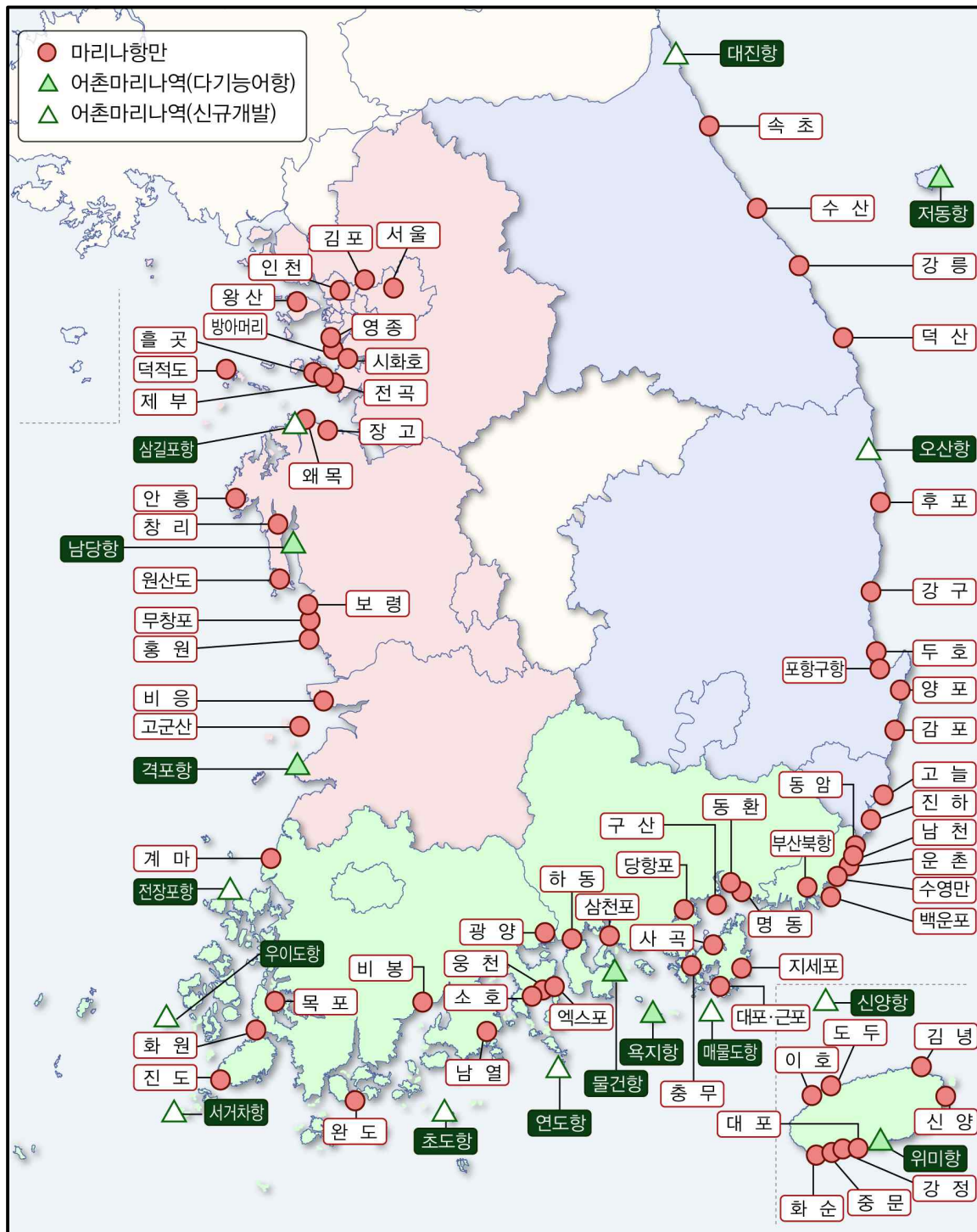
■ 쟁점사항

- 우수한 해양자원(바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양정책에는 소극적
 - 농정, 경제 등 타 분야에 비해 해양관련 산업에 관심 및 투자 저조
 - 과거는 1·2차산업(생산·가공)에 투자집중, 신산업분야 투자확대 필요
 - 해양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1·2차 산업 중심→ 신산업 중심)
- 해양수산 신산업육성은 15개 시·군 모두 해당되나, 관심과 추진의지 미흡
 - 해수면뿐만 아니라 내수면 어업(양식 등)도 포함, 다양한 아이템 발굴
- 대표적 선도산업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콘텐츠 개발(도+시·군)
 - 국가계획에 마리나항만 조성 예정구역으로 7개소 지정(15)/민자유치 사업
 - * 7개소(왜목, 홍원, 창리, 안흥, 무창포, 장고항, 원산도)/
 - 마리나항 개발시 200~300억원 소요

■ 도-시·군 합의사항

- (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선제적 대응으로 해양신산업 육성
 - 광역적 R&D연구 및 국가 해양프로젝트 유치(마리나, 헬스케어, 바이오수소 등)
 - 충남연구원 내 해양수산연구센터 설치 운영으로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
 - 도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해양신산업 육성 추진
 - 도내 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아이템 등 발굴
- (시·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해양신산업 발굴, 육성
 -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 육성, 고부가가치 창출
 - IT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수산업의 新산업화 병행(첨단양식, 수산유통·가공 등)
 -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 추진(마리나항만 등)
 - 미래 해양정책을 펼쳐나갈 해양수산 전문가 및 공무원 육성

※ 참고 : 전국 마리나항만 및 어촌 마리나역 위치도



협약 20. 내포신도시의 안정적 운영 · 관리체계 구축

◆ 내포신도시 준공지역 확대 및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명품도시로서의 기반시설 운영 · 관리 실현

■ 내포신도시 조성현황

- (도시기반) 1단계 구역 : 시설 완공 (14.5. 소유권 이전 / 홍성, 예산)
2단계 구역 : 15년말까지 완공 (16년 인계 예정)

| 구 분 | | 전 체 | 1단계 | 2단계 | 3단계 | 비고 |
|-------------|-----|------------------|------------------|------------------|------------------|-------------------|
| 면 적 (만㎡) | 계 | 995 | 184(18%) | 405(41%) | 406(41%) | LH 총개공 공동시행 |
| | 홍성군 | 628 | 135(21%) | 273(44%) | 220(35%) | |
| | 예산군 | 367 | 48(13%) | 133(36%) | 186(51%) | |
| 사 업 기 간 | | '07. 7 ~ '20. 12 | '07. 7 ~ '13. 12 | '14. 1 ~ '15. 12 | '16. 1 ~ '20. 12 | |

- (주택공급) 10,781세대 (완공 6,337세대, 공사 중 4,407세대)
※ 15. 7월 현재, 7,753명(주민등록) / 16년에는 2만명 추가유입 예상
* 홍성지역 7,622명(98.3%), 예산지역 131명(1.7%)

■ 준공구역 운영 · 관리실태

- 1단계 구역 도시기반시설 운영·관리 전환
 - 인수관리 요청('14.2.7) → 인계인수 완료(' 14.6.5~' 15.8.25/홍성·예산)
 - ※ 주요 도시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가로등, 상하수도, 하천, 교통시설 등
-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인 홍성, 예산군에서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 · 관리하여야 하나
 - 각종 민원 등 문제 발생 시 道에서 맡아서 총괄 대응
(홍성, 예산군의 소극적 대응으로 주민불편 발생)

※ 도청이전 이후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지 역 | 2011 | 2012 | 2013 | 2014 |
|-----------|-------|----------------------|------------------|-------------------|
| 홍북면 (홍 성) | 4,172 | 7,624 | 20,488 | 25,293 |
| 삽교읍 (예 산) | 4,128 | 5,120 | 6,230 | 13,418 |
| 주요 증가사유 | - | 도청이전, 롯데@ 취등록세 증가 | 1단계 준공 재산세 증가 | 극동·효성@ 취등록세 증가 |

■ 문 제 점

- 내포신도시 준공구역 확대 및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관리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홍성·예산군에서 신도시 기반조성 관리에 대한 행정역량 투입 미흡(주민불만 가중)
 - 환경(쓰레기·잡초제거 등), 가로등, 주차, 건축공사장 차로 점거, 불법광고물 등 도시환경 관리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관리

■ 쟁점사항

- (道 입장) 홍성, 예산군은 신도시 관리청으로서 책임있고 주도적인 운영·관리 필요
 - 도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충개공, LH)의 협조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
- (홍성군 입장) 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라 매년 행자부에 기준인건비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장 인력증원은 어려운 실정
 - ※ 장기적으로 행정구역 변경(읍승격, 별도 面으로 분리) 등을 통한 증원 검토
- (예산군 입장) 아직은 많은 인구유입이 없어, 추후 인구유입 상황에 따라 검토

■ 도-시·군(홍성·예산) 합의사항

- (도) 내포신도시의 완벽한 기반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정주여건 마련
 -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컨셉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추진
 - 도시기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양 군(홍성, 예산) 간 조정·중재
- (홍성·예산군) 내포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자체적 운영·관리
 - 도시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 및 장비, 예산확보 투입
 - 내포신도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

※ 참고 1 : 1단계 사업 준공시설 현황 (15.8.25 인계·인수 완료)

| 시설구분 | | 규 격 | 단위 | 수 량 | | | 비고 |
|------------------|-------|------------------------|----------------|-----------|-----------|-----------|----|
| | | | | 계 | 홍성군 | 예산군 | |
| 도로 (현황도로포함) | | 폭6~39m, 75개소 | m ² | 594,665.7 | 385,073.2 | 209,592.5 | |
| 보행자도로 | | 폭4~10m, 102개소 | m ² | 29,739.2 | 18,599.2 | 11,140.0 | |
| 공 원 | 소계 | 13개소 | | 93,870.9 | 32,234.7 | 61,636.2 | |
| | 소공원 | 6개소 | m ² | 7,634.1 | 5,251.1 | 2,383.0 | |
| | 어린이공원 | 4개소 | m ² | 10,178.5 | 6,913.2 | 3,265.3 | |
| | 근린공원 | 2개소 | m ² | 20,070.4 | 20,070.4 | — | |
| | 역사공원 | 1개소 | m ² | 55,987.9 | — | 55,987.9 | |
| 녹 지 | 소계 | 10개소 | | 122,559.9 | 99,523.0 | 23,036.9 | |
| | 완충녹지 | 3개소 | m ² | 17,550.8 | 12,894.2 | 4,656.6 | |
| | 경관녹지 | 2개소 | m ² | 33,441.4 | 33,441.4 | — | |
| | 연결녹지 | 5개소 | m ² | 71,567.7 | 53,187.4 | 18,380.3 | |
| 광 장 | 일반광장 | 6개소 | m ² | 6,056.9 | 5,573.8 | 483.1 | |
| 공공공지 | | 3개소 | m ² | 60,581.9 | 60,581.9 | — | |
| 공동구 | | ■2.2x2.35~3.1x2.35 | m | 842.0 | 600.0 | 242.0 | |
|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 | V=30,000m ³ | m ² | 8,655.3 | 8,655.3 | — | |
| 상수도 | | D80mm~900mm | m | 29,519 | 24,057 | 5,462 | |
| 하수도 | | 우수(D250mm~1,500mm) | m | 36,893 | 25,930 | 10,963 | |
| | | 오수(D80mm~400mm) | m | 20,160 | 14,047 | 6,113 | |
| | | 우수암거 | m | 3,142 | 2,385 | 757 | |
| | | (■1.5x1.8~3.0x2.0) | | | | | |
| 재이용수시설 | | D350mm~700mm | m | 4,900 | 1,480 | 3,420 | |
| 초기우수처리시설 | | 와류형, 필터형 | ea | 7 | 7 | — | |
| 가로등 | | | 주 | 899 | 546 | 353 | |
| 공원등 | | | 주 | 306 | 195 | 111 | |
| 신호등 | | | 주 | 31 | 18 | 13 | |

※ 사업면적 : 총 9,951.7천m² (1단계 : 1,835.8천m², 전체의 18.5%)

※ 참고 2 : 2단계 사업 준공시설 현황 ('16년 인계·인수 예정)

| 시설 구분 | | 시설 수량 | 단위 | 시행사·관리청별 수량 | | | | 비고 |
|-----------------|-------|----------|----|-------------|-------|----------|--------|--------------------------|
| | | | | 충남개발공사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 | | 홍성군 | 예산군 | 홍성군 | 예산군 | |
| 도 로 (현황도로포함) | | 37,255 | m | 8,512 | 7,857 | 13,302 | 7,584 | 홍성:21,814m 예산:15,441m |
| 보행자도로 | | 1,609 | m | 47 | 528 | 723 | 311 | 홍성:770m 예산:839m |
| 하 천 | | 5 | 개소 | 2 | 1 | 1 | 1 | |
| 유 수 지 | | 9 | 개소 | 4 | － | 1 | 4 | |
| 공 원 | 소계 | 24 | 개소 | 3 | － | 13 | 8 | |
| | 소공원 | － | 〃 | － | － | － | － | |
| | 어린이공원 | 18 | 〃 | 1 | － | 10 | 7 | |
| | 근린공원 | 6 | 〃 | 2 | － | 3 | 1 | |
| | 문화공원 | 2 | 〃 | | | 1(1) | 1(1) | 홍예공원 |
| 녹 지 | 소계 | 30 | 〃 | 14 | 1 | 8 | 7 | |
| | 완충녹지 | 12 | 〃 | 4 | 1(1) | 4(1) | 3(2) | |
| | 경관녹지 | 5 | 〃 | 3 | － | 1(1) | 1(1) | |
| | 연결녹지 | 13 | 〃 | 7 | － | 3(3) | 3(3) | |
| 광 장 | 일반광장 | 9 | 〃 | 6 | － | － | 3 | |
| 공공공지 | | 5 | 〃 | － | － | 4 | 1 | |
| 공 동 구 | | 2,145 | m | 834 | － | 751 | 831 | |
| 상 수 도 | | 51,835 | m | 16,052 | 129 | 18,205 | 17,449 | |
| 하 수 도 | 계 | 75,568 | m | 23,041 | 192 | 26,943 | 25,392 | |
| | 오수관 | 28,810 | m | 10,654 | － | 10,678 | 7,478 | |
| | 우수관 | 46,758 | m | 12,387 | 192 | 16,265 | 17,914 | |
| 재이용수시설 | | 4,153 | m | 1,068 | 67 | 619 | 2,399 | |
| 초기우수처리시설 | | 18 | ea | 10 | － | 5 | 3 | |
| 가 로 등 | | 1,449 | 주 | 410 | － | 475 | 564 | |
| 공 원 등 | | 1,126 | 주 | 526 | － | 320 | 280 | |
| 신 호 등 | | 43 | 주 | 15 | － | 12 | 16 | |

※ 사업면적 : 총 9,951.7천㎡ (2단계 : 4,052천㎡, 전체의 40.7%)

제5장 도·시·군 협력과제

협력 1. 재난대응 안전관리 및 안전지수 개선 [제안 : 천안, 공주]

-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단위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
- ◆ 중점관리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발생 사전 차단 및 안전지수 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 현실태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기별·유형별 자연재난 대책 추진
 - － 겨울철(12.1~익년3.15), 여름철(5.15~10.15)등 예방·대비 활동
 - － 태풍, 호우, 폭설 등 유형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수시 운영
-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34개소 (시·군 자체점검 실시)
 -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점검 필요(시·군 자체점검 → 도+시·군+전문가 합동점검)
 - * 재난위험시설 : 총 34개소(D등급 25, E등급 9) / 교량, 옹벽, 절개지, 공동주택, 시장 등
 - * 중점관리시설 : 총 3,833개소(A등급 1,819, B등급 1,706, C등급 308)
- 지자체 안전수준 7분야 계량화 안전지수 부여(최고 1에서 최저 5등급까지)
 - ※ 7개 분야: ①자연재해 ②화재 ③교통사고 ④범죄 ⑤안전사고 ⑥자살 ⑦감염병
 - － (지표산출) 매년 전년도 안전관련 주요통계를 위해지표(사망·사고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 경감)로 구분하여 계산

※ 핵심지표 목록

| 분야 | 위해지표(7) | 취약지표(19) | 경감지표(12) |
|------|--------------|---|----------------------------|
| 자연재해 | 자연재해 사망자수 | 시기화율, 제방면적 | 재정자주도, 구거면적, 유지면적, 구조구급대원수 |
| 화재 | 화재 사망자수 | 산림면적,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 | 병상수, 재정자주도, 도시지역면적 |
|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망자수 | 재난약자수, 기초수급자수, 의료보장 사업장수, 자동차등록대수 | 의료기관수, 구조구급대원수, 인구밀도 |
| 범죄 |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 총전입자수, 인구밀도, 기초수급자수, 제조업 업체수, 음식점 및 주점업 업체수 | 경찰관서수 |
| 안전사고 | 안전사고 발생건수 | 하천면적, 산림면적, 재난약자수, 시·군구외 전입자수, 건설업 종사자수, 제조업 종사자수 | 의료보험료 수납액 |
| 자살 | 자살 사망자수 | 고령인구수, 혼인귀화자수,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 기초수급자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종사자수 |
| 감염병 | 감염병 사망자수 | 건강보험급여실적, 고령인구수, 기초수급자수, 도시지역면적 | 의료기관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 문제점

- 국지성 폭우 및 태풍 등 풍수해 자연재난 발생시 보고 누락 등
 - 야간 재난안전 상황근무자의 전문성 결여(7개 시·군*은 당직실로 상황관리 전환, 재난안전부서 직원이 24시간 재난상황관리를 유지하는 시·군은 8개 시·군에 불과)
 - * 7개 시·군(공주,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제9호 태풍 ‘찬홈’ 내습 시, 재난상황 보고 누락·지연사례 발생(7.13)
- 재난위험시설 점검시 담당공무원의 육안점검에 따른 부실점검 우려와 돌발상황 대비 수시 점검(상시모니터링) 미흡
- 안전지수 시범공개 결과 화재·교통사고 2개 분야 공개(15.7.29, 국민안전처)
 - 우리도 화재 4등급, 교통 4등급으로 전반적으로 저조(’13년 통계기준)
 - ※ 화재사망 : 26명(서울, 경기도 이어 3위),
교통사고 사망 : 418명(경기·경북·경남에 이어 4위)
 - (부진원인) 위해지표 중 13년도 화재·교통분야 사망자 발생률이 전국 타시도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
 - 위해지표(사망·사고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 경감)에 대한 분석 및 개선을 위한 도·시·군의 적극적 대응 및 협력 필요

■ 도-시·군 협력사항

- 지역단위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
 - (도) 재난대응 즉시 지원체계 확립(재난대응 13개* 협업기능 중심)
 - (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체계 확립(재난안전법 제18조)

*①재난상황관리 ②긴급 생활안정 지원 ③긴급 통신지원 ④시설응급복구 ⑤에너지 기능 복구 ⑥재난자원 지원 ⑦교통대책 ⑧의료 및 방역서비스 ⑨재난현장 환경 정비 ⑩자원봉사관리 ⑪사회질서유지 ⑫수색·구조·구급 ⑬재난수습홍보

- 재난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 (도) 재난위험시설 재해예방을 위한 도 안전관리 자문전문가 지원,
도+시·군+전문가 합동점검 실시(년 2회)
 - (시·군) 재난위험시설 상시모니터링 요원 지정·운영, 합동점검 참여,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한 안전 위해요소 신고요령 교육·홍보
-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효율적 협업행정 추진
 - (도)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안전컨설팅 지원
 - (시·군)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로 구체적 단위과제 선정·추진

※ 참고 1 : 광역지자체 안전 등급

■ 특별·광역시 (8개소)

| | 시도 | 화재 | 교통사고 |
|---|---------|----|------|
| 1 | 서울특별시 | 1 | 1 |
| 2 | 부산광역시 | 4 | 3 |
| 3 | 대구광역시 | 3 | 3 |
| 4 | 인천광역시 | 4 | 2 |
| 5 | 광주광역시 | 2 | 4 |
| 6 | 대전광역시 | 2 | 2 |
| 7 | 울산광역시 | 3 | 4 |
| 8 | 세종특별자치시 | 5 | 5 |

■ 도 (9개소)

| | 시도 | 화재 | 교통 |
|---|---------|----|----|
| 1 | 경기도 | 1 | 1 |
| 2 | 강원도 | 3 | 2 |
| 3 | 충청북도 | 3 | 3 |
| 4 | 충청남도 | 4 | 4 |
| 5 | 전라북도 | 2 | 3 |
| 6 | 전라남도 | 5 | 5 |
| 7 | 경상북도 | 2 | 4 |
| 8 | 경상남도 | 3 | 2 |
| 9 | 제주특별자치도 | 4 | 3 |

※ 참고 2 : 기초지자체 안전등급

■ 화재 분야

| 구분 | | 화재 |
|-------------|-----|--|
| 시 (74개소) | 1등급 | (경기)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고양시, 시흥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
| | 2등급 | (경기)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
| | 3등급 | (경기) 용인시, 파주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전남) 여수시, 나주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경산시, (경남) 김해시, 양산시 |
| | 4등급 | (경기) 이천시, 안성시, (강원) 원주시, 삼척시, (충북) 충주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당진시 , (전북) 남원시, (전남) 순천시, 광양시, (경북)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
| | 5등급 | (경기) 포천시, (강원) 춘천시, 강릉시, (충남) 계룡시 , (경북) 영천시, 상주시, (경남) 밀양시 |
| 군 (84개소) | 1등급 | (부산) 기장군, (경기) 여주군, (강원) 철원군, (충북) 증평군, 음성군, (전남) 무안군, 영광군, (경남) 창녕군 |
| | 2등급 |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충북) 청원군, 옥천군, (충남)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 (전북) 장수군, 고창군, (전남) 보성군, 해남군, 영암군, (경북) 청도군, 칠곡군, 울릉군, (경남) 함안군 |
| | 3등급 |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인제군, (충북) 진천군, 단양군, (충남)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 (전북)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
| | 4등급 |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횡성군, 영월군, 양양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 (전북) 진안군, 순창군, (전남)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경북) 의성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
| | 5등급 | (강원) 평창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전남) 완도군, (경북)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경남) 의령군 |
| 구 (69개소) | 1등급 |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
| | 2등급 | (서울) 용산구,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부산) 연제구, 사상구, (대구) 서구, (인천) 남구, 연수구, 남동구, (광주) 서구, 남구, (울산) 남구 |
| | 3등급 | (서울) 중랑구, 성북구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부산)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
| | 4등급 | (서울) 종로구, 강북구, 관악구, (부산) 서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대구) 남구, 북구, 수성구, (광주) 동구,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울산) 동구, 북구 |
| | 5등급 | (서울) 중구, (부산) 중구, 영도구, 북구, (대구) 동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

* (참고) '13년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함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13.9.23. 시로 변경)는 군(郡)지역에 포함, 충북 청주시(14.7.1. 청원군과 통합)는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분리

■ 교통 분야

| 구분 | | 화재 |
|-------------|-----|--|
| 시 (74개소) | 1등급 | (경기)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오산시, 군포시 |
| | 2등급 | (경기) 의정부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계룡시 ,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
| | 3등급 | (경기) 평택시, 동두천시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강원)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충남) 아산시 , (전남)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경북)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
| | 4등급 | (경기) 안성시, 포천시, (강원) 동해시, 삼척시, (충북) 충주시, 제천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경남) 밀양시 |
| | 5등급 | (충남) 논산시 ,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경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
| 군 (84개소) | 1등급 |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강원)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 |
| | 2등급 |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인제군, 고성군, (충북)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전남) 구례군, 무안군, 완도군, (경북) 영양군, 칠곡군, (경남) 하동군 |
| | 3등급 | (경기) 여주군, (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북)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경북) 의성군, 영덕군, 성주군, 울진군, (경남)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 |
| | 4등급 | (강원) 횡성군,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 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 5등급 |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충남) 청양군 , (전남) 보성군, 영암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
| 구 (69개소) | 1등급 | (서울)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중랑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
| | 2등급 |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부산) 동래구, 사하구, (인천) 부평구, 계양구 |
| | 3등급 | (서울)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대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동구 |
| | 4등급 | (서울) 종로구, 중구, (부산) 서구, 동구, 금정구, 사상구, (대구) 북구, (인천) 동구, (광주)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
| | 5등급 | (부산) 중구, 강서구, (대구) 중구, 동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울산) 북구 |

* (참고) '13년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함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13.9.23. 시로 변경)는 군(郡)지역에 포함, 충북 청주시(14.7.1. 청원군과 통합)는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분리

협력 2. 시·군과 함께하는 「충남경제비전 2030」

- ◆ 최근 주력산업 성장둔화, 신흥경쟁국의 추격 등 충남경제의 위기 직면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중기 경제산업계획 수립
- ⇒ 경제비전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道, 市郡이 공동참여 주체로서 상호협력

■ 추진배경

- 최근 충남의 주력산업 성장둔화, 신흥경쟁국 추격 등 위기에 직면
 - －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등 충남 경제가 나아가야 할 충남 미래에 대한 그동안의 성찰과 진지한 고민에서 경제비전 수립 논의 시작
 - 現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경제정책으로는 복잡 다양한 경제환경과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흐름을 따라잡기 역부족
 - －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 집행 역할에서 벗어나 충남만의 특색을 찾아 충남에 맞는 맞춤형 처방·대응, 환황해 경제거점 중심으로 발돋움
- ⇒ 기업인,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등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충남경제비전 2030」 수립 추진 필요

■ 비전수립 개요

- (범위) 2016~2030 (15년간) / 도내 전역 대상 (15.12월 발표예정)
- (성격) 중기계획, 전략계획, 실천계획, 과정계획
- (내용)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산업 육성, 환황해 경제권 거점 구축, 품격 있는 정주여건 조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 수립방향

- 도민과 경제주체,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경제비전
 - － 경제비전위원회(18인의 각 분야 전문가) + 경제비전연구단(전문가 중심의 분야별 Working Group) + 경제비전추진단(道 경제비전수립 T/F)

- 지방정부 주도의 참여적 소통적 계획
 - 지방정부 주도의 기획과 도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 경제주체 참여
- 충남 경제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미래비전 제시
 - 면밀한 현실진단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방안 모색 등 담대한 비전의 제시 및 실천전략 마련
- 끊임없이 진화 발전하는 과정중심의 계획
 - 지속적인 의견수렴(전문가, 도민)을 통한 피드백 및 지속적 수정발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발전
 -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선도

■ 협력의 필요성

- 「경제비전 2030」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시·군의 주체적 참여 필요
 - 시·군의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경제비전 수립 (핵심사업 취합 중)
- 실행력 있는 비전수립을 위해 시·군 및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가치공유(공감대 형성) 필요

■ 도-시·군 협력사항

- 경제비전이 시·군 발전계획과 연계되어 경제현장에서 효과적 작동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경제비전 수립 및 추진에 공동 노력
 - 경제비전 시·군 핵심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반영 등 적극적 지원과 관심
 - 비전수립 이후에도 계속 진화 발전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비전 가치 공유 협력
 - 지역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협조
 - 비전 가치 및 전략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 “충남경제비전 2030” 발표(‘15.12월) 후에도 변화하는 경제상황, 시·군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능동적·포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수정 보완 발전

※ **참고 : 경제비전2030 시·군 순회설명회 결과**

| 시군별 | 주요의견 | 비고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강구 ▶낙후지역 발전전략 등 적극적 지역균형발전전략 강구(천안,아산,서산,당진 제외) ▶지역관광자원 활용전략마련 ▶지역 입주 기업지원전략 | |
| 천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수도 감면, 주변지역 청소용 쓰레기봉투 지급, 화재보험 지원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착한업소 공무원 이용독려 및 지역홍보 | 5.27 |
| 공주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마을의 관광명소화 ▶공주역사, 금강 주변 활용 아름다운 주거단지 조성 ▶문화재보존지역 규제 개선 | 7.15 |
| 보령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서간 도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재유치 ▶낙후지역에 향토기업입주 시 더 많은 지원 ▶관광특구지역의 관광콘텐츠 보강, 보령머드축제 상시 운영, 도서개발 등 관광지 개발전략 | 7.16 |
| 아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해외취업 인센티브 지원 ▶수도권규제완화 대응 ▶지역대학 활용 및 지원방안 ▶판매 가공업체 등 관련 업체에도 6차산업 지원대상으로 범위확대 | 6.2 |
| 서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산항 중국 용안 여객선 취항 대비 대형쇼핑센터 건립 등 중국관광객 유치전략 ▶해미지역 민간항공기 취항 유치 | 5.27 |
| 논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산 대표 먹거리산업 육성 ▶한중 FTA 활용 상품포장, 자동차기업 소재산업 유치 ▶대학기업 마케팅 지원 ▶청년창업 지원 | 7.13 |
| 계룡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획일적 관리체계가 아닌 지역맞춤형 산업단지 관리체계로 개선 ▶교육지청 유치 ▶국방산업유치 ▶기업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 | 7.17 |

| 시·군별 | 주요의견 | 비고 |
|------|---|------|
| 당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문국가산단의 기업유치 위해 SOC 확충 ▶소득 역외유출 방출방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별 차별화된 혁신빌리지 조성 및 산업과 연계 ▶일반부두 확대 ▶충남항만물류협회 설치 | 7.17 |
| 금산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산갯잎특수 지원 육성방안 마련 ▶인삼제품 관광상품화 전략 마련 | 6.5 |
| 부여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바이오산업단지 유치 ▶문화재 관련 규제완화 ▶금강 수변환경 활용 발전전략 마련 | 7.16 |
| 서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안관광휴양벨트에 서천군 생태관광을 주 타킷으로 설정 ▶시·군의 전략, 목표와 연동한 실행계획 작성 필요 ▶서천을 중국진출 교두보 조성 ▶수생바이오매스단지를 포함한 R&D전략 필요 | 6.5 |
| 청양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 융복합산업 등 성장가능성 큰 산업발굴 ▶로컬푸드 육성 지원 ▶상품의 6차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 | 7.15 |
| 홍성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산물 마케팅 및 홍보전략 마련 ▶수도권인력 유치 정주여건 마련 ▶지역전통산업 글로벌시장 진출전략 ▶홍성을 평화, 정의, 극일의 성지로 컨셉 구상 제안 | 6.4 |
| 예산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학과 연계 멘토링 시스템 구축 ▶전통웅기산업 글로벌화 ▶수처리 시스템을 도입, 냉난방으로 활용 ▶삼교역사 주변 개발 | 6.2 |
| 태안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리나 항 연결 소규모 요트 접안시설 설치 ▶수산물 6차산업화 전력 필요 ▶해양대학, 바다대학 유치 ▶태안상공회의소 유치 ▶섬 개발 구제 완화 | 5.26 |

협력 3.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관련 범도민 관심제고

◆ 지난 5. 4일 행자부장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으로 촉발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범도민 차원의 관심과 공동협력 필요

■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경위

- 1998. 3. 23. : 평택시, 매립지 일부 토지등록 → 최초 분쟁발생
- 2004. 9. 23.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당진 vs 평택) → 당진 승소
- 2009. 4. 1. : 지방자치법 개정 → 행자부장관이 매립지 귀속 결정
- 2010. 2. 10. : 평택시, 행자부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 신청
- 2015. 5. 4. : 행자부장관, 중분위 심의의결(4. 13.)에 따라 분할귀속
 ※ 결정 : 962,350.5㎡ 中 당진시 282,760.7㎡(29%), 평택시 679,589.8㎡(71%)

■ 현 실태

- 매립지 귀속기준 부재 및 행정자치부 법령정비 노력 부족
 - (행자부) “매립지 관할은 중분위 심의의결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결정”
 ↳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2009. 4. 1.신설]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지 규정 不在”
 - 미흡한 규정(매립지 귀속기준 不在)으로 지자체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행정자치부의 관계법령 정비 노력 不足
- 매립지 귀속 결정 시, 마땅히 고려해야할 사항 누락 → 재량권 일탈·남용
 - 기업유치 등 道·市행정 노력, 연육교 계획, 당진市 설치법률(관할구역) 등 간과

■ 우리道 대응방향

- (사법대응) 행자부장관 결정에 불복하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訴 제기
 - 행자부장관 결정 취소소송(5.18./대법원) 및 권한쟁의심판청구(6.30./헌재)
- (입법대응) 해상(매립지 포함)에 대한 자치권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거버넌스 구축) 시민주도형 범도민 대책위 구성(9.14.月), 政·官지원 체계 구축

■ 문제점

-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쏘 시·군 인식 결여 및 무관심 일관
-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안으로 치부, 도민 연대의식 및 공감대 부족
- 現실상 소통·이해부족으로 지역 간 「땅 뺏기 싸움」으로 폼하 우려
- 중앙정부 권한남용, 지역간 끊임없는 갈등·분쟁 조장 → 지방자치制 훼손

■ 도-시·군 협력사항

- 행자부(중분위) 결정 부당성, 「全도민 서명운동」 전개시 적극 동참
- 「매립지 관할권 바로알기 순회교육」 및 언론 기고를 통한 여론 환기
- 지역국회의원 대상, 여·야 공동발의 등 지방자치법 개정 공동 추진
- 헌법에 보장된 자치권 확보 및 지자체간 유사사례 분쟁 해소 노력

〈그림 3〉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현황도



협력 4. 체계적인 공공갈등 협력 (제안:천안,태안)

◆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으로 사전예방 및 관리·역할 강화
- 갈등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비용손실 최소화

■ 사업개요

- (목표) 상생 협력으로 더불어 사는 충남
- (필요성) 공공정책 사업과 관련된 각종 갈등 빈번 발생, 갈등으로 인한 행·재정력 낭비 초래는 물론 주민불편 가중
- 공공갈등 관리계획
 - (사전예방) 공공갈등 영향분석, 잠재갈등 사전조사, 여론 모니터링 등
 - (조정해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및 조정협의회를 통한 합리적 해결
 - (기반구축) 갈등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 각종 위원회에 갈등 전문가 참여확대
 - (역량강화) 역량강화 교육,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현장지원 중심 운영

<갈등조정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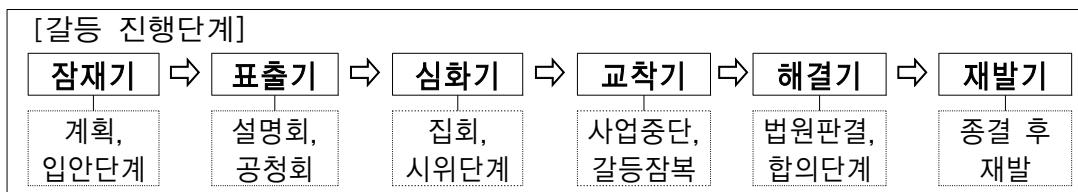
① 갈등발생 → ② 갈등현안 검토(도+사군+플러스충남) → ③ 갈등영향분석 →
④ 갈등조정 (협의회) → ⑤ 참여적 의사결정(합의도출) →
⑥ 사업(정책) 수정·보완 → ⑦ 갈등해결

■ 현 실태(문제점)

- 공공갈등 관리 : 29건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등)
 - 환경피해(10), 지역개발(7), 폐기물매립장(4), 경계분쟁(3), 교통(3), 송전선로(2)
 - ※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및 기피시설 설치가 갈등발생의 주요 원인임
-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발생 증가 추세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책임성 확대, 지역주민 생활영역 내에서의 갈등 증가
 - 표면적 이해관계(환경문제)와 실질적 이해관계(보상금)가 복합되어 해결책 도출 어려움
 - ※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 : OECD 27개 회원국 중 2위(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연간 최대 246조원 추정)-삼성경제연구소 자료('13년)
- 갈등해결을 위한 법적기반 취약
 - 시행령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이 유일(국무조정실 소관)
 - 지역 갈등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 도-시·군 갈등관리 협력체계 미흡
 - 도·시·군 모두 갈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골격은 갖추었으나, 갈등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대응에 한계)

■ 협력의 필요성

- 참여적, 민주적으로의 공공갈등 관리방식 변화 필요
 - 갈등해결(사후적 해결 → 사전적 해결), 정책추진(결과중심 → 과정중심), 행정·정책(효율성 중심 → 민주성 중심), 갈등합의(사법적 판단 → 당사자간 협상) 등으로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 필요(갈등 예상되는 사업추진시 정확한 사업 내용을 주민에 미리 공개하여 신뢰확보가 중요)
- 갈등해결을 위한 독자적 자원 부족, 공동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전문가 컨설팅지원, 각종 우수사례 및 정보공유 등 도-시·군 공동협력 추진



- 갈등의 다양화 및 시·군단위를 넘어서는 광역화 현상으로 상호협력 필요
 - 갈등의 광역화, 집단화 및 각종 사회단체 개입으로 인한 이념화 경향, 도·시·군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 필요
- (예) 주민↔도, 주민↔시·군, 도↔시·군, 시·군↔시·군 등 다양한 유형의 갈등 발생
- 충남연구원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중 (컨설팅 등 갈등현장 지원)
 - * 07.5월부터 충남연구원에 포럼사무국 설치 운영, 외부 전문가와 협력파트너십을 구축 제3자적 입장에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참여

■ 도-시·군 협력사항

-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갈등 협력
 - (도) 갈등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 (시·군) 시·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갈등 단계별 긴밀한 협조
 - ※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 8개 시·군(공주, 아산, 논산, 당진, 금산, 서천, 청양, 예산)
- 공공갈등 역량강화 사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 협력대응
 - (도) 공공갈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갈등관리 DB구축
 - *공무원 갈등관리 교육, 갈등관리 관계관 워크숍, 전문가 아카데미 등
 - (시·군) 민관네트워크 활성화(기초자료 작성), 갈등현장 정보 공유
- 시·군 갈등현장 컨설팅 지원 기능 강화
 - (도) 충남연구원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갈등현장 지원
 - (시·군)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활용 갈등현장 대응능력 강화

※ 참고 : 공공갈등 관리대상 사업

| NO | 시·군 | 갈등 사업 | 갈등 분야 |
|----|-----|------------------------|-------------|
| 1 | 천안 |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 교통 |
| 2 | | 제5산업단지 축산물유통센터 건립 | 비선호시설 |
| 3 | 공주 | 목방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 비선호시설 |
| 4 | | 천태산 석산개발 반대 | 비선호시설 |
| 5 | 보령 | 보령-서천간 부사간척지 경계 설정 | 지방행정 |
| 6 | |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 비선호시설 |
| 7 | |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 지역개발 |
| 8 | 서산 | 장동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비선호시설 |
| 9 | 논산 | 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 추진 | 비선호시설 |
| 10 | | 태화산업단지 조성 | 지역개발 |
| 11 | 당진 | 동부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 수자원개발·이용·보전 |
| 12 | |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계 분쟁 | 지방행정 |
| 13 | | 345kV 북당진~신탄정 송전선로 건설 | 수자원개발·이용·보전 |
| 14 | | 345kV 당진화력~북당진 송전선로 건설 | 수자원개발·이용·보전 |
| 15 | | 석문국가산업단지 에코타운 조성 | 비선호시설 |
| 16 | | 육성우 목장 조성 | 비선호시설 |
| 17 | 금산 |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 지역개발 |
| 18 | | 불산 취급공장 이전 | 비선호시설 |
| 19 | 부여 | 은산면 폐기물매립장 설치 | 비선호시설 |
| 20 | 서천 |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 수자원개발·이용·보전 |
| 21 | | 서천-군산간 공동조업구역 | 지역개발 |
| 22 | | 군산LNG발전소 어업인 피해보상 | 비선호시설 |
| 23 | 청양 | 강정리 폐기물 매립장 설치 | 비선호시설 |
| 24 | 홍성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 비선호시설 |
| 25 | | 장항선 개량2단계 건설사업 | 교통 |
| 26 | 예산 | 대술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비선호시설 |
| 27 | |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 통과 노선 | 지역개발 |
| 28 | 태안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 수자원개발·이용·보전 |
| 29 | | 안면도관광지 개발 무산 | 지역개발 |

협력 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

◆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 카드발급 및 이용율 제고

■ 사업개요

-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95,430명(6세이상)
- 지원내용 : 문화누리카드 발급(개인별 5만원/년)/문화·여행·스포츠 이용
- 사업비 : 36억원(국비26,도비2.6,시·군비7.8) ※목표수혜인원 : 69,370명
 - 목표수혜인원 : 69,370명(카드발급 55,804명, 문화더누리사업 13,566명)
- 집행체계 : 「시·군」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홍보
 「문화재단」 - 사업비 결제, 카드가맹점 관리, 문화더누리사업*
- * 문화더누리사업 : 카드 사용이 어려운 시설단위(장애인, 고령층) 및 오지주민 등을 위한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지원서비스(사업비 7억원)
- ※ 카드이용 절차 : 발급신청(대상자) → 카드발급(읍면동) → 카드사용(개인) → 이용대금 입금(시·군)

■ 현 실태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및 이용율 전국 최하위 수준('15.10.2기준)
 - 카드발급률 74.04%, 카드이용율 63.78%
- 카드 가맹점 부족 및 사용품목 한정 등에 따른 발급 기피로 문화향유 소외
 - 도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629개소*, 천안시 122(최고), 청양군 3(최저)
 * 도서 126, 공연 22, 영화 21, 음반 16, 숙박 394, 랜터카 17, 기타 33

■ 문제점

- 농촌지역 특성상 카드이용 가맹점이 부족, 사용가능 품목도 적고, 금액이 소액(5만원)이어서 주민들의 카드발급 신청 및 사용에 무관심
- 카드 미발급자에 대한 카드발급 독려 및 홍보 부족
 ※ 읍면동 문화업무 담당공무원의 사회복지전산망(행복이음망)에 대한 접속권한 9월부터 허용

■ 도(문화재단)-시·군 협력사항

- (도) 다양한 품목에 사용 가능토록 중앙부처(문체부) 건의
- (시·군) 카드발급 확대 및 이용 홍보,
 문화더누리사업 추진(9월부터)에 따른 대상자 모집·홍보 지원

※ 참고 : 기관별 역할

| 기관 | 역 할 |
|--------------------|--|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총괄) 세부계획수립, 사업운영총괄 및 점검·평가 ▶(예산총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기금 교부 및 정산 ▶(지원업무)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교육지원 ·통합시스템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 ·통합이용권 사업 홍보 총괄 ▶ (기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4 항의 업무 수행 |
|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 ▶(사업계획) 각 시도별 ‘15년도 사업계획 수립 ▶(예산총괄) 지방비 매칭,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주관처 교부 ▶(운영) ·지역별 사업총괄,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카드사업 운영 및 관리(카드발급 및 이용률 제고) ·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내 홍보 협조 |
|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 ▶(예산총괄) 지방비 매칭, 지역주관처 교부 ▶(운영) ·지역별 카드사업 총괄 및 관리책임 ·관내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사용 관리 감독 ·지역별 카드 발급 및 이용 홍보 등 서비스 전달 |
| 읍·면·동 주민센터 | ▶(카드발급) 카드발급업무 수행 ▶(안내/홍보) 카드 발급 시 카დი용 안내 및 홍보 |
| 지역주관처 (17개 시도) | ▶(카드사업)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및 평가 자료제출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관리, 조사, 발굴 ·지역홍보 추진 ▶(카드촉진사업) ·카디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문화더누리사업) ·지역 문화더누리 사업 계획 및 추진 ·지역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프로그램 발굴 ·카드미발급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추진 ·외부 협력 및 기부 유치 등 ▶(모니터링) ·시·군·구 사업 설명회 개최 ·복지시설, 기획사업 현장 등 모니터링 |
| 카드사(농협) | ▶(카드발급) 카드 발급, 정산 관리, 통계 및 집행실적 관리 ▶(가맹점관리) 카드가맹점 관리 및 전수조사, 사업홍보 등 ▶(콜센터) 전담 콜센터 등 이용자 편의서비스 운영 |

협력 6. 「2016년 양대 체전」 성공개최 위한 협업체계 구축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군 분산 개최
- 시·군별 주민참여, 환경정비, 손님맞이 준비 등 체계적인 협업체계 구축

■ 행사개요

- 기간: 전국체전-7일간(10.7~10.13), 전국장애인체전-5일간(10.21~10.25)
- 장소: 충청남도 일원(아산시 등 15개 시·군) / 경기장 현황 - 별첨
 - ※ 주경기장 :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 종목·규모: 전국체전(47개 종목 / 32천 여명), 전국장애인체전(27개 종목 / 7천 여명)
 - 분산개최 배경 : 기존 경기장 최대 활용, 도민의 화합분위기 조성

■ 현 실태

- 대형 국제체육대회의 빈번한 국내 개최로 전국체전 등 국내 체육대회에 국민(도민) 관심 저조
 - ⇒ 범도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 도민 모두 손님맞이 준비 필요

■ 도-시·군 협력사항

- 「문화체전」 분위기 조성
 - 시·군 지역축제와 연계 대회기간 중 문화예술행사 집중 개최
 - 농협, 학교 등 자매결연 기관 등을 통한 선수단 환영 및 관람·응원문화 주도
- 질서·친절·청결운동 전개, 지역주민 참여유도
 - 교통거리질서 준수, 내 집앞골목도로변 등 환경정비 자율참여
 - 接客업소 위생·친절운동 전개, 질서유지 등 분야별 자원봉사 동참
 - 경기장 및 행사장 주변 청소 전담인력 및 물품 확보 등
- 교통·숙식·물가관리대책 추진
 -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참고 1 :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현황

■ 경기장 분포현황 : 도내 70개소(15 시·군), 타 도 4개소

| 구분 | 총계 | 천안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계룡 | 당진 | 금산 | 부여 | 서천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 |
|------|----|----|----|----|----|----|----|----|----|----|----|----|----|----|----|----|
| 경기장수 | 70 | 17 | 3 | 2 | 23 | 2 | 5 | 1 | 2 | 3 | 1 | 2 | 1 | 4 | 2 | 2 |

※ 타 도(4개소) : 충북 2개소, 경북 2개소

■ 시·군별 경기장 현황

| 지역 | 종 목 | 종 별 | 경 기 장 | 지역 | 종 목 | 종 별 | 경 기 장 |
|------------|------|--------|-----------------|-----------|--------|--------------|----------------------------|
| 천안 (17) | 축 구 | 고등부 | 천안축구센터 | | 역 도 | 전종별 | 온양고등학교 체육관 |
| | 테니스 | 대학·일반부 | 천안종합운동장 테니스장 | | 체 조 | 기계체조 | 선문대학교 체육관 |
| | | 남고부 | 천안실내테니스장 | | 탁 구 | 전종별 | 호서대학교 체육관 |
| | 농 구 | 고등부 | 단국대학교 체육관 | | 볼 링 | 해외동포 | 로알볼링장 |
| | | 대학·일반부 | 상명대학교 체육관 | | 하 키 | 전종별 | 아산학선필드하키경기장 순천향대학교하키경기장 |
| | 배 구 | 남고부 | 천안고등학교 체육관 | | 소프트볼 | 전종별 | 곡교천 시민체육공원야구장 |
| | | 여고·일반부 | 공주대 천안캠퍼스체육관 | | 택 건 | 전종별 | 경찰교육원 체육관(3F) |
| | 핸드볼 | 남대·일반부 | 우정공무원교육원 체육관 | | 댄스스포츠 | 전종별 | 아산시민체육관 |
| | | 전종별 | 유관순체육관 | 서산 (2) | 유 도 | 전종별 | 서산 농어문문화체육센터 |
| | 야 구 | 고등부 | 북일고등학교 야구장 | | 태권도 | 전종별 | 한서대학교 영암체육관 |
| | 체 조 | 에어로빅 | 한국기술교육대 체육관 | 논산 (5) | 근대5종 | 컴바인 | 논산시 공설운동장 |
| | | 리듬체조 | 남서울대학교 체육관 | | | 펜 싱 | 건양대학교 집나지움 |
| | 볼 링 | 일반부 | 천안종합운동장 볼링장 | | 수 영 | 수 영 | 충남체육고등학교 수영장 |
| | | 대학부 | 홍익볼링장 | | | 볼 드빌딩 |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
| | | 고등부 | 정석볼링장 | 계룡 (1) | 롤 러 | 전종별 | 논산학생인라인롤러경기장 |
| | 스쿼시 | 고등부 | 남서울대학교 체육관 | | 펜 싱 | 전종별 | 계룡 시민체육관 |
| | | 대학·일반부 | 천안시국민체육센터 | 당진 (2) | 배드민턴 | 전종별 | 당진 실내체육관 |
| 공주 (3) | 수상스키 | 전종별 | 금강신관공원 수상스키경기장 | | 산 악 | 전종별 | 당진 인공 암벽장 |
| | 야 구 | 일반부 | 공주시립야구장 | 금산 (3) | 사이클 | 개인으로 도로독주 | 금산읍, 남일면, 남이면 일원 |
| | 조 정 | 전종별 | 금강조정경기장 | | | 산악자전거 | 금산군 일원 군북면 일원 |
| 보령 (2) | 요 트 | 전종별 | 보령요트경기장 | 부여 (1) | 카 누 | 전종별 | 백마강 카누경기장 |
| | 궁 도 | 전종별 | 보령정 | 서천 (2) | 세팍타크로 | 전종별 | 서천 국민체육센터 |
| 아산 (23) | 육 상 | 트랙·필드 | 이순신종합운동장 | | 당 구 | 전종별 | (구)성실여중(폐교) |
| | | 마라톤 | 신정호 주변도로 | 청양 (1) | 복 싱 | 전종별 | 청양 군민체육관 |
| | | 경 보 | 신정호 주변도로 | 홍성 (4) | 트라이애슬론 | 수 영 | 홍보지구 트라이애슬론장 |
| | 축 구 | 여일반부 | 아산신도시 하수처리장 축구장 | | | 사이클 | 홍주문화체육센터 |
| | | 남일반부 | 경찰교육원 축구장 | | 우슈쿵푸 | 전종별 | 홍주종합경기장 |
| | | 남대·일반부 | 이순신종합운동장 | | 양 궁 | 전종별 | 홍주종합경기장 |
| | | 대학부 | 선장축구장 | 예산 (2) | 정 구 | 전종별 | 광천생활체육공원 정구장 |
| | 수 영 | 다이빙 | 아산실내수영장 | | 력 비 | 전종별 | 예산 공설운동장 |
| | | 경영/수구 | 아산실내수영장(환경과학공원) | 태안 (2) | 바 독 | 전종별 | 예산생활체육관 |
| | 핀수영 | 전종별 | 아산실내수영장 | | 씨 림 | 전종별 | 태안 군민체육관 |
| | 테니스 | 여고부 | 이순신테니스장 | 충북 (2) | 골 프 | 전종별 | 현대더링스CC |
| | | 고등부 | 강변테니스장 | | 사이클 | 트랙 | 음성종합운동장 |
| 검 도 | 레슬링 | 전종별 | 이순신빙상장·체육관 | 경북 (2) | 사 격 | 공기총화약총 | 충북 청원 종합사격장 |
| | 검 도 | 전종별 | 경찰교육원 체육관(1F) | | 승 마 | 전종별 | 상주 국제승마장 |
| | | | | | 근대5종 | 승 마 | 국군체육부대 승마장 |

※ 참고 2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현황

■ 경기장 분포현황 : 도내 36개소(9 시·군), 타 도 2개소

| 구 분 | 총 계 | 천 안 | 공 주 | 보 령 | 아 산 | 논 산 | 당 진 | 금 산 | 홍 성 | 예 산 |
|------|-----|-----|-----|-----|-----|-----|-----|-----|-----|-----|
| 경기장수 | 36 | 12 | 4 | 1 | 13 | 1 | 1 | 1 | 2 | 1 |

※ 타 도(2개소) : 충북 2개소

■ 시·군별 경기장 현황

| 지 역 | 종 목 | | 참 가 장 애 유 형 | | | | | 경 기 장 | 비고 |
|--------|---------|----|-------------|----|----|----|----|------------------|----|
| | | | 지체 | 뇌병 | 지적 | 청각 | 시각 | | |
| 천안(12) | 축 구 | 뇌병 | | ○ | | | | 천안축구센터(천연1) | |
| | | 지적 | | | ○ | | | 천안축구센터(인조3) | |
| | | 청각 | | | | ○ | | 천안축구센터(인조1) | |
| | | | | | | | | 천안축구센터(인조2) | |
| | | 시각 | | | | | ○ | 천안축구센터(풋살장1) | |
| | | | | | | | | 천안축구센터(풋살장2) | |
| | 배 구 | | ○ | | | | |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 |
| | 당 구 | | ○ | | | ○ | |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 |
| | 배드민턴 | | ○ | | ○ | ○ | | 천안실내배드민턴장 | |
| | 볼 링 | | ○ | ○ | ○ | ○ | ○ | 천안종합운동장 볼링장 | |
| 공주(4) | 보치아 | | ○ | ○ | | | | 정석볼링장 | |
| | 조정(수상) | | ○ | | | | | 유관순체육관 | |
| | 조정(실내) | | | | ○ | | ○ | 금강조정경기장 | |
| | 탁 구 | | ○ | | ○ | ○ | | 금강조정경기장 인근 | |
| 보령(1) | 탁구(시각) | | | | | | ○ | 백제체육관 | |
| | | | | | | | | 백제체육관 내 | |
| 아산(13) | 요 트 | | ○ | | | | | 보령요트경기장 | |
| | 육 상 | | ○ | ○ | ○ | ○ | ○ | 보령요트경기장 | |
| | (단축마라톤) | | ○ | ○ | ○ | ○ | ○ | 이순신종합운동장 | |
| | 역 도 | | ○ | | ○ | ○ | ○ | 신정호 주변도로 | |
| | 수 영 | | ○ | ○ | ○ | ○ | ○ | 선문대학교 체육관 | |
| | 테니스 | | ○ | | | | | 아산실내수영장(환경과학공원) | |
| | | | | | | | | 강변테니스장 | |
| | 농 구 | | | | ○ | | | 호서대학교 체육관 | |
| | | | ○ | | | | | 아산시민체육관 | |
| | 유 도 | | | | | ○ | ○ | 경찰교육원 체육관(1F) | |
| | 태권도 | | | | | ○ | | 경찰교육원 체육관(2,3F) | |
| | 파크골프 | | ○ | | ○ | | | 곡교천 파크골프장 | |
| | 댄스스포츠 | | ○ | | | ○ | ○ | 이순신빙상장·체육관 | |
| | 골 볼 | | | | | | ○ | 순천향대학교 체육관 | |
| 논산(1) | 바 둑 | | ○ | | ○ | ○ | ○ |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 |
| | 론 볼 | | ○ | ○ | | | | 논산시 론볼경기장 | |
| 당진(1) | 력 비 | | ○ | | | | | 당진 실내체육관 | |
| 금산(1) | 사이클(도로) | | ○ | ○ | ○ | ○ | ○ | 금산읍, 남일면, 남이면 일원 | |
| 홍성(2) | 양 궁 | | ○ | | | | | 홍주종합경기장 | |
| | 펜 싱 | | ○ | | | | | 홍주문화체육센터 | |
| 예산(1) | 게이트볼 | | ○ | | ○ | ○ | ○ | 예산게이트볼장 | |
| 충북(2) | 사이클 | | ○ | ○ | ○ | ○ | ○ | 음성종합운동장 | |
| | 사 격 | | ○ | | | | | 충북 청원 종합사격장 | |

협력 7. 영상위원회 출범 및 적극적 로케이션 지원

◆ 영화촬영 등 적극적 유치를 위한 충남 로케이션(현지촬영) DB구축 및 홍보·촬영 지원 협력체계 구축(충남영상위원회 출범 15년.7월)

■ 출범배경

- 영상은 단순오락을 넘어 지역과 국가의 이미지를 전파, 관광자원화 등 산업의 중심
-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상산업은 세계적으로 더욱 높은 인기
 - 지난 해 <별에서 온 그대> 중국한류열풍 영상콘텐츠가 지닌 문화적 파급력 실감
- 영상산업은 창조경제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표산업 부상

■ 충남영상위원회 구성

- 출 범 일 : 2015. 7. 27.
- 영상위원회 위원 : 18명(위원장 김인수 영화제작자)/명단 별첨
- 주요기능
 - 충남 영화, 영상산업 육성, 도민의 문화향유 저변 확대, 영화·영상 핵심인력 양성 및 홍보 강화

■ 사업계획(15년)

- 로케이션 DB구축 및 홈페이지 구축(7~12월)
 - 도내 로케이션 발굴계획(시·군별 10개소 이상) : 총 150개소
 - 3개 시·군씩 묶어 한편의 캠페인 영상제작(총 5편), “충남의 美 00시·군 편” 등으로 방송 홍보, 한국영상위원회 ‘필름코리아(ifilmkorea.or.kr)’와 연동 전국적 DB 서비스 제공 및 홍보
- 로케이션 홍보 및 지원기관 네트워킹(7~12월)
 - 방송사 연계프로모션, 주요관계자 초청 홍보, 로케이션 팸투어 등
 - 독립영화 제작지원 : 촬영예정작 대상 제작비 지원

※ 로케이션 지원 사례

- ▶ 장편 극영화 ‘김선달’ 촬영지원(태안 신두리, 금산 적벽강)
- ▶ KBS 드라마 ‘장영실’ 촬영지원 협의 진행

→ 현재, 로케이션 D/B구축의 초기단계로 시·군 협조가 절실히 필요,
로케이션 요청시 도와 협력하여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

■ 도-시·군 협력사항

- 충남 로케이션 DB화 및 홈페이지 구축
 - 촬영지 발굴, 영상자원 DB 구축 등 체계적 로케이션 정보 제공
 - 한국영상위원회 ‘필름코리아’ 서버 연동으로 영상정보 제공
 - 사진 및 UCC 공모전 개최, 로케이션 북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 로케이션 홍보 및 지원기관 네트워킹 구축
 - 지원기관 워크숍 개최, 영상제작 주요관계자 초청 사업홍보 및 로케이션 팸투어 운영
 - 시·군 및 촬영 지원기관 대상 사업홍보 및 적극적 로케이션 협조

※ 참고 1 : 충남영상위원회 위원 [위촉직] 16명

| 구 분 | 사 진 | 이 름 | 주요 이력 | 비 고 |
|------------|---|-----|---|------|
| 영화 제작자 |  | 김인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전) 시네마서비스 대표 <왕의 남자>, <실미도>, <넘버 3> 등 | 위원장 |
| 드라마 제작자 |  | 김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른여름스토리연구소 대표 고려대 미디어학부/한예종 영화과 겸임교수 <주몽>, <타짜>, <선덕여왕> 등 | 부위원장 |
| 영화 감독 |  | 양우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인> 등 2014년 대중상영화제 신인감독상, 시나리오상 2014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감독상 | |
| |  | 한지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BS드라마 <연애시대>, <미스터 맘마>, <하루> 등 2012년 제1회 애틀랜타 대한민국 영화제 올해의 감독상 2001년 제38회 대중상영화제 감독상 | |
| |  | 방은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으로 가는 길>, <용의자 X>, <오로라 공주> 등 2005년 제25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감독상 1995년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 배우 |
| 영화 제작자 |  | 최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더스필름(주) 대표 <변호인>, <좋은놈나쁜놈이상한놈> 등 | 실행위원 |
| |  | 고영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인디플러그 대표 <위낭소리> 등 | 실행위원 |
| |  | 최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꽃피는 봄이 오면>, <황진이> 등 | 실행위원 |

| 구 분 | 사 진 | 이 름 | 주요 이력 | 비 고 |
|-----------|---|-----|--|--------------|
| 학계 |  | 변재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향대 영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 천안여성영화제 추진위원장 ◆ 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 실행위원 |
| |  | 구재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영상대 영상촬영조명과 교수 ◆ 제2회 서울국제3D페어 집행위원장 | |
| 기업 법조 |  | 길종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특임교수 ◆ 전 CJE&M 영화사업부문 대표 ◆ 전 삼성영상사업단 한국영화팀장 | |
| |  | 표종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YP 픽쳐스 대표이사 ◆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 ◆ 전)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 변호사, 실행위원 |
| 드라마 제작 |  | 정세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MBC 드라마국 프로듀서 ◆ 전) 채널A 드라마센터 본부장 ◆ <청춘의 덫> 등 | 실행위원 |
| |  | 이성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E&M 부사장 ◆ 전) KBS 드라마국 팀장 ◆ <불멸의 이순신> 등 | |
| |  | 김미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넘버쓰리픽쳐스 대표 ◆ 전 그룹에이트 프로듀서 ◆ <미생>, <아랑사또전>, <궁> 등 | |
| 작가 |  | 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산스쿨 대표 ◆ <비트>, <태양은 없다> 등 ◆ 1999년 백상예술대상 시나리오상 | |

협력 8. 3농 혁신(2단계) 추진에 따른 시·군의 주도적 참여

◆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3농혁신(2단계) 사업에서 현장의 실천력을 갖고 있는 시·군의 주도적 참여 필요

■ 추진배경

- 산업화 이후 도·농간 격차 심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문제를 극복하고
- 농어업에 종사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정치·사회·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받아오던 문제 해소

-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 : (80) 95.9% → (13) 62.5%
- 전체 인구 고령화율 : (80) 3.8% → (00) 7.2% → (13) 12.2%
- 농가 인구 고령화율 : (80) 6.7% → (00) 21.7% → (13) 37.3%

⇒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下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책 입안

■ 현재여건

- 단기간내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은 우리 농업의 구조적 (영세·고령농)인 문제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불가능
- 3농혁신은 기존의 농정과 다른 별개의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들을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재창조 하는 것

〈 지난 5년간 추진해 본 결과 〉

- ① 정책적인 성과 : 민관 거버넌스 구축 “충남농정의 체계화·통합화”
- ② 사업적인 성과 : 미생물활용 축산시스템 구축 등 롤모델화, 정부정책 반영
 - ※ 전국단위 평가 3위 이상 수상 : 2011년(18개) → 2014년(32개)
 - 다만, 쌀 관세화 및 FTA 타결, 구제역 및 AI 발생 불안감 확산 아쉬움

■ 2단계 사업계획

- 계획기간 : 2015 ~ 2018년(4년간)
- 총사업비 : 5조 789억원 규모
(국비 2조 1,300억원, 지방비 2조 42억원, 기타 9,447억원)
- 추진사업 : 5대혁신, 15대 전략과제, 50개 중점사업 선정

- ① 생산혁신 (22개) : 지속가능한 농어업, 신성장 농산업 육성
- ② 유통혁신 (7개) : 농산물 유통 선진체계 구축 및 융복합 산업화
- ③ 소비혁신 (8개) : 도시·농촌 상생발전과 착한소비 정착기반 마련
- ④ 지역혁신 (5개) :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삶터·일터·쉼터 가꾸기
- ⑤ 역량혁신 (8개) : 농어촌 주민역량 강화 및 협치농정 체계 구축

■ 협력의 필요성

- 그동안 하드웨어, 행정주도 사업배분 방식 위주의 지원요청
 - 하드웨어적(시설중심) → 소프트웨어(사람중심) 지원방법 전환 필요
 - 행정주도 → 민관협력 형태의 내발적 발전 전환
- 3농혁신 현장실천력을 갖고 있는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미흡
 - 농어업·농어촌 문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 없으며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
- 시·군단위 거버넌스 협력체계, 리더 부족 → 농업회의소 등 제도적 뒷받침
- 시·군은 3농혁신 주요사업에 대한 도비 분담비율 확대 요구
 - 3농혁신 주요사업의 도비 분담율 확대(30:70→50:50)

■ 도·시·군 협력사항

- 3농혁신의 정책방향에 대한 농어민 역량교육확대, 거버넌스 구축
 - (도) 3농혁신 대학, 농어촌 리더, 공무원 특강 등 도단위 교육 강화
 - (시·군) 시·군단위 농어민 주축 3농혁신 거버넌스 체계구축
- 시·군 중심의 3농혁신 융복합 사업(2016) 도, 시·군비 분담율 확대

⇒ 이제 3농혁신 사업이 “가시화 단계”를 지나 “본격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시장·군수님들의 아낌없는 조연과 협조 지원당부 드림

※ 참고 1 : 1단계사업 주요성과

■ 민선5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5년간)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지방농정이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

- 1단계 사업비 : 총 4조 3,887억원
(국비 2조 1,173억, 지방비 1조 6,399억, 기타 6,315억)

〈정책적인 성과〉

- ① 농어업·농어촌정책 소극적·부차적 영역 → 새로운 가치창조영역 인식전환
- ② 하드웨어·행정주도·외생적발전 → 소프트웨어·민관협력·내생적발전
- ③ 농어업·농어촌 분리(분절)추진 → 농어업·농촌·농어민으로 통합화·체계화
- ④ 행정주도 농정 → 3농혁신위원회 「5단 18TF팀의 민간주도 농정변화」
- ⑤ 농정분야의 전문가 및 기관 협력 「정책네트워크」 구축

〈사업적인 성과〉

- ① 3농정책 「실효성」 제고 → 전국 모델화(정부정책으로 채택)
 - － 미생물 활성액비 활용 축산순환시스템, 주민주도의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등
- ② 3농정책 「실천력」 강화 → 전국 최고 달성(각 부문 '대상' 수상)
 - － 토바우 전국 제일 명품브랜드 발돋움, 농촌체험휴양마을(3년연속 대상)
 - ※ 전국단위 평가 3위 이상 수상 : 2011년(18개) → 2014년(32개)
- ③ 3농정책 「실행력」 제고 → 전국 최초 시행(선도적 역할 수행)
 - － 도·사군단위 귀농지원센터 설치, 농어촌마을 전수자원조사 D/B구축 등

⇒ 다만, 쌀 관세화,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가속화 불안감 확산,
구제역 및 A발생 등 축산농가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큰 아쉬움 남음

※ 참고 2 : 3농혁신 2단계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목록)

| | | | |
|----------|------------|--|--|
| 1. 농 어 업 | 1. 생 산 혁 신 | 지속가능한 농어업, 신성장 농산업 육성(5대 과제 22개 중점사업) | |
| | | 1.고품질 농산물 | 【과제1】 지속가능한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 ① 쌀 관세화 대응 충남 쌀 경쟁력 강화 ② 광역 친환경농업벨트 조성 ③ 충남 시설원에 산업벨리 조성 ④ 로컬푸드와 연계한 원예특작 특화단지 조성 ⑤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GAP 인증면적 확대 ⑥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재정 내실화 |
| | | 2.선진 축산 | 【과제2】 자연친화형 선진 축산업 육성 ① 시장개방 등에 대응한 친환경·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②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③ 축산물 유통·소비기반 확립 ④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자원화 추진 ⑤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통한 안전축산 기반구축 |
| | | 3.산림 자원 가치 제고 | 【과제3】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및 임산물 경쟁력 강화 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② 경쟁력 있는 임산업 육성 ③ 산림휴양문화 조성관리 |
| | | 4.명품 수산업 | 【과제4】 수산자원의 미래 산업화 ① 충남 4대 명품 수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 ② 섬마을 중심 수산업 특화단지 조성 ③ 안정적인 바다자원 생산기반 확충 |
| | | 5.미래 농업/ 현장 농정 | 【과제5】 지역맞춤형 미래농업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① 기후변화 및 미래농업 대응기술 확보 ② 현장실용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 ③ 씨앗산업 육성 및 미래 성장농업 시범확산 ④ 3농혁신 현장 참여형 농정실천 농업인 발굴 ⑤ 신기술 현장접목 연구 및 기술보급 확산 |
| | 2. 유통 혁 신 | 농산물유통 선진체계 구축 및 융복합 산업화(3대 과제 7개 중점사업) | |
| | | 1.로컬 푸드 | 【과제6】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기반조성 ① 생산자 중심의 로컬푸드 체계 구축 ② 학교급식을 이용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③ 공공부문 및 기업의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공급 |
| | | 2.선진 유통 | 【과제7】 산지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① 생산자 조직 및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② 광역브랜드 중심 유통계열화 선도 |
| | | 3.6차 산업 | 【과제8】 농산어촌 융복합 산업화로 부가가치 창출 ① 농업6차산업 활성화 ② 농촌지역 전통식품 산업화 |

| | | | |
|---------|----------|---|---|
| 농어업 | 3. 소비 혁신 | 도시·농촌 상생발전과 착한소비 정착 기반마련(2대 과제 8개 중점사업) | |
| | | 1.도농 교류 | 【과제9】 공정팜핑에 기초한 도농 쌍방향적 교류활성화 ① 충남형「3味프로젝트」 추진 ② 생활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③ 도농교류 활성화 시스템 구축 ④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운동 확산 |
| | | 2.농어업·농어촌 가치증진 | 【과제10】 농업가치 교육 및 농촌어메니티 활성화 ① 농업의 가치이해 및 농촌체험활동 ② 전통식문화 계승보급 및 바른 식생활 실천 ③ 농업·농촌 가치확산 프로젝트 ④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구축 |
| 2. 농어촌 | 4. 지역 혁신 |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좋은 삶터·일터·쉼터 가꾸기(2대 과제 5개 중점사업) | |
| | | 1.생활 기반 | 【과제11】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및 지역혁신모델 구축 ①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② 농산어촌 마을재구조화 ③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구축 시범사업 |
| | | 2.생산 기반 | 【과제12】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 ①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 ②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 3. 농어업인 | 5. 역량 혁신 | 농어촌주민 역량강화 및 협치농정 체계 구축(3대 과제 8개 중점사업) | |
| | | 1.인재 육성 | 【과제13】 농어촌 인력의 체계적 발굴·육성·관리 ① 농어촌 지역리더 육성 ② 농어촌 후계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 ③ 품목별 대표자 육성 및 농어촌 주민 평생교육 강화 ④ 귀농하기 좋은 충남 조성 |
| | | 2.농촌 복지 | 【과제14】 농어촌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확충 ① 충남형 농촌서비스 기준마련 및 복지향상 종합계획 수립 추진 ② 여성 농업인 영농향상 및 농촌보육복지 지원체계 구축 |
| | | 3.협치 농정 | 【과제15】 농업인 주체의 협치농정 실현 ① 3농혁신 지속추진 기반마련 ②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 |

협력 9. 구제역 · AI 재발방지대책

◆ 구제역 · AI 매년 반복적 발생,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
이의 방지를 위한 상시 방역활동 필요
※ (현재 위기경보단계) 구제역 : 관심단계로 평시방역유지 / AI : 전남 · 광주지역 발생으로 주의 단계
* 위기경보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우리 도 발생현황

- 구제역 : ‘14. 12. 16일 천안 발생이후, ‘15. 4. 28일 홍성에서 마지막 발생
- 6개 시·군 70건 30천두 살처분 조치 → 5. 22일 이동제한 전면해제
- AI : ‘15. 1. 28일 천안 발생이후, ‘15. 3. 28일 아산에서 마지막 발생
- 4개 시·군 6건 240천수 살처분 조치 → 5. 19일 이동제한 전면해제

■ 발생 후 주요 추진상황

- 구제역 방어력 향상을 위한 「신형백신」 집중 확보 공급 : 3,139천두분

성 과 항체 형성을 향상 : 발생전(‘14. 11월) 49% → (‘15. 4월) 67% → (7월) 69%

※ 백신지원 체계 : 소 50두, 돼지 1천두 미만 농가 시·군공급(전액보조),
그 외 농가 축협공급(50%자담)

- 구제역, AI 취약지역(발생농장, 도축장, 재래시장) 일제점검 : 76개소(6.22 ~ 7.17)
- 전염병예방법 위반사례 없음, 현장지도 8건 / 발생농가 재입식요령 홍보병행
- 장마철 대비 매몰지 특별 관리 : 140개소(양호 139, 미흡1) → 보완완료 (7.22)

■ 문제점

- 전염병 발생의 사전 예방적 차원의 축사환경 개선인식 미흡
- 열악한 가축사육환경(밀집사육 등)을 개선위한 인식과 노력 부족
- 축산농가(특히, 계열화·위탁농가) 방역관리 미흡
- 화농 등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여 ‘미 접종 또는 기피’ 로 질병발생 초래
- 이동제한 기간 중 입식 및 이동, 축산차량 소독조치 없이 농가 진입 → 확산의 주
요인



- 가축전염병 발생 후 ‘사후대응 중심의 방역체계’의 한계
 - 발생 후 이동통제, 살처분 등의 긴급방역으로 현실적 재발방지에 어려움
 - 구제역 발생농장 부분살처분으로 바이러스 잔존
 - 확산초래 (홍성 덕실단지 23호중 15호 발생)
- 국가방역 개념으로 시·도별, 권역별 방역여건이 달라 맞춤형 방역추진 애로
 - 축종별(홍성-돼지, 전남-오리 등) 사육여건, 축산관련 시설 상황 등 지역 특수성 고려 미흡

향후중점
개선방향

- ❖ 가축사육환경 개선 → 사육환경 및 질병관리를 고려한 축사시설 현대화
- ❖ 사전 예방중심 방역체계 구축 → 농가단위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 관리태세 확립
- ❖ 지역별, 권역별 여건을 고려한 → (충남형) 가축방역 모델 개발

■ 협력방향

- 가축사육환경 개선 → 사육밀도 기준준수, 환기, 축사청결상태, 시설 현대화 등
- 농가 책임성 강화 및 방역기관의 적극적 관리·점검으로 → 자율방역 활성화
- 지역여건을 고려한 농가단위 예방접종, 소독·차단방역으로 → 가축전염병 예방
- 가축전염병이 인접 시도 또는 시·군에서 발생시 → 신속한 초기대응 필요
 -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등 방역매뉴얼에 의거 단계별 조치사항 신속 이행

■ 도-시·군 협력사항

- (도)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축사환경 개선 유도
 - 구제역은 예방백신 적기 공급 및 「항체형성을 검사」 강화
 - AI는 「상시예찰」 중심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 ※ 사전예방 중심, 충남형 가축방역 모델 개발에 역점
- (시·군)
 - 농가단위 백신 및 차단방역태세 정비, 확인체계 확립
 - ▶ 농장별 담당자 지정 관리 및 소독활동 점검 강화
 - 질병 발생 시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신속 초기대응
 - ▶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 살처분 및 방역조치로 전파 최소화
 - ▶ 인접 시·군과의 경계도로 차단방역대 설치·운영 협의
 - ※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되, 시·군 여건을 분석한 전략적 방역 추진

※ 참고 1 : 시·군별 신형백신 공급 및 백신항체 양성을 현황

■ 구제역 발생 전('14.11월) 대비 양성률 약 20% 상승

- 신형백신 공급 확대에 따른 항체 양성률 개선
- 도축장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에 따른 출하 전 백신보강접종 분위기 형성

(7월말 기준)

| 시·군별 | 신형백신 공급내역(두) (3~7월) |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현황(%) | | |
|------|------------------------|--------------------|----------|----------|
| | | ' 14. 11월 | ' 15. 4월 | ' 15. 7월 |
| 충남 계 | 3,139,025 | 49 | 67 | 69 |
| 천안시 | 178,000 | 49 | 78 | 79 |
| 공주시 | 120,000 | 56 | 67 | 68 |
| 보령시 | 602,000 | 59 | 74 | 76 |
| 아산시 | 165,000 | 39 | 77 | 77 |
| 홍성군 | 1,259,525 | 47 | 64 | 68 |
| 서산시 | 91,500 | 57 | 68 | 67 |
| 논산시 | 117,500 | 59 | 56 | 54 |
| 계룡시 | 500 | 25 | - | 44 |
| 당진시 | 275,000 | 47 | 67 | 70 |
| 금산군 | 14,500 | 50 | 51 | 56 |
| 부여군 | 70,000 | 67 | 69 | 65 |
| 서천군 | 24,500 | 48 | 70 | 65 |
| 청양군 | 56,500 | 62 | 53 | 54 |
| 예산군 | 158,500 | 38 | 61 | 65 |
| 태안군 | 6,000 | 92 | 53 | 60 |

※ 참고 2 : 구제역 방역체계 및 SOP 중앙부처 개선 건의내역

| 구 분 | | 건의 사항 |
|-------------------------|-----------------|---|
| 방역 체계 개선 (12건) | 백신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백신 자돈 접종프로그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1회 접종 → 개선) 2회 접종 |
| | 검사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감염항체(NSP) 검사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농장, 15천두 검사 → 개선) 농장+도축장, 30천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농장별 연1회 → 개선) 연 2회 이상 도축장 백신항체 검사결과로 행정조치 → 접종률 제고 |
| | 축산시설 소독시설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축장, 사료하치장 소독시설 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스팀세척소독시설, 대인소독기), 사료하치장(소독시설 기준 마련) |
| | 보상금 감액기준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 방역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액조항 추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 허가, 적정사육두수, 중복발생, 항체형성률 |
| | 방역위반농가 페널티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발생 : 발생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3진아웃) 백신미접종 농가 : 3개월 이내 출하정지 (다만, 검사후 출하가능) |
| | 방역교육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시설 관계자 방역교육 의무화 도입(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도축장, 사료·분뇨업체, 집유장, 가축시장 등 |
| | 기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동성이 가장 높은 안동주로 생산된 백신의 신속한 공급 일정규모 이상 양돈농가 '수의사 의무고용 제도' 도입 위탁 양돈농가 가축입식시 사전신고제 도입 학계 등 전문가 집단과의 정보공유시스템 도입 |
| SOP 개선 (6건) | 확산방지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해 시도간 생축이동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종축장 및 도축장 지정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시·군별 최초 발생농가 전두수 살처분 및 추가 발생농장은 위험도 평가후 살처분 범위 결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접종 유형 구제역 발생시에도 방역지역(3km)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검사후 도축장 출하는 허용(감수성 가축 최소화) |
| | 위험지역 검사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지역(3km)내 구제역 정밀검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농장과 동일 축종에 대한 항원·항체검사 |
| | 거점소독시설 소독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예열설비 도입 및 소독시간 기준 마련 |
| | 용어통일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역·AI SOP 방역지역 용어 통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지역 : 발생지,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 |

※ SOP : 2012년 3월 30일자로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3 : 시 방역관리지구 설정 내역

(단위 : 호, 천수)

| 구 분 | | 시·군 | 읍·면·동 | 사 육 현 황 | | 비 고 |
|-------------|-------|-----|--|---------|-------|-------|
| | | | | 농가수 | 사육규모 | |
| 총 계 | | 5개 | 38개 | 649 | 7,042 | 중복 제외 |
| 발생위험 지 역 | 소 계 | (5) | | 646 | 7,125 | |
| | 금강하구 | 서천군 | 장항읍, 서천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시초면 | 350 | 365 | |
| | 천 수 만 | 서산시 | 석남동, 수석동, 부춘동, 동문동 해미면, 인지면, 음암면, 운산면 부석면, 고북면 | 107 | 437 | |
| | 삽 교 천 | 당진시 | 송악읍, 합덕읍, 신평면, 우강면 순성면 | 39 | 1,458 | |
| | | 아산시 | 선장면, 신창면, 영인면, 인주면 | 19 | 233 | |
| | 병 천 천 | 천안시 | 구룡동, 청당동, 목천읍, 성남면 광덕면, 풍세면 | 76 | 2,415 | |
| | 풍 서 천 | 천안시 | 목천읍,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북면, 동면 | 55 | 2,217 | |
| 중복발생 지 역 | 소 계 | (1) | | 39 | 1,313 | |
| | 직 산 면 | 천안시 | 직산읍 | 7 | 172 | |
| | 풍 세 면 | 천안시 | 풍세면 | 31 | 1,127 | |
| | 북 면 | 천안시 | 북면 | 1 | 14 | |
| 가금밀집 지 역 | 소 계 | (1) | | 23 | 902 | |
| | 용정단지 | 천안시 | 풍세면 (용정리) | 14 | 389 | |
| | 가송단지 | 천안시 | 풍세면 (가송리) | 9 | 513 | |

* 합계 수치는 천안 중복 6개 읍면 59호 2,298천수를 제외함

협력 10.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일하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해소,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추진배경

-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구 확산 및 보육 인프라 확대조성 필요
- 보육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 경향
 - ※ 전국 43,742개소 중 국공립 2,489개소(5.7%, 道 13위), 직장 692개소(1.6%, 道 12위)

■ 사업개요

- 설치대상
 - 의무사업장(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 의무사업장 외 사업장
(제조업 500명이하, 건설업 300명이하, 도매 및 소매업 200명이하 등)
- 우리 道 설치 목표율 : 4.8%(2014) → 10%(2020)
 - 시·군 및 사업주의 예산부담에 따른 설치에 미온적, 실적부진
 - 도내 어린이집 총 2,053개중 국공립 68개소(3.3%, 전국평균 5.7%/13위), 직장 어린이집 30개소(1.5% /12위)에 불과
 - ※ 국공립 어린이집 : 1위 서울 12.4%, 2위 부산 7.9%, 3위 전남 6.9%, (충남 3.3%, 13위)
- 설치비 지원

| | |
|-------------|--|
| 국 공 립 | ① 공동주택 등 무상임대를 통한 확충 (리모델링비 5천만원) ② 기존(민간·가정) 시설매입 전환 (매입·리모델링비 5억원) ③ 시설 신축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개소당 5억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 직 장 | ① 의무사업장(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 설치 독려 ↳ 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16년~) : 1년 2회, 매회 1억원 범위 ② 의무사업장외 사업장 : 사업비 지원으로 설치 촉진 - 대상) 제조업 500명이하, 건설업 300명이하, 도매 및 소매업 200명이하 등 * 단독형 3.6억원 / 공동 컨소시엄형 7.2억원 / 산단형 16.5억원 (국3, 도 0.3, 시·군 0.3) (국 6, 도 0.6, 시·군 0.6) (국 15, 도 0.75, 시·군 0.75) |

■ 추진현황

-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 확충 5개년 계획수립('15.4월)
 - * ' 20년까지 국공립 68개(3.3%)→ 140개(6.8%)/ 직장 30개(1.4%)→ 65개(3.2%)
- ' 1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요조사 제출(15.6월) : 7개소
 - * 7개소 : 천안(1), 아산(2), 서산(2), 부여(1), 홍성(1)
- 직장어린이집 확충 MOU 체결(15. 7월, 6개 기관*)
 - * 근로복지공단(국비지원 및 컨설팅), 도(설치비 지원), 4개 상공회의소(참여 홍보)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설명회 (8.25/천안 북부상공회의소)
 - ⇒ ' 15년. 9월까지 시·군 수요조사 후 ' 16년 사업계획 확정 예정

■ 문제점

-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에서 국공립 신축에 기존 어린이집 반발
- 설치 의무대상인 시·군의 경우 예산부담에 따른 설치에 미온적
 - ※ 지방자치단체 : 8개(설치 : 도, 천안, 아산, 당진 / 미설치 : 공주, 보령, 서산, 논산)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20개소)의 설치 관심 저조
 - 천안 8, 공주 2, 보령 1, 아산 4, 서산 1, 논산 1, 당진 1, 부여 1, 금산 1
-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에서 운영비 부담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온적

■ 도-시·군 협력사항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무상임대, 민간매입 전환 등)
 - (도) 지역여건(정원충족률 등)을 감안한 계획 수립 및 국비확보 노력
 - (시·군) 보육수요를 감안, 국공립 확충대상 지속 발굴
-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설치제도 및 직장어린이집 확대 설치
 - (도) 적극적 홍보 및 컨설팅, 미의무대상 설치비 지원(국·도비 확보)
 - (시·군) 시·군청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시·군(의무대상) 설치 추진, 어린이집 설치 적극적인 제도(홍보), 설치대상 사업장 지속 발굴

※ 참고 1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구분 | 유형 | 내역 | 지원한도 | 비고 |
|---------|-----------|------------|-----------|---|
| 설치비 | 신축 | 건축비 | 502백만원 | - 최대 396㎡까지 지원(국50%,도25%, 사군25%), 지원단가(1,270천원/㎡) ※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미지원 |
| | 매입 | 매입 및 리모델링비 | 502백만원 | - 민간어린이집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국공립 전환 - 보조율 : 국50%, 도25%, 사군25% ※ 설계용역비 미지원 |
| | 공동주택 리모델링 | 리모델링비 | 50백만원 | -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 전환 - 보조율 : 국50%, 도25%, 사군25% ※ 설계용역비 미지원 |
| 기자재 구입비 | | 기자재 구입비 | 20~80 백만원 | - 일반 신축(6천만원/개소), 이전 또는 대체신축(3천만원) 장애아전문 신축(8천만원), 민간시설 매입(2천만원), 공동주택(4천만원) |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영유아보육법령상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 11호(노유자시설중 어린이집)에 설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정어린이집에 설치 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가능(법 시행규칙 개정, '15.1.28)

※ 참고 2 : 직장어린이집 설치예산 지원

| 유형별 | | 지원대상 | 용도 | 지 원 액 | | 비고 |
|-----|---------------|-----------------------------|--------------|----------------------------|---------------------------|------------------|
| | | | | 국비(공단) | 지방비(도,사,군) | |
| 단 독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시설전환 | 300백만원 한도 (소요금액의 80%) | 60백만원 한도 (국비지원액의 20%) | |
| 공동 | (일반) 공동 | 2개이상 사업장 (우선지원대상 50%이상) | 시설전환 | 600백만원 한도 (소요금액의 80%) | 120백만원 한도 (국비지원액의 20%) | |
|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 2개이상 사업장 (우선지원대상 100%) | 시설전환 | 600백만원 한도 (소요금액의 80%) | 120백만원 한도 (국비지원액의 20%) | |
| | 산업단지형 | 7개소이상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80%) | 시설건립 시설전환 | 1,500백만원 한도 (소요금액의 90%) | 150백만원 한도 (국비지원액의 10%) | 투자입지와 계획 연계추진 |

※ 지방비 지원은 미 의무대상 사업장에 한함

※ **참고 3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현황**(보건복지부, '15.4.30)

■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 연번 | 사업장 명칭 | 소재지 | 비고 |
|----|------------|----------------------|----|
| 1 | 단국대학교(천안) |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 |
| 2 |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 |
| 3 | 엠이엠씨코리아(주)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851 | |
| 4 | (학)순천향대학교 |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 |
| 5 | 선문대학교 |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 |
| 6 | 중부대학교 |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 |
| 7 | 동부제철(주) |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228 |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회신 사업장

| 연번 | 사업장 명칭 | 주 소 | 비 고 |
|----|-------------|----------------------|-----|
| 1 | (주)주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7길 56 | |
| 2 | 경남기업(주) |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59 | |
| 3 | 에드워드코리아주식회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3공단1로 96 | |
| 4 | 현대다이모스주식회사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신당1로 105 | |

※ '15년도 보육수당 지원기업(9개소) -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자에 해당됨

※ **참고 4 : 자치단체 설치현황 및 계획**

| 구 분 | 설치 의무대상 | 설 치 여 부 | 비 고 |
|------|---------|---------|-------------|
| 계 | 8 | 4 | |
| 충청남도 | ○ | ○ | |
| 천안시 | ○ | ○ | |
| 공주시 | ○ | × | 위탁검토 중 |
| 보령시 | ○ | × | ' 16년 위탁 예정 |
| 아산시 | ○ | ○ | |
| 서산시 | ○ | × | 위탁 중 |
| 논산시 | ○ | × | ' 16년 위탁 예정 |
| 당진시 | ○ | ○ | |

협력 11. 닥터헬기 인계점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

◆ ' 15. 12.월부터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운용 예정

⇒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계점(헬기 이·착륙장) 설치·관리방안 마련 필요

■ 사업개요

- 닥터헬기를 거점의료기관(권역외상·응급의료센터/단국대병원)에 배치, 환자 발생시 5분내 의료진 탑승 후 '인계점'으로 출동
 - 닥터헬기(1대) 운영비 매년 30억(국비 70%, 도비 30%) 소요
- 인계점은 매년 5개소씩 총 25개소 신설 계획(15년~' 19년 까지)

■ 닥터헬기 운영방법

- (운항대상)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시술이 필요한 환자
- (운항범위) 배치병원 반경 운항 가능거리 130km이내(도내 전지역)
- (운영시간) 365일 주간 운영(일출 ~ 일몰, 야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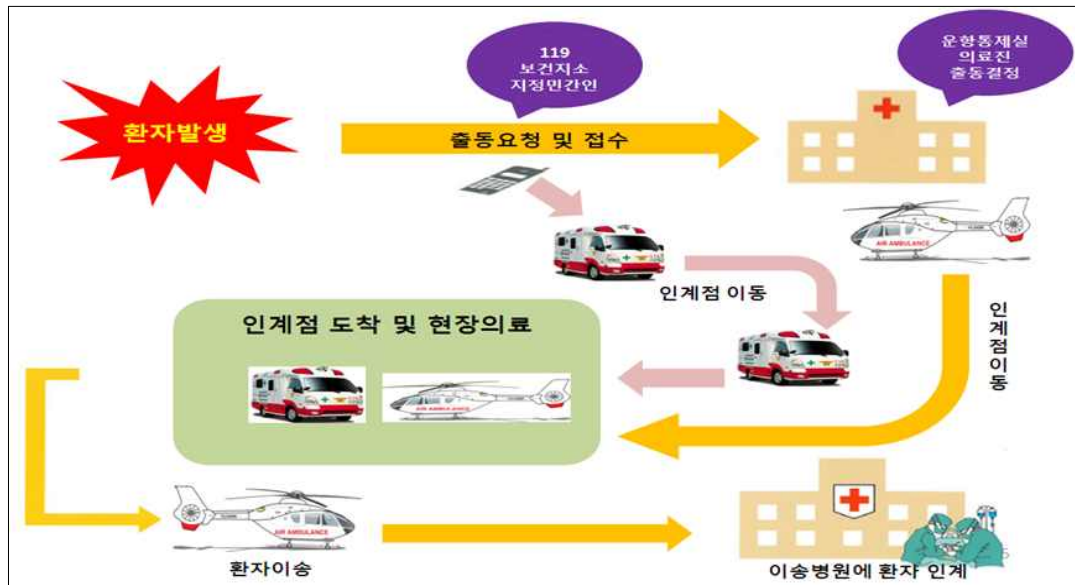
■ 그동안 추진현황

- 인계점 신규 건설(15년) : 5개소(보령2, 서산1, 당진1, 태안1)
 - 사업비 : 10억원(국비 70%, 도비 30%) * 1개소당 2억원
 - 선정방법 : 시·군별 수요조사 및 헬기운용사업자(기장 3명) 의견 반영
- 인계점 추가 확보를 위해 기존 소방 헬기장(230개) 현지 실사 중
 - 기존 소방헬기장 중 70개 별도 추가선정 예정
(바닥이 콘크리트이고 이착륙을 위한 충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한 장소)

■ 협력 필요성

- 인계점 신규 건설 후보지 조사 및 매입, 건설 추진
 - (선정대상) 30×30m 규모의 이착륙시 시야 확보 가능지역
 - (유지관리)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 및 등화시설 등 유지 관리
- ※ 「항공법 시행규칙」 제4조(착륙대의 길이와 폭) 및 제9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제222조(비행장의 설치기준) 준수

※ 체계도



■ 도·시·군 협력사항

- (도) 인계점 신규 건설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 (시·군) 인계점 신규건설 추진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후보지 추천, 건설 및 인계점 추가 지정
 - 인계점은 당해지역의 구급차가 출동하여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분포할 수 있도록 선정
 - 신규 건설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
 - 인계점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여 응급헬기의 출동 시 신속한 착륙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시설의 경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대리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업무 수행)
- ※ 인계점 내 장애물 적재 방지 : 어구(도서)·농작물(육지) 비치 및 차량주차 등 금지

※ 참고

■ 인계점 신규건설 및 지정 계획

• 인계점 신규 건설 계획

| 년도 | 2015년 | 2016년(예정) | 2017년(예정) | 비고 |
|-------------------|--------------------------------|------------------------------|--|------------------------------|
| 인계점 건 설 예정지 | 외연도, 삽시도, 대난지도, 고파도, 안면도 | 장고도, 호도, 고대도, 가의도, 유부도 | 부여구드래, 홍성의료원, 보령병원, 서산의료원, 예산 무한천 | 2019년까지 매년 5개소 신규건설 예정 |

• 인계점 지정 계획

| 구분 | | 계 | 동남 | 서북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계룡 | 당진 | 금산 | 부여 | 서천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 |
|----------------|----|-----|----|----|----|----|----|----|----|----|----|----|----|----|----|----|----|----|
| 목표 | | 70 | 2 | 2 | 4 | 8 | 4 | 4 | 4 | 2 | 6 | 4 | 8 | 4 | 4 | 4 | 4 | 6 |
| 행정 구역 현황 | 읍면 | 161 | 8 | 4 | 10 | 11 | 11 | 10 | 13 | 3 | 11 | 10 | 16 | 13 | 10 | 11 | 12 | 8 |
| | 동 | 46 | 9 | 9 | 6 | 5 | 6 | 5 | 2 | 1 | 3 | | | | | | | |
| | 도서 | 32 | | | | 16 | | 4 | | | 3 | | | 1 | | 1 | | 7 |

■ 닥터헬기 주요제원

| | | |
|----------------------------|-------------------|--|
| 기종 | AW109 GRANDNEW |  |
| 최대 이륙중량 | 3,175kg | |
| 탑승인원 | 6~8인승 | |
| 의료장비 | CT 등 61종(245점) | |
| 통상 배치병원 반경 130Km내 기준 운행 | | |

협력 12. 공주역 활성화 방안

◆ 2015년 4월 개통한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 공주역은 우리도 낙후지역에 위치한 정차역으로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

☞ 지리적 한계극복 및 이용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대책 필요

■ 그동안 추진현황

- 공주역 진입도로 개설(2개소, 4.1km), 안내표지판 정비(180개), 시내·외 버스 노선조정(11개노선 48회), 연계도로 정비(포장, 차선도색, 배수로 등)
- (관광상품) 도, 시·군+코레일과 공주역 이용 관광상품 개발·운영(4개 코스), 전국 주요역사 대형현수막 및 서울지하철역 홍보물(2,000여 개소)
 - ※ 공주역 홍보 및 관광상품 지원('15년) : 3억원(도비1.5억원, 시·군비1.5억원)
- (팸투어) 코레일 마케터, 여행기자, 여행사, 파워블로거 초청(60명)
 - 세계문화유산 유적(공주, 부여) 탐방, 일본 NHK 취재 방송(70개 국가)

■ 문제점

- 공주역 이용객 저조시 정차회수 감축 우려, 대응책 필요
 - 자가용, 관광버스 이용 관광객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공주역 KTX이용 관광객 실적은 저조(주중 평균 306명, 주말 평균 528명)
- 관광객을 유인할 다양한 관광상품 부족
 - 코레일 홈페이지 관광객 모집
(4개 코스 개발 : 공주, 부여, 공주부여, 체험코스 / 15.4월)
 - 축제, 체험, 육군훈련소 입소 및 면회객 등 연계 관광상품 추가개발 필요
- 시내·외버스 연계교통망 등 미비로 이용객 불편
 - 열차운행시간에 맞춰 시외버스(6회), 시내버스(30회) 운행시간 조정(15.3)
 - 국도지선 연결도로 개설(국도23호~40호, 공주역~계룡대)

■ 도-시·군 협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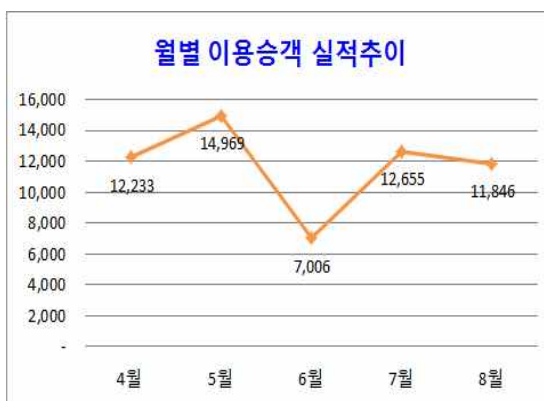
- (도) 공주역 이용 유네스코 백제유적 관광상품 개발(도+코레일) 및 KTX 공주역(테마역)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국도지선 연결
- (시·군) 연계교통망 재조정 등을 통한 이용객 불편 해소, 관광상품 운영 및 수학여행, 체험학습 유치, 지역 로컬 푸드 및 백제 대표음식 개발

※ **참고 : 공주역 이용객 현황 (15. 4. 2 ~ 9. 5 현재)**

■ **누적 이용객 : 59,526명(승차 30,136 / 하차 29,390)**

— 일평균 370명 이용(주중 306명, 주말 528명)

■ **이용객 추이**



■ **테마 관광 (916명 / 예약 130명)**



누적이용객현황

| | |
|--------|-------|
| 공주부여코스 | 399 명 |
| 공주코스 | 130 명 |
| 부여코스 | 343 명 |
| 체험코스 | 44 명 |
| 계 | 916 명 |

협력 13. 지적(지목) 불일치 공유지 정비

◆ 기본이 바로선 지적(地籍)만들기의 일환으로 도로, 하천 등 SOC사업 준공토지 등에 대한 지목 불일치 해소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17년(2년간)
- 정비대상 : 67천 필지(도내 공유지 332천 필지의 20%)
- 주요내용 : 도로·하천 등 SOC사업 준공 후에도 전, 답, 임야 등으로 방치되는 공공용재산에 대한 지목변경 등 현실화 추진
- 소요예산 : 660백만원(도비 198, 시·군비 462 / 30:70)

■ 주요내용

- 대상지 조사 : 충남 3차원공간정보, 국토부 브이월드, 네이버 등 활용
 - 기존에 추진되었던 공공사업(도로 및 하천 등) 구간별로 조서작성
- 지적공부 정리방법
 - 지목변경 : 재산관리 부서(위임기관)와 협의(신청)하여 지적정리
 - 재산소유기관 명칭변경 : 정부조직법 기관명에 맞춰 현실화(정비)
 - (예시)천원군 → 천안시, 온양시·아산군 → 아산시
 - 토지합병 : 지목, 소유자, 이용현황, 토지등기부 등 동일한 토지
 - 등기촉탁 : 지적공부의 정리사항과 동일하게 등기부 정리

■ 협력의 필요성

- 공유지 중 현재 이용 상태와 지적공부상의 지적 불일치 해소
 - 공공용 재산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각종 공공사업 이후 공유재산(지적공부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도·시·군 협력사항

- (도) 국·공유지 이용상태에 적합한 지목설정 및 합병정리 지침(기준) 마련
 - 신규발생 토지에 대한 정리절차 매뉴얼작성 보급 등
- (시·군) 준공시설 자료수집, 대상 토지 현지조사 및 정리
 - 공공용재산 관리부서와 인허가 부서간 자료공유 및 협조
 - 지목변경 및 합병을 통한 지적공부 현실화 시행(등기촉탁)

※ 참고 : 지목불일치 공유재산 현황 (단위 : 필지/천㎡)

| 사·군 | 계 | | | 도유지 | | 사·군유지 | |
|------------|----------------------|--------------------|-----------|---------------------|-------------------|----------------------|--------------------|
| | 전 체 | 불 일 치 정비대상 | 비율 (%) | 전 체 | 불 일 치 정비대상 | 전 체 | 불 일 치 정비대상 |
| 합 계 | 332,078 / 405,610 | 67,801 / 24,922 | 20.4 | 76,215 / 160,023 | 13,822 / 7,609 | 255,863 / 245,587 | 53,979 / 17,313 |
| 천 안 서북구 | 13,110 / 17,964 | 1,730 / 657 | 13.2 | 1,450 / 1,748 | 187 / 69 | 11,660 / 16,216 | 1,543 / 588 |
| 천 안 동남구 | 6,686 / 7,443 | 1,243 / 486 | 18.6 | 1,607 / 1,066 | 209 / 85 | 5,079 / 6,377 | 1,034 / 401 |
| 공주시 | 28,131 / 28,227 | 8,162 / 3,113 | 29.0 | 6,233 / 6,884 | 1,912 / 985 | 21,898 / 21,343 | 6,250 / 2,128 |
| 보령시 | 22,139 / 72,747 | 4,273 / 1,667 | 19.3 | 3,612 / 52,106 | 526 / 491 | 18,527 / 20,641 | 3,747 / 1,176 |
| 아산시 | 25,383 / 26,473 | 5,985 / 2,419 | 23.6 | 7,006 / 5,822 | 1,485 / 667 | 18,377 / 20,651 | 4,500 / 1,752 |
| 서산시 | 29,509 / 24,804 | 8,165 / 2,655 | 27.7 | 5,968 / 5,261 | 1,393 / 774 | 23,541 / 19,543 | 6,772 / 1,881 |
| 논산시 | 37,842 / 25,473 | 10,615 / 3,042 | 28.1 | 8,244 / 4,809 | 1,413 / 618 | 29,598 / 20,664 | 9,202 / 2,424 |
| 계룡시 | 2,513 / 427 | 182 / 64 | 7.2 | 84 / 185 | 36 / 10 | 2,429 / 242 | 146 / 54 |
| 당진시 | 28,616 / 24,913 | 3,533 / 1,823 | 12.3 | 7,338 / 7,063 | 1,342 / 978 | 21,278 / 17,850 | 2,191 / 845 |
| 금산군 | 22,133 / 33,975 | 3,529 / 1,098 | 15.9 | 4,972 / 4,154 | 769 / 255 | 17,161 / 29,821 | 2,760 / 843 |
| 부여군 | 23,028 / 22,999 | 5,176 / 1,758 | 22.5 | 4,672 / 10,542 | 823 / 268 | 18,356 / 12,457 | 4,353 / 1,490 |
| 서천군 | 17,060 / 18,250 | 4,037 / 1,490 | 23.7 | 3,144 / 2,447 | 537 / 220 | 13,916 / 15,803 | 3,500 / 1,270 |
| 청양군 | 20,806 / 14,137 | 3,689 / 1,530 | 17.7 | 4,233 / 5,497 | 894 / 698 | 16,573 / 8,640 | 2,795 / 832 |
| 홍성군 | 25,972 / 18,185 | 3,810 / 1,538 | 14.7 | 6,604 / 4,039 | 1,167 / 722 | 19,368 / 14,146 | 2,643 / 816 |
| 예산군 | 8,772 / 8,947 | 1,869 / 622 | 21.3 | 2,223 / 1,933 | 525 / 285 | 6,549 / 7,014 | 1,344 / 337 |
| 태안군 | 20,378 / 60,646 | 1,803 / 960 | 8.8 | 8,825 / 46,467 | 604 / 484 | 11,553 / 14,179 | 1,199 / 476 |

협력 14. 수산행정 선진화를 위한 역할 정립

- ◆ 도와 시·군간 수산행정의 역할 재정립으로 수산산업 발전도모
 - 수산세력 위상(전국 3위)에 걸맞는 선진행정으로 해양건도 실현 기여

■ 수산행정의 현 실태

- 잦은 어업분쟁 발생으로 어업조정 등 해결방안 마련 애로
 - 업종간 같은 어종, 시기, 바다 공간 공유로 인한 분쟁('15년 9건 발생)
 - 많은 민원이 발생하나, 시·군 개입 불원(실익 없음) 및 해소의지 미약
 - 불법어업 단속, 어업권 관리 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대처 미흡
 -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 도 의존도 증가로 민원 등 장기화
 - 민원발생시 일단 상급관청에 가야 해결된다는 인식 팽배
 - 소극적 대응(시·군 공무원) 및 道 개입 희망(예산, 제도 등)
 - 수산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협업)」 운영 한계
 - 업종간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와 비정기적 간담회, 협의회 개최
 - 지리적 특성과 여건에 따른 시·군 평가기준 마련 애로
 - 공통평가지표 개발 곤란, 수산행정의 발전적 계기조성 미흡
 - 도-시·군, 시·군 간 인사교류 중단, 선진행정 습득기회 상실
 - 소수직렬의 여건상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해 역량개발 및 동기부여 미흡
- ⇒ 시·군보다 道에 대한 어업인 의존도가 높아 광역행정 추진 애로 道가 도다운 행정 수행 곤란, 시·군의 현장행정 지원기능 위주 수행

■ 수산행정 발전방향

- 도, 시·군을 포함한 분쟁완화 소통시스템 구성 운영
 - 구성 : 도, 시·군, 해경, 수협, 업종별 어업인단체 등 유관기관 포함
 - 역할 : 분쟁조정 및 관계법령 제도개선 발굴 건의, 수산행정 발전 도모
- 해양수산직공무원 역량제고를 위한 인사교류 방안 마련
 - 시·군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인사교류 기준 마련
-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군 평가를 통한 선진 수산행정 기반 강화

■ 그동안 추진현황

- 업종간 분쟁(안강망, 선망, 닳자망 등) 민원 조정 : 50여회
 - ※ 어업분쟁 완화를 위한 충남 연근해어업조정 간담회 개최(2회), 갈등민원 9건 협의
- 어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 － 어촌계, 어항시설, 생태환경지역, 해양수산업현장 등 방문 대화
 - 애로사항 청취, 민원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견 청취 등
- 수산업안 관련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운영
 - － 충남해양수산업정책협의회 최초 구성·운영(3.31, 35명), 2회 개최
 - － 충남 4대명품 수산물 육성 위한 민간 활성화팀 운영(4개분야 40명)
- 도-중앙(해수부)간 「인사교류(사무관급)」 실시(' 15. 8. 31)

■ 협력의 필요성

- 도는 장기 분쟁민원 해결에 치우쳐 체계적인 정책개발 미흡
- 시·군은 어업분쟁 등에 자체해결 의지보다는 도 또는 중앙 의존 경향 심화
- 내륙 시·군은 수산업 이외의 직렬이 수산업무 수행(전문성 미흡)
 - － 내수면 양식산업 개발에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관심 및 사업추진 소홀
- 해양수산업 인사교류 중단으로 업무추진역량 및 발전정체
 - － 도-시·군 또는 시·군간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역량 개발 기회제공 필요

■ 도-시·군간 협력사항

- (도) 경쟁력 있는 미래수산업 육성 기반 강화
 - － 어촌·어업의 진입장벽과 장기 갈등 민원 해소 지원
 - － 민·관협의체 상시운영으로 시·군간 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 －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공모사업지원 확대
 - － 공정한 시·군 평가기준 마련,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차등지원
- (시·군) 어촌·어업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 업종간 분쟁 및 민원사항 등 적극 개입 해결 노력 경주
 - － 면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소득 증대 도모
 - － 현장행정 강화로 어업질서 확립 및 (낚시)어선 등 안전사고 예방
 - － 해양수산업직공무원 도-시·군, 시·군 간 상호 인사교류 및 채용 확대

제6장 도·시·군간 정책협력 협약서 및 부속서류

1.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간 정책협력 협약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15개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도와 시·군의 정책협력 강화」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도와 시·군이 공동의 행정목표에 대해 상호 보완성을 기초로 수평적이고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협약사항) 도와 시·군간 협약사항은 붙임의 부속서류와 같으며, 도와 시·군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적극 협력하며, 기타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재원부담) 본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와 시·군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조 (후속조치) 도와 시·군은 행정력 결집을 통한 지방자치 역량 강화로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 및 도민 행복 추구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협력에 공동 노력한다.

제5조 (효력발생) 본 협약서의 내용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바뀔 경우에도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이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속서류 : 협약사항 1부.

2015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천안시장 구 본 영



공주시장 오 시 덕



보령시장 김 동 일



아산시장 복 기 왕



서산시장 이 완 섭



논산시장 황 명 선



계룡시장 최 홍 목



당진시장 김 홍 장



금산군수 박 동 철



부여군수 이 용 우



서천군수 노 박 래



청양군수 이 석 화



홍성군수 김 석 환



예산군수 황 선 봉



태안군수 한 상 기

목 차

1. 국도비 부담비율 합리적 개선을 통한 재정혁신
2. 서울 충남학사 건립
3.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
4.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
5. 충남 상생산단 정주여건 개선
6.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7. 충남형 동네자치 확산
8. 문화관광 축제의 경쟁력 강화
9. 충남관광 활성화
10. 공립예술단 운영체제 개편
11. 백제역사 유적지구(세계문화유산) 통합관리
12.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13. 마을만들기 지원·협력 시스템 구축
14. 농산물 통합마케팅 체계와 공동브랜드 육성
15.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역할과 기능 재정립
16. 깨끗한 충남만들기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
18. 공공디자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
19. 해양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20. 내포신도시의 안정적 운영·관리 체계 구축

2.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간 정책협력 협약서 부속서류

본 협약서 제2조의 협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도비 부담비율 합리적 개선을 통한 재정혁신

- 도비부담 법적비율 미 준수 사업 단계적 개선(3:7→5:5)
 - 16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부터 우선 적용 추진
- 도 공약사업 등 도비부담 단계적 상향(16년~)
 - 공약사업(20~30% → 50% 수준)/시책사업(9~20% → 30~50% 수준)
- 도-시·군간 기능 조정 및 성과 미흡사업 단계적 일몰, 감액 등 합리적 개선
 - 시·군추진 업무 도비 보조 하향조정(3:7), 사업규모 축소, 일몰

2. 서울 충남학사 건립

- 장학기금 미납 8개 시·군은 '16년까지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납부
 - 시·군 출연금 목표액 75억원 중 42억원 납부 / 미납액 33억원
- 추가 지분 희망 시·군은 학사 건립비용을 '16년도 본예산 반영

3.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

- (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추진체계 구축
 - 공모사업 사전 정보 조사공유체계 구축
 -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공모사업 심사 위원회 구성 및 추진 필요성·타당성 검토
- (시·군) 지역 특색있는 사업 발굴
 - 기존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 검토
 - 공모사업 단계별 공동대응 및 체계적인 사업성과 관리 체계 구축

4.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

- 사회적경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주민자치센터 강좌, 시민대학, 초·중·고 학생교육) 운영, 도정신문,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 전개
 - (시·군) 시·군별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홍보 및 교육 추진
-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충남형 사업 전개
 - (도) 지역문제 해결위한 청년활동가 지원(16년부터 연10명씩 / 2억원), 지역 및 업종별 네트워크 활성화
 - (시·군) 시·군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판로 안정화 지원
 - (도) 따숨서포터즈 운영,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 (시·군)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기업을 연계, 우선구매 등 협력 촉진

5. 충남 상생산단 정주여건 개선

- (도) 산단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 실태조사 결과분석을 통한 시·군별 지원대상 사업 및 규모 확정
 - 중앙부처 국비지원 공모사업 등과 연계한 상생산단 조성 추진
- (시·군)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상생산단 정주여건 조성사업 추진
 - 산단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추진, 사업확정에 따른 예산확보(16년)
 -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정주여건 개선 추진
 - 상생산단 관련 중앙 공모사업의 적극적 발굴 및 참여

6.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 도-시·군간 전 직렬 대상 인사교류 실시(교류기간 2년 단위)

| |
|------------------|
| 교 류 목 표 |
|------------------|

- 5급·6급 : 시·군별 각 1~2명 ※ 기술직 포함

- 우수자원을 교류자원으로 선발
 - 교류 후 원 소속 복귀시 도·시·군간 연계성 강화 자원으로 활용토록 승진직후 또는 승진 후 2년 이내 우수자원으로 선발(5·6급 공통)
- 인사교류 자원에 대한 희망보직 부여

- (도) 시·군 교류자원에 대한 희망보직(과 단위 포함) 반영
- (시·군) 도 교류자원 보직부여(5급 - 과장 또는 읍면동장 / 6급 -팀장)
-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행 확행
 - 인사교류자가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 가점(월 0.1점), 근무성적 평정(최하 “우” 등급), 성과상여금(최소 “A” 등급) 등 보장

7. 충남형 동네자치 확산

- 교육 운영주체 재정립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추진
 - (도) 전문가·강사요원·공무원 교육, 시·군 아카데미 교육비 지원(50%)
 - (시·군) 시·군 주도 주민자치 아카데미 일반·실무교육 실시
- 도·시·군 역할 분담을 통한 현장활동가(리더) 발굴·육성
 - (도) 컨설팅·공동체 조사를 통해 권역별 활동가 및 마을리더 발굴
(18년까지 100명) 워크숍·포럼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
 - (시·군) 마을만들기·사회적경제 등 중간지원조직과 연계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동체 사업에 활동가 참여
- 안정적인 동네자치 운영재원 확보 및 시범사업 추진
 - (도) 「(가칭)주민자치세」 신설 등 법제화 및 제도화 마련
 - (시·군) 주민세를 동네자치 재원으로 활용한 시범사업(1~2개소) 추진

8. 문화관광 축제의 경쟁력 강화

- 국비지원이 일몰(7년간 지원)된 문화관광축제는 평년에는 도비 미지원
 - 단, 도 주관 메가이벤트 또는 국제행사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도비 지원기준 정립
 - 문화관광축제 : 정해진 매칭비율(국비-지방비)에 따라 지원
 - 지역향토문화축제 : 원칙적으로 시·군 주도로 개최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경쟁력 확보)
 - 메가이벤트 축제 : 시·군축제 중 육성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 일정주기로 도 주관의 메가이벤트식 개최(선택과 집중의 전폭적 지원)
- 유망 지역향토축제 발굴·육성 등 경쟁력 강화
 - (도) 도차원의 육성이 필요한 축제 선정(현장평가, 심의 등) 지원
 - (시·군) 주민 자립형 축제 자체육성 노력(후원 발굴 등 수익 다변화)

- 국비지원 문화관광축제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
 - (도) 국비지원 축제에 대해 중앙과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및 지원,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부담
 - (시·군) 축제의 내실화로 경쟁력을 갖추 국비지원 축제 기획·응모

9. 충남관광 활성화

- 중장기 관광비전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 (도) 충남관광비전·마케팅에 대한 전략 수립
 - (시·군) 정확한 자료제공 및 지속적 피드백 지원
-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역할분담
 - (도) 시·군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패키지형 상품으로 개발
 - (시·군) 지역축제, 3농체험, 문화자원 등 연계할 관광상품 발굴
- 맞춤형 해외마케팅 강화
 - (도)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 중심의 광역마케팅 강화
 - (시·군) 지역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행관계자 팸투어 등 관광마케팅 적극적 협조 지원
- 국내외 관광 홍보전(홍보관 운영, 설명회 개최) 공동 협력, 친절교육
 - (도) 국내외 관광 홍보행사 홍보전 개최(가이드라인 제시)
 - (시·군) 국내외 마케팅 추진행사에 적극 동참,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강화

10. 공립예술단 운영체제 개편

- (도) 도립예술단 창단 시까지 운영비 현 도비 보조율 유지
 - 도립 예술단 창단시 시·군 공립예술단원 흡수
 - ※ 다른 시도 도립예술단(평균2.2개) 운영실태 고려, 도립예술단 창단
- (천안·공주·부여) 공립예술단의 전 시·군 균형있는 문화공연 추진

11. 백제역사 유적지구(세계문화유산) 통합관리

- (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 중앙부처 협력
- (공주·부여) 관광자원화(활용), 관광객 맞이(백제상가촌·저잣거리 조성 등)
- 백제왕도 복원, 보존정비, 고도풍미 도시계획 및 조성, 유적 홍보
 - ※ (백제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통합관리, 활용방안 연구 및 콘텐츠 개발, 해설사 교육 등

12.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취지의 공감대 형성 및 가치공유 노력
 - (도)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현장설명회 지원 강화
 - (시·군) 민관협력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전문가 채용 등 인력확충
-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 (도) 광역 작부체계 구축, 식재료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
 - (시·군) 지역 작부체계 구축, 단계별 품질기준 도입, 전통산업 육성 등
- 수발주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식재료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도) 수발주 프로그램 개발·보급, 광역단위 통합관리 기준마련
 - (시·군) 식재료 분류기준 표준화, 품질·가격 비교 가능토록 품목 간소화

13. 마을만들기 지원·협력 시스템 구축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 (도) 도 단위 중간조직 설치, 마을만들기 정책개발 지원
 - (시·군) 시·군 단위 중간조직 설치,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
- 장기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 통합·운영
 - (도) 도 및 시·군간, 민과 관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례 및 정책개발 지원
 - (시·군) 주민역량강화, 마을만들기사업, 사회경제 육성 등 마을만들기 사업 통합 운영

14. 농산물 통합마케팅 체계와 공동브랜드 육성

- 시·군 단위 산지유통 체계 구축, 파워있는 시·군 브랜드 육성 협력
 - (도) ① ‘공선조직’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시설현대화 지원
 - ② 시·군 단위 순회간담회를 통한 종합계획 수립·실천방향 제시
 - (시·군) ① 산지유통 종합계획(통합마케팅)수립 및 실천
 - ② 시·군 브랜드를 산지유통 육성, 종합계획 수립·실천과 연계
 - ▶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농가조직 위주로 사용권 부여
 - ▶ 포장재, 공선 수수료 등 농가 참여유도, 시설 현대화 등 조직 지원
 - ▶ 도 지원정책 연계, 브랜드 취급 조직 지원 (시설, 컨설팅, 교육 등)

- 道단위 연합마케팅(충남오감) 육성 협력
 - (도) ① 품질관리·상품화 기준마련, 마케팅전담팀, 판로개척
 - ② 참여조직에 포장재, 시설현대화, 물류비 등 지원
 - (시·군) 품질관리·상품화사업 실행, 출하권의 일부를 道연합사업단에 위임
- 道브랜드와 시·군 브랜드 간 조직 공동 활용, 마케팅체계 구축
 - (도) 농협 도본부를 통해 - 시·군 조공법인과 연계 대외마케팅 지원
 - (시·군) 조공법인 등을 통해 - 도단위 연합과 연계 상품공급 체계 확립

15. 독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역할과 기능 재정립

- (공주,보령) 사업성격상 지역장애인 위주 서비스사업 시·군 전담추진
(16년부터)
 - ' 16년 이관(4개사업) : 소재지 장애인(이용률 95%이상)을 위한사업
 - ※ 재가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특별운송사업
 - ' 17년이후 : 나머지 기초사업 이관은 해당시·군과 협의추진
- 기초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시·군(공주, 보령, 계룡, 청양) 건립방안 강구
- 도비재원 조정분은 시·군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용

16. 깨끗한 충남만들기

- 도-시·군간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동의 목표 실현
 - (도) “깨끗한 충남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정책 피드백 및 추진시스템 발전 방안 마련
 -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사업 단계별 추진
주민 및 사회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자발적 청소 문화 확산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조기 대응
 - (도) 자원순환 사회 기반시설(폐열활용 소각로)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 및
시·군별 연합형(2~3개 단위) 소각시설 설치 조정 역할
 - (시·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소각시설 변경 등) 및 쓰레기 재활용 확대
- 도민 환경마인드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환경 교육 추진
 - (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상설 교육장 운영
 - (시·군) 자율적 주민 참여를 위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환경 교육 실시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 (도) 장기미집행시설 우선 투자 순위 판단기준 마련 및 도비 지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정 및 국비지원 건의(국토부)
 - (시·군) 장기미집행시설(도로, 공원 등) 우선 추진대상 조사 및 자체 예산 확보, 사업 추진,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도-시·군) 도시계획 전문성·연속성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
 - 정확한 수요추정과 지방재정 등을 감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18. 공공디자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 지원체계 운영
 - (도) 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공공디자인센터 및 총괄계획가(MP) 운영지원, 경관관리 중장기사업 발굴
 - (시·군) 공공디자인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확보 및 컨설팅 협업추진
 - (도) 민간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시·군에 자료제공, 시·군에 디자인 컨설팅 지원
 - (시·군) 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공공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공공디자인 컨설팅 요청(시·군→도)

19. 해양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선제적 대응으로 해양신산업 육성
 - 광역적 R&D연구 및 국가 해양프로젝트 유치(마리나, 헬스케어, 바이오수소 등)
 - 충남연구원 내 해양연구팀 설치 운영으로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관련 기업간 연계망 구축 운영 지원(기업간 정보교류 등)
 - 도내 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아이템 등 발굴
- (시·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해양신산업 발굴, 육성
 -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 육성, 고부가가치 창출
 - IT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전통수산업의 신산업화(첨단양식, 수산유통·가공)
 - 해양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항만 등 전략적인 개발계획 수립 추진
 - 민자유치 촉진과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세제혜택, 기금마련 등)
 - 미래 해양정책을 펼쳐나갈 해양수산 전문가 및 공무원 육성

20. 내포신도시의 안정적 운영·관리 체계 구축

- (도) 내포신도시의 완벽한 기반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정주여건 마련
 - －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컨셉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추진
 - － 도시기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양 군(홍성, 예산)간 조정·중재
-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자체적 운영·관리
 - － 도시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 및 장비, 예산확보 투입
 - － 내포신도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

제7장 업무협약제도의 도입과 추진방안

1. 업무협약의 모형 정립

1) 개념적 모형

■ 업무협약행위에 내재하는 중요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상호 연계시킨 모형

- 업무협약행위의 개념적 모형은 대체로 6가지 핵심요소 또는 원칙이 상호 작용을 맺어서 형성됨

- 협약과제의 전략적 선택성
-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
- 분담의 협동성
- 지원의 안정성
- 자치단체간의 공공협약성
- 절차의 분권적 통합성

■ 협약과제의 전략적 선택성

- 충남도의 지역발전에 상호 기여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성격을 지니는 과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충남도와 시·군이 전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상호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임

■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

- 지역의 가용자원과 제반여건 그리고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도와 시·군이 스스로 협약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각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임

■ 분담의 협동성

- 충남도와 시·군 간에 반드시 투자와 각기 역할을 수행하여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분담과 역할수행이 아닌 상호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 지원의 안정성

- 충남도와 시·군이 협약대로 안정적인 예산 등의 지원이 뒷받침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 자치단체 간 공공협약성

- 충남도와 시·군이 명시적인 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고 공공의 효력을 발생토록 하는 것으로 협약 당사자 간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 절차의 분권적 통합성

- 협약과제의 협의, 선정, 체결과정은 강압적 방식이 아닌 분권적 체제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별, 부문별 사업을 충남도 전체의 틀 속에서 조정·통합하는 공식적 절차에 의해 확보토록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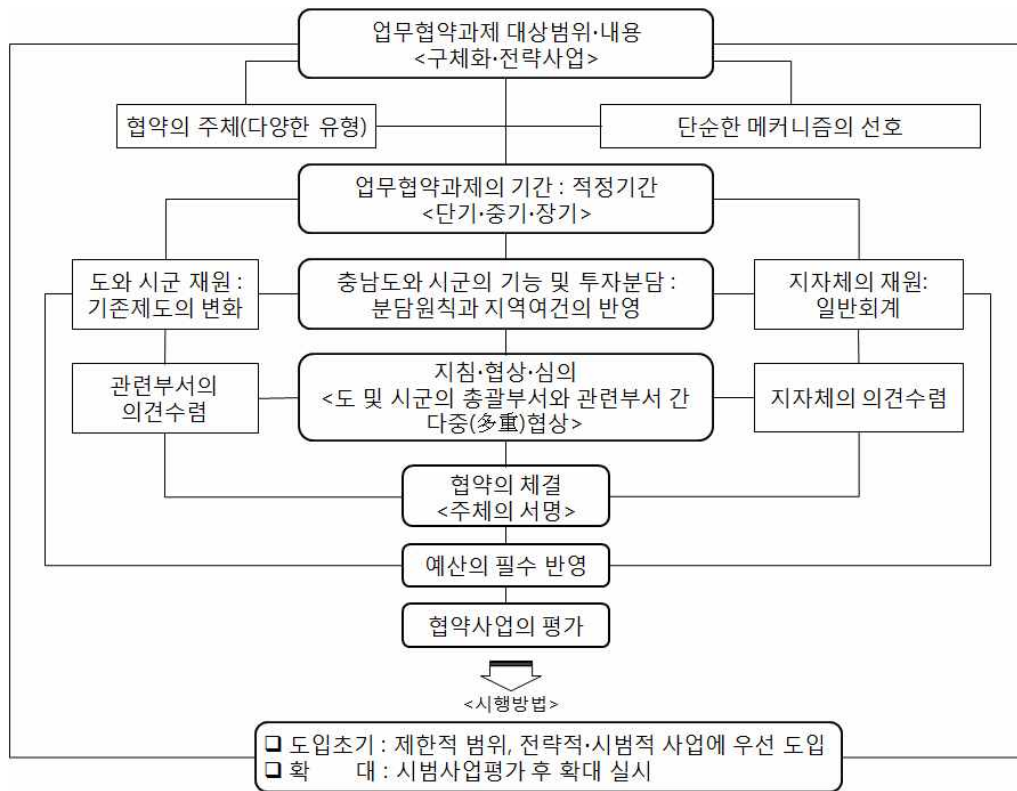
■ 개념적 모형이 추구하는 바는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형 지역발전의 도모
- 분권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지역발전을 추구
- 충남도의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실천적 모형 : 운용요소의 메커니즘

■ 개념적 모형에 내재하는 중요요소를 현실적으로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실용적 운용모형임

- 업무협약의 실제 운용시 요소 및 요소들 간 메커니즘을 협약과정의 순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됨



〈그림 4〉 업무협약 운용시 매커니즘 협약과정

2. 업무협약제도 도입의 기본원칙

■ 원칙 1 : 업무협약 체결

-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 충남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략적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추진해야 함

■ 원칙 2 : 협약자유

- 협약 당사자는 충남도와 시·군으로 하되 실제의 협약은 충남도와 협약을 원하는 시·군으로 하며 강제적인 협약사업 참여는 배제함으로써 협약자유 원칙을 견지토록 함

■ 원칙 3 : 상호협의를

- 충남도와 시·군은 지역발전에 동반자적 관계에서 업무협약에 참여하며 계획에서 완료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기간, 투자계획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함

■ 원칙 4 : 공동의 지역발전 목표 수용

- 업무협약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은 충남도의 지역발전 목표와 시·군의 지역발전 목표를 동시에 수용하는 사업이어야 함

■ 원칙 5 : 계획이 제시된 다년도 사업

- 협약대상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다년도 사업이어야 하고 협약될 사업은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원칙 6 : 예산반영

- 체결된 협약내용에 대하여는 충남도와 시·군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해야 함

■ 원칙 7 : 재원의 공동 부담

- 협약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충남도와 시·군이 업무 및 기능에 따라 공동부담 하되 지역개발수준, 지방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지역간 차등적인 부담을 기해야 함



■ 원칙 8 : 중점사업을 대상

- 협약과제가 많을수록 실천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정한 종류의 중점사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 원칙 9 : 단계적 추진

- 충남도와 시·군의 재정, 계획수립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제도 도입시 시범적 실시를 토대로 단계적 추진을 도모하도록 함

3. 업무협약제도의 추진방안

1) 협약의 대상사업

- 협약의 대상사업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포괄적인 범위를 규정할 수 있음
 - 협약체결 대상은 광범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제도도입 초기부터 적용시킨다면 제도의 전략성, 계획성, 실천성 및 협력적 측면의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음
 - 따라서, 협약기간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략적 중점사업은 국가시책, 국토계획, 충남의 개별지역계획 등을 상호 반영하여 기간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용하여야 함
 - 제도 도입초기의 협약 대상사업의 경우 규모가 대규모인 사업은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규모를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협약 대상사업은 미리 준비된 사업과 실현가능성 및 효과를 반영하여 충남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선정토록 해야 할 것임
 - 미리 준비된 사업이란 사업이 일정부분 검증된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의미하여 우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반면 실현가능성과 효과가 낮으며 국가 및 충남도의 전략과 괴리된 사업은 선정에서 배제하여 낭비를 막도록 해야 함
- 우선수행사업 선정에 대한 기본지침을 충분 협의해야 함
 - 충남도는 협약기간 중의 전략사업, 즉, 우선시행사업 선정에 대한 기본 지침을 시·군과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2) 협약유형

- 향후 광역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점차 많아질 것을 고려하여 다자간 협약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많은 시·군이 참여할 경우 협약체결이 복잡하고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충남도 전체적인 참여와 공동사업을 위해서라면 다자간 협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일부 특정사업에 있어 단자간 협약유형을 제한적으로 병행하는 방안을 구상하여야 함
 - 도입초기 여러 행정구역에 걸치는 광역의 공동사업의 경우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협약체결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촉진을 위해 협약을 권장하여야 하며 지역간의 통합과 결속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와 시·군의 협약관련 법적규정이 요구됨

3) 협약기간

- 협약대상사업의 시행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대체로 중기(3-5년) 기간의 채택이 적절함
 - 협약기간은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6-10년)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단기의 경우 협약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필수기간으로 사업기간의 충족면에서 채택이 어려울 수 있음
 - 중기의 경우 최소한의 사업기간을 충족하며 경우에 따라 중간평가가 가능하기에 채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장기의 경우 계속성을 갖는 사업으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안정된 예산운영의 부담과 융통성있는 추진이 곤란하므로 제도도입 초기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중기계획 등과 연계하여 협약기간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각종 계획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요구되어 짐

4) 업무 및 투자의 분담과 자원 배정

(1) 업무 및 투자의 분담

- 협약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충남도와 시·군의 기능과 투자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함
 - 협약제도로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과 재정여건의 심한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의 협약제도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측면도 있으며 충남도와 시·군의 행·재정적 차원에서의 대등관계 유지측면에서도 중요함
- 업무협약제도의 성공을 위한 업무와 투자분담 원칙은 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사전에 구분하고 이에 각 자체예산 투입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다만, 기능과 역할 구분이 어렵거나 공동투자가 필요한 부분 또는 개별지역간의 투자여건에 있어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여 지역의 재정여건과 발전정도에 따라 협의한 후 차등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역의 재정여건과 발전정도는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참여하는 모든 자치단체가 동의하여야 함

(2) 협약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특별한 지위 부여

-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약체결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공식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필수적으로 배정해야 함
 - 사업기간 동안 총액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연차별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예산반영을 위해 협약사업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조치가 요구됨
 - 협약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예산요구시 충분히 예산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협약기간동안 안정된 예산배정을 위해서는 계속비에 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협약체결된 사업계획의 필요시 인·허가 등에 있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여 협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 걸림돌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5) 협약사업 총괄부서의 심의

- 협약사업을 총괄하는 주무업무는 업무협약 자체가 다양하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자치행정 또는 기획업무 담당부서가 될 수 있음
 - 자치행정업무 담당부서의 경우 도 및 시·군과의 연계를 비롯 인력과 조직운영상에 있어 효율적일 수 있으며 기획업무 부서의 경우 자치단체 전체적인 관점과 틀 속에서 운영할 수 있음
- 협약사업의 심의는 도 및 시·군의 총괄부서 장과 소관부서 장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별도의 보고와 이해 없이도 사업추진과 총괄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협약을 총괄하게 되는 부서에서는 협약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사항을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 협약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의 협약지침과 자체 작성한 협약잠정안을 마련하여 협의함

6) 협약사업에 대한 평가와 협약의 효력

1) 협약사업에 대한 평가

- 충남도의 총괄부서는 시·군과 협의하여 협약사업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작성토록 하여야 함
 - 이에 근거하여 관련부서 및 시·군은 협약사업의 추진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작성토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2) 협약의 효력

- 업무협약은 충남도와 시·군의 행정계약 형태를 띠게 됨으로 법률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협약은 상호 합의하에 파기할 수 있으나 한 당사자에 의한 일방적인 파기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차질은 금지함으로써 협약사업의 위상과 책임감 및 실천력을 확보해야 함

7) 관련 제도의 정비

- 업무협약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도 및 시·군에서는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체 제도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8) 업무협약제도의 체결과정

-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업무협약 절차와 관련하여 주요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1단계 : 업무협약지침 및 계획 작성 - 총괄부서가 관련부서 및 시·군 협의 후
- 2단계 : 협약지침 및 계획의 관련부서 및 시·군 송부
- 3단계 : 관련부서 및 시·군은 해당정책 방향 및 사업선정
- 4단계 : 도 및 시·군 소관부서 간 사업별 협약에 대한 협의
- 5단계 : 도 및 시·군 소관부서 협약사업 잠정안 마련 및 총괄부서 송부
- 6단계 : 총괄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총괄·조정
- 7단계 : 협약사업 최종 조정안을 심의
- 8단계 :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서명

부록 1 : 도-시·군 협약과제 발굴 현황

| 연번 | 과 제 명 | 필 요 성 | 발굴부서 (시·군) |
|----|--------------------------|--|---------------|
| 1 | 사회적경제 육성 | ○ 사회적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군 단위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지원방안 마련필요 | 경제 정책과 |
| 2 | 충남형 동네자치 실현 | ○ 도와 시·군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자율 공동체 육성·지원 체계 구축 | 자치 행정과 |
| 3 | 주민세 동네자치 활용 | ○ 주민세를 주민자치(동네자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칭 주민자치세로의 활용에 관한 도와 시·군의 협력 | 자치 행정과 |
| 4 |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지원 | ○ 시·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과 중간 지원조직 설립으로 민간주도의 현장지원 체계 구축 | 농촌마을 지원과 |
| 5 | 깨끗한 충남만들기 | ○ 깨끗한 충남 만들기를 통한 청청 충남 이미지 회복과 충남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 | 환경 관리과 |
| 6 |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 | ○ 도와 시·군의 디자인 관련 정책, 계획, 사업 등 협의와 조정을 통한 충남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 건축 도시과 |
| 7 | 폐도부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 ○ 지역주민 참여로 지역주민 스스로 사용 계획을 수립 자연환경과 연계한 쌈지공원 조성 | 도로 교통과 |
| 8 | 공공갈등 공동협력체계 구축 | ○ 갈등현안의 사전 공유 및 사전별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지원 체계 구축 | 천안시 |
| 9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공동협력 | ○ 현재 법령과 지침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분담과 상호보완 시스템 구축 | 천안시 |

| 연번 | 과 제 명 | 필 요 성 | 발굴부서 (사군) |
|----|-------------------------------------|--|--------------|
| 10 | 충남형 안전문화 정착 | ○ 실질적인 시민체감형 안전문화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충남형 안전문화운동 실행모델 마련 | 공주시 |
| 11 | 효율적인 주민자치 (마을사업) 육성 | ○ 충남형 동네자치 원칙과 역할 정립 등 지침 마련 등 주민자치(마을사업) 집중 육성 지원 | 보령시 |
| 12 | 소방업무의 유기적 협업체계 | ○ 소방 일부 업무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아산시 |
| 13 | 충남관광 선진화 전략 | ○ 15개 사군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충남 관광의 새로운 비전과 리노베이션 실천전략 필요 | 아산시 |
| 14 | 농특산물 수요처 발굴 | ○ 농특산물 납품을 위해 사군 우수 농특산물 공급-소비 시스템 구축 | 아산시 |
| 15 |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 ○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지원 위한 체계적인 법률 제정 및 제도마련 필요 | 서산시 |
| 16 | 가로림만 지역개발 및 보존 대응체계 확립 | ○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서산시 |
| 17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간 재정 지원 제도 개선 | ○ 도와 道교육청의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교육기관 재정 지원 방식 개선 | 논산시 |
| 18 | 경관위원회 도-사군간 통합운영 | ○ 충청남도 경관관리의 일원화 방안 마련 | 논산시 |
| 19 | 충청남도 관광자원 스마트 홍보 | ○ 개방형 스마트 관광안내를 통해 사군 통합형 여행상품 개발 등 충남도 관광 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 계룡시 |

| 연번 | 과 제 명 | 필 요 성 | 발굴부서 (시·군) |
|----|-----------------------------|---|---------------|
| 20 | 비문해·저학력 문해교육으로 교육복지 실현 | ○ 초등학력 인정 체계가 잡힌 도교육청 과 도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초등 학력 인정 교육을 기획, 진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당진시 |
| 21 | 해양오염사고 대비 공동방제 | ○ 도 관할 해역에 오염사고 발생시 도지사와 시·군이 공조체계 구축 | 당진시 |
| 22 | 100세시대!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충남실현 | ○ 선제적인 질병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장년부터 노년까지 주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 부여군 |
| 23 | 외국인 지원 정보공유 및 지원체계 정립 | ○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도-군간 공동 프로그램 개발 | 서천군 |
| 24 | “민어유” 로컬푸드 품질인증 실현 | ○ 충청남도 주도의 로컬푸드 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 청양군 |
| 25 | 충청남도 MICE산업육성 협력 | ○ 홍성 원도심에 MICE산업 (회의, 컨벤션 등) 유치함으로써 원도 심 활성화에 기여 | 홍성군 |
| 26 |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 ○ 의료원 등 도내 공공기관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홍성군 |
| 27 |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체험 관광 | ○ 지자체에서 개발·운영 중인 콘텐츠 를 묶는 새로운 체험형 관광 상품을 개발 협력 | 예산군 |
| 28 |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도-시·군 공공갈등 관리 |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도-시·군간 협력 | 태안군 |
| 29 | 대규모 산업단지 환경관리 방안 | ○ 충남도의 2개 이상 시·군간 연계된 환 경피해 대응방안 마련 필요 시·군 단 일 지자체 로는 환경 민원을 대응(해 결)하는데 한계, 충남도 주도적 관리 필요 | 태안군 |
| 30 | 정부예산 공모사업 협력체계 구축 | ○ 정부 공모사업의 수가 2004년 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되었으나 기초자치 단체 차원에서 대응에 한계 | 태안군 |
| 31 | 관광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발전체계 구축 | ○ 관광 여건을 활용한 도차원의 체계적인 관광 기반 구축이 절실 | 태안군 |

부록 2 : 발굴 협약과제 검토의견

| 협약과제명 | 검 토 의 견 | 검토부서 (발굴시·군) |
|--------------------------------------|--|-----------------------|
| 공공갈등 공동협력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협약과제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므로 (가칭) ‘도-시·군 공공갈등 공동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단일 과제로 협약을 체결함이 적절 | 도민협력 새마을과 (천안시) |
|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도-시·군 공공갈등 관리 업무 협약 | | 도민협력 새마을과 (태안군) |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공동협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는 관련법령에서 대상 시설별 재난책임기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정 관리 중 ○ 시·군 소관 시설은 재난책임기관으로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책임과 역할이 정해 있어 기능 재정립 협약과제 대상에서 제외 필요 | 안전총괄과 (천안시) |
| 충남형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관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따라 안전문화 활동과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임(2014. 4.)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책무사항으로 도와 시·군간의 협약과제로 볼 수 없음 | 안전총괄과 (공주시) |
| 효율적인 주민자치 (마을사업)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에서 협약 추진 중인 과제임 | 자치행정과 (보령시) |

| 협약과제명 | 검 토 의 건 | 해당부서 (발굴사·군) |
|-------------------------|---|-----------------|
| 소방업무의 유기적협업 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무 중 지원, 협조가 필요한 사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사회재난-가축전염병) 발생 시 도 소방조직의 사·군 급수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 집중기간 중 산불 예방활동을 위한 예찰활동 등에 의용소방대 활용 및 지휘근거 시장·군수에게 부여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 임무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으로서 산불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나, 법령 상 근거 없는 시장·군수의 지휘권으로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가 발생. 다만, 산림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산불진화 시에는 적극 협조하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시장·군수)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사고 시 보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외에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및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자연재난)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필요 시 장비 및 인력 협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업무수행(각종 훈련 및 캠페인, 예방활동, 지역행사 등) 시 장비 및 인력 협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제시된 협약과제는 既 법률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거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협약과제로는 실행불가능 | 소방행정과 (아산시) |

| 협약과제명 | 검 토 의 건 | 해당부서 (발굴사군) |
|--|--|-----------------|
| 농특산물 수요처 발굴 지원 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내 농특산물 대량소비처 (기업, 공공기관 등) 에 대한 내고장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도차원의 농특산물 수요처 발굴에 있어 공간적·효율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도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내 농특산물 수요처 발굴을 추진함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수도권 또는 타지역의 경우 정례 직거래장터 및 전국단위 농특산물 박람회 등을 통하여 지역내 우수 농특산물의 수요처 발굴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농산물유통과 (아산시) |
| 지역특성에 맞는 광역-지자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와 15개 사군의 공통협약사항이 아님. 추후 검토 | (서산시) |
| 가로림만지역개발 및 보존 대응체계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와 15개 사군의 공통협약사항이 아님. 추후 검토 | (서산시) |
| 경관위원회 도-사군간 통합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법 제29조의 경관위원회는 사군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승인, 조례에 따른 건축물 및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사군은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감안한 경관관리를 위하여 사군 경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하며, ○ 전문 인력 부족으로 경관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경관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 및 도시계획 등 타법에 의한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경관조례 제정 및 개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건축도시과 (논산시) |

| 협약과제명 | 검 토 의 건 | 해당부서 (발굴·사·군) |
|---|---|-----------------------|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 자치단체간 재정 지원 제도 개선 | 의견없음 | 교육법무 담당관실 (논산시) |
| 충남관광 선진화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의 대내외적 관광여건 변화(백제고도 유네스코 등재,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등)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거버넌스 구축 및 도와 사군의 업무공유와 협력이 중요 | 관광산업과 (아산시) |
| 충청남도 관광자원 스마트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에 따라, 관광산업과에서는 그간의 단기적이고 부분적으로 추진되었던 관광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 충남 관광비전과 마케팅 전략(콘텐츠 및 채널 구성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중(전문용역으로 추진중, 11월 완료 예정) 여기에서 도출 된 도와 사군의 미래 관광비전 및 세부전략 추진과 관광기반 구축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체계 구축과 역할* (협약사항) 정립이 실효적 <p>* (마 케 팅)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등 (관광개발) 시설 인프라 확충 등 (관광기획) 인적기반 강화, 기금조성 등</p> <p>⇒ 따라서, 충남관광 선진화 전략(관광자원 스마트 홍보 포함)은 “충남 관광비전 및 마케팅 과제와 전략연구 용역” 완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12월중에 업무협약을 추진 시, 도와 사군의 기관별 효율적 자치분권 업무추진과 상호간의 정책협력 강화에 바람직</p> | 관광산업과 (계룡시) |

| 협약과제명 | 검 토 의 건 | 해당부서 (발굴시·군) |
|------------------------------|--|-----------------------|
| 비문해·저학력 문해교육으로 교육복지 실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교육청에서 지정한 13개 시·군의 25개 교육기관(지자체 9, 도교육청 소속기관 9, 비영리법인 7)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각 시·군의 여건 및 실정에 맞게 학력인정 문해교육이 아니더라도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성인 문해교실」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도 및 시·군, 도교육청 등에서 既추진하고 있는 문해교육을 도-시·군 협약과제로 발굴하여 추진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교육법무 담당관실 (당진시) |
| 해양오염사고 대비 공동 방제 업무 협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시·군 협약사항(역할)은 해양환경관리법,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등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 지역해경서, 해양환경관리공단(대산지사)이 협약 유무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이행 중인 사항으로 도, 시·군 행정기관 간 별도의 협약은 불필요함 ○ 다만, 대산석유화학단지 5사와 대산항 주변 공동방제 및 주민예찰 경비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협약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유류5사 협조가 어려워 답보상태임 | 해양정책과 (당진시) |

| 협약과제명 | 검 토 의 건 | 해당부서 (발굴·사·군) |
|--|--|------------------------|
| <p>100세 시대!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충남실현</p> | <p>□ 100세시대 대비 업무추진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기 위한 “제 6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 수립·추진(2015~2018) ①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건강관리 총괄 지원센터 역할 -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 건강관리 전문가 인력양성 등 교육훈련 - 도-사·군 계획 지원, 평가, 기술지원 등 ②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대책 수립,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사·군 치매상담센터 16개소와 연계 지원 ③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에 의한 기능과 역할이 구분되어 도와 사·군이 수행 중에 있음 <p>□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된 사항은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기능으로 별도의 조례제정과 센터설치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제안된 도-사·군 협약과제로 선정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다만, 현 기능의 재정비를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 개선 필요 | <p>보건정책과 (부여군)</p> |

| 협약과제명 | 검 토 의 건 | 해당부서 (발굴·시·군) |
|--|---|------------------|
| “믿어유” 로컬푸드 품질인증 실현 (품질인증센터 건립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농산물 품질관련 제도는 친환경, GAP,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이력추적관리, 안전성검사 등으로 법령에 의해 국가에서 별도 전문기관을 두고 엄격하게 관리 운영 ○ 일부 지자체, 기업 등에서 상표관리 차원에서 품질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유지비용에 비해 차별화, 신뢰성, 성과확보가 어려운 실정 ○ 다만 지역내 유통 농산물에 따라서 道 차원의 품질인증센터 건립운영은 막대한 예산투자에 비해 객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존 국가기관과 제도를 활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예 : 친환경·GAP 인증비 지원사업,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등)안전성관리를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소,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체제를 강화할 계획 ※ 지역 생산농산물의 지역내 유통장려 차원에서 로컬푸드 인증표시, 동일한 포장재 사용 등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예 : 완주군) | 농산물유통과 (청양군) |
| 충청남도 MICE산업육성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읍사무소 이전에 따라 회의 장소로 활용한다고 하나, 회의 개최로 인한 원도심 활성화 및 쇠퇴화 가속화를 지연하거나 멈출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 또한 일정 시·군을 차별화해서는 타 시·군에서 역효과가 나타날 것임 ○ 협약과제로써는 부적격한 방법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건축도시과 (홍성군) |

| 협약과제명 | 검 토 의 건 | 해당부서 (발굴사군) |
|--|---|-----------------|
|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도-시 군간 협력 지원체계 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군 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시작단계(4개 사군 운영 中)로 공공급식까지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사항임 | 농산물유통과 (홍성군) |
|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체험 관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별 자체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는 관광상품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 및 판로 확보 등 세종시 입주민들의 유치 필요 ○ 아울러 농업기술원에서 농가 마을을 육성하는 농촌 체험 사업등과도 연계 추진시 효과성 제고 ○ 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연구용역 「충남 관광 비전 및 마케팅 과제 및 전략연구」에서 도출되는 충남의 대표적 관광자원, 권역별 연계 상품 등을 반영하여 도와 사군이 협력 시스템을 구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 | 관광산업과 (예산군) |

| 협약과제명 | 검 토 의 견 | 해당부서 (발굴사군) |
|---------------------------------|---|------------------------|
| <p>대규모 산업단지 환경관리 방안</p> | <p>□ 그동안 추진내용</p> <p>①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대기질 측정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8개소 중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에 2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측정결과는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서 상시 확인 가능 ○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태안군 이원면 지역에 대한 대기질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으며, 반상회 및 영농교육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공개 또는 설명회 가능 <p>②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부터 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대책 마련 예정 <p>③ 산업단지 주변 주민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지역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대산지역 주민들은 발전소(태안,당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임(보상문제) <p>□ 만·관 협의체 구성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간, 지역주민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요소를 고려하여 대기질 모니터링,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 ○ 단기적으로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해 도, 사·군, 민간단체 등 합동 집중점검 및 사업장 자체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함이 타당함 | <p>환경관리과 (태안군)</p> |

부록 3 : 발굴 협약과제 세부내용

협약과제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도민 삶의 질 제고

□ 협약의 필요성

-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충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 제정(' 12.7) 및 『충남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 12.9)등 제도적 근거와 중·장기 전략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기여하여 왔으나
- 중앙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전략 부재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이 미비한 실정
 - ※ 충남도 사회적경제는 전국 7위 규모(' 14. 12월, 사회적기업 142개)로 성장했으나, 상당수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영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중앙정부 주도의 직접적 재정지원 및 획일적 지원정책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에 애로
- 자본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경제로서 사회적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군 단위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 확대
 - 기업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공모를 통한 우수기업 지속·발굴 육성
 - 농촌 사회문제(에너지·노인복지·귀농귀촌 등) 해결을 위해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농촌형·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모범사례 적극 발굴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 청년 기업가 발굴·육성(청년실업 해소일환), 지원기관 전문가 양성
 - 지역대학·지역기업 등과 연계협력, 사회적경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 및 판로지원 강화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업비 + 교육·컨설팅 등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 기업을 연계, 기술지원·판로촉진 등 협력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주체확대 및 기업운영 역량 강화 지원(행·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연3회), 마을기업(연2회) 공모하여 우수 기업 선정, 내실 있게 육성 - 예비기업 대상 컨설팅강화 · 인증요건 상시 모니터링으로 인증률 제고 -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충남형 모델화」 하여 보급 ○ 사회적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청년 기업가 등 인적자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대학과의 사회적경제 업무 협약체결(도, 중간지원기관, 대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 대학 내 사회적경제 창업과정 개설, 동아리 운영을 통한 예비사업자 육성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청년캠프 등 18개 과정) 활성화로 예비기업가 육성 - 도내 대학 순회 사회적경제 특별교육, 학습동아리 운영(사군별 1개 팀 이상) ○ 마을, 자치영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융복합을 위한 정책협의 진행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업무협약 실시 (당사자조직 협의회) ○ 사회적경제 인식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도민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제품 소비자 평가단 운영(충남자원봉사센터 등과 업무협약) - 지역방송사와 함께 사회적경제 공익캠페인 전개(하반기) - 지역언론사 활용 우수기업 40~50개 선정하여 「마을기업 특별」 홍보 ○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지원 역량강화(우수인재 확보 등) |

| | |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대표성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 서천주민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서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천안)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부여) - 농촌형 사회적경제 모범사례 발굴·육성 (에너지·노인복지·문화소외·귀농귀촌 분야 등) - 지역자원 활용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역자원조사 실시(특화사업 활용)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 시·군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작성 - 시·군별 사회적경제 전문직 공무원 위촉 혹은 중간지원조직 설립 - 시·군별 사회적경제 육성 자체시책(예산) 발굴 및 우수시책 공유 ○ 사회적경제 조직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네트워크 구축 확대 노력('14년 8개→ '15년 12개) ○ 대·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간 매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 지역기업 발굴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사회적기업 등 지원으로 유도 (시·군별 1~3개 기업 이상) ○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의 판로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홍보, 서비스 위탁 가능 사업 발굴 등 시·군별 목표 달성 노력 경주 - 사회적경제 조직 우선구매 조례 제정 - 시·군의 공공건물을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

□ 기대효과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 복원과 창조를 통해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체계 구축
- 지역주민에 의한 자립적 생산·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제고
- 지역단위 민간 주도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확산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증대 및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 지원
-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 관심 제고와 다양한 판로시장 개척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능력 향상

□ 향후조치

- 사회적경제 인식 및 도민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 협약내용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협약과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형 동네자치 실현

□ 협약의 필요성

- 최근 사회운동, 국제기구, 학계, 지자체의 관심 → 동네(마을)
 - 동네(마을) 공동체성 회복이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
- 동네는 일터, 삶터, 쉼터로 복지,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정부로서 주민자치의 출발점
 - 3농혁신, 문화마을, 도시재생 등 성공여부 마을자치공동체가 좌우
- 동네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역량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함
- 그러나, 도 주도의 동네자치 사업추진으로 인해 자치공동체 지원 주체로서의 시·군의 역할이 불명확(미약)하고, 중앙정부 시범사업 위주 자치공동체 육성은 동네자치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정립 실행방안 모색
 - 환경·공동체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유형별 실행모델 제시
- 주민자치회·마을 자치역량조사
 - 시·군 추천 → 활동가 + 시·군 합동조사 : 45개소(주민자치회 15, 마을 30)
- 주민자치 활동가 발굴 → 자치공동체 조력자 역할 부여
 - 공동체 가치실현 의지가 강하고 官 의존성 낮은 현장 활동가(30명)
- 주민자치회 실행모델 시범 적용 및 마을 자치공동체 자율 육성
 - 시·군(읍면동)과 협의, 실행모델 선택 시범적용·확산(5개소)
 - 주민참여도 높고 발전가능성 있는 동네자치공동체 선정(10개소)
 - ※ 관련 근거 :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 타시도 사례 (협약 및 우수사례)

■ 진안군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10년 성과

- 주민역량강화 → 마을경관, 경제사업 → 문화, 복지, 환경영역 확산
- 마을공동체 활동 열심히 하면 소득사업 가능,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 ※ 진안읍 원연장리(인구 90%이상 75세이상)
 - ：꽃잔디 축제 등 마을사업(年 4천만원 수익)
- 전국 마을만들기 선진지로 부각 : 年150팀, 2,000명 견학

■ 주요내용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신규사업 자체, 기존사업 리모델링과 사업간 연계 적극 모색, 지원시스템 구축
- 원연장 꽃잔디마을 : 꽃잔디축제, 다목적체험관 운영 마을소득 증대
- 흰구름 작은도서관 : 건립을 위한 51차례 회의 개최 등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사업추진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방향 제시, 동네자치 모델 유형화 ·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준비 · 주민자치 활동가 및 자치공동체 발굴(육성) 시스템 구축 · 주민자치 역량 강화 제도 지원(컨설팅, 교육 등)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역량조사 참여 및 활동가, 자치공동체 육성 협력 ·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방안 마련 ·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 강화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아카데미, 컨설팅 공동실시 |

□ 재원분담 방안

■ 동네자치 추진 예산 지원 <도와 시·군 매칭>

- 활동가 자율 모임의 장 마련 지원(공간, 수당, 물품 등)
- 자치공동체가 공공성 사업 추진 할 경우 최소한의 지원

■ 2015년 예산 분담계획

| | |
|------------|--|
| 교 육 컨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리더) 요구 시 긍정적 검토, 지원 원칙 -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현장견학, 전문가 컨설팅 등 ■ 도, 시·군 부담비율(5:5) |
| 사업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조달 원칙, 주민제안사업 중 공공성 있는 사업 우선 ■ 자체 재원으로 사업추진 후 확대가 필요한 사업 中 마중물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 지원 ■ 도, 시·군 부담비율(5:5) |

□ 기대효과

- 도와 시·군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자율 공동체 육성·지원 등으로 동네자치 활성화에 기여
- 동네자치 활성화를 통해 귀농·귀촌 등 전입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발생
- 민선 6기내 지속가능한 공동체 100개소를 육성, 확산시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좋은 충남형 동네자치 실현 가능

□ 향후 필요조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 공동체 지원을 위한 도, 시·군 자치법규 제·개정(필요시)
- 재원부담을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 및 시·군 담당자 교육 등

협약과제

주민세 동네자치 활용을 위한 협력

□ 협약의 필요성

- 균등분 주민세는 구성원의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국민개세주의의 과세성격으로 과세의 종류는 ① 개인세대주 ② 개인사업자 ③ 법인임
- 이중 개인세대주에 대한 세액은 읍면 3천원, 동 4천원이며 (보령시만 읍면 6천원, 동 9천원)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 하지만, 현재 주민세는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세율 현실화가 절실함
- 또한, 지방세 가운데 주민세 균등분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지역공동체의 각 구성원에게 부과하며, 이는 비과세·감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 개세(國民皆稅)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는 동네 단위로 이루어지는 동네자치를 통해 구현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동네자치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동시에 관련한 비용을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갖추어야 함
- 주민세를 주민자치(동네자치)의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가칭 주민자치세로의 활용에 관한 도와 시·군의 협력 필요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 (가칭)주민자치세 도입과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주민세 주민자치 활용방안 제시 |
| 시·군 | · 시·군 공동 주민세 인상 및 주민자치(동네자치)로 재원으로 활용 |

□ 기대효과

- 동네 또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동네자치(마을자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재정기반의 구축마련

□ 향후 필요조치

- 주민세는 보통세이기 때문에 그 세수를 지방자치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기초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의 예산편성을 권유하는 조치 마련 등

협약과제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 협약

□ 협약의 필요성

- ❖ 그동안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 계획 수립, 희망마을 선행 사업(소규모 선행사업) 중심으로 마을별 역량수준에 따라 단계별 마을발전 육성
 - ❖ 주민주도의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가속화를 위하여 3농혁신 특화사업비를 활용한 「시·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과 중간지원 조직 설립」으로 민간주도의 현장지원 체계 구축 준비 중
 - 사업량 : 5개 시·군(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 ※ 나머지 시·군도 2016년부터 단계적 지원 예정
 - 사업비 : 900백만원(도비 450, 시·군비 450) _ 개소당 160백만원
- ⇒ 중간지원조직(광역 ⇄ 기초)이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

□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추진 내용

- ❖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등 지역 여건에 맞게끔 행정의 자원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민간에 지원하는 기관

-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와 분석·평가·연구
- 마을 주민상담 및 컨설팅 진행과 교육, 세미나, 견학 등 추진
- 마을 공동체 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마을만들기 소식지 발간 및 정보 제공
- 마을만들기 관련 대내외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 기타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
- 사회적 경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의 사업 통합 서비스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방안 마련 및 정책적 지원 · 도 광역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을 통한 실무 지원 · 마을 활동가 발굴 및 역량 강화, 외부 인적 자원 유치 지원 · 정책 피드백 - 개선방안 발굴 → 실행 → 피드백 →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모범)사례 공유 및 전파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특성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통합 지원센터) · 전담팀, 업무협조체계 등 행정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편 · 시·군 독자사업 발굴, 정책협의회 구성, 기본조례 제정 등 추진 ·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기대효과

- 충청도 마을만들기 정책이 시·군 지역 주도로 확산 및 발전
- 도와 시·군 협력을 통해 앞서가는 광역 모델 구축
- 시·군 단위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조기 성과 도출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등 관련 영역의 융복합 추진
- 현장밀착형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여

□ 향후 조치

- 도 및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선행학습 지속 추진
- 협약내용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협약과제

깨끗한 충남 만들기

□ 협약의 필요성

- 깨끗한 환경은 농산물, 관광, 축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충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일의 기본임
- 방치된 쓰레기로 인하여 청청 충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청정 이미지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해야할 단계에 이름
- 쓰레기 처리 사무가 시·군 고유사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깨끗한 충남 만들기 대책 수립 추진할 계획
- 깨끗한 충남 만들기를 통한 청청 충남 이미지 회복과 충남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을 위하여 도와 시·군간 긴밀한 협력 필요

□ 사업의 주요내용

- 깨끗한 충남 만들기 성공 추진 방안 공동 마련
 - 우리 도 실정에 맞고 지속적 추진이 가능한 실천방안 강구
 - 개선방안 발굴 → 실행 → 피드백 → 우수사례 공유
- 재정지원방안 마련 및 평가를 통한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공
- 추진체계 확립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도 - 시·군간 협력 강화
 - 도, 시·군,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범도민 실천분위기 조성
 - 전진대회 개최, 마을평가제 도입, 관광지 등 현수막 대대적 게시
- 도민에 대한 청소교육 확대로 깨끗한 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
 - 청소대학 운영, 주민자치 아카데미, 영농교육 등 활용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방안 마련 및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공 · 자원순환 협의회 구성·운영 ·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공모사업 · 정책 피드백(개선방안 발굴 → 실행 → 피드백 →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모범)사례 공유 및 전파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특성에 맞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 계획 수립 추진 · 정기적인 대청소 활동 전개, 방치쓰레기 수거 · 주민의식 강화 교육(마을지도자 교육, 영농교육 등 활용) ·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근절 대책 마련 시행 |

□ 기대효과

- 깨끗한 충남 만들기 운동을 통한 자율적 청소 문화 확산이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
- 청정충남 이미지가 농산물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
- 깨끗한 환경은 우리 도 방문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인식되어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 도민 사회단체와 함께 사람중심의 거버넌스 행정 구현으로 도량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 조성

□ 향후 조치

- 도 및 전 시·군 동시 깨끗한 충남 만들기 운동 전개
- 협약내용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협약과제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

□ 협약의 필요성

- 도와 시·군의 디자인 관련 정책, 계획, 사업 등 협의와 조정을 통한 충남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 정체성에 맞는 통합디자인 실현을 위한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 경관관리 관련 법제와 계획의 실효성 부족, 전문가 활용 부족
- 공무원과 주민의 디자인 인식 부족, 주민참여 여건 부족

□ 주요내용

- 디자인 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
- 공공디자인 마인드함양
-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디자인 비전 및 정체성 연구 · 공공디자인 마인드함양(디자인 아카데미운영) · 디자인 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 · 경관, 공공디자인조례 역할 조정 · 디자인 관련 계획 총괄 조정 · 정책연구 및 실행계획 수립 · 전문가 풀 구축 및 운영 관리 ·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군의 통합관리 주체 설계 · 디자인 조례, 조직, 인원 확충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극 적용 · 사업기획 시 디자인설계비 계상 · 컨설팅 활용 사업기획 구상 · 사업별 총괄계획가 선임 · 주민참여 프로세스 구축 · 디자인 교육 및 홍보 |

□ 기대효과

- 일괄된 디자인 행정 추진
- 사업의 효율성 증대
- 디자인을 통해 행복한 생활문화 환경조성

□ 향후 필요조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 및 시·군 담당자 교육 등

협약과제

폐도부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 협약의 필요성

- 기존도로의 선형개량 사업으로 발생된 폐도부지가 방치되어 쓰레기투기 등으로 지역이미지 실추
- 그동안 도에서 지방도 폐도 부지를 공원화하여 시·군에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지역주민 참여의식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낮고 관리부실
- 지역주민 참여로 지역주민 스스로 사용계획을 수립 자연환경과 연계한 쌈지공원 조성

□ 사업의 주요내용

- 국지도 및 지방도 폐도 부지를 활용 쌈지공원 조성
 - 마을별 특색 있는 공원계획을 수립 공모형식으로 시행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형 기법 도입
- 각 구간별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성 강조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도부지 관리권 시·군 위임 • 마을별 특색 있는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도비지원 • 사업시행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 컨설팅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참여 공원조성계획 수립 공모신청 • 조성완료 후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시행 |

□ **재원분담 방안**

- 씬지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 지원 <도와 시·군 매칭>
- 2016년 예산확보

□ **기대효과**

- 도와 시·군, 지역주민과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조성
- 폐도부지에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조성, 지역특성화가 가미된 사업추진으로 충남 이미지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향후 필요조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 재원부담을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 및 시·군 담당자 교육 등

협약과제

공공갈등 공동협력체계 구축

□ 협약의 필요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관련 공공갈등 발생 증가

-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시민의 참여의식 및 권리의식 향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시행을 둘러싼 공공갈등 발생 증가세

※ 2012년 기준 OECD 가입국가 중 사회갈등지수 2위 (삼성경제연구소)

■ 갈등 원인 및 양상의 복잡·다양화, 갈등진행의 장기화에 따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관여되는 공공갈등 증가

- 주민⇄시·군, 주민⇄도, 시·군⇄시·군, 시·군⇄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 증가

■ 대안적 갈등해결을 위한 독자적 역량 미흡

- 행정소송 등 기존의 분쟁해결 도구가 지닌 경직성,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갈등주체 간 신뢰형성 미흡 등의 이유로 대안적 갈등해결 필요성 증대
- 대안적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의 제약으로 인해 독자적 갈등해결의 어려움 존재

□ 사업의 주요내용

■ 공공갈등 현안공유를 통한 대응체계 구축

- 갈등현안의 사전 공유 및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사안별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지원

■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자원의 지원

- 시·군에서 발생한 공공갈등 중 갈등 파급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충청남도의 공공갈등 전문가 등 지원으로 갈등의 효과적 해결 도모

■ 공공갈등 대응력 제고를 위한 공동 업무 연찬과 교육 시행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전문인력 지원 및 갈등현안 정보·사례 공유 · 공공갈등 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 연찬 및 교육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현안 정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현안해결을 위한 기초자료 등 작성 · 시·군 보유 공공갈등 전문인력의 연계 지원 등 |

□ 재원분담 방안

■ 공공갈등 관련 예산 활용

- 도 및 시·군의 역할 수행에 따른 재원 부담
- 시·군에서 발생한 현안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시에는 시·군과 도의 협의를 통해 재원부담 결정

□ 기대효과

- 도와 시·군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갈등의 효과적 대응 및 관리
- 도와 시·군의 협업을 통해 공공갈등 해결역량 강화에 시너지 효과 창출
- 대안적 갈등해결을 통해 주민의 행정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참여도 제고

□ 향후 필요조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검토
 - 재원부담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 및 시·군 담당자 교육 등

협약과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공동협력 강화

□ 협약의 필요성

■ 도와 시·군의 안전관리 협력 필요성 증대

- 재난 위험이 큰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법령과 지침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분담과 상호보완 시스템 구축
 - ※ 지시, 사후관리 차원의 기능을 넘어 사전 예방과 적극적 참여로 시·군 보완성 제고

■ 시·군의 독립적 안전관리 역량 한계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점검과 등급 판정, 관리대책 수립 등의 전문성 부족
- 정보공유,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실질적 행정지원 등 필요

□ 사업의 주요내용

■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객관적 조사와 평가 기준 표준화

- 막연한 육안조사나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조사 기준 마련 (편람 제작 등)

■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관 등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도 차원의 전문기관 육성·발굴 및 점검·진단 시 정보공유

■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 대응 및 시·군 응원 지원

- 긴급 상황 발생 시 각종 장비 인력의 신속한 지원(각종 자원의 풀 관리)

■ 재난안전 대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시·군 공무원 교육 및 민관협력 모델 구축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조사 평가 표준화 •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시스템 구축 •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민관협력 모델 구축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상시 관리 역량 강화 • 시·군별 안전점검 인력 및 장비 정보 공유 협조 • 시·군별 관련단체 및 민간 전문기관 협력 체계 구축 |

□ 재원분담 방안

■ 기존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 활용

- 도 및 시·군의 역할 수행에 따른 재원 부담
- 신규 사업발굴 예산은 필요시 도·시·군에서 협의 분담형태로 부담

□ 기대효과

■ 도와 시·군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예방 차원의 상시 안전관리 실행력 확보로 재난예방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 범 도민 차원의 재난예방 관심도 제고와 선제적 민관협력 모델 창출

□ 향후 필요조치

■ 효율적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 방안 의견 수렴

- 도-시·군 의견 수렴 및 역할 정립 모색
- 공무원, 전문가, 협력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 인력·장비 등의 공동 활용 방안 모색

- 도-시·군의 전문가, 기관단체 및 민간보유장비 등 전수조사 발굴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모색

- 객관적 조사와 평가 기준 표준화 및 협력
-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재난안전 대응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발굴

- 시·군 공무원 교육 및 민관협력 모델 구축

협약과제 **충남형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관계 구축**

□ 협약의 필요성

- 2013년부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안전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 시·군이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자칫 형식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그칠 수 있음
- 이에, 실질적인 시민체감형 안전문화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충남형 안전문화운동 실행모델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함

□ 사업의 주요내용

- 매년 시·군별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운동 실행모델 선정 및 배포
-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근거 마련(道 조례 제정 등)
- 충남형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시·군 매칭)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정착된 안전문화 정책을 발굴하여 충남형 안전문화 정책으로 선정 및 확산 ·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근거 마련(조례 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 · 시·군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및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안전문화 확산 · 생애주기별 시민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 **재원분담 방안**

- 충남형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시·군 매칭)

□ **기대효과**

- 충남형 공통된 안전문화운동 실행으로 도민안전의식 제고
⇒ 안전한 충남도 조성으로 살기 좋은 행복 충남 구현

□ **향후 필요조치**

- 충남형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작성 등
(각종 사건 사고 자료, 충남경찰청, 도 소방본부자료 활용)

협약과제

효율적인 주민자치(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정립

□ 협약의 필요성

- 자문·견인 역할 할 주민자치(마을사업) 집중 육성 지원
- 매년 신규 주민자치(마을사업) 발굴 축소
⇒ 주민이 주민자치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능력(역할)부족

□ 사업의 주요내용

- 주민자치 주체로 자리매김 할 때까지
 - 주민자치(마을사업) 지속 컨설팅 등 지원
 - 예산 지원(도-시·군 매칭)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 충남형 동네자치 원칙과 역할 정립 등 지침 마련 |
| 시·군 | ·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현장 지원 시 |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자치공동체 육성
- 행정기관 대신 자문 역할 가능

협약과제

소방업무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협약의 필요성**

- 소방 조직의 경우 도 소속 업무로 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 시 시·군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 외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군의 현장에서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매년 발생 시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협조를 받고는 있는 실정임
-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현장에서의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도의 자원이지만 일부 업무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사업의 주요내용**

-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무 중 지원, 협조가 필요한 사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구제역 발생 시 도소방조직의 시·군 급수 지원
 - 산불 집중기간 중 산불 예방활동을 위한 예찰활동 등에 의용소방대 활용 및 지휘근거 시장·군수에게 부여
 - ※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비, 의용소방대 보수비, 의용소방대 연합회운영비, 출동수당 등 일부 시·군비 부담
- 재난상황 외에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및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 가뭄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장비 및 인력 협조
 - 특정업무수행(각종 훈련 및 캠페인, 기타 예방활동, 각종 지역행사 등)시 장비 및 인력 협조

□ **현행 운영사례**

- 구제역 발생 시 급수 지원을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진행되고 있어 담당자 간 불만 발생
 - 일부 경비 시에서 부담(재료비(물), 유류비)
- 각종 훈련 및 지역행사 등에 시·군 소방조직의 인력 및 자원협조 유기적 활용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 지원, 협조 사무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계 근거 마련 |
| 시·군 | · 지원, 협조가 필요한 사무에 대한 적극적 운영 |

□ 재원분담 방안

- 협조사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경비 지원

□ 기대효과

- 소방행정에 대한 지속적 동반자적 협력체계로 살기 좋은 지역건설
- 각종 재난상황 대처 및 예방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마련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협약과제

충남관광 선진화 전략

□ **협약의 필요성**

- 관광은 “굴뚝없는 공장” 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도 고용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사업임
- 관광사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 이라고 하여 외화획득의 효율적인 수단이나 충남의 관광산업 현실은 수도권과의 거리 접근성 및 인근 청주공항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요우커(중국관광객)들을 수도권이나 서울로 뺏기는 현실임
- 충청남도 역시 관광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주시하고 15개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자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 아직 시·군과 현장에서의 체감도 미흡, 지역 내 관광 인프라 시설 부족 등으로 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 곤란과 성과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충남 15개 시·군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충남 관광의 새로운 비전과 리노베이션 실천전략이 절실한 시점임

□ **사업의 주요내용**

- 관광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소재를 발굴하여 특화상품으로 판매
 - DB구축과 가이드북 제작을 기반으로 경쟁력있는 대표 스토리텔링 상품개발
 - 체험관광이 가능한 상품을 스토리텔링하여 발굴·전개
- 외국인 관광객 언어소통 불편해소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 도 내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원 육성
 - 관광관련학과 대학생 대상 외국어교육 실시(영,중,일어)
-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판로개척
 - 충남도 15개 시·군과 우호협력을 맺은 중국 내 도시를 우선으로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진행
 - 일정조건 충족시 (예)유료관광지 2개이상 관람, 1박이상 숙박 등)인센티브 제공 및 관광지 요금 할인제도 시행 활성화

■ 충남도 내 관광지를 하나로 연계하여 전국 대상 홍보체계 구축

- 온·오프라인 쌍방향 홍보수단 활용, 도 내 관광자원 홍보활동 전개
- 도 내 우수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 관광의 환류체계 강화

-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과 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관광선진화 실천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전개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대표관광 콘텐츠 발굴 및 역량 강화 지원(행·재정) · 관광산업 체질강화를 위한 인프라시설 구축 · 관광산업 인식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관광선진화 범도민적 실천운동 전개 · 외국인 관광객 언어소통 불편개선을 위한 통역가이드 육성 · 관광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검토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스토리텔링 발굴육성(행·재정지원) · 관내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결, 시·군별 개별 관광상품 구성 · 관광자원과 주변 관광관련 사업(숙박, 식당 등) 간 연계 강화 ·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관광종사원 대상 ‘손님맞이 서비스 교육’ 실시 |

□ 기대효과

-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대표 관광상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체계 구축
- 지역 주민대상 관광 선진화 범도민적 실천운동 전개로 친절한 충남,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 낙후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증대 및 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구축
- 다양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판로시장 개척을 통하여 늘어난 관광수입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향후 조치

- 협약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 도 주도의 관광 선진화 범도민적 실천운동 전개
-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원 교육 프로그램 개설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 및 시·군 담당자 교육

협약과제

농특산물 수요처 발굴 지원 체계 구축

□ 협약의 필요성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안정적인 유통 판로 개척
- 도 - 시·군 업무협약으로 농특산물 수요처 현황 확보·보급
- 대량 소비처인 도내 기업의 급식식당 및 각종행사(예. 김장담그기)에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농업경쟁력 확보

□ 사업의 주요내용

- 급식식당 및 행사시 농특산물 납품을 위해 시·군 우수 농특산물 공급-소비 시스템 구축 협약
- 홍보비 예산 지원(도-시·군 매칭)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농산물 인증 지침 마련 · 도내 수요처와 특산물 현황 및 실적 총괄 관리 ·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기여 기업이미지 홍보 지원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우수 농특산물 발굴 및 육성 협력 · 기업 특성에 적합한 농특산물 소비 수요 파악 ·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 구축 |

□ 재원분담 방안

■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홍보 예산 지원 <도와 시·군 매칭>

- 지역 농산물 및 기업 홍보 지원

■ 2015년 예산 부담계획

| | |
|-----|--------------------|
| 사업비 | ■ 도, 시·군 부담비율(5:5) |
|-----|--------------------|

□ 기대효과

- 주요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여 시·군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충남 지역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
-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의 대표성 확보 및 인지도 증가
- 농특산물 소비 확대 및 판매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실현

□ 향후 필요조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 서는 기업이미지 홍보 방안 협의
 - 재원부담을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 및 시·군 담당자 교육 등



협약과제

지역특성에 맞는 광역-지자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 협약의 필요성

- 대산석유화학단지는 3대 석유화학단지로서, 입지 주변의 주민들은 화재발생 · 석유누출 · 토양오염의 가능성과 인명 · 재산 피해 노출
 - 석유화학단지는 지역기피 시설로서 지역주민 갈등과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
 - 대산5사의 국세납부액에 비해 지방세 비율*은 1%가 안 되며,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
 - * 2013년 대산5사 국세 3.68조, 지방세 283억원 납부(0.77%)
- ⇒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제정 및 제도 마련 필요

□ 그동안 실태(문제점 등)

<서산시>

- 서산시-전남 여수시-울산 남구 공동노력 및 공동건의('14.3.27)
- 충남도 및 국회의원 건의('14.7.11/9.4)
- 새누리 지방자치안전위원회 건의('14.11.24)

<전남도, 여수시>

- 석유화학 국가산단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13.7.16)
 - * 김선동 국회의원 외 5인, 대립참사 대책위 공동주최
- 김선동 국회의원 특별법안 발의('14.4), 전남도 별도 특별법* 의원발의 추진
 - * 김선동 의원 발의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 도 차원의 특별법 발의 추진('15.3.19)

<울산광역시>

-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14.10.)
 - ⇒ 광역지자체, 지자체, 국회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파급력 있는 공동노력 필요
 - ⇒ 단순 건의 보다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자문 및 연구에 의한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한 필요성 피력

□ 사업의 주요내용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노력 및 논리 개발

*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 신설, 지자체 지원시책 수립·시행

- 지방교부세 배분공식 수정, 주형세 10%귀속, 석유화학단지 국고보조사업 신설 등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자체, 지자체, 국회의원, 전문가 등 포함 · 석유화학산단으로 인한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영향 공동연구 ·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공동워크숍 개최 등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산단입주기업과 유대성 강화 및 연계사업 발굴 · 지자체와 입주기업, 산단지역발전방안 공동수립 · 산단입주기업 애로사항, 규제 등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 등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 국회토론회 등을 통한 특별법 제정 이슈화 · 전문가 : 연구 자문 및 참여 |

□ 기대효과

- 광역지자체 차원의 공동협력으로 응집력 및 대응력 강화
- 객관적 자료에 의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논리강화

협약과제

가로림만 지역개발 및 보존 대응체계 확립

□ 협약의 필요성

-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 반려('14.10.6), 가로림 조력발전 전기사업 허가 준비기간 연장(' 14.12.8.)으로 사업 장기간 표류
 - ⇒ 지자체(서산·태안) 주민(찬성측·반대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필요
 - ⇒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그동안 실태(문제점 등)

- 사업의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 조력발전사업 동향에 따라 소모적 논쟁 지속
- 첨예한 사업 찬·반 대립양상으로 행정(도·지자체)에서도 소극 대처

□ 사업의 주요내용

- 충청남도, 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가칭)가로림만 지역 개발 및 보존협의체* 구성
 - * 보존협의체 : 시·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조율·통합하고, 합의사항 도출
- 조력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 을 도입하여 발전계획 수립
 - * 플래닝기법 : 사업 무산·정상화 2가지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 ⇒ 가로림 지역개발 및 보존을 위한 컨트롤 타워 협의체 구성으로 난관 극복 필요한 시기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림만 지역개발 및 보존 협의체 구성 및 전담부서 지정 · 토론, 의견조율을 통한 합의사항 도출 · 가로림만 지역개발 및 보존 중장기 시나리오별 전략적 발전계획 수립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합의사항 적극적 수용 · 시나리오별 전략적 발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등 개최 및 주민 소득사업 발굴 추진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 발전계획 수립 자문 및 연구 · 지역주민 : 소모적 논쟁 최소화 노력(공동담화문 발표) 등 |

□ 기대효과

-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조력발전 사업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가로림 중장기 발전추진 가능

협약과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간 재정 지원 제도 개선

□ 협약의 필요성

- 道와 道교육청의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교육기관 재정지원 방식 개선
- 道 교육청, 道와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적이고 경합적인 교육투자의 비효율성 제거

□ 사업의 주요내용

- 道와 道 교육청간 업무협약(협력)에 따른 교육기관 재정 지원 사업 추진시 시·군 협의 없이 일괄지원으로 시·군에서는 매칭(대응투자)계획에 시·군 재정 부담
- 교육기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법(부담)등 사전 협의
 - ※ 시·군특성을 반영한 사업, 재정 지원방식 등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 道(교육청)의 교육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방식(부담) 가이드라인 제시 · 가이드라인에 시·군 특성과 재정 여건 반영 |
| 시·군 | · 교육기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법(부담)등 사전 협의에 대한 교육사업 지원 |

□ 기대효과

- 道(교육청) 지원사업에 대한 시·군의 공유(검토)로 교육지원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

□ 향후 필요조치

-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의 계획·편성과 관리 운영의 통합적 운영

협약과제

경관위원회 도-시·군간 통합운영

□ **협약의 필요성**

- 시·군 경관관련 전문 인력 구성의 애로사항 해소
- 충청남도 경관관리의 일원화 방안 마련

□ **사업의 주요내용**

- 도내 경관위원 통합 인력풀 구성
- 시·군별 경관위원회 분과 구성(도-시·군 추천)
- 도는 경관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해당 시·군이 위원회 운영비(참석수당 등) 지급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 경관위원회 통합운영에 필요한 시·군별 분과위원회 구성 |
| 시·군 | ·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 시·군별 해당 분과위원회 운영비 지급 |

□ **기대효과**

- 도 경관위원회 통합관리로 경관위원회 인력풀을 구성하기 힘든 시·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통일된 충남형 경관관리 실현

□ **향후 필요조치**

- 도-시·군 경관위원회 50%내 추천에 의한 구성

협약과제

충청남도 관광자원 스마트 홍보

□ 협약의 필요성

- “충남”이라는 공통된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관광자원의 개방·공유
-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지나가는 지역으로 인식 “머무르고 싶은 충남”으로 변화 시도 필요

□ 사업의 주요내용

- 충남도의 관광명소(Land mark)를 선정하여 시·군 경계없이 홍보 및 안내
 - 충남관광지 안내 표지판 시·군 경계없이 설치
- 배낭여행객의 증가에 따라 매력적인 관광지로 어필될 수 있도록 QR코드/NFC 태그 설치를 통한 여행정보 제공
 - 대중교통 정보 및 여행지 주변의 게스트하우스, 지역맛집 등
-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에 QR코드/NFC 태그 설치
 - 다양한 언어로 스토리를 전하여 관광지의 이해도 증진
(개별 배낭여행객의 경우 가이드부재에 따라 관광지의 이해가 어려움)
- 시·군 관광안내지도 작성의 통일화
 - 앞면은 충남도 전체지도, 뒷면은 해당 시·군의 관광지도 등
- QR코드, NFC 태그, 충남여행 앱 개발 등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정보제공
 - 명소, 모범음식점, 숙박시설, 기차역 등에 관광안내도와 병행설치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판의 공공디자인 도안 및 제작 • 충남관광명소 QR코드, NFC 태그, 앱 개발 등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의 주요 랜드마크 선정 및 관광지 내용제공 • QR코드, NFC 태그 설치장소 협조 등 |

□ 기대효과

- 개방형 스마트 관광안내를 통해 시·군 통합형 여행상품 개발 등 충남도 관광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 지역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방안 마련
- 관광자원의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향후조치

- QR코드, NFC 태그에 기재 될 내용 협의 및 담당자 연찬
- 관광안내도 내용기재 및 문화재 설명자료 제공
- 시·군의 관광자원 공유 및 지역의 주요축제 연계 상품개발



협약과제

비문해·저학력 문해교육으로 교육복지 실현

□ 협약의 필요성

- 정규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의 저학력 성인이 우리지역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은 한글 깨우치기 부터 초등학력 졸업인정까지 교육을 갈망함(배움의 끝은 없다)
- 보통 40세 이상의 성인으로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 충청남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교육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교육욕구를 채우고자 함
- 이에, 초등학력 인정 체계가 잡힌 도교육청과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도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초등학력인정 교육을 기획,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자 함

□ 사업의 주요내용

-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교육 지정 신청
 - 도교육청의 공고에 따라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기관으로 신청 및 지정 확정(도교육감 지정)
-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교육 교사(강사) 섭외 및 계약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연수(교육연수이수자)에 한하여 교사로 섭외, 개별 강사계약 실시
-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교육 운영(3년과정)
 - 단계별 운영 : 1단계(초등1~2학년), 2단계(초등3~4학년), 3단계(초등5~6학년)
 - 진입평가를 통해 개인 수준에 맞는 단계 진입 가능
 - ※ 관련 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당진시평생교육조례 제3조, 제4조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p>[충남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p>[충남도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해득교육 기관 지정, 이수자 학력인정 및 평가 · 문자해득교육 교사 연수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해득교육 기관 지정 신청 · 교사 섭외 및 계약, 강사로 지급 등 · 문자해득교육 운영(1단계~3단계/각 1년 과정) |

□ 재원분담 방안

■ 특성화(문해교육) 예산 지원 <도와 시·군 매칭>

■ 2015년 예산 분담계획

| | |
|-----|---|
| 운영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강사 지원 : 강사로 ■ 학습자 지원 : 교육교재 및 현장학습 등 ■ 도, 시·군 부담비율(3:7) |
|-----|---|

－ 사업비: 50,000천원[도15,000천원(30%), 시35,000천원(70%)]

□ 기대효과

■ 관내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수준 높은 학습 기회제공

■ 연 240시간의 꾸준하고 정기적인 교육 운영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정규 교과와 같은 학교활동 실시로 학교생활 경험

■ 2/3 출석자에 한하여 단계별 학력인정 및 최종 이수자 초등학력 인정서 취득으로 개인의 학력신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협약과제

해양오염사고 대비 공동방제 업무 협약

□ 협약의 필요성

- 해양오염사고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인접 시·군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 예찰과 공동방제 필요
- 사고발생 해역과 오염해역이 상이한 경우 등 방제조치 총괄 필요
 - 도 관할 해역에 오염사고 발생시 도지사와 시·군이 공동방제 조치
 - ※ 현행 둘이상 자치단체 피해시 도지사가 방제조치(해양관리법 제68조 제2항)
- 대산항만 구역내 위치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유류오염사고 빈발로 도와 인접 시·군간 공동대응 필요

〈표 2〉 대산항 유류오염사고 현황

| 사고일시 | 위 치 | 원 인 | 피해지역 |
|-----------|----------------|--------------------------|----------------|
| '09.12.21 | 대산항 돌핀부두 | 신양호 중유 5,900ℓ 유출 | 석문면 난지도 전역 |
| '10. 1.15 | 대산항 묘박지 | 유존선-D호 중유 500ℓ 유출 | 서산시 삼길포 해안 |
| '11. 4.29 | 대산항 묘박지 | 신창5호 유성혼합물 83ℓ 유출 | 석문면 소난지도 해안 |
| '13. 4. 8 | 대산항 A-1 묘박지 | 디엘 에메랄드호 연료 436.5ℓ 유출 | 석문면 대난지도 해안 |
| '14.11.27 | 대산항 A-1 묘박지 추정 | 미 상 | 석문면 비경도 해안 |

□ 사업의 주요내용

- 사전예찰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방제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 장비 상시비축 관리
- 지역주민의 해양오염 사전 예찰활동 강화 및 방제 교육 실시
- 예찰활동 경비 및 피해 어업인 배상 비용 마련
 - 대산석유화학단지 5사 기금조성 및 주민예찰 경비 지원 등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사고 방제대책 계획 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 총괄 지휘 · 관할 해역내 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 방제자재 및 방제인력 지원 대책 강구 · 지역주민 자체 예찰활동 등 지원 대책 강구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해역내 오염사고 발생시 도지사와 방제조치 협력 · 해안방제 활동에 소요된 방제비용 청구 · 지역주민 사전 예찰활동 지원 및 방제 교육 실시 |

□ 기대효과

- 도-시·군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 체결로 유류피해 최소화
- 사전 예찰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어장환경, 해양생태계 보호

□ 향후 필요조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 공동방제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재원부담을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협약과제

100세시대!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충남실현

□ 협약의 필요성

- 인구의 고령화로 ‘유병장수 시대’, 건강한 노년은 ‘희망사항’
 - 노후의료비 증가는 가계부담 가중 → 노인빈곤 악순환 되풀이
- 이는 곧 道내 생산성 저하 및 사회적 비용증가로 사회문제 대두
 - 충남도 역점과제인 3대 행복과제의 최우선 선결문제는 주민의 건강
- 선제적인 질병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장년부터 노년까지 주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시·군 통합시스템 구축
 - 일방적인 보건서비스 제공 및 만성질환자 지원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과 질환 전 단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도입필요
- 기존 시·군의 건강관리센터 등을 道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요망
- 道와 시·군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환경여건 개선과 개인의 참여 및 상호협력을 통한 전체적인 주민 건강증진을 지향해야 함

□ 사업의 주요내용

- 주민 평생건강생활 진단 및 개선활동 지원 보건시설 설치
 - 인프라구축, 관련 장비설치, 인력확충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환자 조기검진 등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예방적 차원의 관리프로그램 도입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지원(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도입), 건강체력관리, 건강한 식생활관리 등
- 사회복지 연계 프로그램 도입 및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 사회복지문제해결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원스톱 서비스
 -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등 구성, 자발적인 건강관리 활동이 지속되도록 유도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건강관리 지원조례 제정 · 도민 건강관리 총괄 지원센터 설립 ·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시·군 보급시행 · 건강관리 전문가 인력 양성 및 시·군 지원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주민 홍보 및 교육강화 · 시·군 질병양상 등 분석 특성화된 건강관리 대책 수립시행 · 건강도시를 위한 민간 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 · 청장년에서 노년까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 기대효과

- 충남도의 총괄 지원 및 관리로 보편적인 도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道-시·군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기반구축
- 장기적으로 건강한 도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충남건설 기여

□ 향후 조치

- 道-시·군 협약과제 이행을 위한 제반 근거마련 및 예산확보 필요
 - 道 조례제정 및 시·군 조례개정 및 재원부담 상호협의 등



협약과제

외국인 지원 정보공유 및 지원체계 정립

□ 협약의 필요성

-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사회는 언어와 종교, 피부색의 차이를 넘어 상호 존중하고 포용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
-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도-군간 공동프로그램 개발
- 산업단지 등 개발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좋은 일자리 제공
-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 및 피해 최소화
 - 도내 외국인 3년 동안 70% 증가('11년 44,467명 → '14년 75,438명)

□ 사업의 주요내용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으로 정보공유 및 한국생활정책을 위한 공동체 사업 발굴
- 충남형 외국인 근로자 지원책 실행방안 마련
 - 통역, 법률, 의료 등 유관기관과 사회전반적인 서비스 연계
 - 제조업체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인력정보 제공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타시도 사례 (협약 및 우수사례)

- 경기도 안산시 다문화마을 특구사업
 - 명칭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Ansan Multicultural-Village Special Zone)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79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8년
 -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활성화, 다문화원 건립, 국제다문화심포지엄 개최, 만남의 광장 활성화 등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외국인 지원 원칙과 역할 정립 등 지침 마련 ·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 마련 · 외국인 지원 네트워크 구축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련 각종 지원정책 홍보 · 지역별(시·군별) 외국인 인력현황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외국인을 위한 실질적인 세부지원책 마련 · 외국인 관련 교육 및 행사에 상호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 |

□ 재원분담 방안

■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 예산 지원 <도와 시·군 매칭>

- 도, 시·군 부담비율(5:5)

□ 기대효과

- 외국인 관련 도-시·군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의 틀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 자립 유도
- 도-시·군 간 각국 나라의 지역문화 체험을 통한 장을 마련하여 고향의 그리움 해소

□ 향후 필요조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 공동체 지원을 위한 도, 시·군 자치법규 제·개정(필요시)
 - 재원부담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 및 시·군 담당자 교육 등

협약과제

“ 믿어유 ” 로컬푸드 품질인증 실현

□ 협약의 필요성

■ 확대되는 전국적인 로컬푸드 운동 확산 반영

⇒ 충남도 시·군당 생산자 직판장 1개소 설치계획

■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산물·농식품 안정성 체계화

- 로컬푸드·학교급식의 성공여부 좌우

■ 각 기초자치단체가 품질인증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재정적 부담 해소:약 26억

- 건축시설비(부지매입 포함) 10억
- 기계설비 구입비 14억
- 인건비 6명 × 0.4억 = 연 2.4억

⇒ 충청남도 주도의 로컬푸드 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시 15개 시·군의 예산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

□ 사업의 주요내용

■ 충남형 로컬푸드 인증 참여농가 교육

- 시·군 농업기술센터 새해 영농교육시 충남형 로컬푸드 인증의무 교육 실시
-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출하농가 반드시 사전교육 이수 및 로컬푸드 인증농가 만 참여 가능

■ 충남형 로컬푸드 품질인증 기준 마련

- 저농약수준(GAP 농약안전사용 수준 + 무제초제)

■ 충남도 로컬푸드 품질인증상표 사용 또는 기초자치단체 로컬푸드 품질인증 상표 사용. 예) “믿어유” 로컬푸드 인증상표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 품질인증 센터 설립 및 운영 · 토양·수질·잔류농약 검사(인증기준 마련) · 저농약수준(GAP 수준 및 무제초제)의 검사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급식 참여농가 조직 · 로컬푸드 가공센터 설립 및 참여농가 조직 · 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식품 참여농가 교육 및 컨설팅 |

□ 자원분담 방안

■ 로컬푸드 품질인증 센터 운영(충남도 운영)

- 로컬푸드 참여농가 로컬푸드인증 검사 수수료 감면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충남도에 경작한 농산물에 한함. 50%)

■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 : 시·군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의거 시·군비 부담

□ 기대효과

- 도와 시·군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농·노령농·여성농 중심의 로컬푸드 활성화 촉매역할
- 충남 로컬푸드 활성화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도내 기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여
-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로컬푸드의 영역을 확장해 충남도 3농혁신 정책 안착화 기여

협약과제

충청남도 MICE산업육성 협력

□ 협약의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및 홍성군 인구의 지속적인 내포신도시 이주로 원도심 공동화 심화 및 쇠퇴 가속화
-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원도심 성장권인 동력원 발굴에 한계
- 충청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증가된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관련 회의 및 컨퍼런스 등을 홍성 원도심에 유치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MICE 산업 -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폭넓게 정의한 전시·박람회와 산업을 의미함

□ 사업의 주요내용

- 충청남도의 MICE산업 발전을 위한 아젠다(agenda) 공동 발굴
- 아젠다(agenda)별 하드웨어, 프로그램사업 공동 추진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산업 관련 컨퍼런스, 회의를 홍성읍 원도심에서 연10회 이상개최 (개최 회수 조정가능) · 회의개최시 원도심내 장소·식당 등 이용 · MICE산업인력 채용시 홍성군 출신 우선 고려 |
| 홍성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산업 관련 행사를 유치, 기획, 장소 지원 · MICE산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 육성 및 발굴 · MICE산업 지원센터 설립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 |

□ 재원분담 방안

■ 2015년 예산 분담계획

| | |
|------------|---|
| 교 육 컨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교육) · 공무원의 Mice산업 추진역량 강화(교육) · 도, 시·군 부담비율(5:5) |
| 사업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 산업 지원센터 설립(홍성읍사무소 리모델링) · Mice 기획, 홍보, 운영사업 · 도, 시·군 부담비율(5:5) |

□ 기대효과

- 충청남도과 홍성군의 상호협력 거버넌스 구축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과 홍성군의 상생협력기반 구축
- 홍성군의 신성장 동력원(MICE산업) 발굴

□ 향후 필요조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 공동체 지원을 위한 도, 시·군 자치법규 제·개정(필요시)
 - 재원부담을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 및 시·군 담당자 교육 등

협약과제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도-시·군간 협력 지원체계 정립

□ 협약의 필요성

- 도-시·군간 역할 정립으로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로컬푸드 비중 확대
- 자치공동체가 공공급식을 확대할 최소한의 지원 근거 마련

□ 사업의 주요내용

- 공공급식을 위한 도 지원 조례 제정
- 의료원 등 도내 공공기관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지원
- 공공기관 영양사 또는 총무과와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워크숍 실시

□ 도-시·군 협약사항

| |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원 등 공공급식 활용을 위한 지원조례 마련 · 공공기관 영양사 또는 총무과와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워크숍 실시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공공급식 대상 기관 확대 노력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식재료 공급자는 다양한 품목 확보 및 품질개선 노력 |

□ 기대효과

- 지역 내 고품질 로컬푸드 소비 확대

협약과제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체험 관광

□ **협약의 필요성**

- 세종시의 본격적인 출발과 함께 세종-대전의 도시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관광 정책 필요
- 각 지자체별로 6차 산업 육성, K-FARM 누리사업, 체험마을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개발·운영 중인 콘텐츠를 묶는 새로운 체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로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의 주요내용**

- 지자체별 개발·육성 중인 콘텐츠 조사
 -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군별 콘텐츠 조사
-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 역량강화
 - 교육이나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자의 역량 강화
- 여행사와의 MOU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 별도의 체험테마를 개발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육성중인 체험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콘텐츠로 하여 이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형 체험 관광상품 개발
-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체험형 관광 육성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험관련 콘텐츠 조사 · 각 콘텐츠를 연결하는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 ·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 콘텐츠 운영자 역량 강화 제도 지원(컨설팅, 교육 등)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관광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자 역량 강화 ·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육성 및 사업 추진 |

□ 기대효과

- 도와 시·군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이용하여 별도의 체험 콘텐츠 개발 없이 관광상품 개발 가능
- 관광 활성화로 지자체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조력

□ 향후 필요조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 재원부담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 및 시·군 담당자 교육 등

협약과제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도-시·군 공공갈등 관리 업무 협약

□ **협약의 필요성**

- 종전과 달리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은 단기간에서 장기간으로, 소수에서 다수간으로 확대되면서 집단시위 등의 형태로 표출
 - 갈등으로 인한 공공정책 사업의 지연은 갈등주체들의 소모적 대립 및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
- 또한, 現 갈등의 양상은 지역을 초월하여 다면적이고 매우 복잡
 - 물질적 이해관계 등에 기초하여 지역분열이 심각하게 발생
 -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 생활권이 확대, 시·군단위를 넘어서는 갈등의 광역화 현상이 나타남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도-시·군간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협약의 주요내용**

-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공무원, 외부전문가, 주민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 도와 시·군간 갈등관리 현황의 수시 확인 및 공유
 -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 이행
 - ※ 본청 및 15개 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이행 중
- 주요 갈등현안의 집중관리를 통한 조기 해소
 - 주요 갈등현안 선정, 道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집중관리
 - 도-시·군간 시·군간 민·관간 갈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중립적 갈등관리 기구를 활용한 갈등현안 해결 도모
-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갈등예방과 해결방안을 담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해결 로드맵 구축
 - 관련 정책·법령·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운영

- 공직자 대상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 교육 실시
- 지역주민 등 현장 갈등당사자 중심의 합동세미나 실시
- 갈등 관리방안, 해결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갈등관리 종합 DB 구축 운영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 도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 관리 기구의 도입 및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운영 • 각 시·군의 갈등현황의 관리 및 충남도 중요 갈등현안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해결 로드맵을 통한 갈등 해소 방안 마련 • 공공갈등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 교육 실시 및 전문가 지원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조례 개정) • 지역특성·여건에 맞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갈등관리 종합 DB 구축을 위한 사례 공유 • 갈등관리 예방·해소를 통한 사회적 성과 창출 |

□ 기대효과

- 도와 시·군간 갈등관리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공갈등의 사전예방 및 조기 해소 도모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성화로 공공갈등을 공론화 하고 갈등의 유형 및 실태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
-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향후 필요조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도, 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필요시)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

■ 갈등관리 종합 DB 구축을 위한 갈등 현황 및 해결 사례 공유

■ 도, 시·군 공직자 및 주민대상 공공갈등 관리 교육 실시

《공공갈등 해결 위한 원칙》

- ① 집단적, 고착화된 갈등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 접근
- ② 갈등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 ③ 장기적 관점에서 갈등해소 노력
- ④ 언론의 역할 제고
- ⑤ 주민 의사를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 ⑥ 잠재적인 갈등에 대한 예방과 대비

협약과제

대규모 산업단지 환경관리 방안

□ 협약의 필요성(郡 현황)

- 최근 화력발전, 제철,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관련 환경문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군) 서부 화력발전 및 서산시 대산읍 소재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관련한 대기오염·악취 관련 인접지역(원북·이원)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군에서는 ‘14년 하반기부터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는 1종 사업장으로 충남도에서 관리(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입지 외 지역 시·군 주민들은 환경 피해 민원을 지역 시·군에 제기
 - 「관리주체」, 「산업단지 입지 시·군」, 「주변 피해 시·군」이 서로 상이하여 환경 민원 분쟁 시 조치할 수 있는 역할이 불명확함

⇒ 충남도의 2개 이상 시·군간 연계된 환경피해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시·군 단일 지자체로는 환경민원을 대응(해결)하는데 한계, “충남도 주도적 관리” 필요

□ 사업의 주요내용

- 인접 지역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실시, 측정결과 변화추이 분석
 - 측정항목 및 검사주기 : O₃, CO, SO₂, NO₂, PM₁₀, 4회/년
- 인근 시·군과 ‘민&관&기업’ 협의체 구성
 - 시·군 추천 → 도+ 주민 + 시·군 합동조사
- 대기오염, 악취관련 환경조사 용역실시
 - 용역조사 결과에 따른 원인, 방지대책 계획수립
- 시·군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대기오염 모니터링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 산업단지 배출사업장 자체 환경개선 방안 마련 제시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시·군간 주민협의회 구성(만·관 협의기구) 계획 수립 ·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협약 체결 · 환경영향조사 용역 재원마련 · 기업체에 환경기술 지원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 · 대기오염, 악취 관련 주민자치 역할 강화를 위한 시·군 지역주민 교육 및 자료준비 · 자체환경개선 방안 마련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대기질 현황 실태조사 · 대기오염 상시모니터링 실시 및 자치역량조사 참여 · 주민 환경의식 교육(영농교육 등 활용) |

□ 기대효과

- 도 & 시·군 & 주민과의 환경 파트너십 구축
- 도와 시·군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기오염, 악취민원 불편해소와 기업의 환경오염 저감대책 점진적 추진계기 마련
- 기업과 주민사회와의 상호 신뢰성 회복

□ 향후 필요조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 공동체 지원을 위한 도, 시·군 자치법규 제·개정(필요시)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 및 시·군 담당자 교육 등
- 도 주관 대규모 산업단지 관련업체 수시 지도·점검

협약과제

정부예산 공모사업 협력체계 구축 (기획감사실)

□ 협약의 필요성

■ 정부 공모사업의 수가 2004년 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에 한계

- 지자체 간 초 경쟁체제 및 중앙정부의 요구수준 향상
-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부족 및 우선순위 설정 어려움 등

□ 사업의 주요내용

■ 정부 업무보고 등 정책방향 분석으로 차별화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 필요

- 연초 공모사업 등 국가사업 정책분석을 통한 로드맵 제시

■ 공모서는 단순 계획서가 아닌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등 학술 용역 수준의 계획서를 요구

- 전문기관 용역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필요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정보조사 자료 공유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 모니터링(중앙부처, 산하기관, 도 자체 공모 등) – 모니터링 자료 분석 및 시·군 전파(충북도 사례 참고) · 유관·전문기관 협력 라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연구원, 대학, 기업, 전문가 그룹 등 · 지역 국회의원 등 정부부처 설득력 강화 지원 · 공모사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교육 실시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특색있는 지역사업 발굴 · 계획수립 ⇨ 계획집행 및 사업관리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등 추진체계 구축 (주민참여확대, 사업실현성 제고, 사업성과관리 및 확산 등) · 기여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부여 관리 |

□ 재원분담 방안

- 공모사업 전문기관 용역비 매칭 지원 : 도 70% , 시·군 30%
- 공모사업 총괄계획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시·군 배치 : 도 50%, 시·군 50%
- 충남연구원 내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및 연구인력 확충
 - 충남연구원의 도 출연금 확대

□ 기대효과

- 지자체의 경쟁력, 자생력 강화 및 각종 지역 현안사업 해결 가능
- 공모사업을 통한 주민 의식변화 및 역량강화
- 열악한 지방재정의 보완 및 지역 특화발전 도모
- 지역 인프라 확충과 주민 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향후 필요조치

- 협약내용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임기제 공무원 배치 등을 위한 도, 시·군 자치법규 제·개정(필요시)
 - 재원분담 사항에 대한 상호 협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 및 시·군 담당자 교육 등

참고 : 충북도 사례

- ❖ 충북발전연구원(충북미래기획센터) : 정부·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충북 현안과 관련된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의 공모사업·정책연구 현황정보) 조사 제공(주보)
⇒ 관련 부서의 시기 적절한 대응 및 추진방향 설정 도움

협약과제

관광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발전체계 구축 (관광진흥과)

□ 협약의 필요성

- 충청남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2시간), 안면도-보령 간 연륙교 개통 등을 앞두고 관광객 유인 여건이 한층 더 높아짐.
- 또한 중국 여객선 항로 취항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소비는 숙박비, 음식비, 오락비 등 다양한 형태로 지출, 지역 소득증대 및 관광 경제 활성화 기대
- 하지만 관광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광산업 체계적 육성 곤란
⇒ 관광 여건을 활용한 도차원의 체계적인 관광 기반 구축이 절실

□ 사업의 주요내용

- ① 특성 있는 지역 축제를 발굴·육성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② 시·군의 지역 농·특산물 공동 유통망 형성 ⇒ 농산물 판로 개척
- ③ 중국 여객선 취항 이후 외국인 관광객 불편해소(언어소통 등)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 외국어 가능 문화관광 해설사 모집 및 육성
 - 결혼 이주 여성들을 관광통역 안내원으로 육성
- ④ 충청남도 시티투어 상품 개발
 - 전 시·군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 온·오프라인 쌍방향 홍보수단을 활용, 전국단위 홍보체계 구축
- ⑤ 충청남도 관광박람회 개최
 - 전국 주요도시를 찾다니며 도내 우수관광지를 홍보하는 박람회 개최

□ 도-시·군 협약사항

| 구 분 | 협약 사항(역할)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축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 외국인 관광객 언어소통 불편해소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 시티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박람회 개최 추진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 있는 지역 축제 발굴 및 육성 · 외국인 관광객 언어소통 불편해소를 위한 인적자원 모집 · 관광박람회 적극 참여 및 지원 |

□ 기대효과

- 도내 전 시·군의 고른 균형 발전 도모
- 태안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대표 축제 발굴 및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체계 구축
-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

□ 향후 필요조치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충청남도+시·군 TF팀 구성 운영
 - TF팀 구성을 통해 향후 추진방안 등 협약사항의 구체화

부록 4 : 도-시·군 간 협약과제 발굴

1. 충남형 동네자치 실현

1) 사업의 주요 현황

■ 충청남도는 민선 5기부터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동네자치 뿌리내리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함께하는 행복한 동네자치” 라는 비전을 세우고 다양한 제도적 실험을 모색하고 있음

■ 2014년에는 주민 자치의식 향상과 자치공동체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자치 교육」 및 「시범공동체 육성」 등 추진

- 주민자치 교육 : 계획 3,320명 / 실적 3,865명(116%)
- 시범공동체 육성 : 11개소(읍면동 7, 마을 2, 아파트 2)

■ 성과 및 아쉬움

| | |
|-----|---|
| 성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 제고, 확산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주민자치 예산 확보('15년) : 8개 시·군 118백만원 ○ 느리지만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보임 |
| 아쉬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교육 및 시범사업, 희망마을 등 자치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성과 도출이나 지원 단절될 경우 지속하려는 노력 부족 |

한계점

- 정부 사업계획(공모)에 의한 하향식 사업추진 → 현장반영 無
- 공무원에 의존한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 → 자립 어려움
- 마을사업 기획, 집행, 네트워크 주도할 인재 부족 및 주민참여 미흡

■ 민선6기 동안에는 주민이 주도하는 충남형 동네자치를 통해 삶터, 일터, 쉼터가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자치공동체 100개소 조성

■ 2015년 추진계획

〈2015년 핵심과제〉

- 자치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동가 육성 지원(15개소, 30명)
- 충남형 동네자치 모델 시범적용(주민자치회, 마을자치 구분)

〈추진체계 및 역할〉



| | |
|--------------|---|
| 道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자치 역할정립 등 제도마련 지원 ▶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시범적용안 마련 ▶ 자치공동체 조성 지원 (권역별 활동가 양성지원 등) |
| 시·군 (읍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조사 참여, 현장활동가 발굴 지원 ▶ 주민자치회 모델 시범적용·시행 ▶ 공동체 자율육성 위한 행·재정적 지원 |
| 활동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주민자치·마을리더 코디, 중간지원 역할 ▶ (현장) 주민과 함께 공동체 만들기 활동 |

(1) 마을 자치역량조사

- 마을 자치역량 DB 구축을 통해 맞춤형 동네자치 정책 추진
- 역량있는 활동가 및 충남형 동네자치 모델(유형) 병행 조사
 - 시민사회 기초조사 등 활동가 네트워크가 있는 전문가 활용
- 조사내용

| 구 분 | 조 사 항 목 |
|-----|---|
| 읍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장 관심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 ▶ 자치역량 수준, 공공성과 전문성 등 ▶ 성과평가(자치역량 향상 기여도에 가장 핵심적인 기준) |
| 마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 역량, 마을 내 공공시설 및 공공프로그램 운영실태 ▶ 문화 및 전통, 마을의 사회경제적 이슈(개발, 환경, 소득 등) ▶ 마을의 네트워크 자원 측정(마을회의, 상조회 등) ▶ 의사소통체계, 주민참여도 등 28개 항목의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

• 결과분석

- 지속발전 가능성, 주민자치 역량사업
- 리더십 훈련 및 성장, 사업적 성과 및 수혜
- 외부 지원 체계와 소통정도 등

⇒ 자치공동체 선정 및 동네자치 모델(유형) 개발자료로 활용

(2) 주민자치 활동가 발굴 및 육성 지원

-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로서 활용 가능한 인력(활동가) 발굴
- 활동가의 리더십, 회의·소통능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

① 주민자치 활동가 발굴

- 방법 : 마을자치 역량조사와 병행(조사평가표 작성)
 - 활동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전문가 활용
 - 전문 활동가 및 시·군(읍면동) 추천에 의한 발굴
 - 역량조사 중 읍면동 및 마을단위 현장 활동가 발굴 등
- 인원 : 30명 이상(시·군별 2명 이상)
 - 공동체 가치실현, 자기희생이 강하고 관 의존성이 낮은 자
- 발굴 후속조치
 - 마을 자치역량 조사 참여,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역량 교육)
 - 공공성(가치)있는 사업 발굴 및 주민 참여 유도 등

② 주민자치 활동가 육성 지원

- (네트워크) 스스로 모여 토론 및 대화, 학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
 - 권역별 리더 활동가 및 마을·활동가별 자유평모임 유도

(3) 자치공동체 자율 육성·지원

■ 지역별 자유평모임을 통해 마을발전 토론의 장 마련 지원

■ 자치공동체 육성을 위한 활동가(리더) 요구 시 긍정적 검토·지원

- 선정방법 : 현장 활동가 + 시·군 협의 선정
 - 주민주도 환경 조성 및 자율성 부여, 행정기관 관여 최소화
 - 조사평가표에 의한 선정(전문활동가 + 도·시·군 공무원 합동)
- 사업지원 : 자치공동체 요구 시 긍정적 검토, 지원

《 기 본 원 칙 》

- ❖ 공공성(가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조달 원칙’
 - 마중물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보조금) 지원

(4) 충남형 동네자치 모델(유형) 연구·시범적용

■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속 확산 가능한 동네자치 모델 연구

■ 주민자치 관련 법규 등 제도정비 병행을 통한 실행력 제고

- 동네자치 모델 연구팀 구성·운영
 - 분권협의회 주민자치분과 중심 연구팀 구성(5~7명)
 - 유형발굴, 지방자치법 개정안, 표준조례안 등 제도개선안 마련
- 공동체 유형분석을 통한 충남형 동네자치 모델 개발
 - 유형별 특성·발전가능성 등 분석, 확산 가능한 모델 제시
- 제시된 모델(유형)을 15개 자치공동체에 시범적용 유도
 - 시·군(읍·면·동), 주민자치회(마을)와 협의 추진

(5) 주민자치 아카데미 지속 운영

■ 주민자치 수준에 맞는 다양하고 반복적인 현장중심의 교육

- 주민대상 교육과정(총 8개 과정 1,900명)

| 연번 | 과정명 | 대상 | 인원 |
|----|----------------------|-------------------|--------|
| | 8개 과정 | | 1,900명 |
| 1 | (기초)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 6개 시·군 | 900명 |
| 2 | (기초)찾아가는 주민자치 배달강좌 | 희망 읍면동 | 200명 |
| 3 | (심화)읍면동 주민자치 방문교육 | 15개 읍면동 | 300명 |
| 5 | (심화)읍면동 리더 양성 워크숍 | 읍면동 방문교육 중 발굴된 리더 | 30명 |
| 4 | (전문)우리동네 주민자치 전문가 과정 | 주민자치 리더 | 20명 |
| 6 | (실무)예산회계 실무과정 |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 250명 |
| 7 | (소통)주민자치포럼 | 주민자치 활동가 | 100명 |
| 8 | (소통)주민자치 워크숍 |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 100명 |

- 공무원대상 : 900명

| 연번 | 과 정 명 | 대 상 | 인원 |
|----|--------------|------------------|------|
| | 2개 과정 | | 900명 |
| 1 | 공무원 교육원 연계과정 | 주민자치과정, 신규공무원 | 630명 |
| 2 | 시·군 순회 교육 | 시·군(읍면동) 주민자치담당자 | 270명 |

2) 협약의 필요성

■ 지방자치 출범 20년과 지속적 발전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취약한 지방재정, 지역주민의 참여 미흡, 자치의식 결여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음
-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 다양한 행태의 지방정부의 운영 방식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등이 필요함
- 최근 사회운동, 국제기구, 학계, 지자체의 관심은 일터, 삶터, 쉼터로 복지,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작은정부의 출발점으로 동네(마을)가 중요함

■ 제도적 시스템 필요

- 동네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역량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함
- 그러나, 도 주도의 동네자치 사업추진으로 인해 자치공동체 지원 주체로서의 시·군의 역할이 불명확(미약)하고, 중앙정부 시범사업 위주 자치공동체 육성은 동네자치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필요

- 도와 시·군, 지역주민의 체계적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자율 공동체 육성·지원 등으로 동네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함

3) 도-시·군의 역할과 기능

① 도의 역할과 기능

■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방향 제시, 동네자치 모델 유형화

-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모델 유형화 및 검토를 통하여 제도 도입에 필요한 공감대 형성

■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준비

-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주민의견 조사등을 통한 지역주민 협의 필요
-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제도 및 기준 마련

■ 주민자치 활동가 및 자치공동체 발굴(육성) 시스템 구축

- 주민들의 근접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생조직과 단체들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자치 활동가 및 자치공동체 발굴 시스템 마련

■ 주민자치 역량 강화 제도 지원(컨설팅, 교육 등)

- 주민자치의 시범단계에서 실무단계로 전환 필요
-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의식 고취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필요

② 시·군의 역할과 기능

■ 활동가, 자치공동체 육성 협력

- 지역주민의 소속감을 통한 자발적인 노력 증대
- 소극적·제한적 참여 탈피를 위한 자치공동체 육성 방안 협력

■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방안 마련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민·관협력 소규모 포럼, 주민 위주의 대화의 장 마련 등 특성에 맞는 참여 확대방안 마련
- 사전홍보를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 강화

- 주민의 자치이해도와 자치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상황임
- 대학,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아카데미, 컨설팅 공동실시

- 주민자치의 개혁과 문제해결을 위한 통로 활용
-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컨설팅 실시

4) 필요 및 조치사항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 공동체 지원을 위한 도, 시·군 자치법규 제·개정
- 동네자치 시범사업에 대한 재원부담 상호 협의(민선6기 100개소)

| | |
|-------------------|--|
| 교육 컨설팅 지원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리더) 요구 시 긍정적 검토, 지원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현장견학, 전문가 컨설팅 등 ■ 필요시 기초, 전문, 심화과정 구분 지원 ■ 도, 시·군 부담비율 : ' 16년(5:5), ' 17년 이후(3:7) |
| 사업비 지원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조달 원칙, 주민제안사업 중 공공성 사업 우선 지원 ■ 자체 재원으로 사업추진 후 확대가 필요한 사업 中 마중물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 지원 ■ 도, 시·군 부담비율 : ' 16년(5:5), ' 17년 이후(3:7) |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 및 시·군 담당자 교육 등
- 민 주도형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방안 마련

■ 지역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둔 주민참여의 제고

- 상호간에 사회적, 심리적 유대를 가질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필요함
- 이러한 지역공동체는 협력적인 활동을 조장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자원으로 볼 수 있음
- 지역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의무감, 사회적 기대감을 지향하는 주민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 강화 필요

5) 기대효과

■ 주민참여 활성화 기대

- 도와 시·군, 지역주민의 체계적 협력시스템 구축
- 이를 통한 주민 중심의 자율 공동체 육성·지원 등으로 동네자치 활성화에 기여

■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 동네자치 활성화를 통해 귀농·귀촌 등 전입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용
-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발생

■ 참여와 소통 증대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유대형성 및 집합적 역량강화
- 지역공동체에 애착을 갖고, 이에 헌신할 수 있는 주민의식 고양
- 민선 6기내 지속가능한 공동체 100개소를 육성, 확산시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좋은 충남형 동네자치 실현 가능

6) 협약사항

| 구 분 | 협 약 내 용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방향 제시, 동네자치 모델 유형화 ◦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준비 ◦ 주민자치 활동가 및 자치공동체 발굴(육성) 시스템 구축 ◦ 주민자치 역량 강화 제도 지원(컨설팅, 교육 등)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역량조사 참여 및 활동가, 자치공동체 육성 협력 ◦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방안 마련 ◦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 강화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아카데미, 컨설팅 공동실시 |

도-시·군 협약과제 인터뷰 참고자료(시·군의견)

① 충남형 동네자치 실현

| 시·군 | 검 토 의 견 |
|-----|---|
| 천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자발성과 참여에 기반한 주민자치 확산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 확립을 위해 읍·면·동-시·군-도 단위로 각각의 역할과 협업체계 구축 필요 ○ 재정투자 중심의 방식보다 사람과 일의 발굴을 통해 지역공동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세밀한 기획을 수립 추진 요망 |
| 공주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수당은 시·군에서는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도에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보령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보령시 간 체계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로 간 역할정립을 명확히 하여 도와 협력을 통해 충남형 동네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 아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적 동기부여로 인한 동네자치 만들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동네자치 실현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 관계공무원,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동네자치 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후 자생적 동기부여로 인한 동네자치 만들기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도-시·군간 역할정립으로 효율적인 자치공동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주도의 동네자치 추진 및 현 협약사항만으로는 시·군은 도 주도의 조력자 역할만 할 것이 우려 됨 ○ 동네자치 추진 예산 지원(도-시·군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적 동네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예산지원(역량강화 교육비 및 컨설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서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 계획 및 제도적 장치마련 등과 시민과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군에서 공동체 육성을 협력한다면 주민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충남형 동네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동네자치가 지역별 지자체에 일괄 적용할만한 여건이 될지 판단이 필요함 ○ 주민자치의 개념과 취지에 맞춰 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 | |
|-----|---|
| 논산시 | 의견없음 |
| 계룡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道 주관의 우수동네자치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주민자치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 ○ 시·군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모델 컨설팅 기회제공 |
| 당진시 | 의견없음 |
| 금산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역량 조사시 적극 협조 ○ 재정적 지원은 지양하고 마을의 자립 역량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추진 필요 ○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해 주민자치회 활동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마을 활동가 인력 추가 확대 필요 |
| 부여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주민참여도가 낮고 주민역량 결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전 자치역량조사와 현장방문, 전문가 컨설팅 등이 필요함 |
| 서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자치 활동가 자율모임의 장 마련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 재검토 필요 ○ 농촌형 지자체의 경우 동네자치 활동가와 주민 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과 중복 우려 ○ 공간, 수당, 물품 등 지원에 따른 이해 충돌 발생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신규건립 요구 지역과의 마찰 |
| 청양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는 일터, 삶터, 쉼터가 공존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형태로서 주민자치의 출발점 임은 인지되나, 현재 제도화된 주민자치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주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며, 현재 읍면 단위 에서도 주민자치를 위한 활동가 및 전문가가 부족하며 주민 자치 위원의 역량과 주민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동네자치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현재 상황에서는 도와 연계 또는 사·군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동네자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활동가 및 전문가를 양성한 후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됨 |
| 홍성군 | 의견없음 |
| 예산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각종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성공적인 동네자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

| | |
|------------|---|
| <p>태안군</p> | <p>□ 제도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개폐 여부 결정 ○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표준조례(안)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기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안 구성 ○ 주민자치회 위상 정립으로 금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p>⇒ (발전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선출에 의한 주민자치회 구성 ② 위원들의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 ③ 주민센터 주 이용자인 여성의 참여비율 확대 ④ 자생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p>□ 인력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 활동가 발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의 고령화, 생업 종사 등으로 주민자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부족 - 공무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강화 필요 <p>⇒ (발전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상담(조력)인력의 사군 전담배치로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 기여 <p>□ 재정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활동가의 활동수당 현실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 재정지원 증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p>⇒ (발전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활동가에 대한 활동수당 현실화 ②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도움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처리, 의사결정과정, 협상대화의 기술 등 |
|------------|---|

2. 주민세 주민자치 활용

1) 배경

- 2015년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로 20년이 되가는 뜻깊은 한해임. 이러한 민선자치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성격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 첫째, 주민행복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임
 - 지방자치의 본질적 목표로서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이라는 주민행복의 구현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실천의 원칙으로서의 지방자치임
 - 주민행복의 구현이라는 패러다임이 제도로서 실현되기 보다는 하나의 실천의 원칙으로서 실현되어야 함
 -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는 “주민중심의 생활자치 구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개개인의 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및 읍면동이어야 할 것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 마지막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임
 - 향후 지방자치는 행정환경 및 수요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체제 하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률적인 중앙중심에서 다양성의 지방중심으로, 중앙과 협력을 통한 효율성이 있는 자치로, 공급자 또는 생산자 중심에서 주민 또는 시민 중심의 고객중심이 되어 주민과 협력하는 자치가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환경변화속에서 충청남도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해 주민자치 시범공동체를 선정하여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주민자치 시범공동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읍면동과 마을(동네)을 그 관할 범위로 설정하고 있음. 이는 동네 또는 마을 단위에서 자치의 성과를 고양하고, 주민이 사는 생활공간에서 지방분권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를 함께 담고 있다고 할 것임(동네자치의 추구)

■ 충청남도는 2014년도에 11곳을 동네자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도내 행복 자치공동체 100곳을 조성할 계획임(충남형 동네자치공동체 100곳 육성)

- 이는 자치공동체 회복이 환경, 청소년, 빈부격차, 노인문제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자치공동체 15곳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내 도내 45개 마을에 대한 자치역량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 모델을 개발해 시범 적용할 예정임

■ 그러나 이러한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모델이 취약한 재정여건 때문에 동네자치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충실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장차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유태현, 2015)

- 지방재정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세 신설 및 확충, 그리고 지방세외수입 증대, 중앙재정의 이전 등에 대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지방재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지방세제가 가격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험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 지방세 가격기능의 담보는 지방원리에 부합하는 지방세제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 항목이 아닐 수 없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현행 지방세제를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정비하는 노력이 요구됨. 그 첫 번째 단추로 (가칭)주민자치세의 도입을 모색하는 접근은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임

○ 동네자치와 주민세

■ 지방자치 그 가운데 동네자치를 확산시키는 한편 그것을 뒷받침할 재정기반을 튼실하게 하고자 한다면 현행 지방세 세목 가운데 지방자치와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주민세에 주목하여 현재의 세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는 일본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주민세 균등분을 현재 수준보다 높여 그 세수를 지방자치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의 강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이럴 경우 현행 주민세는 보통세이기 때문에 그 세수를 지방자치(동네자치)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음.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동네자치 몫으로 배정하는 등의 예산편성을 권장하는 조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주민세의 항목 가운데 균등분에 한정하여 현재보다 그 세율을 인상하여 세수를 늘리고,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동네자치의 확산과 내실화를 도모하는 접근은 현행 지방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기적 대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균등분의 인상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균등분은 그 제한세율을 높이거나 적어도 현행 수준(세대당 10,000원 상한)에 근접하는 세액을 과세하도록 하고, 법인균등분은 현실을 반영한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나아가 사업자균등분의 경우도 현재보다 높임으로써 그 취지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정비가 요구됨. 이 방안은 관련 부문 간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의 장점을 갖지만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충실하게 조달할 수 있겠는가에 의문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 재원을 동네자치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네자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민세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주민세 부과처럼 광역과 기초가 공동으로 과세하는 주민세의 개정 또는 신설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2) 협약의 필요성

- 동네자치는 중앙정부의 임의적인 선택 또는 일시적인 지원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과제는 아닐 것임. 그렇다면 동네자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충실한 재정기반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동네자치의 운영에 있어 시·군 간의 통일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동네자치 운영을 위한 도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현재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의 동네자치의 성공은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성공적인 동네자치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모든 시·군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임



- 동네자치의 재정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세의 불균등을 해소시켜 주면서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주민수의 불균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불균형을 도가 주체가 되어 보충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도-시·군의 역할과 기능

① 도의 역할과 기능

- 주민자치세 신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타시도 및 관련기관과 공조체계 확립
-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를 주민자치(자치공동체)운영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가칭) 주민자치세를 목적세화 하는 등 제도정비 노력

② 시·군의 역할과 기능

- 현행 주민세를 주민자치 재원으로 사용 할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마을 선정, 시범운영
- 장기적으로 목적세 형태인 (가칭)주민자치세 신설 공동노력

4) 필요 및 조치사항

- 현행의 주민세가 광역과 기초가 동시에 과세하는 한편 균등분의 현실화, 주민의 경제적 능력 반영 등을 통해 지방자치와 연계된 세목의 위상을 구축하게 되면 그 명칭 변경 뿐만 아니라, 거둔 세수는 주민을 위한 자치구현에 할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의 정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관련제도의 정비
 - 부과주체의 선정 : 광역+기초
 - 부과방식 : 균등분 + 차등분

5) 기대효과

-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주민자치 공동체의 성공을 위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의 유도
-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 주민이 사는 생활공간에서 지방분권의 실천

6) 협약사항

| 구 분 | 협 약 내 용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를 주민자치(자치공동체)운영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가칭)주민자치세를 목적세화 하는 제도정비 ○ 주민자치세 신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조체계 확립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주민세를 주민자치 재원으로 사용 할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마을 선정, 시범운영 ○ 장기적으로 목적세 형태인 (가칭)주민자치세 신설 공동노력 |

도-시·군 협약과제 인터뷰 참고자료(시·군의견)

② 주민세 주민자치 활용

| 시·군 | 검 토 의 건 |
|-----|--|
| 천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균등분) 현실화(인상)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상승이나 징세비 등을 고려할 경우 '99년 이후 변동이 없는 세율의 현실화 필요 - 천안시:인상을 위한 내부검토 중(읍,면)3,000원/(동)4,000원 ⇨ 2016년부터 10,000원 ※ 천안시에서는 증대된 세입에 대하여 주민참여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임 ○ 주민(동네)자치 재원 활용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균등분)은 지역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증가된 세입에 대하여 주민(동네)자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한것으로 판단되나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함 ○ 추가 검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에는 개인 균등분 외에 개인사업, 법인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주민세로 통칭하면 주민세 전체액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으니 주민자치 재원의 활용은 “인상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 - 주민세는 보통세로 주민(동네)자치 활용을 위한 재원규모 결정은 예산편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유사한 성격이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주민(동네)자치 재원에 대한 차이점 등 개념의 정의가 필요함 |
| 공주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도와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찾아가는 강좌 등을 통하여 동네자치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이 선행된 후에 주민세를 주민자치에 활용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임.(시정담당관) (자치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세를 동네자치 사업에 활용토록 제도화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판단됨.) - 주민세 개인균등분(읍면 - 3,000원/ 동 - 4,000원)을 2015년 중 충청남도 각 시·군이 공동으로 조례개정(세율현실화)하여 2016년부터 10,000원으로 과세 추진 중으로 세입 규모는 2014년 177백만원에서 460백만원으로 약 260% 수준으로 증대 예정 - 지자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매년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취지상 각 마을의 구성원(세대주)이 납부한 주민세를 당해 마을의 주민자치(동네자치)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은 가능하다 사료됨 - 주민자치(동네자치) 예산편성과 관련 읍·면·동 또는 마을별 납부한 세액과 관련된 자료의 예산 수립부서 제공 및 협조 가능(세무과) |

| | |
|-----|---|
| 보령시 | 의견없음 |
| 아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일환으로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각 읍면동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매년 편성하고 있음 ○ 주민세를 별도로 주민자치를 위해 예산 투입하는 것은 중복성격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
| 서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는 보통세로 정액을 주민자치 재원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사업부서 및 세출예산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판단됨 (단, 일정금액 이상은 목적세로 사용하도록 단서조항 설정가능) |
| 논산시 | 의견없음 |
| 계룡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세인 주민세를 목적세처럼 특정 사업 및 특정한 범위의 주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조세목적에 불 부합 ○ 특정세입을 특정목적의 세출로 예산편성 시 자율통제 기능 약화, 합리적 재정운용을 제한하게 되며, 또한 사업내용에 따라서 재원이 불충분하거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적은 사업에 예산편성 될 수 있는 등 비효율적 측면이 발생될 수 있음 ○ 현재 주민자치의 경우 주민자치협의회나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되어 운영되는바, 보조금 형식의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 당진시 | 의견없음 |
| 금산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 인상에 대한 협력 사항은 동의하나, 주민세를 주민자치 특정 목적으로 예산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 부여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군의 경우 세입만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민세를 주민자치(동네자치)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열악한 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비 50%지원 건의 |

| | |
|-----|--|
| 서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성공을 위해 자치재원의 확보가 중요한데 주민세를 지역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우리군의 경우 인구가 적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 청양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주민세 세율 인상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는 1마을(행정리)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으로 금액이 적은 주민세 세원으로 동네자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 홍성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군민을 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를 듯 함 ○ 주민자치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군민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 |
| 예산군 | 의견없음 |
| 태안군 | 의견없음 |

3.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

1) 사업의 주요 현황

■ 충청남도 3농혁신의 일환으로 주민주도의 내발적 지역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 충청남도는 민선5기 출범 이후 ‘3농혁신’을 도정의 제1의 과제로 하여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주민주도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2012년부터 추진중에 있음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희망 농어촌 마을’을 비전으로 하여 일반마을-새싹마을-꽃마을-열매마을 등 마을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는 추진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단계별 지원체계 도입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군단위 마을만들기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침체되었던 농촌마을 주민들의 의식개혁과 마을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내발적 발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 마을만들기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희망 농어촌 마을



• 마을만들기 경험이 전무하고 역량이 미비한 마을



• 마을만들기를 통해 ‘희망마을’로 지정된 마을
• 소규모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마을



• 소규모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경험이 있는 마을
• 중·대규모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마을



•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마을
• 마을 및 공동체 활성화를 희망하는 마을

자료 : 조영재 외, 2011, 충청남도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 및 실천전략, 충남발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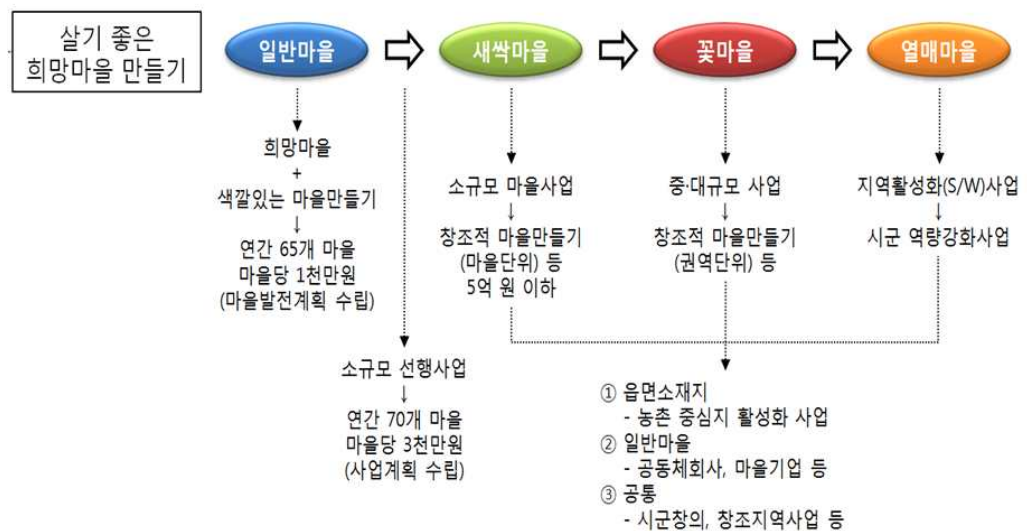
■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6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하여 지역의 내발적 발전역량 강화 도모

- 2011년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마련
- 2012년
 - 마을 자원조사 및 D/B구축 : 4,278개 마을
 - 마을발전계획 수립(258개 마을), 마을학교 운영(516명의 주민 및 리더 교육)
 - 우수마을 상사업비(6개 마을, 4.1억 원), 선행사업비(30개 마을, 6억 원)
- 2013년
 - 마을발전계획 수립 : 250개 마을
 - 마을학교 운영 : 500여명의 주민 및 리더 교육
 - 제1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개최 (11.1~2)
 - 우수마을 상사업비(15개 마을, 4.1억 원), 선행사업비(30개 마을, 6억 원)
- 2014년
 - 마을발전계획 수립(150개 마을)
 - 마을학교 운영(300여명 주민 및 리더교육)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시·군사업을 활용한 단계별 마을만들기 추진으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일반마을-새싹마을-꽃마을-열매마을 등 마을의 역량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 자율편성사업) 등 마을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체계를 갖고 있음
- 특히, 일반마을에서 새싹마을 사이의 단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소규모 선행사업을 지방비로 추진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있음
 - 일반마을 : 희망마을 및 색깔있는 마을만들기를 통합하여 추진하고, 연간 65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 희망마을 선행사업 : 희망마을만들기 및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등을 이수한 마을 중 연간 7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3천만원 지방비(도비+시·군비)를 지원 하여 소규모 선행사업을 추진(농식품부가 공모사업 신청 전 2016년부터 의무화)

- 새싹마을 : 사전 역량을 갖춘 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마을사업을 추진하되,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5억 원 이하의 창조적 마을만들기(마을단위)와 연계하여 추진
- 꽃마을 : 소규모 마을사업 추진의 경험을 갖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중·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되,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5억 원 이상의 창조적 마을만들기(마을종합, 권역단위 등)와 연계하여 추진
- 열매마을 : 중·대규모 사업추진의 경험을 갖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S/W), 농어촌인성학교 등 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



〈그림 5〉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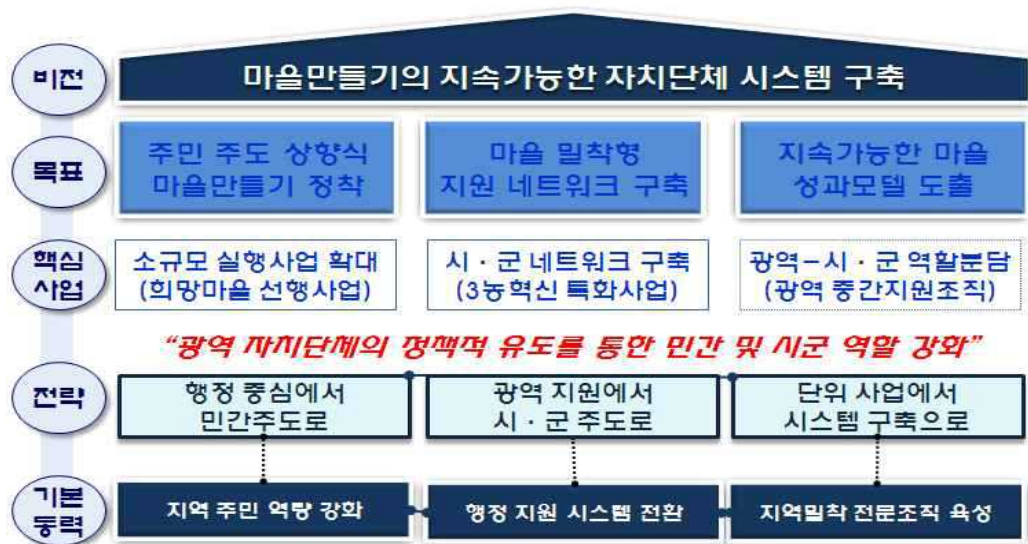
- 그러나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충남도가 주도하고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일반농산어촌의 시·군 자율편성사업과의 연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시·군의 참여가 요구됨

■ 3농혁신특화사업으로 ‘시·군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통한 시·군의 마을만들기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진행

-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3농혁신특화사업으로 우선 농촌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이를 기획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의 행정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함
-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자생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 다양한 민간조직 및 기관단체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내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하고, 이러한 다양한 마을만들기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시·군에 있어 마을만들기 관련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민간조직의 협력을 통한 역량 및 잠재력 극대화가 가능할 것임



〈그림 6〉 민선6기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정책체계

■ 관련법령

- 현재, 농식품부는 농촌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 주민의 자율적 마을발전계획수립 및 시행이 가능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지원법안을 제정 계획임
- 또, “주민주도로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상향식 ‘마을만들기’ 를 촉진할 필요” 가 있어 상향식 마을만들기의 제도적 기반으로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을 추진한다고 배경 설명을 하고 있음
- 법안의 주요내용은
 - 주민은 농촌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촌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농촌마을만들기 계획이 시·군의 지역개발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및 심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마을만들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시 마을의 역량 등을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 주민은 농촌마을만들기 계획의 이행,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농촌마을의 경관 보전·관리·형성 등을 원활하게 이행할 목적으로 주민 간 농촌마을 만들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농촌마을만들기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농촌개발 관련 분야의 국가전문 자격 제도를 도입함(안 제11조)
- 농촌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 농촌활성화 시·군 지원센터를, 시·도에 농촌활성화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농촌활성화 시·군 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 등의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마을만들기진흥원을 설치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관련 조례로서 충청남도에서는 2012.12.31.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는 주민 스스로가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망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희망마을 만들기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8조(우수 마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군과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한 전시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 주민의 참가 및 대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협약의 필요성

■ 마을만들기는 광역보다는 지역단위의 내발적 발전 모형으로 도의 지원과 함께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및 주도 필요

- 마을만들기는 주민주도의 내발적 지역발전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광역주도 보다는 시·군 또는 지역, 또한 민간영역에서 주도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 즉, 충청남도의 마을만들기 시작은 광역단위에서 주도하였지만, 향후 시·군의 자체실정에 맞는 마을만들기 모형 구축을 통한 시·군 주도의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이를 도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 할 것임
-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 마을만들기가 정착되고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단계별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도 및 시·군 사업의 연계와 융복합 추진 필요

- 중앙정부의 마을사업은 대부분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진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역량을 갖춘 마을을 육성하는 데에 도와 시·군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살기 좋은 희망마을의 육성 단계에 있어 일반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침체된 농촌마을에 희망을 불어 넣고 새로운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갖추도록 함에 있어 도 및 시·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적 지원이 요구됨
- 또한, 새싹마을 - 꽃마을 - 열매마을에 대한 단계별 마을육성 사업내용이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 자율편성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또한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도의 융복합 지원체계가 함께 연계될 필요가 있음

■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 및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연계 추진 필요

- 마을사업 등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행정과 현장(농어촌마을 등)을 연결시켜주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단위에서 실제 현장과 행정을 지원해 주는 시·군조직 뿐만 아니라 광역단위에서 전체를 기획하고 시·군의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해 주는 도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이 필요하고, 도 및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연계운영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기반이 될 것임

3) 도-시·군의 역할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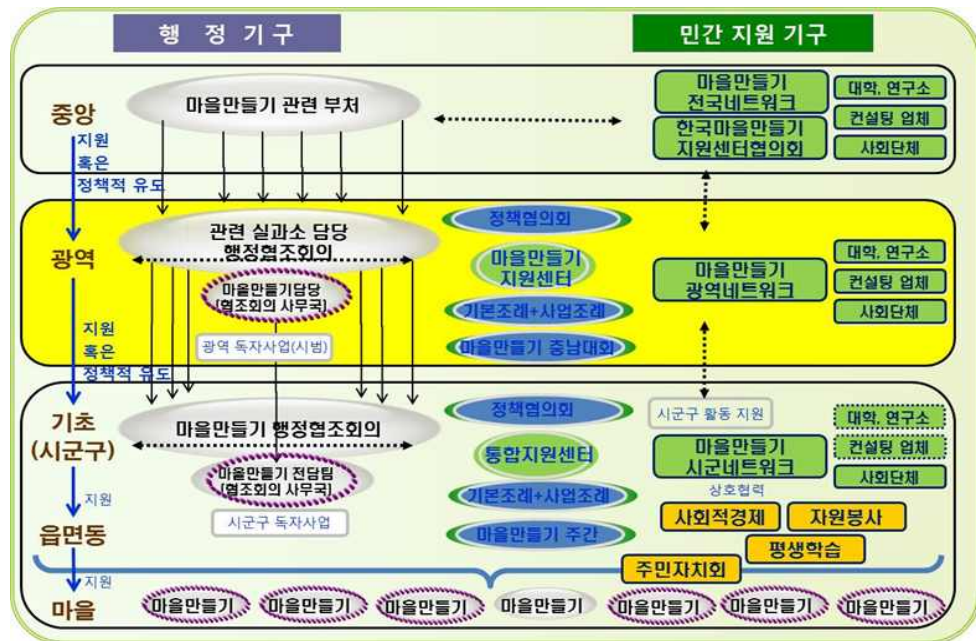
① 도의 역할과 기능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정책기획 및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마련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 등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마을만들기 모형 및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
- 구축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시·군 및 농어촌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제도마련 및 개선,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

■ 재정지원방안 마련 및 정책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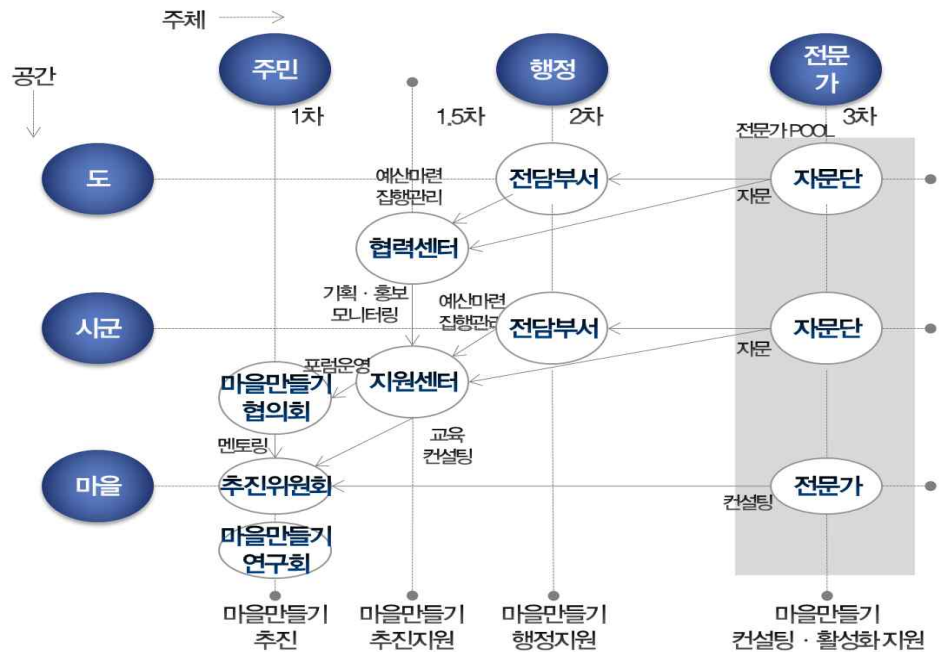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비 및 지방비 등 다양한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발굴 및 사업 추진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기회를 제공
- 충청남도는 마을만들기 희망마을 선행사업 및 3농혁신 특화사업 추진(시·군 행정조직 개편, 민간네트워크 구축 등)등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을 도입·지원하고 있음



〈그림 7〉 광역-기초 민관협력적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 도 광역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실무 지원

- 광역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마을만들기 정책 개발 및 정책 추진 지원
 - 마을만들기 관련 조사분석 및 연구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마을만들기 전문가 등 인적자원 발굴 및 유치 지원
 -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컨설팅 지원
 - 마을만들기 모니터링 및 피드백
 - 우수사례 홍보 및 자료집 발간,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추진
 -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 시·군 단위를 넘어서는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자료 : 조영재 외, 2011, 충청남도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 및 실천전략

〈그림 8〉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및 추진체계 모형

■ 내부 인적자원 발굴·육성 및 외부 인적자원 유치 지원

-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도 단위 및 시·군단위의 활동가 및 전문가 등의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DB 구축
-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역량강화 도모
- 필요한 외부 인적자원의 지역 유치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 마을만들기 모니터링 및 우수(모범) 사례 공유·전파

-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추진 여부 및 성과,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과제, 현장 주민 및 시·군의 요구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함
- 특히, 마을만들기 추진의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 내발적 발전의 모범사례 등을 발굴하고 행정 및 마을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정보 전달의 역할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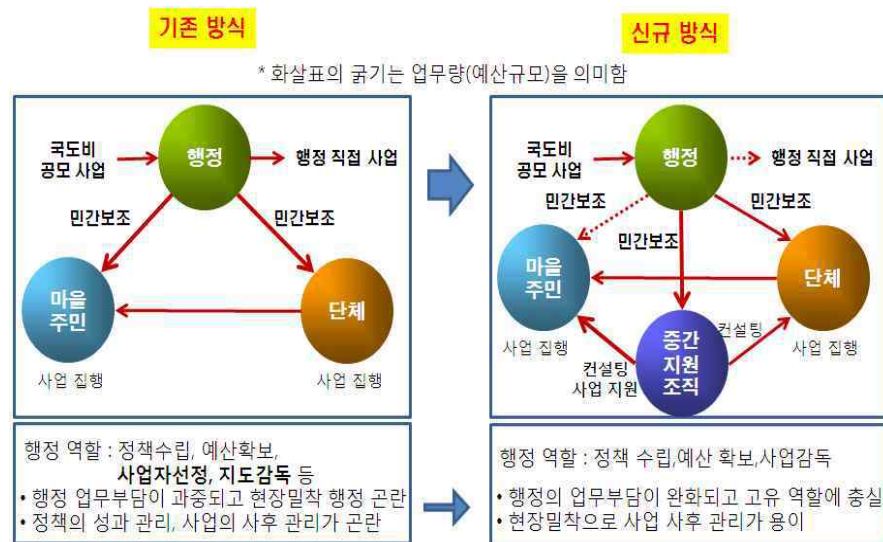
② 시·군의 역할과 기능

■ 충남도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자체적인 마을만들기 모형 구축

-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모형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시·군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자체적 마을만들기 모형과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특히,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의 새싹마을 - 꽃마을 - 열매마을의 단계와 연계하는 사업추진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으로의 개편

- 분산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하나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혹은 관련 사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유사한 관련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
- 특히,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을 통한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집행 방식에 대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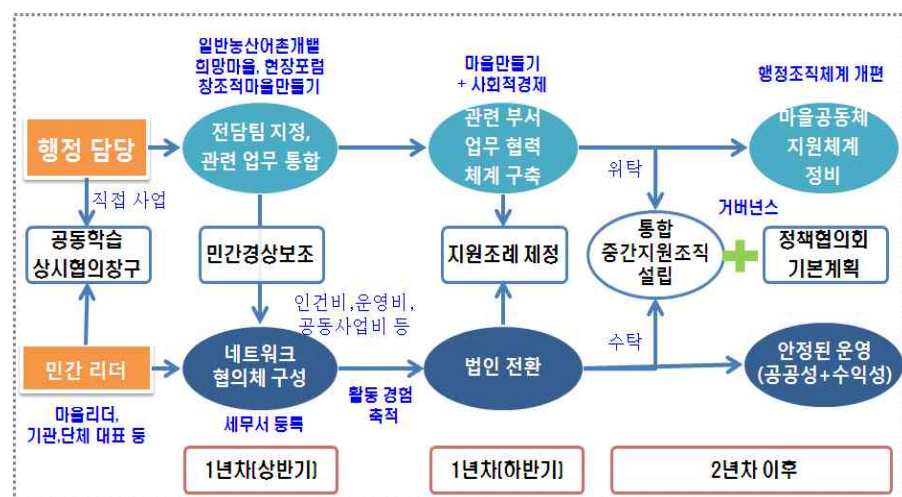
〈그림 9〉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집행방식 개선 개요

■ 시·군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 시·군단위에서 마을만들기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고 코디네이터 및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마을만들기 사업 개발 및 추진 지원
 - 마을만들기 관련 기초조사분석 및 평가 연구
 - 마을공동체 자원 조사 및 DB 구축
 -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마을만들기 현장 전문가 등 인적자원 발굴 및 유치 지원
 -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컨설팅 지원
 - 마을만들기 소식지 발간 및 정보 제공
 -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의 사업 통합 서비스

■ 민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유도

- 시·군단위의 마을만들기 관련 다양한 민간조직과 기관·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고 활동을 지원하며 이들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림 10〉 시·군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절차

4) 필요 및 조치사항

■ 마을만들기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시·군참여 및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 기존 행정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민주도의 내발적 지역발전, 상향식 개발 등 마을만들기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시·군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 및 주도 노력 필요

■ 도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선행학습의 지속적 추진 필요

- 도단위 광역지원센터, 시·군단위 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설치방안 및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등에 대한 관련 주체의 선행학습 필요
- 또한,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및 관련 재원마련 필요

■ 협의내용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협의된 내용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도 및 시·군의 행정적 지원 방안과 관련된 재정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5) 기대효과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정책이 시·군 주도로 확산 및 발전

■ 도와 시·군 협력을 통해 혁신적이고 전국 선도적인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지역 개발 추진모델 구축

■ 시·군 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만들기 조기성과 도출

■ 현장밀착형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기반 마련

6) 협약사항

| 구 분 | 협 약 내 용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구축 ○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량 단계별 융복합 지원체계 구축 ○ 시·군 마을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외부 인적 자원 유치 지원 ○ 도 광역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을 통한 실무지원 ○ 마을만들기 홍보, 모니터링 및 정책 피드백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팀 & 협조체계 등 효율적인 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 시·군 독자사업 발굴, 정책협의회 구성, 기본조례 제정 등 추진 ○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군 특성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통합 지원센터) ○ 주민 교육, 마을 컨설팅 등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 |

도-시·군 협약과제 인터뷰 참고자료(시·군의견)

③ 지속가능한 희망마을 만들기

| 시·군 | 검 토 의 건 |
|-----|---|
| 천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유사사업) 중복 예방 필요 |
| 공주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 발전계획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민관협력 시스템으로 도·농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조직으로, ○ 도에서 조례 등 규정을 마련 제도적 뒷받침과 운영 예산 및 인력지원이 가능한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함 |
| 보령시 | 의견없음 |
| 아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설치 후에도 특화사업비 등 재정지원이 계속되는 협약사항 명시 ex) 명시내용 :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 운영비의 일부를 계속 지원하여야 한다 |
| 서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되는 시·군과는 협약이 필요할 것이며 미 추진되는 시·군과는 시행 전 행정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 논산시 | 의견없음 |
| 계룡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자원·예산 등의 수반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 - 우리시의 경우 열악한 소규모의 도·농 복합도시(1동3면)인 관계로 광역 또는 인근 시·군의 중간 지원조직으로부터 직·간접적 지원이 타당 |
| 당진시 | 의견없음 |
| 금산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문가 등 인적자원이 부족하며, 중간지원조직과 연계된 각종 협의체 등의 통합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과 함께 운영에 대한 협의체 관계부서 협업 및 협조 필요 |
| 부여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시스템 개편: 현재 부여군에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은 여러부서(건설과,문화관광과,도시건축과,굿뜨래경영사업소,농업기술센터 등)에 산재해 있는 상황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독자사업발굴, 정책협의회 구성, 기본조례 제정은 총괄부서(기획감사실)에서 사업부서 의견을 들어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 | |
|-----|--|
| 부여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민간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는 설치가 우선이 아니라 설치 후 원활히 운영되기 위한 주민들의 역량함양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 이에 따라,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역량함양을 위한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역량강화용역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 중이며, 용역완료 후 부여읍을 시작으로 부여군 전역에 확산시켜 성공적으로 민간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를 설립·운영할 계획임 |
| 서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색깔)마을 육성 등 농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있어 별도의 중간조직 보다는 활성화지원센터를 보강하는 것이 적절함. |
| 청양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군은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과 중간 지원조직 설립으로 민간주도의 현장지원체계 구축 준비 중에 있으며, ○ 전담팀 구성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 실효성 등 종합적 검토에 따라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 홍성군 | 의견없음 |
| 예산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의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가속화를 위하여 3농혁신 특화사업비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설립으로 민간주도의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와 분석·평가·연구 등 현장 밀착형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에 기여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협약이 필요함 |
| 태안군 | <p>□ 제도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색깔)마을 육성 등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있어, 별도의 중간지원조직 설립보다는 기존의 지원센터를 보강하는 것이 적절 ○ 시·군 단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게 되면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 운영 지원을 통한 조직설립은 장기적으로 운영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음 <p>⇒ (발전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광역단체 단위에서 각 시·군 전문가들을 포함한 중간지원조직을 우선 설립하여 각 시·군의 마을에서 지원요청을 할 경우 지원 |

4. 사회적 경제 육성

1) 사업의 주요 현황

■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개념

- 사람중심의 공동체 경제로서 자본보다는 사람, 개별기업·조직의 이익보다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 즉, 이윤창출보다는 구성원 및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배분에 있어 자본 확대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당사자 경제

■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 국가 등이 인식하지 못하는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공급
-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윤리경영문화의 전도사 역할 수행

■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① 사회적경제의 종류와 추진 부서

| 구 분 | 목 적 | 추진부서 | 중앙부처 |
|-------------|----------------------------------|---------------|----------|
| (예비) 사회적기업 |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 고용노동부 |
| 마을기업 | 마을단위 소득 및 일자리 창출 | " | 행정자치부 |
| 협동조합 | 구성원 이익 도모, 지역사회 기여 | " | 기획재정부 |
| 농 어 촌 공동체회사 |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 농 정 국 (농업정책과) | 농림축산 식품부 |
| 자활기업 | 수급자, 차상위자의 자활 도모 |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

※ 기타 「지역통화, 공제조합, 로컬푸드조직」등 여러 형태가 존재

-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② 총괄 현황



출처 : (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단위 :개소)

| 총 계 | (예비) 사회적 기업 | 마을 기업 | 협동 조합 | 자활 기업 | 두레 기업 | 로컬 푸드 조직 | 농어촌 공동체 회사 | 희망 마을 | 비 고 |
|--------|-------------|-------|-------|-------|-------|----------|------------|-------|-------------|
| 1,215 | 143 | 90 | 203 | 75 | 25 | 9 | 12 | 658 | '14.12월말 기준 |
| 100.0% | 11.8 | 7.4 | 16.7 | 6.2 | 2.0 | 0.7 | 1.0 | 54.2 | |

③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 | '12.12 | | '14.12 | | 비 고 |
|--------|----|--------|----|--------|--------|-------|
| | | 업체수 | 비중 | 업체수 | 비중 | |
| 합 계 | | | | 511 | 100.0% | |
| 사회적 기업 | 인증 | 23 | | 54 | 10.6 | 증 31 |
| | 예비 | 94 | | 89 | 17.4 | 감 5 |
| 마을기업 | | 48 | | 90 | 17.6 | 증 42 |
| 협동조합 | | 7 | | 203 | 39.7 | 증 196 |
| 자활기업 | | | | 75 | 14.7 | |

- 사회적기업 인증율 : 30%대선 ※ 2014년도 인증기업 18개 → 전국 3위 수준
- 예비사회적기업 감소이유 : 인증기업 전환, 지정종료기업 증가
- 2014년말 기준으로 충남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은 (예비)사회적기업 143개, 마을기업 90개(자립형 60개,신규/재지정 30), 협동조합 203개, 자활기업 75개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2년에 비해 각각 26개, 42개, 196개소가 늘어난 수치로서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④ 시·군별 현황

(단위 :개소)

| 시·군별 | | 총계 | (예비)사회적기업 | |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
| | | | 계 | 인증 | 예비 | | |
| 합 계 | | 432 | 139 | 54 | 85 | 90 | 203 |
| 市 지역 (8개) | 소계 | 280 | 98 | 37 | 61 | 48 | 134 |
| | 천안 | 76 | 32 | 14 | 18 | 2 | 42 |
| | 공주 | 27 | 8 | 4 | 4 | 8 | 11 |
| | 보령 | 23 | 6 | 3 | 3 | 8 | 9 |
| | 아산 | 65 | 26 | 4 | 22 | 9 | 30 |
| | 서산 | 28 | 8 | 5 | 3 | 7 | 13 |
| | 논산 | 37 | 10 | 5 | 5 | 8 | 19 |
| | 계룡 | 5 | 2 | — | 2 | 1 | 2 |
| | 당진 | 19 | 6 | 2 | 4 | 5 | 8 |
| 郡 지역 (7개) | 소계 | 152 | 41 | 17 | 24 | 42 | 69 |
| | 금산 | 26 | 7 | 2 | 5 | 4 | 15 |
| | 부여 | 13 | 4 | 1 | 3 | 5 | 4 |
| | 서천 | 31 | 13 | 5 | 8 | 7 | 11 |
| | 청양 | 11 | 2 | 1 | 1 | 7 | 2 |
| | 홍성 | 28 | 5 | 4 | 1 | 7 | 16 |
| | 예산 | 21 | 4 | 2 | 2 | 5 | 12 |
| | 태안 | 22 | 6 | 2 | 4 | 7 | 9 |

☞ 주) 대표적 사회적경제조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교함('14.12월말기준)

- 2010년부터 시작된 지역형(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10년 17개, 11년 51개, 12년 44개, 13년 33개, 14년 30개 등 총 175개 기업이 지정되었으나 지정종료, 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으로 2014.12월 말 현재 85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어 있음
-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은 10년 11개, 11년 16개, 12년 21개, 13년 26개, 14년 16개 등 2014.12월 말 현재 총 90개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음
- 일반협동조합은 소재지 사·도지사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되며 12년 7개, 13년 100개, 14년 96개의 협동조합 신고 수리함. 현재 설립희망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군」에 업무 위임 추진 중
- 충남 사회적경제조직의 시·군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76개로 가장 많고 아산시 65개, 논산시와 서천군이 각각 37개와 31개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계룡시와 부여군, 청양군은 각각 5개, 13개와 11개에 불과함

-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판단됨

■ 충남 사회적경제의 육성 여건(어려움)

-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 인식 부족 등으로 기업육성 애로
 - 새로운 경제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도민 참여율 등 미흡
 - 사회적경제 여건 미성숙, 대표자 경영능력 등 부족 자립성장 한계 내재
 - 안정적인 이익창출 등 어려움으로 회사의 지속성 유지 곤란
 - 일반기업에 비해 제품의 질 등이 떨어져 판로 등 어려움 상존
 - 이로 인해 회사가 발전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회사 등 계속 발생
- ⇒ 정착단계에서 발전단계로 진입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어려움 내재,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기업의 자립 성장 지원 지속 필요

■ 충남 사회적경제 추진 과제











① 정책목표 :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 기존의 시장경제와 더불어 사회적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함으로써 도민참여 사회적경제 체계수립
-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사업은 다음과 같음

| 추진과제 | 전략사업 |
|-------------------|---|
| 친화적 환경조성 | • 사회적경제 정책홍보 |
| | • 협동조합 설립지원체계 구축 |
| |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지역단위 협동조합 만들기 |
| 통합적 추진환경 조성 | •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체계 정비 - 전문가 채용 |
| | • 충남형 사회적경제 제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조례제정 - 사회적경제선언 |
| | • 사회적경제로 연계가능한 자치단체 사업발굴 및 시행 |
| | • 사회적경제조직 업무 및 판매공간 제공 |
| | • 중간지원기관 기능강화 및 시·군밀착형중간지원기관 설립 |
| | • 충남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
| | • 충남사회적경제 통계정보 구축 |

출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208페이지

- 충남도 및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대응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전략사업 | | 추진사업 |
|--|---|---|
| • 사회적경제 정책홍보 |  | • 지역방송(TJB 등) 및 신문사 (대전일보 등)와 공동기획 홍보사업 추진 |
| • 협동조합 설립지원체계 구축 |  | • 협동조합 지원센터 위탁운영 |
|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지역단위 협동조합 만들기 |  | •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협동조합 발굴(*천안 등 10개 시·군) * 천안,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서천, 홍성, 태안, 계룡 |
| •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 조직체계 정비 - 전문가 채용 |  | • 경제정책과내 사회적경제팀 구성 ※ 전문공무원 인력채용無, 아산시 1인 전문공무원 채용 |
| • 충남형 사회적경제 제도 확립 - 시·군조례제정 - 사회적경제선언 |  | • ‘기업’ 조례→ ‘경제’ 조례전환 (천안, 보령, 아산) ※ 미전환 12개 시·군 |
| • 사회적경제로 연계가능한 자치단체 사업발굴 및 시행 |  | • 사회적경제정책협의체 구축중 ※ 시·군: 추진실적 無 |
| • 사회적경제조직 업무 및 판매공간 제공 |  | ※ 파악된 실적 없음 |
| • 중간지원기관 기능강화 및 시·군밀 착형중간지원기관 설립 |  |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구축 ※ 시·군: 추진실적 無 |
| • 충남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  | • 워크숍 개최(2015.4.30) ※ 시·군: 추진실적 無 |
| • 충남사회적경제 통계정보 구축 |  | • 2012년~ 실태조사(센터) |

② 정책목표 :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혁신형 인재 및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
- 이를 위한 추진과제 및 전략사업은 다음과 같음

| 추진과제 | 전략사업 |
|---------------------------|---|
|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발굴 | •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
| | • 사회적경제 전문컨설턴트 육성 |
| | • 공무원 교육 체계 구축 |
|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주체 역량강화 | •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초·중·고 교과과정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
| | •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 |
| | • 프로보노 지원체계 구축 |

출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269페이지

- 충청도 및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대응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전략사업 | | 추진사업 |
|-------------------|---|---|
| •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 ☞ |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운영 및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추진(2015) ※ 시·군: 단발성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나, 인력양성 심화과정 無 |
| • 사회적경제 전문컨설턴트 육성 | ☞ | • 대학(청년캠프, 학습동아리 등) • 중소기업교류 협력사업 無 ※ 시·군: 추진실적 無 |
| • 공무원교육체계 구축 | ☞ | • 시·군담당자 교육실시(2012~) ※ 시·군: 추진실적 無 |
| •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개발 | ☞ | • 충남교육연구소(2013)와 공동교육교재 개발 • 충남경제교육센터와 연계추진(2013~), 초·중·고 대상수업 실시 • 청년강사모임 구축(2014~) ※ 시·군: 추진실적 無 |
| • 사회적경제학습동아리발굴 | ☞ | • 2013부터 추진중 |
| • 프로보노 지원체계구축 | ☞ | • 프로보노 양성교육 실시(2013~) • 프로보노 지원 및 구축 ※ 시·군: 추진실적 無 |

③ 정책목표 :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및 비즈니스 역량강화

-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결합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사업을 발굴하여,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 이를 통해 시장확대 및 경쟁력 확보
- 이를 위한 추진과제 및 전략사업은 다음과 같음

| 추진과제 | | 전략사업 |
|------------------------|------------|---------------------|
|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 육성 | | 사회적 경제 지역특화 사업 |
| | |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링 구축 |
| 우호적 시장 조성지원 | 공공시장 조성 | 공공 구매/조달 체계 수립 |
| | 민간시장 조성 | 민간 시장 확대 지원사업 |
| | | 사회적 경제 전시/판매전 개최 |
|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원 | | 전문지원조직 육성 |
| 조직간 거래 활성화 | | 사회적경제 조직간 거래 활성화 지원 |

출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319페이지

- 충남도 및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대응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전략사업 | | 추진사업 |
|---------------------|---|---|
| •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 ☞ | • 광역단위 추진하였음 ※ 사군과 연계 추진실적 無 |
| • 공공조달 확대 | ☞ | • 광역 및 사군단위 추진실적 • 공공구매관련 운영위원회,지원센터, 통합관련 시스템 광역/사군 無 |
| • 민간시장 확대지원사업 | ☞ | • 판로지원센터 위탁운영(2014~) ※ 사군별 추진 |
| • 사회적경제전시판매전 | ☞ | • 추진중(2012~) ※ 사군별 추진(예,지역축제연계) |
| • 전문지원조직 육성 | ☞ |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구축 ※ 사군: 추진실적 無 |
| • 사회적경제조직간 거래활성화 지원 | ☞ | • 광역단위 추진하였음. ※ 사군: 파악된 실적 無 |

■ 관련법령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 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4.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및 법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예산 등 재원 조달 계획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지원계획(이하 "연도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2. 연도별 지원계획: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4.15.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 주요내용은

-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협약의 필요성

■ 現 사회적경제 지원제도가 가지는 한계

• 국비중심의 재정지원

- 현 재정지원 중심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발굴, 육성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또한 이러한 재정지원사업은 ①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재정지원의 수혜목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발생, ②재정지원업무에 쫓겨 다른 사회적경제사업들을 업두도 낼 수 없는 시·군 담당공무원의 양산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음

- 광역중심(충남도)의 재정지원
 - 충남도는 일찍이 재정지원제도 중심의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선도적으로 사회적 경제시책을 추진하여, 타 시도의 모델로 역할을 하여 왔음
 - 그러나 마을공동체, 풀뿌리시민조직들, 사회적창업의 자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지 않는 한, 광역차원의 사업효과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음

■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의 대두
 -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심화되면서, 그 장점보다는 그 약점이 부각되고 있음. 예를 들어 ①대도시로의 인구유입으로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와 소외, ②한계비용사회로의 진입으로 청년/장년 실업자양산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또는 보완재)으로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효율성’ 보다는 ‘협력·공유적정임금고용’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두고 추구함. 이는 시장경제의 약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돈’이 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냄. 그러므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필요함
- 사회적경제의 眞正한 활성화 Key Player
 -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위에서 아래로’ 중앙집중방식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의 분산형방식임. 그러므로 충남 사회적경제의 眞正한 활성화 Key Player는 충남도의 15개 시·군임
 - 그러므로 상기의 주요 사회적경제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대적임. 특히 지역의 풀뿌리조직과 상시 ‘맞닿아’ 있는 일선 시·군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등 기반조성/인적자원육성사업에서 절대적임

3) 도-시·군의 역할과 기능

① 도의 역할과 기능

■ 사회적경제 주체확대 및 기업운영 역량 강화 지원(행·재정)

- 사회적기업(연3회), 마을기업(연2회) 공모하여 우수 기업 선정, 내실있게 육성
- 예비기업 대상 컨설팅강화 · 인증요건 상시 모니터링으로 인증률 제고
-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충남형 모델화」하여 보급

■ 사회적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청년 기업가 등 인적자원 육성

- 도내 대학과의 사회적경제 업무 협약체결(도, 중간지원기관, 대학 등)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청년캠프 등 18개 과정) 활성화로 예비기업가 육성
- 도내 대학 순회 사회적경제 특별교육, 학습동아리 운영(시·군별 1개 팀 이상)

■ 사회적경제 인식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도민교육 강화

- 사회적경제 제품 소비자 평가단 운영(충남자원봉사센터 등과 업무협약)
- 지역방송사 등 사회적경제 공익캠페인 전개(하반기)
- 지역언론사 활용 우수기업 40~50개 선정하여 「마을기업 특별」 홍보

■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업무협약 실시

-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등 당사자조직 협의회와의 업무협약

② 시·군의 역할과 기능

■ 사회적경제 발굴 및 기반조성

-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대표성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 － 예) 주민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서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천안),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부여)

- 농촌형 사회적경제 모범사례 발굴·육성
 - 에너지·노인복지·문화소외·귀농귀촌 분야 등
- 지역자원 활용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추진
 -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역자원조사 실시(특화사업 활용)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및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작성

■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 시·군별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전문공무원 위촉
- 전체 시·군공무원대상 사회적경제 교육(년 2회)/ 담당자대상 집체교육(년 2회)
 - 예) 기초교육: 사회적경제 이해, 사회적경제관련 지원제도 등
집체교육: 사회적경제 이해, 선배담당자에게 듣는다(담당자소양교육) 등
- 시·군별 사회적경제조직대상 아카데미운영
 - 단발성 교육프로그램 지양, 심화과정 추진
 - 조직론, 마케팅 등 실질적 경영이론 과정
 - 디자인, 기술 등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추진(지역대학연계)

■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및 비즈니스 역량강화

- 사회적경제조직 생산제품의 판로지원 확대
 - 시·군별 사회적경제 구매목표 설정
 - 사회적경제 조직 우선구매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 충남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센터와 연계 모색
- 대·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간 매칭강화
 - 지역기업과의 연계협력 추진, 지역기업은 일방적 시혜의 개념이 아닌 CSV개념으로 전환 필요
- 시·군별 공유재산의 사회적경제조직 무상/우선활용 추진

4) 필요 및 조치사항

■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 전환
 - － 전문공무원 채용
 - －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조직구축
 -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조례 및 목표 설정
- 지역통계데이터 확보
 - －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유재산 활용
 - － 지역자원조사(사회적경제조직 발굴목적)
- 지역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 － 기업인연합회, JC(청년회의소)등 지역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및 이해 촉구
 - － 이를 통한 대·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연계추진
 - － 주민이해 촉구(이장단 회의, 부녀회 간담회 개최 등)

5)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체계 구축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 복원
- 지역주민에 의한 생산 및 소비활동 촉진, 이를 통한 선순환경제 형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확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증대 및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 마련
-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 관심 제고와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능력 향상

6) 협약사항

| 구 분 | 협 약 내 용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주체 확대 및 기업운영 역량 강화 지원 ◦ 사회적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청년 기업가 등 인적자원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업무협약 ◦ 사회적경제 인식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도민교육 강화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 ◦ 시·군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조례 제정 체계적 추진 ◦ 일반기업·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 간 연계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조직) 네트워크 구축 운영 활성화 |

도-시·군 협약과제 인터뷰 참고자료(시·군의견)

④ 사회적경제 육성

| 시·군 | 검 토 의 견 |
|-----|---|
| 천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결연·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 협약을 맺은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비 등 인센티브 부여로 협약의 활성화 유도 ○ 협약된 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과 도주관 시·군 합동 워크숍개최 등으로 협약의 중요성 인지 |
| 공주시 | 의견없음 |
| 보령시 | 의견없음 |
| 아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 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위주 및 단발적 협약이 아닌 지속가능한 실질적 운영필요 ○ 사업 역할을 명확히 하여 운영 주체간 역할 분담 제고 (도는 각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내실화 된 상시적 TF 구성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p>ex) 2015년 마을기업 제도상으로는 추후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및 고용부인증사회적기업 이 불가함으로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충남도 및 15개 시·군 연대에 의한 제도 개선 촉구 필요</p> |
| 서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내에서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협약을 긍정적으로 판단함 |
| 논산시 | 의견없음 |
| 계룡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의 공동체경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이 큰 새로운 경제문화로 ○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지원·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p>※ 우리시 사회적경제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 마을기업 1개소 * 2015년 마을기업 4개소 신청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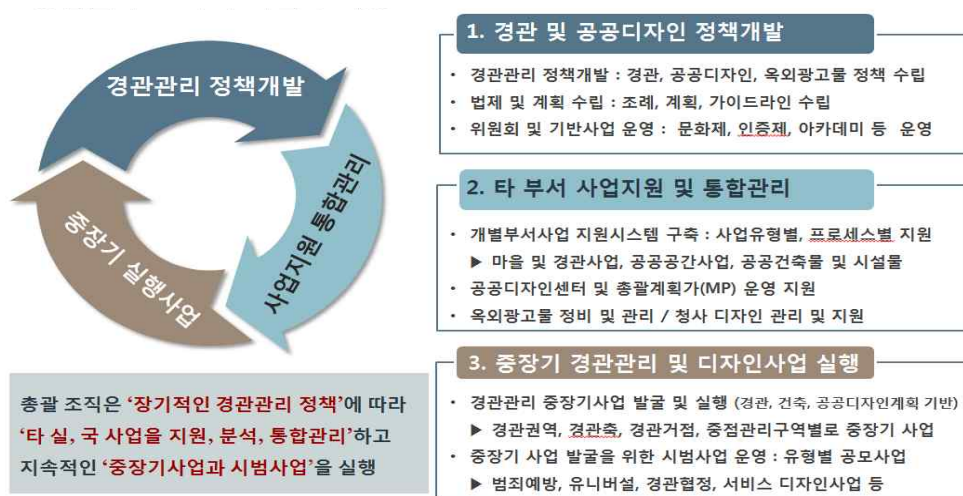
| | |
|-----|---|
| 당진시 | 의견없음 |
| 금산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사회적경제를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 ○ 중간지원기관과 우수사회적기업 대표 등을 통한 순회교육 및 홍보 필요 |
| 부여군 | 의견없음 |
| 서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 지역 특성에 맞는 대표성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 (예: 서천주민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적 경제기본 조례 제정 ○ 지역 내 순환경제시스템 도입 목적의 사회적 경제영역 D/B구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주민기업, 6차산업체 등) ○ 사군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체감도개선/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컨설팅 - (예비)사회적기업 지속성 유지를 위한 경영컨설팅 |
| 청양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의 역할 중 사회적경제 조직간 네트워크 구성과 대·중소기업과 매칭강화 분야는 시·군의 역할보다는 도에서 충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또는 업종별 등 특성을 살려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양군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5개, 마을기업 7개로 자체 네트워크 구성으로는 선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없어 역할이 미흡함 |
| 홍성군 | 의견없음 |
| 예산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는 인적자원(여성·노인·장애인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강구되는 사업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민간단체 주도의 협력적 동반자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의 적극적인 발굴 및 육성체계가 중요함. 또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진 시 많은 부서의 업무 협조 및 충남도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함 |
| 태안군 | <p>□ 제도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간 매칭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 - 매칭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 제도 정비 ⇒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세 특례 제한법 내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6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이 있으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는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사항이 없음 |

5. 공공디자인 통합지원

1) 공공디자인 주요 현황

■ 공공디자인 통합지원개념

- 공공 디자인(public design)이란 국가 및 지역에서 수행되는 공공영역의 디자인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편의도모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계획, 실행하는 통합적인 디자인 활동을 의미함
- 다수의 개별부서에서 각기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디자인의 일관성을 확고히 하고자 함
- 충남의 통합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각 시·군 지역의 특성을 특화함으로써, 충남의 정체성 정립과 시·군의 차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 현황 및 행정기반 현황분석

(I)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사업

- 충청남도에서는 매년 혹은 지속적으로 공공디자인 정책 및 기획개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추진(도시공공디자인, 농어촌공공디자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등), 공공디자인 컨설팅, 기본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수립, 사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
- 공공디자인문화제, 공공디자인 공모전, 우수옥외광고전시회등 주민, 대학생, 전문가등 참여를 통해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하는데 계속적으로 디자인정책을 개발

- 지역중심시대에 발맞춰가며 충남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역특화 맞춤형 공공디자인, 3농혁신 정책과 맞물려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지역의 색이 물어나는 공공공간을 조성
-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장소의 테마를 대상으로 환황해경제권 시대 서해안 지역을 특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을 통한 도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행정기반 구축 현황 분석(2014년 기준)

- 제도 및 관련법 분석
 -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은 공주, 논산, 보령, 예산, 천안의 5곳(33%)이며, 계획중인 곳은 홍성 1개 군, 조례가 없는 시·군은 9곳인(60%) 계룡, 당진,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청양, 태안, 금산임
 - 경관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은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아산, 천안, 태안의 7곳(46.6%), 계획중인 곳은 계룡, 공주, 서천, 예산, 홍성군의 5곳(33%), 조례가 없는 시·군은 서산, 청양, 금산의 3곳(20%)으로 나타남
 - 관련 시행지침(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시·군은 논산, 천안, 아산의 3곳(20%)이며, 없는 시·군은 계룡, 공주, 금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청양, 태안, 홍성의 13개(86.6%)으로, 경관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구체적 운영 규정을 만들지 않은 시·군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전담부서 구성 분석
 -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는 시·군은 공주,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천안, 홍성, 금산, 태안의 13곳(80%)이며, 전담부서 자체가 없는 시·군은 계룡, 청양으로 나타남
- ※ 전담부서 : 현재 시·군 전담부서는 광고물인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동반함에 따른 실질적 공공디자인업무의 한계점
- 시·군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명칭은 도시디자인팀이 6개(40%), 공공디자인팀 1개(6%), 경관디자인팀1개(6%), 가로환경디자인팀, 디자인총괄, 도시경관팀, 경관주택팀, 주택디자인담당이 각 1개로 조사됨
 -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담부서의 직제상 도시정책과 소속이 공주 1곳(6%), 도시재생과 예산, 천안의 2곳(13%)이며, 도시건축과 소속이 부여, 서천, 태안, 홍성, 금산의 5개(33%)군, 건축과 소속이 당진과 아산, 도시과 소속이 보령과 서산, 등으로 공공디자인 단독부서가 아닌 건축 및 도시과의 팀 단위 소속으로 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디자인 관련 일반직(디자인직류)이 있는 도청은 1, 시·군은 당진1, 서천1이며
이름, 전문계약직이 있는 5명으로써 논산1, 천안 2, 아산 1, 홍성1으로 4곳임.
그 외의 7(46.6%)시·군인 공주, 서산, 부여, 계룡, 금산, 태안, 서천, 청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직(디자인직류)은 15개 시·군 중 3명 외에는 없음
- 관련기본계획 수립여부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4개(26.6%) 시·군으로 공주, 천안,
논산, 보령이며, 계획중인 곳은 홍성 1개곳, 없는 곳은 10개(66.6%) 시·군으로
계룡, 당진,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청양, 태안, 금산 등으로 나타남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4개(26.6%) 시·군으로 공주, 천안,
논산, 보령이며, 없는 곳은 11개(73%) 시·군으로 계룡, 당진,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청양, 태안, 홍성, 금산 등으로 나타남
 -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8개(53%) 시·군으로 공주, 당진, 아산, 천안,
보령, 논산, 서천, 태안 이며, 계획중인 곳은 3개(20%) 시·군으로 부여, 서산, 홍
성이며, 없는 곳은 4개(26.6%) 시·군으로 계룡, 예산, 청양, 금산 등으로 나타남
- 운영체제 분석
 -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8개(53%) 시·군으로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아산, 예산, 천안, 태안이며, 계획중인 곳은 부여와 서천의 2곳
(13%), 없는 곳은 계룡, 부여, 청양, 홍성, 금산의 5개(26.6%) 시·군으로 나타남
 -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시·군의 심의 및 자문기능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경관조례 제정 및 경관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과 군 계획위원
회에서 자문 및 심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공디자인 과제 추진의 문제

- 통합관리 주체(기획, 총괄)의 부재
 - 가로시설물의 설치, 운영, 관리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행정체계의 부재로 인
해 도시 가로시설물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방침없이 각각의 시설주체에 의
해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가로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이며 조화
로운 디자인이 실현될 수없는 원인으로 작용함
 - 기능에 있어서도 각각의 시설물들의 기능간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이 중복되고 남용되고 있음
- 공공디자인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 전담조직 및 인력부족, 네트워크 운영
체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의 공공디자인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또는 경관조례 제정과 전문인력 확보, 전담부서 구성(광고물업무 제외),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공공디자인 관련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 실행매뉴얼 수립,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진단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 15개 시·군 중 50%정도 지자체에서 위의 기반구축과 관련 제도 및 전담인력, 기본계획,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있으나, 나머지 50% 시·군은 이러한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 실정임
- 충청남도 시·군의 사업이 균형과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전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진단과 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병행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결과물 위주의 추진과 평가
 - 과정의 중요성 인식 부족, 과정의 기록 및 평가 부재
 - 사후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부재

■ 관련법령

- 2007년 제정된 경관법과 2008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건축, 경관관리的基础이 되고 있음
-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통합적 관점에서 규정한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요소들을 개별법들이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된 법규로는 건축기본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경관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이 있으며 공공시설물이나 공공매체와 같은 시설, 제품과 같은 영역까지 포괄한다면 문화예술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충청남도는 2009년 4월 15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은 4조(책무)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협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게 그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 자문,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시·군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공공디자인 추진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8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14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경관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사항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약의 필요성

■ 국가중심이 아닌 지역중심 시대에 따른 공공디자인정책 접근 필요

- 다가오는 미래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지역 간의 경쟁 구도로써 도와 시·군의 디자인관련 정책, 계획, 사업 등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함
- 충남의 정체성, 시·군의 지역정체성 형성을 위한 도, 시·군 간의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역의 상황을 극복하고 지자체의 디자인품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 및 민간전문가 참여 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이 필요함
-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접목이 요구되므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 충청남도에서 2009년도부터 공공디자인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시·군에 컨설팅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디자인 행정기반(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이 취약해 통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도와 시·군간의 협약을 통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이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지자체 공공디자인 사업의 외형적 디자인 접목 및 관리 프로세스 부재

- 타지역에서 우선 진행된 사업의 외형 모방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생활방식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이 부족한 실정임
- 충남 공공디자인 전략과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자치단체 수준의 공공디자인 시책은 해당 부처의 사업에 따라 일부 시범 가로정비, 간판정비, 가로시설물 교체 등 대부분 아주 지엽적인 영역에만 초점이 맞추고 있는 실정임

3) 도-시·군의 역할과 기능

① 도의 역할과 기능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정책 기획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지역특색에 걸맞는 공공디자인 정책 기획 및 개발과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계프로그램 개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발굴
- 개발과 발굴을 통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성을 살린 지역 공공디자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경관, 공공디자인조례)마련 및 개선, 다양한 지원책 마련
- 디자인 행정기반구축, 피드백관리 및 지원

■ 공공사업 추진시 공공디자인컨설팅 지원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계획 시 디자인컨설팅(공간계획, 색채, 재질, 형태 등) 지원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도심 특화지역 공공디자인, 농어산촌 마을 만들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 공모사업 추진

■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

- 전 공무원 및 주민 대상 공공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공공사업 추진시 전문가 인력 풀 구성 및 지원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개발

② 시·군의 역할과 기능

■ 디자인업무 위한 전담조직 및 전문·일반직 인력 확보 노력

- 공공디자인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개별부서 공공사업의 디자인 지원 및 관리
- 경관심의 및 경관관리계획 등 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노력

■ 공공사업 추진시 공공디자인 컨설팅 활용

■ 공공디자인시범사업과 연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후속사업추진

■ 공무원 및 주민 등 공공디자인 정기 교육프로그램 실시

■ 공공사업 추진시 전문가 위촉, 자문

- 시·군 공공사업 추진시 기획단계서부터 기본계획 완료시까지 지속적 참여

■ 공공사업 추진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경관, 공공디자인(시설물)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점 제언

-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제시하는 경관·공공디자인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4) 필요 및 조치사항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제도 방안 마련

- 중장기 디자인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노력
- 디자인 전문가 인력 풀 구성 및 활용
-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 및 시·군 전직원의 디자인 교육 및 선진지견학 추진
- 지속가능한 디자인컨설팅 실행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재정적제도 방안 마련

-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예산편성 지원 노력
-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디자인교육 및 선진지견학비 산정 검토
- 시범사업과 연계한 마스터플랜 수립 의무화

5) 기대효과

- 환황해권 중심 시대의 충남만이 가지는 공공디자인 랜드마크화 실현 및 세계 충남이미지 제고
-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통해 소통과 공유하는 행정시스템 실현
- 중장기 공공디자인정책을 통한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도, 시·군의 이미지 향상
- 쾌적하고 아름다운 충남의 아이덴티티(정체성) 확립 및 고유 문화를 가꾸어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6) 협약사항

| 구 분 | 협 약 내 용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정책 기획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 ○ 공공사업 추진 시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 주민 및 공무원 디자인 마인드 함양 ○ 전문가 인력 풀 구성 및 지원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업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노력 ○ 공공사업 추진 시 공공디자인 컨설팅 활용 ○ 공공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추진 ○ 공공사업 추진 시 전문가 위촉 및 자문 |

도-시·군 협약과제 인터뷰 참고자료(시·군의견)

⑤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 시·군 | 검 토 의 건 |
|-----|--|
| 천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과 복지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분야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각 시·군이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유니버설 디자인 등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수립이 필요 ○ 충청남도도 공공디자인컨설팅 지원 시 컨설팅 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컨설팅 전문가를 도에서 선정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 |
| 공주시 | 의견없음 |
| 보령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지식교류 및 체계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바람직 ○ 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 후 시·군 담당자 교육필요 |
| 아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은 독창성 및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일관적인 광역통합관리보다는 지역적인 디자인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통합관리인 경우는 시·군의 정체성 확보보다는 디자인의 통일화에 집중되어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 도의 역할을 좀 더 광범위한 협조적 관계로 시·군별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사료됨 ○ 다음은 도의 협약사항에 포함되어야 사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편적인 컨설팅이나 디자인 협의에서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선도적인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개발 - 중앙정부의 정책을 시·군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도록 매뉴얼 제작 등 전문가 활용 방안이 바람직함 - 타시도의 성공적인 사례 중심으로 충청남도 시·군의 특성 파악 시·군의 균형적인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육 및 자료 배부 필요 - 시·군의 재정악화로 공공디자인에 투자하는 사업비 부족을 해결할 방안 마련 등으로 시·군에서 공공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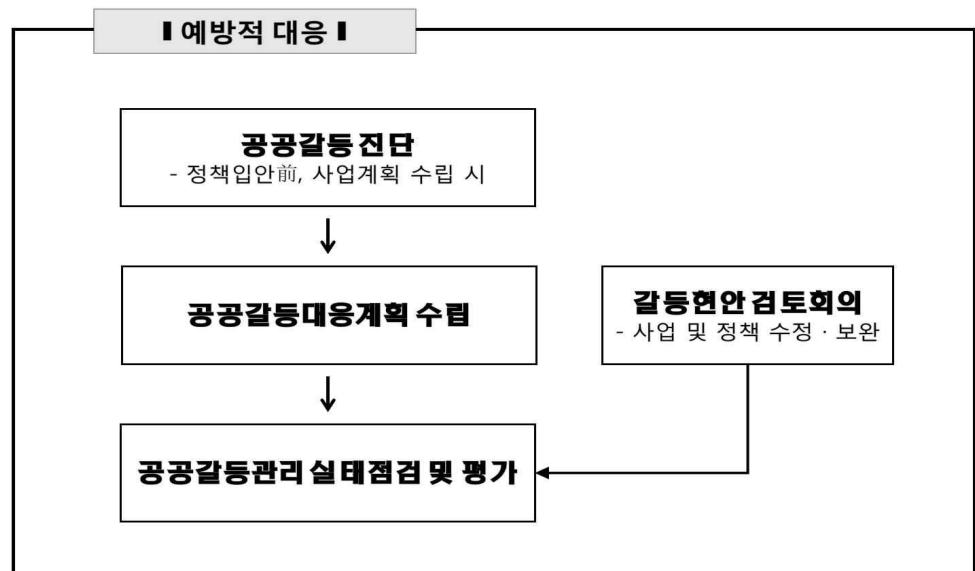
| | |
|-----|--|
| 서산시 | ○ 긍정적으로 판단함 |
| 논산시 | 의견없음 |
| 계룡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15.1.26) 완료 ○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추진('15년 중) ○ 공공디자인관련 디자인아카데미 실시('15. 6월 중) (전 직원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강의를 통한 인식개선) ○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컨설팅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추진(13개 사업) |
| 당진시 | 의견없음 |
| 금산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을 통한 충남의 이미지 개선과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비 - 도비보조사업 보조시 디자인 컨설팅 의무화 ○ 군 - 디자인 설계비 계상 : 공공디자인센터활용 일부수정 |
| 부여군 | ○ 사·군간 통합관리 체계구축에 의한 경관 관리체계에서는 각 사·군의 자율성과 특성이 보장되지 않은 충청남도 전체의 통합적인 방향을 강조한 관리체계가 되지 않도록 사·군별 특성화가 가능토록 추진 필요 |
| 서천군 | 의견없음 |
| 청양군 | ○ 통합관리 주체 설계 및 조직, 인원 확충, 사업별 총괄계획가선임은 군 재정여건,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 홍성군 | 의견없음 |
| 예산군 | 의견없음 |
| 태안군 | <p>□ 제도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주관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군간 균형적인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통합관리 지침 마련 등 구체적인 방향 제시 필요 ⇨ (발전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와 사·군간 명확한 역할 정립 ②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의 상세화 |

6. 공공갈등 협력

1) 사업의 주요 현황

■ 공공갈등관리 기반 조성

- 충청남도는 2014년 12월 30일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조례 제 3943호)를 전면 개정·공포 하였으며, 현재 도내 15개 시·군 모두 조례제정을 완료한 상태임
-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제도의 골격은 갖추었으나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
-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계기관의 협의(협조)·협력, 사안별 대응을 위한 체계적·효율적 대응이 미흡하여 道 각 부서, 시·군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충남형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이에 2015년 조직개편을 통하여 갈등의 진단·예방·조정·관리 기능을 담당 및 총괄하는 갈등관리팀(5급 1명, 6급 2명, 9급 1명)을 신설, 공공갈등진단 등을 통한 공공갈등의 해소와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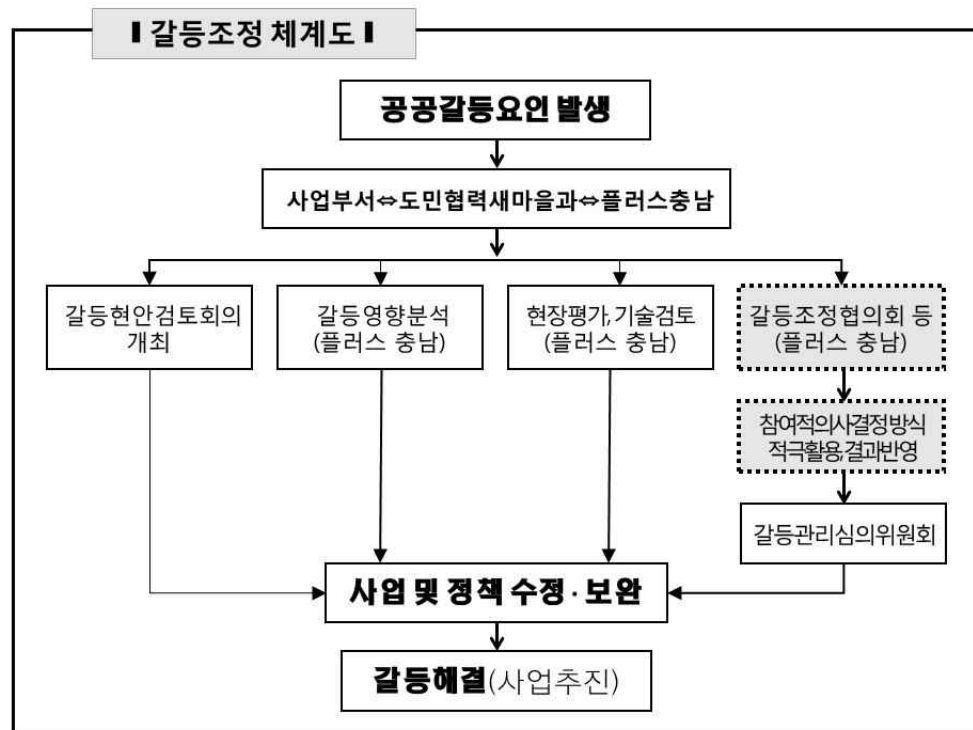


■ 공공갈등 사전 예방

- 공공갈등영향분석을 통한 갈등 예방
 -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갈등 전·후 사안별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대응을 위해 분석 실시
 - 분석내용은 사업의 특성, 쟁점 이해관계자 분석, 사업추진의 문제, 내·외부 환경적 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 및 기술적 검토 실시
- 잠재갈등 사전 조사 및 여론 모니터링
 - 정책입안 전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 갈등 요인 진단 실시
 - 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추진방법 등 공공갈등진단표 작성
 - 중앙 및 지방 언론매체 모니터링으로 갈등 현안 자료 및 정보수집 활동
 -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부서 및 시·군과 정보 공유로 갈등예방에 활용하는 등 방어적 개념을 탈피한 선제적 대응

■ 공공갈등 조정과 해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제13조에 의거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 현재는 제2기 심의위원회로 위촉직 11명, 당연직 4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갈등관리 대상 지정·조정 및 갈등 해결방안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
 - 공공갈등 조정과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의 역할 수행 필요
- 갈등관리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 갈등관리조정협의회는 공공갈등 당사자 간 조정·협의 의지가 있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 행정기관, 전문가, 갈등관리심의위원으로 구성
 - 갈등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 운영 중



■ 공공갈등관리 기반구축

- 갈등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 － 2014년 12월 30일 조례를 전면 개정 공포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규칙 제정 필요
 - － 갈등예방 활동에 관한 운영지침, 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한 세부 절차,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규정 등을 담아 제정하였음
- 갈등관리전문가 참여 확대
 - － 도내 118개 위원회 중 갈등관리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에 갈등전문가를 위촉하여 갈등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 갈등관리전문가 위촉이 필요한 위원회 전수조사, 위촉직 위원이 10인 이상인 위원회 우선 참여, 위원의 임기만료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위촉 추진

■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 갈등관리 교육
 - － 도, 시·군 갈등관리 담당관을 대상으로 각 시·군의 주요 갈등대상사업 공유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을 위한 교육과 우수 갈등해결 사례 현장 벤치마킹, 국

내외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실시

-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의 필요성 및 조례 등 관련 법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에 ‘공공갈등관리과정’을 운영하여 도, 시·군 업무담당자나 관심 있는 직원들의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갈등조정 전문가 아카데미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아카데미, 세미나 및 합동 워크숍 등을 개최
- 갈등관리포럼 운영
 - 충청남도 갈등관리시스템의 특징은 외부 전문가 집단과 협력파트너십 구축에 있으며, 2006년 10월 포럼 구성 이후 현재까지 민·관협력체계를 모범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2007년 5월부터 충남발전연구원 포럼 사무국을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참여하고 있음
 - 일시적·일방적인 행위자, 이해당사자, 참여자의 증가는 성공적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정규화·정례화 된 포럼 운영을 통하여 공공갈등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현장정보의 획득, 사업에 대한 일체감과 지지의 확보, 민주적 권리 부여 등의 역할과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민·관협력체계 강화
 - 권역별 포럼 구성, 지역별 갈등조정 전문위원 위촉 등을 통하여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유도, 협력과 상호자율성을 존중하는 공공갈등 해결의 접근성을 확보함
 - 공공갈등의 해결에 행위자의 자율성과 연계망의 형성은 중요한 요인이며, 위계적 명령체계가 아닌 수평적이며 상호작용을 통한 갈등사한의 접근 개방성을 높이고 있음

■ 관련법령

-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제3조(적용대상)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1월 10일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4조(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2015년 8월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 제2조(사전협의) 새로운 정책 입안 시 공공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갈등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
 - 제3조(공공갈등진단) ①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갈등진단표 및 공공갈등기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제4조(갈등영향분석) 조례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1. 공공정책의 추진 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5.관련 단체 및 전

문가의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임 및 역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시 소집
-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명칭, 운영규정 내용 규정
- 제7조(갈등관리실태 점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갈등관리대상을 점검하고,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공갈등 관리계획을 수립시 반영한다.

2) 협약의 필요성

■ 공공갈등의 지속적 분출

- 최근 사회구조가 분화되고 이해관계가 다원화 되면서 각 분야에서 공공갈등이 끊임없이 분출 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른 시민참여·권리의식 향상으로 각종 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공공갈등은 이해갈등 뿐만 아니라 이념적·종교적·문화적 차원의 가치를 반영한 복합갈등, 정부의 갈등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정부에 대한 기본 신뢰감 부족에서 비롯되는 신뢰갈등 등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또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 등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행정적·사법적 해결방식으로는 갈등해결에 한계가 있음

■ 갈등 사안의 광역화로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공공갈등이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일정지역을 초월한 광역화의 양상을 보임
-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역 간의 경쟁구도는 물론 지역 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갈등 증가로 지역 간의 분열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및 컨트롤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관리시스템의 필요

- 공공갈등은 지역 간의 비선호시설의 입지, 철도역사 등 선호시설 건립을 둘러싼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으로 지역 간의 분열을 초래 할 우려가 커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됨
- 효과적인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갈등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달성이 필요함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 보장을 토대로 공공의사결정과정에서 초래 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관리·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필요

■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 필요

- 능률편향적인 정책과정을 시정하고 주민의 요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즉 갈등주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갈등관리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 사후적 갈등해결 → 사전적 갈등예방, 정책추진 결과의 중요성 → 정책추진 과정의 중요성, 행정 및 정책 효율성 → 행정 및 정책의 민주성과 형평성, 사법적 판결 → 당사자 간 협상으로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 필요

■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필요

- 공공갈등으로 인한 각종 소송 등으로 과도한 비용 지출은 물론 행정 신뢰성 결여로 지역주민 불신 초래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갈등관리 인력 투입이 요구됨
-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갈등 해소 역량이 미흡한 경우가 있어 갈등전문 인력 지원이 절실함

3) 도·사군의 역할과 기능

① 도의 역할과 기능

■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 주요 갈등현안 선정 및 갈등현황 관리

- 갈등진단 및 영향분석을 통한 갈등 대응 지원
- 갈등현안 정보 및 갈등 해결 사례 매뉴얼 작성 등 정책결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정책결정 이후까지 정책추진의 전 단계에 걸친 상시적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적용
-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여 전략적 대응 추진

■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군 위원회 지원

- 충청남도는 제1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2011. 6. 13. ~ 2013. 6. 12.) 제2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2013. 6. 13. ~ 2015. 6. 12.)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2015. 6. 13. 새롭게 구성
- 이번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촉직 15명 당연직 5명 총 2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촉직은 갈등현장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갈등전문가를 위촉하였으며,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갈등관리 종합계획 심의,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조정,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참여
- 충청남도 관내 시·군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은 7개 시·군(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예산군) 구성 중으로 미설치된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하여 갈등전문가 추천 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

■ 주요 갈등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갈등조정협의회는 조례 제14조에 의거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갈등 사안별로 설치 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합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을 조례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
- 2015년 갈등관리팀 출범 이후 갈등관리조정협의회 설치는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2015. 3. 23.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 해결방안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
- 그 밖에 폐기물매립장 관련, 송전탑선로 문제로 인한 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협의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적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예정

- 갈등조정협의회는 전문가 인력 등 자원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구성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시·군에서 협의회 설치를 요청한 갈등 사안이나 갈등관리팀에서 필요한 판단되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시·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 공공갈등 역량강화 교육 및 갈등전문가 인력 지원

- 공공갈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인식제고 및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
- 도, 시·군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세미나 계획을 도에서 수립하여 시·군에서 교육에 참여
- 갈등 양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환경, 에너지, 법률, 여성, 조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 구성 필요
- 도 및 시·군의 갈등전문가 인력 구성의 어려움은 같은 실정이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전문 인력을 발굴하여 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전문가추천

② 시·군의 역할과 기능

■ 지역여건에 맞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각 시·군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근거가 되는 관련 자치법규인 조례는 15개 시·군이 모두 제정된 상태이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됨
- 현재는 7개 시·군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점차 15개 시·군 모두가 구성될 수 있도록 미 구성된 시·군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
-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 임시회 등 조례의 규정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며, 갈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맞게 심의·자문 역할 등을 충실히 수행

■ 공공갈등시스템 및 갈등조정협의회 활용

- 갈등사전 진단,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매뉴얼 등 도 갈등관리 프로세스 적극 활용
- 각 시·군 여건에 맞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시·군에서 발생한 갈등 현안 중 갈등확산이 우려되고,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갈등 당사자 간 협의 의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요청 및 참여

■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갈등관리담당관 연수, 전문가 아카데미, 공공갈등관리 과정 등 충청남도에서 운영 중인 갈등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각 시·군 여건에 맞는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운영 및 공유
- 우수사례 벤치마킹, 갈등관리 노하우 등 시·군 자체 역량 공유

■ 공공갈등현안 기초자료 작성·제공

- 각 시·군별 공공갈등 현안 정보공유 및 자세한 기초자료 작성·제공
-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갈등전문가, 전문기관, 교육기관, 학술단체 등의 전문가 집단 데이터베이스화
- 지역시민사회 참여중심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갈등해소 시민사회 데이터 구축

4) 필요 및 조치사항

■ 공공갈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노력

- 공공갈등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구체적 이행을 위한 도·시·군간 공감대 형성 및 제도 정비 필요
-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정보 공유 필요
- 갈등관리 담당관의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필요

■ 전문인력 확보 및 주민참여 방안 제고

-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이론적·기술적 역량을 갖춘 갈등 전문가의 확보 및 공유
- 갈등관리 전문가, 지역주민이 갈등의 중재 및 협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 공공갈등관리 기구 및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도, 시·군 자치법규 정비
-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 교육·훈련방안 마련
- 재원부담을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5) 기대효과

- 도와 시·군의 체계적인 공공갈등의 대응을 통한 사전예방 및 관리
- 도와 시·군의 협업을 통해 공공갈등 해결역량 강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예방을 통한 주민의 행정신뢰도 향상
- 갈등 조기 해결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손실 최소화
-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관리로 도민 체감형 참여자치 확산

6) 협약사항

| 구 분 | 협 약 내 용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군 위원회 지원 ◦ 주요 갈등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 공공갈등 역량강화 교육 및 갈등전문가 인력 지원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건에 맞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및 갈등조정협의회 활용 ◦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공공갈등현안 기초자료 등 작성·제공 |

도-시·군 협약과제 인터뷰 참고자료(시·군의견)

⑥ 공공갈등 협력

| 시·군 | 검 토 의 견 |
|-----|--|
| 천안시 | 제안시·군 |
| 공주시 | 의견없음 |
| 보령시 | 의견없음 |
| 아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정보 공유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실무 협의 및 조정 과정에 있어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전제의 정립이 필요함 |
| 서산시 | 의견없음 |
| 논산시 | 의견없음 |
| 계룡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갈등이 초래됐을 경우, 조기에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당시 우선적으로 체계적(구체적)인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더불어 갈등전문가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인력pool 마련 - 갈등의 양상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례를 공유하고 갈등발생시 既 해결 시·군에서 선례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해결방안 공유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요구 |
| 당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당사자로 개연성이 높은 지역리더(이통장, 주민자치협의회장, 개발위원장 등)에 대한 교육 필요 ○ 갈등사업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필요 |
| 금산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의 갈등은 지역을 초월한 복잡하고 광역화된 갈등으로 유형 및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 협약 체결로 공공갈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결이 가능할 것이며, - 도내 전문인력 공유를 통한 다양한 갈등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으로 갈등관리 역량강화 등 긍정 효과 기대 ○ 다만, 갈등 해결을 위한 자원분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판단 |

| | |
|-----|---|
| 부여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 사군에서는 갈등관련 경험 및 전문가가 부족하여 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매우 실효성 있는 협약과제로 사료됨 |
| 서천군 | 의견없음 |
| 청양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군은 「청양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도에서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등 협력 지원을 강화한다면 공공갈등 발생예방 및 조기 해소 기대 |
| 홍성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사군간에 야기된 공공갈등의 문제가 양자간에 팽팽이 대립할 때 갈등관리 연구기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최소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하며, 이해타산에 의한 결정이 아닌 공정한 결정이 될수 있는 제3자의 감시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2-3종의 필터 역할을 해주어야 시민간의 이해와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 예산군 | 의견없음 |
| 태안군 | 제안사군 |

7. 깨끗한 충남만들기

1) 사업의 주요 현황

■ 사업 추진 개념

- 깨끗한 충남만들기 관련 사업은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 생태관광 활성화, 행복한 환경 조성 등 도정의 중점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기반조성 사업의 성격을 지님
- 그간 시·군에서 각각 시행하던 폐기물 처리 정책을 보다 통합적으로 집중·체계화 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코자하는 사업임

〈그림 11〉 깨끗한 충남만들기 개념도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2015.4

■ 사업 관련 현황

- 『깨끗한 충남 만들기』 추진 기본계획 수립 ('13.12.), 『깨끗한 충남 만들기』 세부추진계획 수립 ('14. 2.) 등 시행
 - 지역 사회단체 회원 4만명 이상 참여, 방치 쓰레기 약 4만 여톤 수거 등
- 특히 2014년 깨끗한 충남만들기 주요 사업으로 읍·면·동 1지역 가꾸기 운동을 추진(충청남도 새마을회 주관)하여 207개 읍·면·동 주민이 참여하는 등의 효과를 거둔바 있음

- 페비닐·농약병수거사업, 숨은자원찾기, 하천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등
- 기타 통상적인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배출 및 수거 운반 처리, 재활용 폐기물 지정장소 배출 후 수거처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용기 이용 배출 등 전국적으로 사업 추진 현황이 유사한 상황임

■ 사업 관련 문제점

-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군의 고유사무라는 인식이 고착화되어 그간 도에서 지원 및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었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도비 지원이 미약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지원비도 도 자체에서 본예산 삭감된 사례가 있음
- 또한 시·군별 처리 역량, 인력, 환경 의식수준 및 여건 특성이 다양하여 시·군간 격차 존재
 - 특히 해안지역 등 관광지 중심 쓰레기 관련 민원 속출
 - 도시형 아파트 건립 및 원룸의 난립, 농어촌 지역의 노령화 등으로 종량제 봉투 미 정착 사례 다수 발생
 - 농촌지역, 하천, 야산 등 방치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력 및 예산 부족
 - 쓰레기 수거 민간 위탁처리(11개 시·군)변경으로 사각지대 방치 폐기물 신속 처리 어려움 발생
 - 회원의 고령화 등으로 사회단체 활용 쓰레기 수거 한계 당면

2) 협약의 필요성

■ 국내·외 패러다임을 반영한 도 및 시·군의 명확한 역할 분담 시행 필요

-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지속가능한 경제-환경을 위한 폐기물 제로화, 생활폐기물 매립지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 확립 추진
- 국내의 경우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의 입법이 추진됨에 따라 ‘자원순환 협의제’ 운영, 순환자원인정제 도입 등 재활용 시장 활성화, 폐자원이 에너지가 되는 친환경에너지 타운 확산 등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이러한 국내·외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이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도 및 시·군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 촉진 필요

- 따라서 도 및 시·군의 역할과 기능을 포함한 내용을 체계화한 협약을 통한 시행의 추진력 담보 필요

■ 그간 시·군 고유 사무 중심에서 도 및 시·군의 협업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효과 극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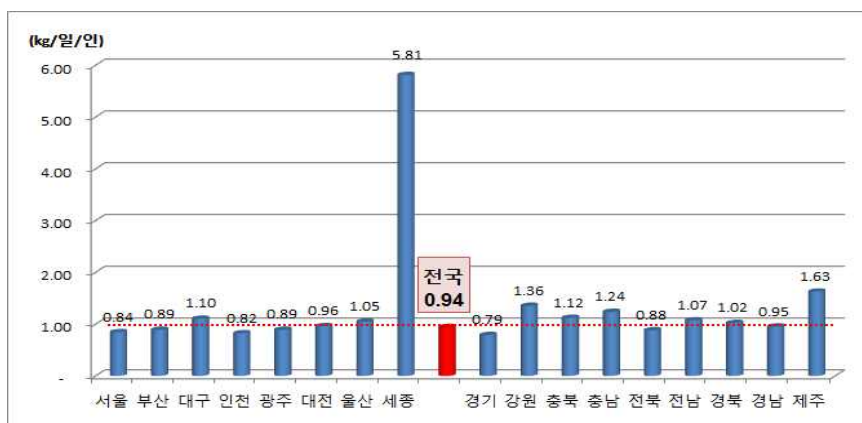
- 깨끗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그간의 사업은 대부분 시·군 고유 사무로 진행. 이에 도내 시·군간의 정보 공유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미약
- 따라서 서로간의 문제점 공유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및 협업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와 시·군간의 협약을 통하여 각각의 실천의지를 고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군별 처리 역량, 인력, 환경 의식수준, 여건 및 특성이 다양하여 존재하는 시·군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충청남도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특성을 분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처리방법에 있어서 매립률을 낮추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협력 필요

- 충청남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 충청남도의 2013년 기준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0.94kg/인/일에 비하여 높은 1.24kg/인/일이며 최근 5년간 전국추세는 감소인 반면 충남은 증가 추세를 보임. 따라서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

〈그림 12〉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자료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3), 2014

- 충청남도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 2013년 충청남도의 생활폐기물 처리율은 전국 평균 처리율과 비교했을 때 매립과 소각의 비율이 높고, 재활용 비율이 낮은 편임. 따라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필요

3) 도-시·군의 역할과 기능

① 도의 역할과 기능

■ 깨끗한 충남만들기 추진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 수립 등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깨끗한 충남만들기 가이드라인 및 추진 매뉴얼 마련
- 행정시스템 개선 및 보완 발전방안 마련
 - 쓰레기 발생 및 수거시스템, 추진협의회 토론을 통한 효율적 대안 공동모색의 장 마련⁴⁾
 -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2016~2021)시 깨끗한 충남만들기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추진력 담보

■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가칭 “깨끗한 충남만들기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정책 조정 및 피드백 실시
- 재정지원방안 마련 및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공 등 협력 지원방안 모색

■ 교육 및 홍보 확대 지원

- 도민 환경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시설 연계 운영
- 범 도민 실천 및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공모사업
- 어린이, 청소년, 주부, 농어민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실천 확산
- 도민대상 청결운동, 쓰레기 없는 축제 개최 등 다양한 도민참여 중심의 활동 전개

4) 청소차량·청소인원 적정성 문제, 가로청소, 수거체계 개선방안,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 영농폐기물 수거 문제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상습 투기장소에 화단 조성 및 쓰레기 수거함 배치로 불법투기를 억제하는 등의 사전예방적 방안 모색 필요

② 시·군의 역할과 기능

■ 실천적 과제도출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시·군 특성에 맞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 추진 전략 수립 후 단계별 사업 추진
- 마을단위 소규모 정기적 대청소 활동 전개(청정한 내고장 만들기 운동), 방치쓰레기 수거 등 실사구시형 사업 추진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및 취약지역 우선 관리

- 시·군 특성을 반영하여 쓰레기 처리 사각지대 집중 관리
- 취약·중점관리 지역, 중점관리 기간, 중점지원 대상 선정 후 관리 등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 예를 들어 연안 지역의 경우 여름철 쓰레기 집중처리 기간 설정,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효과 극대화
-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근절 대책 마련 시행

■ 주민의식 고취를 통한 깨끗한 충남만들기 지속성 강화

- 주민의식 강화 교육
 - 마을지도자 교육, 영농교육 등 활용, 소규모·수시 교육이 효과적
- 학교와 협력하여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생 환경 교육 실시

4) 필요 및 조치사항

■ 향후 필요 및 조치사항

- 시·군, 사회단체, 도민 등 수요자별 맞춤형 협력 및 지원 방안 전개
- 협약내용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도 및 전 시·군 동시 깨끗한 충남 만들기 범 도민운동 전개

■ 향후 추진과제

- 도의 중점추진 과제인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등 관련 사업들과 연계를 통하여 효과의 극대화 필요

- 깨끗한 충남만들기 사업은 도내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시범대상지역의 경우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폐기물 안전처리, 4R 개념 도입 등을 함께 실시하여 사업효과 가시화 필요
- 자원의 보전과 재이용을 통한 자원이 순환하는 저소비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life cycle)에 걸쳐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 충청남도 전체 시스템 및 관리실태 진단을 통하여 선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시행 필요
 - 과학적인 진단을 통하여 단기적인 과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 도출⁵⁾ 및 추진 필요

■ 추진체계(안)

- “깨끗한 충남만들기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정책방향 제시, 지속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 추진 정책 피드백 등
 - 환경·시민단체, 전문가, 도 관련부서, 시·군 등 약 60명 내외 구성

〈그림 13〉 깨끗한 충남만들기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안)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2015.4

5) 충청남도 내부자료(2015.4.23)에 의하면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단기과제의 경우 도 및 시·군 협약, 깨끗한 충남만들기 전진대회 개최,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8개 취약지 정화활동 집중전개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지속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과제로는 청결평가제를 통한 청결지수 공표 운영, 선진사례 연구, 도심 건물 청결명령제, 다가구주택 수거함 비치 의무화, 환경보전대상제 도입,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을 주요과제로 도출하고 있음. 단, 이러한 구상(안)은 확정사항이 아니며 향후 각종 자문회의,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변경 될 수 있음을 전제함

5) 기대효과

- 깨끗한 충남 만들기를 통하여 다시 오고 싶은 충남, 청정 충남의 이미지 제고 및 행복한 충남 토대 마련
- 도민 전 계층의 자율적 청소 문화 확산, 교육, 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환경 의식 및 역량 강화
- 청정 충남 이미지를 토대로 농산물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 지역 환경 브랜드 가치,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 상승 기대
- 해안, 산림, 하천 등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하여 명품 생태 관광지로의 인식제고를 통한 경제산업 활성화
- 도민 전체가 행복한 환경,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자발적 참여 노력을 통해 살고 싶은 충남, 자랑스러운 충남인으로서의 자부심 고취

6) 협약사항

| 구 분 | 협 약 내 용 |
|-----|---|
|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충남만들기 추진체계 기반확립 ○ 협력, 신뢰구축, 공동체 회복 등 사회적자본 확충 ○ 필요시 행·재정지원 방안 강구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충남만들기 실천전략 수립 추진 ○ 주민 자율참여 기반 조성 ○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청소문화 확산 ○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

도-시·군 협약과제 인터뷰 참고자료(시·군의견)

⑦ 깨끗한 충남만들기

| 시·군 | 검 토 의 건 |
|-----|---|
| 천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식 강화교육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쓰레기 처리시설 등 견학(시·군 교류) - 도에서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일괄 제작하여 시·군에 배부 (방송용 홍보 자료, 재활용 분리수거 안내 동영상 및 책자 등) ○ 자율적 대청소 활동을 위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약체결 - 자율적 청소 및 모니터링을 위한 서포터즈 모집 - 연말 유공단체 표창 수여(도) - 해외 선진행정 견학(도) |
| 공주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추진시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아카데미 운영(청소체험) - 쓰레기 소각로 폐열공급 사업 - 환경시설(소각장·매립장·자원순환센터)학습장 운영 ○ 홍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행기를 활용하여 환경정화 캠페인 전개 - 환경신문고 및 오염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 ○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을 통해 폐기물이 순환자원이라는 인식과 시민들의 참여정신 확산이 필요하며, 환경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직원의 사기진작 시책이 병행되어야 함 |
| 보령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쓰레기 처리는 시·군고유사무로 도로부터 재정지원이 없으며, 또한 낮은 청소행정 자립도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방치된 쓰레기가 도로변, 공원, 산, 계곡 등 무분별하게 투기되어 깨끗한 충남 만들기 저해요소이므로 방치된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원 시 협약이 가능 |
| 아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및 시가 동시에 깨끗한 충남 만들기 운동을 전개 청정 이미지로 충남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 이므로 협약이 필요한 과제라 판단됨 |

| | |
|-----|--|
| 서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쓰레기 처리업무의 시·군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청소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됨 ○ 단, 협약사항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및 시·군 예산확보로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의견임 |
| 논산시 | 의견없음 |
| 계룡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방치쓰레기 수거, 수거된 쓰레기는 시에서 처리 ○ ‘깨끗한 충남만들기’에 민·관 협약식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새마을 등)들과 도 단위 협약체결 ○ 공공장소 쓰레기통 도와 시·군 이미지로 디자인 통일, 쓰레기 수거비용 지원 |
| 당진시 | 의견없음 |
| 금산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도의 전문성과 재정 지원의 확대는 깨끗한 지역을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 부여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대청소 활동 전개, 방치쓰레기 수거, 쓰레기 무단투기·소각 근절 등 시·군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기 시행하거나 시행 가능한 사항으로 도 재정지원시 기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주민의식 강화 교육(마을지도자 교육, 영농교육 등 활용)에 따른 전문인력 및 재정이 뒷받침 해야 할 사항임 ○ 깨끗한 충남만들기 우수 시·군 선정은 시·군 형편에 맞는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 서천군 | 의견없음 |
| 청양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전액 자체예산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道가 재정을 지원해 주고 도·시·군간 협력을 강화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 및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범국민 실천분위기 조성 자율적 청소 문화 확산 기대 |
| 홍성군 | 의견없음 |
| 예산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폐비닐 수거비용 지원비 확대 : 현행 도비10원/kg에서 30원/kg이상 지원 • 방치 폐기물 처리비 도비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국비70%(35,000천원), 도비9%(4,500천원), 군비21%(10,500천원)에서 국비50%(35,000천원), 도비25%(17,500천원), 군비25%(17,500천원) 지원 |

| | |
|------------|---|
| <p>태안군</p> | <p>□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책무가 군수에게 위임 ○ 상시 배출장소는 환경미화원에 의해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어촌지역, 임야, 해변 등에 투기된 쓰레기 청소에는 많은 인력, 장비 및 예산이 수반 ○ 특히 해안가는 밀물과 썰물 시 쓰레기가 밀려 들어와 청소 후에도 쓰레기 산적되는 경우가 다반사 <p>⇒ 청소에 수반되는 인력, 장비와 처리비용 지원필요</p> <p>□ 인력 및 재정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임야, 해변 등에 투기된 쓰레기 청소에는 많은 인력·장비 및 예산 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쓰레기 수거인력, 장비운영 지원 필요 ○ 환경의 중요성 등 인식제고를 위한 도 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 운영 <p>⇒ (발전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고승희 연구위원

□ 참여 연구진

최병학 선임연구위원

성태규 선임연구위원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조영재 연구위원

오혜정 연구위원

이수철 책임연구원

박춘섭 책임연구원

장창석 전임연구원

신혜지 연구원

전민지 연구원

